

# 북한,

## 미완의 **논쟁**과

## 새로운 **쟁점**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10:00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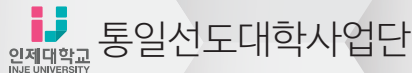
**장 소**

동국대학교 / ZOOM 병행

**주 최**



**후 원**



10:00-10:10	개회식	<b>개회식</b> 개회사: 이기동 (북한연구학회 회장) 환영사: 김병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장 소: 문화관 학명세미나실
10:10-12:00	제1회의	<b>북한연구방법론</b> 사 회: 김범수 (서울대학교) 장 소: 문화관 학명세미나실  권영태 (한국NGO학회) “내재적 접근에 대한 재평가”  김지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정치연구에서 담론분석: 실증주의와 역사주의 그리고 관념론의 가능성과 한계 고찰”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 내부정치에 대한 정량적 접근: 북한 엘리트 데이터셋 소개”  토 론: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12:00-13:00	제2회의	<b>북한의 대남·대외전략과 북한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b> 사 회: 양병기 (청주대학교) 장 소: 사회과학관 첨단강의실  최재덕 (원광대학교) “북·중·러 연대의 심화: 신냉전적 흐름인가? 일시적 연대인가?”  박수유 (채널A)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에 대한 재평가: 남조선 혁명론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는가?”  조현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분석”  토 론: 황수환 (통일연구원) 김상범 (경남대학교) 최규빈 (통일연구원)
12:00-13:00	오 찬	



<p>13:00-14:50</p>	<p>제3회의</p>	<p><b>북한연구의 시각과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b></p> <p>사 회: 송영훈 (강원대학교) 장 소: 문화관 학명세미나실</p> <hr/> <p>한재헌 (동국대학교)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의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북한적 특수성”</p> <p>박아름 (강원대학교) “북한식 권위주의의 현재적 의미”</p> <p>토 론: 노현종 (서울대학교) 이재준 (제주평화연구원)</p>
	<p>제4회의</p>	<p><b>북한체제의 기원, 동태성, 미래</b></p> <p>사 회: 김영미 (국민대학교) 장 소: 사회과학관 첨단강의실</p> <hr/> <p>피터 워드 (빈 대학교)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있어 결정요인 분석”</p> <p>표도르 짜르치즈스키 (국민대학교) “가짜 김일성론의 흥망사”</p> <p>토 론: 김재웅 (고려대학교) 김택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p>
<p>15:00-16:50</p>	<p>제5회의</p>	<p><b>김정은 시대 북한경제</b></p> <p>사 회: 박종철 (대전대학교) 장 소: 문화관 학명세미나실</p> <hr/> <p>최재헌 (동국대학교)·김미연 (이화여자대학교) “김정은 집권 후 금융 부문 변화: 분권화인가 집권화인가?”</p> <p>최지영 (통일연구원) “대북제재 장기화와 북한의 재정·금융제도 변화”</p> <p>김일한 (동국대학교) “만성화된 식량위기에 대한 평가와 전망: 지속인가 개선인가?”</p> <p>토 론: 임 송 (한국은행) 정승호 (인천대학교) 최용호 (농촌경제연구원)</p>

##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현황과 과제

사 회: 진희관 (인제대학교)

장 소: 사회과학관 첨단강의실

송영훈·박아름 (강원대학교)

“강원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현황과 과제”

소성규 (대진대학교)

“대진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현황과 과제”

진희권 (부산대학교)

“인제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현황과 과제”

토 론: 탁용달 (자산관리공사)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보영 (동국대학교)

장 소: 문화관 학명세미나실

15:00-16:50

제6회의

17:00-18:00

정 기 총 회

제1회의

# 북한연구방법론

사회: 김범수(서울대학교)

# 내재적 접근에 대한 재평가

권영태(한국NGO학회)

제목 :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북한 연구 방법에 대한 시론적 탐구<sup>1)</sup>

권영태<sup>2)</sup>

### 초록

북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에 대한 논쟁은 뜨거웠다. 북한 연구방법론으로서 내재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우리 학문의 일반적인 풍토(?)와는 다르게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지난 논의를 살펴보면 개념의 혼동이 여전하다. 특히 외재적 접근과 비교하면서 외부의 잣대를 기준으로 한 북한 연구와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내재적 접근은 학계의 상당한 오해와는 달리 북한의 시각을 그대로 옮기는 연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소련과 중국 연구를 제외하면 정작 첫 제기자인 송두율도 내재적 접근에 따른 북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북한 관련 몇 편의 글이 있으나 내재적 접근 논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재설파했고, 북한 문제에 대한 성찰적인 논지를 전개했을 뿐이다. 이적 시비에 휘말리면서 더 이상 북한 관련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논쟁의 핵심을 평가하였다. 논쟁의 핵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크게 이적 시비, 방법론 인정 여부, '내재적'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살펴보면 내재적 접근에 대해 4가지 서로 다른 이해의 지평이 병존하고 있었다. 내부 논리를 그대로 소개하는 연구, 내부 논리를 소개하고 (외재적) 비판이 포함된 연구, 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연구, 내부 논리를 소개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가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을 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연구로 한정하고 그 의미를 1차 층위로서 이념, 목표와 2차 층위로서 현실, 성과라는 두 층위로 접근하는 것으로 구체화했으며, 이념-현실법 또는 목표-성과법으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념-현실법에 따른 적용의 시도로 사회주의로동법을 예시로 다루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혁명을 통해 탄생했고 여전히 혁명중인 북한의 국가 특성을 잘 보여주는 법이다. 사회주의로동법에 표명된 1차 층위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2차 층위의 연구는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키워드 : 내재적 접근, 이적, 방법론, 사회주의로동법, 송두율, 이념-현실법, 목표-성과법, 본래적 의미

1) 이 논문은 필자의 논문, “북한법 연구의 새로운 시도”, 『북한법연구』 Vol.19(서울 : 북한법연구회, 2018)를 발전시킨 것이다.

2) 한국NGO학회 이사,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

## 목차

### I. 서론

### II. 논쟁의 경과와 평가

#### 1. 이적 시비

#### 2. 방법론 인정 여부

#### 3. '내재적'의 의미에 대한 논쟁

### III.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의 탐구

#### 1. 내재적 접근에 대한 4가지 서로 다른 이해의 지평

- ① 내부 논리를 그대로 소개하는 연구
- ② 내부 논리를 소개하고 (외재적) 비판이 포함된 연구
- ③ 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연구
- ④ 내부 논리를 소개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

#### 2.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의 한정 : 이념-현실법 또는 목표-성과법

#### 3. 내재적 접근에 따른 북한 연구를 표방한 연구의 검토

#### 4. 송두율, 『소련과 중국』의 이념-현실법

### IV. 사회주의로동법을 예시로 한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의 방법 구체화

#### 1. 북한법에 대한 이념-현실법의 적용

#### 2. 사회주의로동법에 대한 1차 층위적 접근

#### 3. 사회주의로동법에 대한 2차 층위적 접근

### V. 결론

## I. 서론

북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에 대한 논쟁은 뜨거웠다. 북한 연구방법론으로서 내재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우리 학문의 일반적인 풍토(?)와는 다르게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sup>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가 학문 본연의 사명이기는 하지만 북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에 대해서만 유달리 비판이 많았다. 비판에 대한 반비판도 이어졌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지난 논의를 살펴보면 개념의 혼동이 여전하다. 특히 외재적 접근과 비교하면서 외부의 잣대를 기준으로 한 북한 연구와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내재적 접근은 학계의 상당한 오해와는 달리 북한의 시각을 그대로 옮기는 연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우선, 관련 논쟁의 핵심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논쟁의 세세한 경과를 일일이 옮기기보다는 핵심적인 문제의식 위주로 정리하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를 탐구하고 내용을 구체화한다.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라 함은 송두율의 연구방법을 뜻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송두율 스스로에게도 이해의 혼란상이 있다.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내재적 접근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지평을 살펴보고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를 명확히 한정하기로 한다.

소련과 중국 연구를 제외하면 정작 첫 제기자인 송두율도 내재적 접근에 따른 북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북한 관련 몇 편의 논문이 있으나 내재적 접근 논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재설파했고, 북한 문제에 대한 성찰적인 논지를 전개했을 뿐이다. 이적 시비에 휘말리면서 더 이상 북한 관련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유일한 내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송두율의 소련, 중국 연구와 함께 내재적 접근에 따른 북한 연구를 표방하는 연구를 검토하여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를 더욱 구체화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재규정한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를 사회주의로동법을 예시로 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3) 비교적 최근 것으로는 정용석, “북한조기붕괴설 부작용 차단과 내재적 접근의 이적논리”, 『북한』통권 465호(서울 : 북한연구소, 2010), 옌스 휘트만, 한운석 옮김, “반공주의 대 내재적 접근? - 통일 전 서독의 동독 연구”, 『역사비평』 2011, 여름(서울 : 역사비평사, 2011) 등이 있다.

## II. 논쟁의 경과와 평가

내재적 접근에 대한 지난 논의를 살펴보면 개념의 혼동이 여전하다.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핵심만 추려보면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적 시비, 방법론 인정 여부가 큰 흐름을 차지했고 ‘내재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

### 1. 이적 시비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적 시비는 학계 바깥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다. 한 언론인은 내재적 접근은 ‘사이비 과학’이자 ‘X소리’라며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 시민이라면 이런 세력과 같이 갈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sup>4)</sup> 송두율은 뜻하지 않게 국가보안법으로 영어의 몸이 되었으며 북한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몰리기도 했다<sup>5)</sup>. 학계에서도 내재적 접근 자체를 ‘이적’으로 단정하기도 했다.<sup>6)</sup>

사회 일각의 이적 시비에 대해서는 청맹과니 같은 시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도 그만이다. 그렇지만 학계에서조차 북한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내재적 접근에 대해 ‘이적’이라는 시각이 공공연히 제시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학계에서 생산적인 논의로 진행되고 연구자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고 비판,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문적 논의가 학계에서 끝나지 않고 사법당국의 개입과 언론의 과도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은 결국 북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입장이 상이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문제제기로 인한 현상이라고 본다.<sup>7)</sup>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싫어한다. ... 공산주의에 관한 한 틀렸다는 한 목소리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비판의 도출이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위함이라고 하면서 또한 가장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를 등에 업은 정치적 독재가 강제한, 머리에 피가 마르면서부터 어떠한 의미의 성찰도 없이 무조건 앵무새처럼 달달 외워야 했던 「반공」, 「멸공」의 훌륭한 교육 결실이 아닐 수 없다.’<sup>8)</sup>*

형법학자 배종대의 지적이다. ‘진정한 의미의 비판’을 가로막는 ‘한 목소리’에 대한 질타이다.

4) 정경훈, “내재적으로 접근해 무엇을 알아냈는가”, 인터넷『매일신문』 2012년 05월 31일. 검색일 2014년 7월 24일.

5) ‘황장엽(黃長燁)이 1997년 한국으로 온 이후 "북한의 당 서열 23위인 김철수(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와 동일인이다"고 증언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1년 8월 재판부로부터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냈다.’ 네이버 백과사전. 표제어 ‘송두율’. 검색일 2014년 6월 12일.

6) 정용석, “북한조기붕괴설 부작용 차단과 내재적 접근의 이적논리”, 『월간 북한』 2010. 9.(서울 : 북한연구소, 2010).

7) 이러한 현상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늘 발견된다. 예컨대 여전히 6.25에 대해 ‘남침’이 아닌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언론의 못매를 맞게 된다. 김일성의 항일독립투쟁 경력도 수십 년 동안 가짜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었으나 와다 하루키 같은 외국 학자의 저술이 소개된 이후 점차 수그러든 바 있다.

8) 배종대, “통일과 북한형법의 이해”, 『북한법률행정논총』 제7집(서울 : 고려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89), p. 34. 배종대는 ‘정치적 독재가 강제한 국민의식의 행태 면에서 보면 남한의 맹목적 반공과 북한의 맹목적 반제국주의는 무비판적이라는 동일한 틀을 갖고 있다’고 한다. 같은 곳.



지금부터 한 세대도 훨씬 전인, 노태우 대통령이 7.7선언으로 대북노선의 대승적 결단을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목소리이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적 시비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고유환은 과거의 북한 연구에 대해 '자폐적 정의관'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한다.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냉전시대에는 상대를 부정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자폐적 정의관 (self-righteous posture)'에 따라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객관적 연구가 어려웠다'는 것이다.<sup>9)</sup> 학계에서조차 여러 연구방법론 중의 한 가지인 내재적 접근을 '이적'으로 단정할 때 생산적인 학술적 논의와 우수한 성과물의 산출이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비판의 도출'을 위해서 내재적 접근은 이적 시비에서 벗어나 복권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복권을 넘어 내재적 접근을 통한 북한 연구의 적극적인 의의를 찾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우선, 내재적 접근의 복권은 학문 본연의 요청인 당야한 시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요청된다. 북한 연구 결과물은 연구자들의 주관적 인식과 상관없이 대북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는 국가정보<sup>10)</sup>로서 성격을 갖는다. 물론 북한학의 연구 성과는 국가정보기관에서 직접 생산한 국가정보는 의미가 아니다. 북한학은 분단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이바지해야 하는 사명을 본원적으로 갖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정책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국가정보의 의의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적 시비는 북한의 제반 현상에 대해 획일적인 견해만 통용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분단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저해하게 된다. 내재적 접근과 다른 연구방법론<sup>11)</sup>은 공존하면서 학계의 북한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적 시비는 학술적 결과물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지켜보는 바람에 국가정보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이른바 '김정일 신드롬'은 언론은 물론 학계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성과물이 이미 생산되어 있지만, 광범위하게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계 일각에서 김정일이 「무능하고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일반적인 담론과 다른 성과물을 생산하고 있었기에 그나마 당시 정책결정자들이 정상회담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적 시비는 실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용석은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은 북한의 내부 자료를 북한 체제의 정당화 근거로 이용한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sup>12)</sup> 이러한 시각은 내재적 접근을 택하는 연구자들이 북한 체제를 정당화할 의도가 없다<sup>13)</sup>는 점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재적 접근을 한다고 하여 북한이 '우리와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타(적대단체 혹은 경

9)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p. 33.

10) 국가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희원, 『국가정보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서울 : 법률출판사, 2008), p. 85.

11) 고유환은 북한 연구방법론으로 전체주의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 외재적 접근법, 일상생활연구, 비교공산주의 연구 등을 언급한다.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pp. 29-30, 39.

12) 정용석, "북한조기붕괴설 부작용 차단과 내재적 접근의 이적논리", p. 26.

13) '이해'와 '정당화'는 다르다는 평범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쟁체제)’라는 점, ‘우리에게 최대의 위협을 주고 있는 ‘타(적대단체)’’라는 점<sup>14)</sup> 또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북한의 제 현상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이상화라는 점도 변하지 않는다.

‘자폐적 정의관’에 따른 북한 연구는 제한된 대북정책의 생산으로밖에 연결될 수 없다. 내재적 접근의 복권은 더 나은 대북 전략 수립이라는 국가이익 차원에서도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정용석은 ‘정치인,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북한 사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착각에 빠져 헛짚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북한 전문가 집단의 오판은 정부의 대북정책 오류로 이어지며 국민들의 대북관을 오도한다는 데서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sup>15)</sup>

이 지적은 옳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내재적 접근에 따라 북한을 연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다. 내재적 접근을 시도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북한에 대한 분석을 ‘이적’이라는 잣대로 가로막아 일방적으로 제한된 정보만을 생산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이 잣대는 스스로에게 들이댈 필요가 있다.

북한법 연구자 장명봉은 ‘시대적 상황변화에 상응하여’ ‘구시대적 냉전질서에 입각해 고착화된 북한법에 대한 연구자세 및 시각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과거 대결과 경쟁의식에 입각한 대북 인식에서 벗어나 통일지향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남북 법제의 단순 내용비교에 의해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연구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법이 지니고 있는 본질과 특징을 밝히고, 그 기초 위에서 북한법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sup>16)</sup> 원로학자의 지적은 북한법뿐 아니라 북한 연구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14)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p. 34.

15) 정용석, “북한조기붕괴설 부작용 차단과 내재적 접근의 이적논리”, p. 19.

16) 장명봉, “북한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법연구』 제5호(서울 : 북한법연구회, 2002), p. 296.

## 2. 방법론 인정 여부

이적 시비와 함께 내재적 접근론에 대한 비판으로 많이 제기된 것은 방법론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방법(론)’, ‘인식(론)’, ‘접근(법)’, ‘시각’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각각의 의미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최완규는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을 정리하면서 접근법과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다. 방법론적으로 접근법은 통상, 이론적 접근법(theoretical approach)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것은 특정한 개념들을 채용하여 이론형성을 지향하는 가설의 형태를 탐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한다. 접근법은 연구자가 연구주제나 문제에 전념하게 될 때 채용하는 특별한 정향이며 시각은 접근법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연구자가 다루려는 현상에 대한 예비적 견해이다.<sup>17)</sup>

결론적으로 최완규는 내재적 접근법은 방법론에서 다루고 있는 접근방법의 세련화 내지 정교화보다는 기존의 냉전적 북한연구시각의 문제점과 한계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다.<sup>18)</sup>

내재적 비판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자라고 할 수 있는 강정인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접근방법 수준에서 내재론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반면 내재론자들에게 대해서는 북한을 보는 일종의 ‘문제의식’ 내지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sup>19)</sup> 결국 최완규의 결론은 내재적 비판은 방법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정인은 박형중의 견해도 소개하고 있는데, 박형중도 내재적 접근이 북한이라는 대상에 대한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회의적 결론을 내린다. 박형중은 내재적(-비판적) 진영과 강정인에 대해 모두 대상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대상에 대한 연구(분석, 이론화, 개념화)와 혼동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20)</sup>

내재적(-비판적) 진영의 핵심적 고민은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적·이론적 고민이 아니라 해석과 평가에 대한 고민이라면서 내재적 방법론은 궁극적으로 북한 관련 사항들을 -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척도 또는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 이데올로기적·규범적으로 어떻게 해석·평가하며, 북한체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어떻게 가려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자 방법론이라고 한다.<sup>21)</sup>

박형중은 다른 글에서 독일 루츠(P. C. Ludz)의 내재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독일의 내재적 접근은 방법론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는 듯하다.

*동독의 지배체제 및 사회체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그 구조와 기능을 인식하는 것이며,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없고 따라서 검증가능한 진술을 해야 한다. 이 때 학문적 진술에 무비판적으로 가치평가를 섞어 넣어서는 안 된다.* <sup>22)</sup>

17)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 연구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 『북한연구방법론』(파주 : 한울, 2003.), p. 15.

18)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 연구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 p. 15.

19)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 연구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 p. 35.

20) 박형중, “북한정치연구”,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한울, 1999, 52-53쪽.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 연구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 p. 36에서 재인용.

21)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 연구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 p. 36.

22) 박형중, “(서)독일의 동독연구에서 ‘전체주의’론과 ‘내재적접근’론”, 『북한연구학회소식』 제10호(서울

박형중은 원래 독일 제품인 내재적 접근을 소개한 소개자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용을 상당히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한다. 그러면서 본인 또한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sup>23)</sup>

현재까지 내재적 접근의 방법론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를 살펴보면 사실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방법(론), 접근(법), 시각, 인식(론) 같은 온갖 개념들에 대한 통일된 인식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다양한 견해 중 어디에도 전적으로 동의 되는 견해를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먼저, 북한 사이버안보연구 관점에서 본 연구는 2차 자료 중심의 기존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북한당국의 기관지인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정책담화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인식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북한학연구 관점에서 본 연구는 NPF라는 일반화되고 체계적인 연구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북한의 언론매체를 이용한 기존연구들은 서술적·해석적 접근의 연구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방식과 NPF의 주요 차이점은 NPF는 과학적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발견하기 위한 경험적 관찰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북한연구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지 않고 연구되는 경향이 컸다. NPF의 사용은 북한연구가 일반적 정책분석틀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특수한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인용한 글은 내재적 접근과 직접 관련되는 논문은 아니지만 내재적 접근의 방법론 인정 여부 논쟁과 관련하여 하나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다.

인용글에서 ‘기존의 북한연구’자로서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도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거나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거나 하는 비판에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재적 접근의 방법론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쟁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했다.

‘2차 자료 중심의 기존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 북한의 인식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했다’는 표현에서는 ‘기존의 북한연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 연구는 공간 문헌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다. 1차 자료에 대한 분석이 기본 중의 기본이기에 비판을 수긍할 수 없었다.

저자는 ‘일반화되고 체계적인 연구 분석틀을 사용’하여 ‘과학적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발견하기 위한 경험적 관찰’을 했다고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기존의 북한연구’는 일반화되고 체계적인 연구 분석틀도 없고 과학적 방법도 아니며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발견하기도 어렵다는 말이 된다.

내재적 접근의 방법론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된 논의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은 과

---

: 북한연구학회, 1999), p. 11.

23) 박형중, “(서)독일의 동독연구에서 ‘전체주의’론과 ‘내재적접근’론”, p. 11.

24) 김근혜, 박규동, “북한 시각에서 바라본 국제 사이버안보질서: 정책담화모형(NPF)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vol.29, no.1(서울 : 통일연구원, 2020), p. 166.

연 필자뿐이었을까? 가장 체계적인 내재적 접근에 대한 비판자인 강정인도 불편을 느낀 점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내재적 접근법과 그 접근법을 취하는 학자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판하고자 고심한 데 반해, 그 후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필자에 대해 제기한 비판은 산발적이고 우회적이기 때문에 필자 나름의 반론을 펴기가 대단히 어렵다.<sup>25)</sup>*

강정인은 자신의 비판은 체계적이지만 자신이 받은 비판은 산발적이고 우회적이라고 한다. 학술 논쟁이 서로에 대한 감정적 대립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표현이다. NPF의 방법을 사용한 학자에 대한 필자의 불편함도 그렇고 강정인과 내재적 접근론자들의 감정적 대립도 모두 불필요하다.

방법론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학계마다 또는 학자마다 가지는 서로의 고유한 학문하는 방법(론), 인식(론), 시각, 접근(법)에 대해 굳이 평가 -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보인다 - 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온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본다.

정작 송두울은 인식론이나 방법론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내재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문화인류학이나 사회인류학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내재적 접근이 인류학의 연구방법론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인식론적·방법론적 문제가 유독 사회주의 연구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이른바 ‘원주민’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이나 사회인류학이 어떻게 유럽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원주민’을 직접 접촉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여하는 관찰’이나 ‘객관적 해석학’ - 의미 연관은 주어진 것 자체로부터 찾아내는 것이지 밖에서부터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 이라는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극소수 제한된 사람만이 북한 사회를 직접 체험하고 1차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북한 연구나 이해가 부딪히는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다.*

26)

방법(론), 인식(론), 시각, 접근(법) 등의 개념의 혼란을 둘러싼 논란은 송두울 본인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때론 혼동하고 있으며 비판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에 바탕한 지적이 엇갈리면서 해결되지 않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재적 접근의 방법론 인정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려면 서구 사회과학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증적 접근과 이에 대한 만만치 않은 반론적 경향에 대한 이해가 심도 있게 진행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증적 접근은 방법론과 이론적 모형을 중시하는 데 반해, 예컨대 베버 식의 해석적 이해 같은 연구는 전혀 다르게 접근한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한 필자의 단정에 대해 반론이 예상된다. 연구 대상에 대해 어느 한 가지 가장 옳은 것을 골라야 한다면 방법론인지 여부, 방법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어떠한지 하는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론), 시각, 인식(론),

25)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 연구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 p. 21.

26) 송두울, 『경계인의 사색』(서울 : 한겨레신문사, 2003), p. 128.

접근(법)을 통해 연구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3. '내재적'의 의미에 대한 논쟁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의미 있는 학술적 논의는 주로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논쟁을 통해 이루어졌다.<sup>27)</sup> 고유환은 내재적 접근과 관련한 논의를 이렇게 한 마디로 정리한다.

*'내재적 접근에 관한 논쟁의 근본적 한계는 송두율이 밝힌 것처럼 북한연구를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으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고, 내재적의 반대말이 선험적이란 사실을 모르고 피상적인 논쟁을 한 것이다.'*<sup>28)</sup>

송두율은 "'내재적'(immanent)이라는 뜻은 우리 인식이 경험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강조한다'고 지적하며, '내재적'이라는 뜻의 반대말은 '외재적'(extern)이 아니라) ... '선험적'(transzendental)'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29)</sup>

그러나 제성호는 송두율의 언급을 배척한다. 우선, '내재적'의 반대 개념에 대해 이렇게 정리한다.

*'내재적(internal) vs 외재적(external) : "어떤 대상(활동) 내부('안'의 시각)에서 그 대상(활동)의 본질을 규정하는" 입장'*

*'내재적(immanent) vs 초월적(transcendental) : '윤리적 . 미적 인식(감각)을 초월하는 '초월(론)적' 입장(칸트의 3대 비판서)을 배격하고 사물 자체의 내면적 본성과 인간 경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입장'*<sup>30)</sup>

내재적 접근 곧, 'immanent한 입장'을 '선험성보다는 후험성(경험성 = a posteriori)을 중시하며, 따라서 대상이 하는 말과 행동과 같은 경험적 요소로써 대상(활동)의 의미와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입장'<sup>31)</sup>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재적'의 반대말을 '선험적'으로 보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그렇지만 제성호는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은 'immanent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internal'의 의미(내부의 논리)를 더욱 강하게 가지면서, 아울러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sup>32)</sup>

'내재적'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안에 존재하는. 또는 그런 것.'<sup>33)</sup>을 의미한다. 영어사전에는 '내재적'이라는 우리말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가 5개나 된다. immanent; indwelling; inherent; intrinsic; internal이 그것이다.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한 혼동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도 아니어서 학자들마다 그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송두율도 예외는 아니다.

송두율은 명백히 내재적 접근을 '선험적 이념'에 의한 북한 사회접근'<sup>34)</sup>으로 표현했다. '내재

27) 내재적 접근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이해는 제성호, "내재적 접근법 : 본질과 문제점",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서울 : 전여옥의원실, 2006), pp. 30-34.

28)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p. 51.

29) 송두율, "북한 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방법' 재론", 『역사는 끝났는가』(서울 : 당대, 1995), p. 255.

30) 제성호, "내재적 접근법 : 본질과 문제점", p. 26.

31) 제성호, "내재적 접근법 : 본질과 문제점", p. 26.

32) 제성호, "내재적 접근법 : 본질과 문제점", pp. 28-29.

33)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 2014. 6. 13.

34) 송두율, "북한 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방법' 재론", p. 257.

적'의 반대말이 '선험적'인데 내재적 접근은 '선험적 이념'에 의한' 방법이라고 한다. 무언가 모순이 되는 것 같다. 독일 철학계에서는 그 의미가 뚜렷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내재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송두율부터 다소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험적'이라는 말에 대해 국어사전은 '경험에 앞서서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또는 그런 것.'<sup>35)</sup>으로 정의한다. 제성호는 이 말을 "경험 이전에'=a priori)'라는 뜻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경험 이전에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것이다.<sup>36)</sup>

송두율은 '경험의 한계 개념으로 설정된 '선험적 이념'<sup>37)</sup>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송두율의 용법은 국어사전 또는 제성호의 이해와는 약간 다른 뜻으로 이해된다. 독일 철학계의 깊숙한 논의를 이해하지 않으면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다.<sup>38)</sup>

내재적 접근에 대해 송두율은 '전체주의나 산업사회이론이 근거하는 '선험적' 입장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도 했다.<sup>39)</sup> 내재적 접근은 선험적 입장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언급에서도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전체주의나 산업사회이론'은 송두율이 사회주의 연구에 내재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비판한 선행 이론이었다.

*'전체주의적 분석 시각은 '민주주의'(=시민적 자본주의)를 우선 절대적인 가치체계로 설정해놓고, 사회주의를 이에 대립되는 절대악으로 양분하는 단순논리 위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 전체주의 속성들이 소위 '자유세계'에 속하는 많은 나라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는 자체 모순도 논증하였다. 물론 이러한 소위 '자유세계' 속에 나타나는 전체주의적 모순은 '권위주의'라고 하여 전체주의와는 구별되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도 역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sup>40)</sup>

*'산업사회 내지 근대화 이론에 근거한 양 체제 수렴이론은 정치분석 위주의 전체주의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고정불변의 실체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양 체제의 공존을 전제한 상대주의적 그리고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토대로 주로 경제, 과학 및 기술을 중시하면서 자본주의(전체주의 이론에서처럼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가 아니라)와 사회주의간의 체제비교를 분석의 중점적 과제로 삼았다. ... 산업사회론에 근거한 체제비교론은 결국 전체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즉 시민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척도로 분석해내려 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였다.'*<sup>41)</sup>

문제는 송두율이 '밖'으로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한데서도 확인되듯이 '내재적'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도 혼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immanent라고 표현하지만 internal의 의미를 가진다는

35)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 2012. 6. 13.

36) 제성호, "내재적 접근법" : 본질과 문제점", p. 27.

37) 송두율, "북한 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방법' 재론", p. 255.

38) 독일 철학계의 깊숙한 논의에 대해서 필자는 문외한이다. 차후 이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기대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내재적'의 뜻을 둘러싼 혼동이 여전함을 확인하였기에, 단어의 의미 분석을 통한 개념 정의가 아니라 내재적 접근을 통한 북한 연구의 구체적인 실례를 찾아 내재적 접근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9)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 109.

40)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p. 105-106.

41)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p. 106-107.



제성호의 비판이 일리가 있는 지점이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송두율의 정의를 보자.

*‘내재적 접근태도’ :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으로 즉 ‘안’으로부터 분석 비판하여,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이념과 정책의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이 사회가 이미 설정한 이념에 비추어 검토 비판해보아야 한다는 주장<sup>42)</sup>*

송두율은 스스로 ‘내재적’의 의미를 ‘안’으로부터라는 표현으로 제시했다. ‘내재적’에 대해 ‘선험적’ 또는 ‘밖’으로부터 양자를 반대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쪽 사회라는 인식대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나는 일찍이 ‘내재적’ 방법론을 제기 ... 우선 북쪽 사회가 어떠한 사회이고 어떠한 사회를 장래 지향하고 있는지를 그들 자신의 언어를 통해 이해하고 나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걸린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내재적 방법론의 골자 ... 아예 처음부터 ‘선험적이거나 ‘밖’으로부터 들이댄 척도로 북쪽 사회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뜻 ...<sup>43)</sup>*

이렇듯 여러 저술에서 송두율의 ‘내재적’이라는 말에 대한 표현은 약간씩 달라진다. 혹자는 이에 대해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때그때 바꾸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아쉽게도 송두율의 여러 저술에 대한 정밀한 비교 분석도 발견되지 않는다. 송두율의 여러 저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학술적인 결론을 내놓는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송두율도 독일 철학계의 개념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혼동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송두율 뿐이 아니다. 고유환도 때론 내재적 접근의 의미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

*‘내재적 접근법은 각국 사회주의에 내재하는 이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자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사회주의를 ‘밖’에서 들여다보는 ‘선험주의’적 태도와는 달리 자본주의와는 구별되는 사회주의 독자성은 물론 그 발전의 다양성도 인정하고 있다.<sup>44)</sup>*

‘선험주의’적 태도를 ‘밖’에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재적’의 반대말이 ‘외재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비슷한 표현으로 ‘선험적’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유환은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내재적의 반대말이 선험적이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sup>45)</sup>

또한 고유환에 따르면 ‘외재적 접근’은 ‘인류보편가치에 입각한 보편주의적 북한접근’<sup>46)</sup>이다. 그렇다고 하여 내재적 접근이 ‘인류보편가치에 입각’하지 않은 ‘북한접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유환이 북한연구방법론으로 ‘내재적비판적’ 접근<sup>47)</sup>을 제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채택한 접근법을 ‘인류보편가치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42)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 107.

43) 송두율, “북한 :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전망”, p. 116.

44)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pp. 49-50.

45)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p. 51.

46)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p. 29.

47) 고유환,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의 이해”,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의 이해』(서울 : 선인, 2006), pp. 22-23.

평가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내재적’의 의미에 대한 고유환의 이해는 ‘선험적 이념’에 의한 북한 사회접근<sup>48)</sup>이라고 표현한 송두울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내재적’의 반대말은 또 있다. 엔스 휘트만은 ‘통일 전 서독의 동독 연구’를 다루면서 내재적 접근을 ‘반공주의’와 대비했다.<sup>49)</sup> 그렇다면 ‘내재적’의 반대말은 ‘반공적’이 되고, 곧, ‘내재적’의 의미는 「비반공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밖’에서 들여다보는 ‘선험주의’적 태도’는 반공적이고 그렇지 않은 접근은 반공적이지 않다는 논리 또한 어불성설이다.

결국 학계에서는 ‘내재적’의 의미에 대해 전혀 합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내재적 접근을 우리 학계에 소개한 송두울마저도 그 의미에 대해 저술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이제 더 이상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논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혹 향후에 진행되더라도 혼동은 계속 될 것이다. 독일 철학계의 논의를 심도 있게 이해한 바탕에서 진행되는 ‘내재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논쟁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논쟁보다는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북한 연구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48) 송두울, “북한 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방법’ 재론”, p. 257.

49) 엔스 휘트만, 한운석 옮김, “반공주의 대 내재적 접근? - 통일 전 서독의 동독 연구”, 『역사비평』 2011, 여름.(서울 : 역사비평사, 2011).

### III.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의 탐구

#### 1. 내재적 접근에 대한 4가지 서로 다른 이해의 지평

이미 학계에서는 내재적 접근에 대한 많은 논쟁이 진행됐다. 2003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은 『북한연구방법론』<sup>50)</sup>을 펴내면서 내재적 접근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다.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 연구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은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고, 구갑우,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은 내재적 접근을 연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연구방법론』 이후에도 내재적 접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발견되지만 논의의 편익상 『북한연구방법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내재적 접근에 대한 학계의 서로 다른 이해의 지평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 연구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에서 내재적 접근과 관련된 논의는 강정인의 비판에 대한 송두율의 반비판과 김연철, 이종석의 견해로 구성되어 있다. 구갑우,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은 또 다른 관점에서 내재적 접근을 다룬다. 차례로 핵심만 살펴보면 같은 ‘내재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4가지 서로 다른 이해가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 ① 내부 논리를 그대로 소개하는 연구

강정인은 사회주의사회를 연구할 때, 외재적 접근법은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의 가치나 기준만을 도입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만을 도입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편협하게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북한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고심한 나머지, 이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북한체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논리를 전개한다고 본다. 또한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가볍게 지나치거나, 혹은 그것을 필연적인 역사적 산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강정인의 비판은 내재적 접근을 북한의 내부 논리를 그대로 소개하는 연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두율은 이에 대해 북한의 주체적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여 이를 위해 어떠한 이론과 실천을 전개해나가는가를 ‘스스로’가 이야기하도록 하는 내재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박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송두율의 반박은 북한의 내부 논리를 그대로 소개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고, 강정인의 비판이 타당하다. 만약 송두율이 다르게 반박했다라면, 예컨대, 외재적 접근 곧, 외부에서 외부 기준을 잣대로 하는 연구는 그 나름의 의의가 있지만 북한의 내부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곤란하다는 정도로 반박했다라면 논쟁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 ② 내부 논리를 소개하고 (외재적) 비판이 포함된 연구

50) 파주 : 한울, 2003.

51) 이하 관련 내용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파주 : 한울, 2003), pp. 18-24, 282-283를 정리한 것이다. 집필의 편익을 위해 일일이 각주 처리를 하지 않았다.

김연철과 이종석은 공히 내재적 접근이 너무 이데올로기 중심적이고 외재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강정인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바꿔 말하면 송두율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이렇다. 김연철은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원래부터 비판적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종석은 자신의 방법론은 ‘내재-비판적 접근론’이라며 새롭게 명명하여 내재적 접근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북한연구에서 결여된 실사구시적 연구자세와 기초 지식 없는 무분별한 이론의 개입, 일부에서의 무비판적 추종주의와 그 대칭으로서의 맹목적 반복주의 등에 대한 반테제로 제기된 것이 내재-비판적 접근론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내재적 접근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비판과 새롭게 명명된 내재-비판적 접근론의 비판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김연철과 이종석이 공히 외재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송두율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내재적 접근이 담아야 하는 비판은 외부적 기준에 의한 비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듯하다.

### ③ 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연구

일련의 비판에 대해 송두율의 반론은 비교적 뚜렷하다. ‘내재적 접근’은 북한 사회주의가 스스로 제시한 ‘이념’을 그 ‘경험적’ 성과에 비추어본다는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념’과 ‘경험’의 긴장관계를 드러내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송두율은 내재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의 층위로 나누어 소개하려고 한다. 따라서 같은 내재적 접근론자로 묶이는 김연철과 이종석의 견해와는 구분된다.

그렇지만 때로 송두율도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컨대 북한의 주체적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여 이를 위해 어떠한 이론과 실천을 전개해나가는가를 ‘스스로’가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은 북한의 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으로 나누어 고찰한다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

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념에 따라 경험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 이념과 달리 경험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 전자는 연구 대상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 표방하는 이념을 경험을 통해 더욱 입증하는 연구가 되어 버린다. 후자는 연구 대상을 내부 자료를 통해 비판하게 된다.

김연철과 이종석이 자신들의 내재적(비판적) 접근이 송두율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때,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을 전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송두율은 ‘내재적 비판’<sup>52)</sup>이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한다. 송두율 스스로는 자신의 연구를 후자 쪽으로 위치 지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내부 논리를 소개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

구갑우의 비판은 강정인과는 상이하다. 구갑우는 내재적 접근은 사회적 실재(reality)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라는 송두율의 취지를 인정한다. 비판적 접근을 고려하지 않

52)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p. 110-111.

고는 성립될 수 없는 접근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내재적 접근론자들에게는 이 비판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김연철과 이종석의 견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구갑우는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결여된 비판을 ‘비교’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구갑우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있다. 송두율 스스로 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연구로 내재적 접근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두율은 내재적 연구가 소련, 동구, 그리고 중국 사회주의 등과 상호 ‘비교’될 때만이 ‘신역사주의적’ 오류(즉 모든 역사적 사실의 ‘유일무이성’을 들어 다른 것과의 비교를 처음부터 아예 거부하는 태도)를 극복하면서 사회주의의 일반적 테두리 안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이의 구현의 특성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송두율의 견해는 내재적 접근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를 포함하는 연구라는 의미가 된다. 비록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같은 체제가 다른 잣대에 따른 비판은 포함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간접적인 비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어 버린다. 그렇지만 비교와 관련된 내용은 단편적으로 지적되고 있을 뿐 송두율의 견해 전반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송두율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는 결국 스스로도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해의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연구방법론』이 정리하고 있는 내재적 접근과 관련된 4가지 이해의 지평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내부 논리를 그대로 소개하는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재적 접근법은 사회주의 이념과 논리만을 도입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편협하게 이해(강정인)</li> <li>- 북한의 주체적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여 이를 위해 어떠한 이론과 실천을 전개해나가는가를 ‘스스로’가 이야기하도록 해야(송두율)</li> <li>- 내재적 접근이 외재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김연철, 이종석)</li> <li>-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가볍게 지나치거나, 혹은 그것을 필연적인 역사적 산물로 해석하는 경향(강정인)</li> </ul>
<p>내부 논리를 소개하고 (외재적) 비판이 포함된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재적’에는 원래부터 비판적이라는 의미가 내재(김연철)</li> <li>- 내재-비판적 접근론은 내재적 접근과는 다름(이종석)</li> </ul>
<p>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재적 접근’은 북한 사회주의가 스스로 제시한 ‘이념’을 그 ‘경험적’ 성과에 비추어본다는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이념’과 ‘경험’의 긴장관계를 드러내보일 수밖에 없음(송두율)</li> <li>- 내재적 접근은 사회적 실재(reality)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방법(구갑우)</li> </ul>

내부 논리를 소개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재적 접근론자들에게는 이 비판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를 '비교'를 통해 해결하려 함(구갑우)</li> <li>- 내재적 연구가 소련, 동구, 그리고 중국 사회주의 등과 상호 '비교'될 때만이 '신역사주의적' 오류를 극복하면서 사회주의의 일반적 테두리 안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이의 구현의 특성도 드러낼 수 있음(송두율)</li> </ul>
---------------------------------	--

표 1 ) 내재적 접근에 대한 4가지 서로 다른 이해

출처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파주 : 한울, 2003), pp. 18-24, 282-283를 표로 정리

## 2.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의 한정 : 이념-현실법 또는 목표-성과법

현 단계에서는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논쟁보다는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북한 연구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계에 병존하고 있는 내재적 접근의 4가지 이해의 지평 중 과연 어느 것을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으로 그 의미를 한정해야 할까?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제외하면 내재적 접근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유환과 송두울은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내재적 접근은 북한사회와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제시한 목표와 현실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자는 것이다.’<sup>53)</sup>*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사회주의 스스로가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실체와 기능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내재적 접근의 특징이 놓여 있다.’<sup>54)</sup>*

전자는 고유환의 이해이고 후자는 송두울의 언급이다. 단어는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활용한다면 내재적 접근이 북한연구방법론으로서 계속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는 송두울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하되 새롭게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 내재적 접근의 문제의식은 북한을 그저 북한의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제기한 목표와 이에 대한 달성 여부, 곧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을 1차 층위로서 이념, 목표와 2차 층위로서 현실, 성과라는 두 층위로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재규정한다. 따라서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를 1차 층위(이념, 목표)와 2차 층위(현실, 성과)로 분석하는 북한 연구 방법론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사회주의 스스로가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실체와 기능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내재적 접근의 특징이 놓여 있다.’<sup>55)</sup>*

‘사회주의 스스로가 설정한 이념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현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sup>56)</sup> 고유환은 이에 대해 ‘북한사회와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제시한 목표와 현실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분석’<sup>57)</sup>하는 접근으로 이해한다. 송두울의 설명과 고유환의 이해에서 알 수 있듯이 애초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의 의미는 두 층위로 이루어지는 연구였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53)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p. 54.

54)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988. 12.(서울 : 한길사, 1988), p. 109.

55)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 109.

56)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 107.

57)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p. 54.

구분	1차 층위	2차 층위
송두울의 표현	지향, 목적, 이념	달성, 현실
고유환의 표현	목표	현실, 성과
재정의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는 무엇인가?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에 대한 현실의 성과는 어떠한가?

표 2 )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의 두 층위

출처 : 저자 작성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문언적으로 보아 당연한 것인데도 그 동안 학계에서 간과되어 왔다. 이는 아마도 학계에서 북한 연구에서 두 층위로 이루어진 북한 연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재적 접근으로 분류되는 주요 학자들의 북한 관련 연구 저작들을 살펴보면 두 층위의 접근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놀랍게도 내재적 접근을 적용한 유일한 연구 성과물은 내재적 접근을 제기한 송두울 스스로가 진행한 사회주의 소련과 중국에 대한 연구뿐이다.

두 층위 분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송두울의 『소련과 중국 -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 . 농민 . 지식인』<sup>58)</sup>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상당히 난해하긴 하지만 신광영이 서평을 통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다.

『소련과 중국』은 ‘제1부’에서 ‘경험적인 자료를 통하여’ ‘소련과 중국에서 나타난 심한 노동자 계급의 분화는 노동자들 내에서 발생한 노동자간 불평등의 심화와 이질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밝혔다.

‘제2부 농민 연구에서 ... 농민은 노동자보다 소득이나 복지에서 열악한 지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 또한 농민 내에서도 지역과 개인에 따른 소득의 불평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제3부에서는 ... 공산당원도 지식인들에 의해서 과대 충원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 소련공산당이나 중국공산당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의 교육수준 향상과 현대화에 따라 ‘지식인의 당’으로 변화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1, 2, 3부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핵심은 각 사회계급들 내에서의, 혹은 사이의 평등화/분화(불평등화)의 문제이다. 기본적인 발견은 사회주의의 이념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살펴본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즉 평등을 사회주의의 기본이념으로 볼 때, 소련과 중국에서 나타난 역사적 경험은 기본이념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회로 본 것이다.’<sup>59)</sup>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8) 서울 : 한길사, 1990.

59) 신광영, “서평 『소련과 중국』- 송두울 저, 1989, 한길사 -”, 『경제와 사회』, 1999년 여름호(서울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9), pp. 245-247.



구분	1차 층위	2차 층위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는 무엇인가?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에 대한 현실의 성과는 어떠한가?
송두율의 『소련과 중국』	사회적 평등	. 노동자간 불평등의 심화와 이질화 . 노동자보다 열악한 농민의 지위, 농민 내 불평등의 심화 . 지식인의 당으로 변화하는 공산당

표 3 ) 송두율의 『소련과 중국』에 나타난 내재적 접근의 두 층위

출처 : 저자 작성

송두율은 내재적 접근을 통해 사회주의가 ‘기본이념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회’라는 결론을 내리고, 배경으로 ‘생산력 발전’ 전략이 ‘평등화전략’을 지배’하였다는 점을 제시한다.

송두율은 소련과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인 ‘사회적 평등’을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사회주의 스스로가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기본이념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회’라는 점을 밝혀냈다고 자부한다.

송두율은 북한 연구에 대해서도 두 층위의 분석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내재적 연구가 지녀야 할 ... 전제’로서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사회의 이념을 전제하고 이 이념이 정치·문화·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어떠한 구체적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내재적 비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sup>60)</sup>

따라서 북한에 대한 두 층위의 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연구는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한 용법은 송두율부터도 혼란스럽지만, 내재적 접근을 적용한 연구는 두 층위로 대상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흔히 내재적 접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연구는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북한 체제의 내적 논리를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북한에서 갖는 의미를 밝히는데 노력’<sup>61)</sup>한 연구인데, 내재적 접근으로 오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북한학자들의 저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아직까지 북한 연구에서 제대로 된 내재적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학계에서 내재적 접근으로 분류되는 연구는 엄밀하게 본다면 1차 층위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과 유사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본연의 내재적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 내재적 접근은 ‘지향과 목표’와 ‘현실의 성과’라는 두 층위의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북한 연구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비록 내재적 접근이 아닌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면서도 연구자 스스로 또는 외부의 규정에 의해 내재적 접근으로 오해된 연구자들의 접근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62)</sup>

논의를 종합하면서 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연구를 내재적 접근의 본래

60)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p. 110-111. 송두율은 이와 함께 ‘소련을 비롯한 동구, 중국 등 여러 사회주의와의 비교연구’도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곳.

61) 광영욱, 『북한 헌법상 주석의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 :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 2.

62) 이 연구들을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과 구분하여 「유사 내재적 접근」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적 의미로 한정하고자 한다. 송두율은 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연구와 함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도 포함하고 있지만 후자는 개념의 혼란상을 더할 뿐이어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재적 접근을 '내재적 비판'으로만 보지 않고 연구 대상의 이념이 경험을 통해 입증되는 것도 포함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도 환기하고자 한다.

### 3. 내재적 접근에 따른 북한 연구를 표방한 연구의 검토

송두울의 『소련과 중국』을 제외하고 과연 내재적 접근에 따른 북한 연구는 존재하는가? 내재적 접근을 통한 북한 연구의 실제적인 사례를 찾아보도록 한다. 2018년 필자는 북한 연구에서는 본래적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연구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논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내재적 접근법 기초했다고 직접 표방한 연구를 한 편 발견했다. 방인혁·손호철의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북한의 민주주의론 연구”<sup>63)</sup>가 그것이다.

방인혁·손호철은 ‘내재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북한의 민주주의론을 살펴’ 본 결과 ‘북한의 민주주의는 자신들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많은 요소들이 아직 북한 사회에 확립되지 않았거나 현재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결론을 내린다.

방인혁·손호철의 글은 북한이 북한 독자의 논리에 의거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목표와 지향으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제한다. 최대한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그 적용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북한 민주주의론 연구를 위해서 해명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한 것도 유의미하다. 아쉬운 점은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 곧 이념-현실법 또는 목표-성과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방인혁·손호철은 북한의 민주주의는 절차성의 부재, 양적 목표 달성 위주의 혁명방법, 정치, 경제, 사회적 약점 등으로 인해 목표와 지향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방인혁·손호철이 들고 있는 논거가 틀렸거나 논리적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절차성의 부재, 양적 목표 달성 위주의 혁명방법, 정치, 경제, 사회적 약점 등 북한의 민주주의가 목표와 지향에 비해 미흡하다고 보는 논거가 북한 외부의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문제의식은 이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에서 바깥의 기준을 사용하는 혼동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방인혁·손호철의 글은 『북한연구방법론』이 정리하고 있는 내재적 접근과 관련된 4가지 이해 중 내부 논리를 소개하고 (외재적) 비판이 포함된 연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방인혁·손호철은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리고 있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과 경계,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던 현지도,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가 가진 가능성 등은 현재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글의 전반적인 기초를 살펴보면 내재적 접근이 비판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긍정적, 부정적 결론을 모두 균형 있게 제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방인혁·손호철의 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바로 대중동원식 사업방법에 대한 언급이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각성을 우선으로 하는 대중동원식 사업방법은 그 자체의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주로 하는 동원은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관성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야기하게 되어 결코 항구적으로 실시되기는 어렵고, 특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과학기술의 발전보다는 양적 목표 초과달성 등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게 되기 쉽*

63) 『민주주의와 인권』 Vol.13 No.2, 광주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다는 점이다. 64)

이 부분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각성을 우선으로 하는 대중동원식 사업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사상적 각성은 대중동원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목표를 일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사상혁명이나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같은 북한의 담론들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관성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야기하게 되어 결코 항구적으로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거나,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과학기술의 발전보다는 양적 목표 초과달성 등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게 되기 쉽다는 비판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지점이다.

물론 제대로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북한 내부 자료를 통한 실증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은 인정할 수 있으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또는 성공했다를 검증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필자도 법무해설원을 통한 북한의 법교육을 연구하면서 방인혁·손호철과 유사하게 법무해설원의 열성적인 활동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론하여 제기한 바 있다.

*법무해설원의 활동에서 사회주의로동법과 관련한 법해설선전사업을 실감있게 진행하여 480분 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늘 중요하게 제시된다. 법무해설원의 일상적인 열정적인 활동은 오히려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법무피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공동체 전 영역에서 북한의 일상을 살펴보더라도 정해진 업무 외에 일일, 주간, 월간 총화와 학습, 그리고 혁명적인 문학예술 관람 등 아침부터 밤까지 '혁명'으로 일관하는 국가공동체 일반 구성원들의 삶을 고려해보더라도 그렇다. 법무해설원이 혁명적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법무생활의 이름으로 국가공동체 일반 구성원들의 삶은 혁명적 피로감이 누적되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65)</sup>

북한이 내세우는 법무해설원과 관련된 이념 또는 목표가 과연 어떻게 현실 또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을 지를 북한 내부 자료를 통해 연구해야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에 따른 북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추론이나 방인혁·손호철의 추론은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의 2차 층위를 규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

64) 방인혁·손호철,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북한의 민주주의론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Vol.13 No.2(광주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p. 231.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둘째, 북한의 소설이나 영화 또는 TV 드라마에서 자주 소재로 등장하는 헌신적인 공장당 비서와 근로자들에 대비되는 관료주의적이고 기술만능주의적인 지배인, 기사장 사이의 갈등의 대립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혁명적 사업방법이 가장 주요한 퇴치대상으로 삼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청산한 것에도 실패했음을 엿볼 수 있다.*

65) 권영태, “북한의 법교육에 관한 연구”(서울 :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 100.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송두율, 『소련과 중국』의 이념-현실법

송두율이 북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을 제안하면서 정작 내재적 접근을 한 연구 대상은 『소련과 중국』<sup>66)</sup>이다. 그렇다면 과연 송두율은 『소련과 중국』에서 어떻게 내재적 접근을 했는가? 제목에서 보듯이 송두율은 소련과 중국을 비교하고 있다.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을 비교를 뺀 이념-현실법 또는 목표-성과법으로 한정할 때 따라 비교 부분은 제외하고 이념과 현실을 비교하는 부분만 살펴보기로 한다.

『소련과 중국』은 ‘서문 : 소련과 중국 두 사회주의에서의 평등의 문제’로 시작한다. 제1부 노동자는 모두 11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1. 산업생산의 조직화
2. 기업의 관리와 조직
3. 산업노동력의 범주화
4. 산업노동자의 충원
5. 산업여성
6. 임금형태
7. 임금정책에 따른 소득격차
8. 노동입법
9. 최저임금
10. 사회적 소비기금
11. 노동자계급 :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인가 아니면 성립 가능한 개념인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논문이나 학술 서적의 목차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노동자계급 :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인가 아니면 성립 가능한 개념인가’가 일종의 소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책은 ‘제1부 노동자’에 이어 ‘제2부 농민’, ‘제3부 지식인’으로 이어지는데, 각 부 모두 마지막 절이 일종의 소결론에 해당한다. 서문의 문제제기에 따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맨 뒤에 배치되어 있다. 서문은 ‘평등의 문제’를 제기했기에 소결론에 해당하는 노동자계급이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인가 아니면 성립 가능한 개념인가’ 하는 물음은 평등 문제와 연관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아왔듯이, 노동자들은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계속하여 경제적 분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체의 국유화(사회화가 아님) 및 일반행정·경제·기술분야 간부들의 지도에서부터 임금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도적’ 계급, 그리하여 사회주의에서 특별한 계급으로 간주되는 ‘노동계급’은 소련에서 “붉은 루블의 지휘” 아래서 사회적 축적의 객체로 전략되고 말았다.*

*문화혁명기간에 생산관계의 변혁을 통한 중국의 평등화전략,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소련의 평등화전략을 마치 서로 대립되고 배타적인 전략 또는 원칙이나 되는 것처럼, 그중 한쪽만을 이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적 산업국가인 소련에서도 사회주의적 개발도상국가인 중국에서도 노동자들은 평등이*

66) 서울 : 한길사, 1990.

라는 규범적 목표달성을 현실화하는 정책의 구체적 제한성 때문에 비슷한 조건 속에 있다.<sup>67)</sup>

몇 번을 다시 읽어 보아도 송두율은 소련과 중국 두 사회주의국가에서 노동자계급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서문에서 제기한 ‘평등’이 두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현되지 못했다는 결론이 된다. 그렇지만, 단서를 붙인다.

그러나 양국에 현실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소련과 중국의 ‘노동계급’을 ‘성립될 수 없는 개념’으로 격하시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착각이다. 비록 ‘노동계급’이 일상성, 기회주의, 냉소적 자세 속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이들 양국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로 미루어 볼 때 ‘소련의’ 노동자들이 ‘미국의’ 노동자처럼 된다는가, ‘중국의’ 노동자들이 ‘일본의 노동자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힘들다.<sup>68)</sup>

소련과 중국, 두 사회주의국가에서 노동자계급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불평등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렇게 ‘격하’하지는 말자는 결론이다. 노동자와 농민과 지식인 모두를 검토한 후 내린 결론에 해당하는 ‘전망’에서는 내린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를 이끌어온 문제제기는, ‘현존 사회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전체 사회 지향적으로 구상된 ‘대안’의 실제적인 효력범위를 검증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의 중요한 사회주의의 규범적인 지향목표로서의 평등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에 즉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

정치와 경제, 생산 관계와 생산력,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의 지속적 상호관계를 우리는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내에서의 평등화와 차등화의 긴장관계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예를 들어 사회성원들 간의 소득 분배에 있어 절대적 평등 혹은 절대적 불평등이 논리적으로 사유 가능하고 또 방법론적으로 가정될 수도 있지만, 그로부터 어떤 선형적인 체제 논리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종종 비속하기 그지없는 자료로 느껴지는 ‘현존 사회주의’의 ‘성과물’이 장래 일어날지도 모를 실망에 대비하기 위해 역사적 연속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간의 일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순의 인식은 실망일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위안은 남아 있게 마련이다. 즉 미래를 위한 냉철한 전망적 선택은 항상 쓸모있고 또 필요한 교훈을 동반하기 때문이다.<sup>69)</sup>

이러한 모순적인 결론은 ‘서문’으로 다시 돌아가 『소련과 중국』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겨우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중·소분쟁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두 사회체제간의 이러한 분열과 더불어 나타난, 사회주의에로의 ‘올바른’ 길에 대한 논쟁은 특히 중국에서의 문화혁명 기간 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서방세계의 ‘좌파들’ 간에 자기네들의 정치적 논쟁에서 충분한 재료가

67) 송두율, 『소련과 중국』(서울 : 한길사, 1990), pp. 111-112.

68) 송두율, 『소련과 중국』, p. 112.

69) 송두율, 『소련과 중국』, pp. 222-223.

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대립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부수 현상 중의 하나는 무비판적인 체제존재론 (Systemontologie)들의 출현이었는데, 이 이론들은 결국은 맹목적인 체제옹호론 또는 선입견에 찬 비난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10월 혁명 이래로 사회주의적 정책은 평등이라는 문제를 항상 평등의 실현 또는 제한의 구체적·물적·정치적 조건들 간의 관련 속에서 다루어왔다.

이하의 연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두 사회의 사회주의에서의 평등 문제에 대한 경험적 검토에서 출발할 것이다.<sup>70)</sup>

송두울은 사회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맹목적 체제옹호 또는 선입견에 찬 비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결론에 해당하는 ‘전망’을 통해 송두울은 내재적 접근을 통한 연구 결과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 간의 일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순의 인식은 실망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송두울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 간의 일치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소련과 중국에서의 평등문제에 대한 이러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자료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연구대상에 관한 지배적 이해들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sup>71)</sup>

‘서문’에서 송두울은 ‘내재적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독일의 학문 풍토 또는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간의 일치’를 믿’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최소한 송두울의 문제의식을 볼 때 내재적 접근을 통한 소련과 중국 연구를 할 때 송두울의 주관적 인식에서는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간의 일치’가 과연 그러한지 ‘경험적’으로 연구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우리 학계에 내재적 접근이 소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셈이다.

송두울은 소련과 중국의 평등에 대해 과연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간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경험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제1부 노동자’ 편에 등장하는 표만 해도 무려 39개에 달한다.<sup>72)</sup> 표 번호가 없는 표도 다수 있다.<sup>73)</sup> ‘광범위한 자료로 하여금 스

70) 송두울, 『소련과 중국』, pp. 9-10.

71) 송두울, 『소련과 중국』, p. 10.

72)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 소련과 중국에서 노동자·사무원의 여성 비율(%)

표2 소련과 중국의 일부 산업분야에서 여성 비율(%)

표3 60년대 후반 소련산업의 노동력 질에 따른 남성과 여성 비율(%)

표4 소련산업 내 주요 직책에서의 여성 비율(%)

표5 소련과 중국의 남성 및 여성 노동자의 시간예산(평균근무일)

표6 상해의 동일수준 노동자들의 임금형태에 따른 격차(1957, 월급 : 원)

표7 소련 ‘엔지니어-기술노동자’ (ITR)의 소득구조(1961, 1970)

표8 소련 노동자의 월임금 내역

표9 소련에서 폴호스를 제외한 국민경제부문의 월평균소득 순위

표10 중국 국민경제부문의 월평균소득 순위



스로 말하도록 하계' 한다는 것은 내재적 접근이 연구 대상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내세우고 있는 이념 또는 목표에 대비한 현실 또는 성과의 대비를 의미한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겠다.

- 
- 표11 소련 여성의 경제부문별 종사비율  
 표12 중국의 일부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  
 표13 소련의 산업별 임금격차(1928~65)  
 표14 1930년대 중반 중국의 소비에트지역(汀洲), 상해, 만주지역의 산업별 임금격차  
 표15 1950·1952·1956년도 중국의 산업간 임금격차(최고 임금수준 : 100)  
 표16 소련과 중국의 산업별 임금수준 순위비교  
 표17 소련과 중국의 산업분야별 임금상승률  
 표18 1962년 소련산업의 임금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평균임금에 대한 %)  
 표19 소련 산업에서 노동자·엔지니어·기술노동자·사무원간의 소득비교(노동자 : 100)  
 표20 1965년도 중국 산업의 임금과 봉급  
 표21 1959년 소련 산업의 기업등급에 따른 봉급격차  
 표22 1956년 중국 산업의 기업등급에 따른 봉급격차  
 표23 1928·1931년도 소련 금속공업에서의 임금상관 계수  
 표24 소련 산업의 지역간임금상관계수  
 표25 소련 공화국들간의 임금격차  
 표26 1956년도 중국 일부지역의 지역별 임금격차  
 표27 중국의 경제구역에 따른 산업생산의 비율  
 표28 중국의 1981년도 1/4분기 가족 일인당 월소득에 따른 도시분류  
 표29 1980년 중국의 성별 임금격차  
 표30 소련 산업의 1968년 생계비와 임금의 지역별 격차  
 표31 소련 국민경제에서 최저임금과 평균임금간의 관계  
 표32 소련 노동자가족의 총소득구조의 변화  
 표33 소련의 사회적 소비기금 재정구조의 변화  
 표34 소련과 중국 국가재정의 사회·문화 분야 지출 구조  
 표35 소련의 사회적 소비기금의 지출구조  
 표36 소련 연금수혜자의 수(콜호즈부문 제외, 연말 결산)  
 표37 소련의 양로연금  
 표38 소련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  
 표39 소련의 상해자연금  
 73)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각주 65 소련에서 여성들이 집에 있거나 또는 가사일을 돌보는 이유(1975년)  
 각주 83 임금개정 전후 여러 임금제도에 따른 소련노동자들 분포(1956~60)(단위 : %)  
 73쪽 도네즈-그루세프스크 노동조합의 시간임금률  
 76쪽 1962년 8월 6개의 임금등급에 따른 총노동자들의 분포비율  
 76쪽 중공업과 경공업의 기본임금 상관계수  
 77쪽 1956~60년의 임금개혁에 의한 임금격차의 감소  
 77쪽 1972년 일부 산업분야에서의 기본임금의 상관계수  
 77쪽 7개의 임금등급간의 상관계수  
 78쪽 1950년 9월 임금점수제 실시 이후 최고등급과 최하등급간의 격차비율  
 78쪽 임금개혁 이후 8개의 임금등급간의 상관계수  
 97쪽 1977년과 1978년 북경 일부 식료품 가격상승  
 109쪽 소련과 중국에서 일부 진찰비와 진료비

#### IV. 사회주의로동법을 예시로 한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의 방법 구체화

##### 1. 북한법에 대한 이념-현실법의 적용

북한 연구의 각 분야에서 내재적 접근이 실제로 두 층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그 내용이 풍부해져야만 진정으로 내재적 접근의 의의에 대한 메타 차원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내재적 접근을 우리 학계에 처음 제시한 송두울을 제외하면 내재적 접근 본연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송두울의 연구도 소련과 중국의 경우에 대한 분석이었다. 정작 송두울도 사회주의 국가 간의 비교를 내재적 접근에 포함시키는 등 혼동을 겪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념-현실법 또는 목표-성과법으로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를 재규정한 이후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시론적인 실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의 각론적 적용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각론적인 적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실제적인 적용 같은 다른 표현도 무방하다.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이 사회주의 또는 북한에 대한 두 층위의 분석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때 내재적 접근에 따른 북한법 연구의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북한법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1차 층위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법의 연구는 주로 조문의 소개와 비교, 제정 또는 개정 배경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뤘다.

조문의 소개는 1차 층위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문의 의미내용에 대한 해석적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층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를 살피면서 북한법 연구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기로 한다.

*‘내재적 접근은 북한사회와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제시한 목표와 현실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자는 것이다.’<sup>74)</sup>*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사회주의 스스로가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실제와 기능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내재적 접근의 특징이 놓여 있다.’<sup>75)</sup>*

북한법에 대한 내재적 접근의 적용은 우선 법의 형식으로 나타난 ‘북한 지도부가 제시한 목표’이자 ‘지향’ 또는 ‘목적’을 탐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북한법이 제시한 목표와 지향을 밝히는 연구가 곧 북한법의 1차 층위에 대한 분석이 된다.

북한법으로 나타난 ‘북한 지도부가 제시한 목표’이자 ‘지향’ 또는 ‘목적’이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곧, ‘현실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북한법의 2차 층위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정리하면 표와 같다.

74)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p. 54.

75)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 109.

구분	1차 층위	2차 층위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는 무엇인가?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에 대한 현실의 성과는 어떠한가?
북한법 연구 적용	북한법이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는 무엇인가?	북한법이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에 대한 현실의 성과는 어떠한가?

표 4 ) 북한법 연구에 대한 내재적 접근의 적용

북한법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이렇게 정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다음 단계로 제기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사회주의로동법을 예시로 들기로 한다.

## 2. 사회주의로동법에 대한 1차 층위적 접근

사회주의로동법은 혁명을 통해 탄생했고 여전히 혁명중인 북한의 국가 특성을 잘 보여주는 법이다. 사회주의로동법에 표명된 1차 층위는 명확하지만, 이에 대한 2차 층위의 연구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북한법이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1차 층위에 대한 접근은 우선, 북한법의 조문이 법으로 표현된 북한의 지향과 목표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주의로동법<sup>76)</sup> 제1조를 보자.

*제1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

이 조문에 대해 내재적 접근의 연구방법을 적용하면 과연 북한이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를 통해 어떤 지향과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가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강조한 표현은 마치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의 표현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연히 북한의 근로자들 중에 스스로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상의 노동에 대해 누구나 거창하게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일한다는 자부심을 부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는 단정적 표현은 어떻게 보더라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제1조의 전단은 노동의 성격에 대한 언급이고, 후단은 근로자들의 노동에 태도에 대한 언급이다. 법학에서 각 조문 간의 배열 순서에 따른 위상과 관계에 대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지만 법의 제1조는 해당 법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최소한 총론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일 수 없는 내용을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표현해놓은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법학계의 이해는 북한법을 대체로 명목적 또는 장식적 헌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해는 북한법은 규범력이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 논문에서는 내재적 접근의 북한법 이해를 시도하기 때문에 다른 탐구를 시도한다.

*부문법과 규정들을 제정완성하는것은 사회주의헌법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법규범과 규정을 제정완성하는것은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한 법체계를 완성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이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움직이고 생활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실생활에 구체화하고 현실화할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 부문법과 규정들을 제정완성한다는것은 한 측면으로는 아직 규제되지 않은 사회관계의 개별적인 부문들을 헌법에 기초하여 새로 규범화하며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미 있는 부문법규범과 규정들을 헌법의 요구에 맞게 고치는것을 의미한다. 부문법과 규정들을 제정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이 두가지 사업들은 다 사회주의헌법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부문에 철저히 그리고 정확히 구현하기 위한 립법적요구들이다.<sup>77)</sup>*

76) 원 명칭은 국호가 들어가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법학자의 언급이다. 북한에서 개별법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움직이고 생활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론에 비추다면 당연히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도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의 요구대로 북한의 모든 사회성원들, 그 중에서도 근로자들이 움직이고 생활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 된다.

곧, 근로자들이 노동의 성격에 대해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임을 인식하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나)' 활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하도록 하는 요구를 표현했다는 의미이다.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이해는 당시 사회주의로동법 제정 전후 김일성의 교시를 보면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로동법을 발표하게된 주요한 의도는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내어 일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sup>78)</sup>

김일성에게 사회주의로동법은 '전적으로 사람과의 사업, 사람들의 로동생활을 규제한 법'으로 '로동조직 원칙과 로동생활에서 지켜야할 행동규범'을 '전면적으로 밝'힌 법이다. 김일성은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모든 사람들이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게 되고 온 사회에 로동을 사랑하는 혁명적 생활기풍이 서게 되며 물질적 부의 생산이 빨리 늘어나게 (된다)'고 보았다.<sup>79)</sup>

김일성은 당시 토지법과 함께 로동법을 발표하면서 해방 직후 발표된 로동법령이 근로자들을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로동법령이라면 사회주의로동법은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사회주의적인 로동법이라는 의의를 부여했다.<sup>80)</sup>

그런데 김일성에게 사회주의로동법 제정의 근본 목적<sup>81)</sup>은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내어 일하도록 하려는데 있었다.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가 전단에서 노동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후단에서 근로자들의 태도를 언급한 것은 김일성이 이 법을 제정한 목적과 정확히 연결된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기 위한 공산주의교양독본이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준칙입니다."*<sup>82)</sup>

김일성은 사회주의로동법을 공산주의교양독본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로동법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도록 더 잘 교양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77)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1), pp. 144-145.

78) 『김일성저작집』 33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202.

79) 『김일성저작집』 33, p. 205.

80) 『김일성저작집』 33, p. 201.

81) 김일성은 '의도'라고 표현했다.

82) 『김일성저작집』 33, p. 204.

하고 있다.<sup>83)</sup>

사회주의로동법이 교양의 독본이기 때문에 법 제정 이후에 필요한 과제는 정치사업과 법적 통제이다.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에 표현된 대로라면 「이미」 북한에서 노동의 성격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그런데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법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김일성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이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되지마는 아직 노동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노동이 생활상 제일차적요구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김일성은 국가에 대해서도 ‘바로 이러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다.<sup>84)</sup> 사회주의로동법에 대한 정치사업은 해석침투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로동행정일군들이 하여야할 중요한 정치사업은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노동규률규정을 근로자들속에 끊임없이 해석침투하며 대중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sup>85)</sup>*

곧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에서 언급된 노동의 성격과 근로자들의 태도는 이미 확립된 기정 사실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새로운 사회발전단계에 맞추어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석 침투’시키려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한 해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문의 표현방식과 상관없이 조문이 의도하는 바는 곧 북한이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를 통해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성격과 근로자들의 태도와 관련된 지향과 목표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6)</sup>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로동을 사랑하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공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공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노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로동법 제14조의 내용이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는 법조문의 표현은 모든 근로자를 혁명가로 보는 북한법의 태도<sup>87)</sup>에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모든 근로자가 혁명가 처럼 일할 것을 주문한다. 이것이 북한법의 목표이다. 여기까지가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에 대한 1차 층위의 분석이다.

83) 『김일성저작집』 33, p. 181.

84) 『김일성저작집』 33, p. 203.

85) 『김일성저작집』 3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05.

86)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의 해석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서울 : 이매진, 2011), pp. 168-172를 참조.

87) 북한이 모든 근로자를 혁명가로 보는 태도는 북한이 일종의 혁명조직(혁명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사회주의로동법에 대한 2차 층위적 접근

법 제정 이후 법이 표방한 지향과 목표가 현실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북한법에 대한 2차 층위의 접근이 된다.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의 경우 두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노동의 성격에 대한 북한법의 지향과 목표를 규정한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 전단에 대해 과연 북한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노동에 대해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 제2차 층위의 물음이 된다.

근로자의 태도에 대한 북한법의 지향과 목표를 규정한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 후단에 대해서는 제2차 층위의 분석이 제대로 되려면 북한의 근로자들은 과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가 하는 경험적 성과의 확인이 필요하다.

구분	조문 표현	제1차 층위의 분석	제2차 층위의 분석을 위한 물음
전단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노동의 성격에 대한 북한법의 지향과 목표	북한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노동에 대해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가?
후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	근로자의 태도에 대한 북한법의 지향과 목표	북한의 근로자들은 과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가?

표 5 )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에 대한 내재적 접근의 시도

「북한법이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에 대한 현실의 성과는 어떠한가?」를 탐구하는 2차 층위 차원의 분석은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다. 1차 층위에 대한 분석보다 더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 층위에 대한 분석의 어려움이 ‘자폐적 정의관’이라는 시각의 문제 때문이라면, 2차 층위에 대한 분석의 어려움은 주되게는 자료의 부족과 대상에 대한 접근 곤란성으로 인한 문제이다.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사회주의로동법 제정 이전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도 향후 다양한 양적, 질적 접근을 통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법 제정 이후의 목표 달성 여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관 곧 노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는 작업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참여관찰 등 직접 북한 사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문학예술작품을 통한 접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적 또는 질적 연구를 통한 방법이 채택될 수도 있다. 대중문화를 통한 연구도 가능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북한 영화를 통해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에 대한 2차 층위의 분석이 가능한지 시도해보고자 한다.

사회주의상업 영웅 정춘실을 다룬 영화 『효녀』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 최고지도자의 교시대로 새로운 가축을 키우려는 주인공에게 다른 ‘일군’들이 반론을 제기한다. 주인공은 교시의 내용을 강행하기 위해 일단 혼자서 무리하게 일을 한다. 결국 감동한 다른 ‘일군’들이 주인공과 함께 한다는 내용이다.

영화를 통해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가 의도하는 목표 달성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는 북한이 「저 정도로 한 개인이 몸과 마음을 혹사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는 목표를 내건 사회」라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곧 사회주의로동법이 추구하는 목표 곧, ‘근로자들’이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기를 목표로 하는 법적인 사명 부여는 현실에서는 몇몇 영웅을 통해서만 겨우 실현 가능한 것이다.

영화는 그나마도 주인공을 제외하면 다수의 일군들은 「어쩔 수 없이」 최고지도자의 교시를 수행하기 위해 일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주제사상은 주요 하부 주제의 하나로 인간개조를 들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도 일종의 인간개조를 목표로 한 법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영화를 통해 몇 사람의 영웅은 생겨날 수 있지만 전 인민에 대한 인간개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통해 보완되어야겠지만 예시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에 대한 내재적 접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6 참고)

1차 층위	2차 층위
북한법이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는 무엇인가?	북한법이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에 대한 현실의 성과는 어떠한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성격 규정과 태도의 제시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동관은 영웅대접을 받는 일부 ‘일군’들에게만 한정되고 있음.

표 6 )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에 대한 내재적 접근의 분석 결과

그런데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영화 『효녀』는 실화에 바탕하고 있는데, 「저 정도로 한 개인이 몸과 마음을 혹사」하는 ‘효녀’들이 실재하며 ‘효녀’들을 다라 다른 ‘일군’들도 「감화」되어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상태로 변화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sup>88)</sup> 만약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간접으로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이 규정한 ‘로동’의 성격에 대한 반증이 되어 북한법의 2차 층위에 대한 접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을 통해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북에서 살 때 자신이 하는 일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더 발휘했는가?」「스스로 혁명가라고 생각했는가?」 같은 물음을 던지면 아주 좋은 2차 층위에 대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법의 2차 층위에 대한 분석은 법학의 일반적인 주제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고, 더구나 분단 극복이라는 정책학의 성격을 띠는 북한학의 일반적인 성격은 북한법 연구에서도 예외일 수 없기에 그 필요

88) 북한 거주 시와 탈북 과정의 건강상의 문제로 취업과 근로가 어렵다는 연구는 상당수 제출되어 있다. 신미녀·김병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모형 개발 : 민관협력 의료지원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1권 제1호(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09) 등.



성은 인정될 수 있다.

앞서 방인혁·손호철의 연구에서 인용한 글은 사실 비슷한 접근법이다.

*둘째, 북한의 소설이나 영화 또는 TV 드라마에서 자주 소재로 등장하는 헌신적인 공장당 비서와 근로자들에 대비되는 관료주의적이고 기술만능주의적인 지배인, 기사장 사이의 갈등의 대립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혁명적 사업방법이 가장 주요한 퇴치대상으로 삼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청산한 것에도 실패했음을 엿볼 수 있다.*

공간 문헌을 비롯한 북한의 자료를 거꾸로 읽거나 디빙킹하여 북한의 현실을 유추하는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에 다른 2차 층위 접근법으로 확정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소설이나 영화 또는 TV 드라마를 통해 판단하는 북한의 현실은 대개 북한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점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내놓는 문학작품이나 대중 문화는 그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잘 나아가고 있는 영웅을 형상화한다. 비판이 가능한 지점을 현실로 인정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부분도 같은 취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다.

## V. 결론

이 논문은 내재적 접근의 본래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논쟁의 핵심을 평가하였다. 논쟁의 핵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크게 이적 시비, 방법론 인정 여부, '내재적'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다.

학계에서까지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적 시비가 진행된 데 대해 비판하였고, 오히려 내재적 접근은 제대로 된 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정보 생산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을 환기하였다.

방법론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분야별 학계와 학자마다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접근(법), 방법(론), 인식(론), 시각 등의 개념의 혼란상으로 인해 무의미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특정한 접근(법), 방법(론), 인식(론), 시각에 대해 과학적이라거나 이와 등치되는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살펴보면 내재적 접근이라는 표현에 대해 4가지 서로 다른 이해의 지평이 병존하고 있었다. 내부 논리를 그대로 소개하는 연구, 내부 논리를 소개하고 (외재적) 비판이 포함된 연구, 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연구, 내부 논리를 소개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가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내재적 접근을 내부 논리를 이념과 경험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연구로 한정했다. 송두윌이 제기한 문제제기에 충실하되 사회주의 국가 간의 비교를 포함하는 것은 제외하였다. 이념-현실법의 연구방법을 1차 층위로서 이념, 목표와 2차 층위로서 현실, 성과라는 두 층위로 접근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이념-현실법 또는 목표-성과법으로 명명했다.

이어 이념-현실법에 따른 적용의 시도로 사회주의로동법을 예시로 다루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혁명을 통해 탄생했고 여전히 혁명중인 북한의 국가 특성을 잘 보여주는 법이다. 사회주의로동법에 표명된 1차 층위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2차 층위의 연구는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 참고문헌

## 남쪽 문헌

## 법령집

장명봉 편, 『2011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 북한법연구회, 2011.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단행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 파주 : 한울, 2003.  
권영태,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서울 : 이매진, 2011.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서울 : 박영사, 2006.  
송두울, 『경계인의 사색』, 서울 : 한겨레신문사, 2003.  
송두울, 『소련과 중국』, 서울 : 한길사, 1990.  
이현휘, 『핵무기, 국제정치윤리, 그리고 북한 핵문제 - 레이몽 아롱의 「평화와 전쟁」을 중심으로』, 고양 : 이새의 나무, 2018.  
한희원, 『국가정보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 서울 : 법률출판사, 2008.

## 논문

권영태, “북한의 법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고유환,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의 이해”,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의 이해』, 서울 : 선인, 2006.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곽영옥, 『북한 헌법상 주석의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 :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권영태,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와 북한 헌법”, 『통일과 법률』통권 제3호, 서울 : 법무부, 2010.  
김근혜, 박규동, “북한 시각에서 바라본 국제 사이버안보질서: 정책담화모형(NPF)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vol.29, no.1, 서울 : 통일연구원, 2020.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박형중, “(서)독일의 동독연구에서 ‘전체주의’론과 ‘내재적접근’론”, 『북한연구학회소식』 제10호, 서울 : 북한연구학회, 1999.  
방인혁·손호철,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북한의 민주주의론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Vol.13 No.2, 광주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배종대, “통일과 북한헌법의 이해”, 『북한법률행정논총』 제7집, 서울 : 고려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89.  
송두울, “북한 :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전망”, 『역사비평』2001. 2., 서울 : 역사비평사, 2001.  
송두울, “북한 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방법’ 재론”,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 당대, 1995.

-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988. 12., 서울 : 한길사, 1988.
- 송두율, “연보 / 처음 그려보는 자화상”,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 당대, 1995.
- 신광영, “서평 『소련과 중국』- 송두율 저, 1989, 한길사 -”, 『경제와 사회』, 1999년 여름호, 서울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9.
- 신동룡, “북한의 이혼소송과 집단주의 법원리에 대한 내재적 이해-소설『벗』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2권3호. 서울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년.
- 신미녀 . 김병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모형 개발 : 민관협력 의료지원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09.
- 엔스 휘트만, 한운석 옮김, “반공주의 대 내재적 접근? - 통일 전 서독의 동독 연구”, 『역사비평』 2011, 여름, 서울 : 역사비평사, 2011.
- 이성로, “북한 社會不平等構造의 성격과 심화과정”, 서울 : 中央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6.
- 장명봉, “북한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법연구』 제5호, 서울 : 북한법연구회, 2002.
- 정용석, “북한조기붕괴설 부작용 차단과 내재적 접근의 이적논리”, 『북한』통권465호, 서울 : 북한연구소, 2010.
- 제성호, “‘내재적 접근법’ : 본질과 문제점”,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 서울 : 전여옥의원실, 2006.
- 차문석,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정책 : 소련·중국·북한의 생산성의 정치』,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기타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 북쪽 문헌

『조선말대사전 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6.



# 북한정치연구에서 담론분석:

✧ 실증주의와 역사주의  
그리고 관념론의 가능성과  
한계 고찰



김지훈(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정치연구에서 담론분석: 실증주의와 과학화의 가능성과 한계 고찰<sup>1)</sup>

김지훈(통일평화연구원)

“어느 고대 필사본의 한 구절을 옳게 판독해내는 것에 자기 영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생각에 침잠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 학문을 단념하십시오.”  
(막스 베버, 『‘탈주술화’ 과정과 근대 학문, 종교, 정치』)

1. 서론: 북한정치연구의 위치짓기

사회‘과학’(social science)에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적’ 엄밀성이 연구자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따라서 사회과학 내에서 정치학은 정치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자연과학적 도구를 차용해왔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는 건 당연한 논리이자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행하는 연구자의 소명의식이다.<sup>2)</sup> 이에 맞춰 여타 사회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학(political science)에서도 질적 방법론은 이제 양적 방법론에, 특히 계량적 방법론에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양적 연구에서 적용되는 과학적 추론(scientific inference)과 이에 따른 연구결과가 질적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전방위적으로 양적 연구 패러다임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하나의 ‘사실’, 아니 따라야 할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3)</sup> 본고는 이러한 경향에 맞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서로 보충하여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역으로 두 연구 간 차이를 더욱 명확히 보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sup>4)</sup> 또한 방법론적 일원주의(methodological monism)에서 벗어나 방법론적 다원주의(methodological pluralism)를 모색하고자 하는 최근 일련의 열린 자세<sup>5)</sup>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바는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모두에서 고민해야 하는 연구자의 태도와 목적에 관한 논의이며, 이를 현재 북한정치연구에 있어 담론연구의 연구경향을 통해 되짚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현재 북한정치 연구에서의 담론 분석의 갈래를 소개하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인신론적 고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함

1) 본고는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를 위한 발표문으로 미완성 초고입니다. 전체 논지와 관련해 문제 제기는 언제든지 감사히 받겠으나, 초고의 글이므로 다른 인용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2) 막스 베버(Weber), 『직업으로서의 학문』, 전성우 옮김 (나남출판, 2006). 17세기에 펼쳐진 과학혁명 은 모든 학문 분과에서 실증주의(positivism)가 담론을 지배함에 따라 인문학의 위기가 여러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학문이란 무엇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해당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본고는 넓게는 사회과학 좁게는 북한정치연구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묻고자 한다.  
3) King, Keohane and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4) Denzin and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1).  
5) Paul Feyerabend, *Against Method (4th edition)* (Brooklyn, NY: Verso, 2010).

의와 향후 북한정치 담론 연구의 방향성을 간단하게나마 고민해보고자 한다.

## 2. 북한정치 담론 분석에 대한 일고찰

### 1) 연구자의 이상(理想)과 자료/해석의 한계

북한정치를 두고 담론연구를 행하는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발화된 텍스트를 통해 발화자의 의중 혹은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북한 핵 담론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체계를 읽고자” 하는 경우이다.<sup>6)</sup> 이럴 때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택하는 텍스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화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북한 자료의 경우 양자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전자의 경우 지도층의 직접적인 언설이나 대화, 인터뷰를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 공식 기관지나 신문, 방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텍스트를 해석할 때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발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연구에서는 그 자료의 한계상 양자가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충 및 상보하며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예로 든 연구의 경우에도, “주요한 텍스트는 핵 담론과 관련하여 북한의 정부기관들이 발표한 문건들 - 예를 들어 성명, 비망록, 담화 등등- 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기관잡지인 『근로자』와 북한의 한 해를 결산하는 『조선중앙년감』의 기사와 논문, 그리고 조선로동당이 출간한 사전류와 ‘소설’로 정의하며 텍스트 간 차이가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sup>7)</sup>

텍스트 성격 상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정치사상 연구 방법론 논쟁 중 텍스트-컨텍스트 논의와 맞닿아 있다. 기본적으로 전자에 방점을 두는 학자는 발화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강조점을 두는 한편, 후자를 중요시 하는 학자는 발화된 맥락이 해당 발화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전자와 관련 정치사상 내 서양 고전을 두고 마치 기호학자처럼 문장과 문단의 배치와 숫자, 단어의 사용과 문장 부호 등까지도 고려하며 면밀한 분석을 행했던 현대 정치사상가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는 해석을 함에 있어 실제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저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의도를 내세우며 저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문장이라도 그 발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문장을 접하는 독자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안겨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sup>8)</sup> 북한정치연구에서 흔히 행해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처럼 발화자의 구분을 통해 비교연구를 행하는 방식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해석의 갈래에 흔히 제

6)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제17권 1호(2014), 206~7쪽.

7)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206~7쪽.

8) Leo Strauss, *Persecution and the Art of Writing* (Free Press, 1952).

9) 예를 들어,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2013), 29-56쪽. 이상숙, “북한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의 특징: 김일성-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2019), 85-103쪽.

기되는 비판은 해당 화자, 더 나아가 그 의도에 대해 연구자는 이미 일정한 판단을 내리고 텍스트 분석에 임한다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이 연구자 본연의 관점이 연구 내용에 반영되어 ‘과학’으로서의 엄밀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과 맞닿아있다. 북한 작치연구에서 그 예시를 찾아보면, “북한의 미디어, 문헌, 공식발표 등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북핵 위협에 관한 대응방안을 당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들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한계를 두고 1960년대 서구권에서는 ‘언어적 전환’이 일어나며 텍스트 해석의 엄밀성이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sup>11)</sup> 이후 우리에게 익숙한 미셸 푸코의 “에피스테미(episteme)”,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의미의 땅(web of meaning)”,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의 “생활 세계(life world)”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담론 연구 방식이 개진되었다.<sup>12)</sup> 정치사상 분과, 좀 더 넓게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 내에서는 텍스트를 사회적 “맥락에 위치시키는” 일로 과거의 어떤 인물이 특정한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 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전개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의 내용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화자의 표현이 당대에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언어 놀이”와 “발화 행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sup>13)</sup> 이렇게 당대의 언어적 컨텍스트를 (재)구성해 발화자의 언어를 맥락화하는 방식은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줄어드는 한편, 해석학에서 제시되는 대로 “감정 이입”이라는 신비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증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후 ‘지성사’라는 방식으로 여러 학문 분과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sup>14)</sup> 이때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더 이상 텍스트를 얼마나 잘 해석해 내느냐에 있지 않다. 오히려 해당 텍스트가 위치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좀 더 생생하게 구현해내는데 있다.

북한정치연구에서 담론 분석을 행하는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 방식의 차이가 간과되어 온 듯하다. 혹은 두 해석의 갈래 모두 중요하기에 동시에 수행되어 온 경우가 많은 듯하다. 관련해서 임수진에 따르면, “북한의 공적담론을 중심으로 한 담론 연구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발전되는 분야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행해온 방식은 “단어들의 배열과 조합을 담론발생의 과정과 연계하여 살펴

10) 허재영, 홍용표, “김정은 시기 북한 핵 담론의 지속과 변화,” 179쪽.

11) 신동일, “언어학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전통, 그리고 비판적 담론연구의 출현,” 『질적탐구』 4권 3호 (2018), 5-11쪽. 해당 논의와 이어졌던 철학적 논쟁과 관련해서는 Paul Rabinow and William M. Sullivan (eds.), *Interpretive Social Science: A Second Look*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장세룡, “언어와 문화로의 전환과 역사학 연구의 방향,” 『계명사학』 12권 (2001), 141-168쪽.

12) Ted Hopf, “Discourse and Content Analysis: Some Fundamental Incompatibilities,” *Newsletter of the APSA’s Organized Section on Qualitative Methods*, Vol. 2, No. 1 (2004), pp. 31-33.

13) Pocock, “Introduction: The State of the Art,” in *Virtue, Commerce, and History: Essays on Political Thought and History, Chiefly in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p. 1~34.

14) 쿼틴 스킨너(Quentin Skinner), 『역사를 읽는 방법: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황정아·김용수 옮김 (파주: 돌베개, 2012).



보며, 북한 정치 엘리트의 (공적) 담론을 통한 북한사회 내외부의 위기상황 관리와 주민통제 전략을 살피는 것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또한 해석적 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핵 담론과 관련한 분석은 한편에서는 북한의 전체적인 군사 행동 내에서 핵무기 담론의 변화를 고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 전달 목적”이라는 뚜렷한 화자의 목적을 전제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sup>16)</sup>

## 2) 통합적 고찰과 양적 연구 방법론의 한계

이전 절에서 지적한 연구자의 편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사회과학, 좁게는 정치학, 그리고 더 좁게는 북한연구 내에서 양적 연구에 관한 집중을 통해 이뤄져 오고 있다.<sup>17)</sup> 하나의 예로, 신년사 분석을 한 계량연구를 들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1946년부터 2015년까지 『로동신문』의 신년사를 수집하여 주요 단어의 위치, 빈도, 문맥구조,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화된 텍스트분석’을 통한 북한의 시가별 정책기조와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연구를 맥락화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북한의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남조선’, ‘미국’, ‘핵’ 등의 단어 사용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가 수행되었다.<sup>18)</sup> 이러한 연구경향에 긍정하며 임수진은 담론 분석의 대상과 시기를 확장함으로써 분석의 보편성과 신뢰성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지만<sup>19)</sup>, 실제로 이러한 한계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 예로 든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sup>20)</sup>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점들을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에서는 신년사가 “북한의 대외정책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대한 북한정부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자료”라 정리한다.<sup>21)</sup> 저자들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정부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우리는 왜 신년사는 그렇게 해석

15) 임수진,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와 담론 연구: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0, 12쪽.

16) 각각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제17권 1호 (2014), 206~7쪽; 허재영, 홍용표, “김정은 시기 북한 핵 담론의 지속과 변화: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 분석의 병행,” 『국제정치논총』 제60집 4호 (2020), 173쪽.

17) Jacques Hymans, “Assessing North Korean Nuclear Intentions and Capacities: A New Approach,”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8 (2008), pp. 259-292; Timothy Rich, “Deciphering North Korea's Nuclear Rhetoric: An Automated Content Analysis of KCNA News,” *Asian Affairs* Vol. 39 (2012), pp. 73-89.

18)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9집 2호 (2015), 28쪽.

19) 임수진,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와 담론 연구,” 31쪽.

20) 이후 본절의 내용은 상당 부분 박종희, 박은정, 조동준,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검토에 할애될 것이다.

21) 해당 연구의 결론에서 연구자들은 “북한정부에 의해 발표되는 말과 글,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의 교시의 성격을 갖는 신년사가 매우 철저하게 계산되고 선택된 정치적 수사이며 이는 해당 시기 북한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와 대외적 행위자에 대한 태도를 반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북한 내에서 신년사가 이러한 담론적 위치를 차지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되어야하며, 또한 북한정부가 해당 발언을 하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논의를 개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 연구자들은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결과는 자료에 대한 사전처리(preprocessing)와 내용분석을 위해 선택된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며, “알고리즘의 종류와 전처리 방식에 대한 세세한 결정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선택에 의존한다”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선언하는 바처럼 양적 연구를 통해 얼마만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기 어렵다. 연구자들이 내세우는 객관성은 “질적 연구와는 달리 알고리즘의 종류와 전처리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은 연구의 투명성과 재현가능성이라는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는 연구절차에 관한 논의인데, 이는 질적 연구에 대한 비판과 양적 연구에 대한 긍정 사이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현가능성’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해당 연구가 과학적 탐구가 가능하기 어려운 면을 보여주는데, 바로 연구에서 선택하는 북한정권의 정책적 관심을 보여주는 핵심어(“남조선”, “미제”, “핵”)와 북한의 태도를 추출하는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에 사용되는 기준이 얼마만큼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양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실제로 연구 주제와 해당 주제에 관한 ‘선입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연구자들은 “본 논문의 주 관심사는 신년사 텍스트의 구조적 변화가 실제 관측된 북한정권의 대내외적 정책변화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는데 있었기에, 이는 연구대상 및 방식에 투영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신년사의 특정 단어가 등장하는 위치(예: 문서의 처음, 중간 혹은 마지막 부분)는 해당 단어가 표상하는 주제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에는 해당 자료가 지니는 특수성이나 발화의 맥락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기본적인 관점이 내되어 있다. 연구자의 사전 지식은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핵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등장하는 1969년 신년사는 핵추진항공모함과 원자탄을 한 차례씩 언급하는데, 이는 푸에블로 납치사건 직후 북한의 위협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인과적 추론은 단순히 정보의 나열로만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연설이나 대화에서 특정단어의 출현빈도수를 찾아 통계법(예, 카이자승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질적 자료를 양적 정보로 변환한 수치에 대한 해석이 주”가 되기에 ‘양적인 질적 연구’로 지칭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기도 한다.<sup>22)</sup>

### 3. 실증주의 비판: 레오 스트라우스의 비판을 토대로

스트라우스는 베버의 논의를 빌어 사회과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basic problem)”은 사실과 가치의 구분이라고 정의한다. 스트라우스가 자신의 저작에서 실

22) 임도빈,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9), 162쪽; 박나라, “질적 연구의 심화와 확장: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의 근거이론 방법 적용 가능성” 『정치·정보연구』 제23권 2호 (2020), 194쪽.

증주의를 비판했을 때, 그는 “현재 사회과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전제가 유지될 수 없음을 보이려고” 했다 (“The Crisis of Our Time”). 스트라우스는 왜 사실-가치 구분이라는 전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여겼는가? 명백한 것은 베버처럼 스트라우스 역시도 사실과 가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사실로부터 가치가 정당화될 수 없고 반대로 가치로부터 어떠한 현실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Natural Right and History*, NRH 39). 따라서 만약 스트라우스가 사실-가치 구분이라는 전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과 가치가 “이질적(heterogenous)”인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동종적(homogeneous)”이라 보여주는 것이 편한 대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스트라우스의 철학적 작업을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트라우스가 사실-가치 구분 논의에 가하는 비판점들을 살펴보면, 스트라우스의 작업이 단순히 철학적 차원에서 머무른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 스트라우스는 사실-가치 구분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스트라우스가 사실-가치 구분이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선언한 것은 그것이 철학적으로 논리적 한계에 직면했다기 보다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가치 구분 논의에 가하는 스트라우스의 첫 번째 비판은 바로 이 논의가 우리가 정치적 공간에서 항시 행하는 실천적 판단이 필연적으로 가치판단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만약 베버식의 사회과학자는 자신이 내세우는 사회과학적 진실이 더 선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WIPP, “Relativism”, NRH). 여기에서 스트라우스는 베버식의 실증주의가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몇몇 문장을 통해 보여주지만, 여전히 스트라우스는 사실과 가치의 이질적 성격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스트라우스는 실천적 문제와 관련해서 베버의 언술을 다소 급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여서, 베버의 논의의 중심에 허무주의가 자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WIPP 19, NRH 40). 스트라우스는 베버와는 달리 가치보다 지적 엄밀성이나 자연과학적 진실을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스트라우스는 자연과학적 탐구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진 역사적 과정을 비판하는 한편, 윤리적 상대주의가 단순히 사실-가치 구분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논한다(NRH 42). 따라서 스트라우스가 논하는, 베버식의 실증주의가 가져오는 허무주의는 존재론적인 허무주의, 즉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도 본질적인 가치나 의미가 없어짐을 뜻한다 (“Existentialism”).

스트라우스가 가하는 두 번째 비판은 실천적 지식이 필연적으로 가치평가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증주의 사회과학자는 자신이 어떠한 사실을 다른 사실보다 주목해야 할 탐구대상으로 취할 때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린다는 점에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사회과학자가 부정한다면, 그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와 세계를 뒤흔들 혁명을 구분하지 못하고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자에 대한 연구를 행할 수 있음을 논한다. (“An Epilogue”). 따라서 스트라우스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치적 문제인지를 엄밀하게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회과학자는 가치중립적인 방법론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전 과학적인 이해”를 취해야함을 주장한다. (“An Epilogue”)

스트라우스의 세 번째 비판은 사회과학이 만약 자신이 다루고자하는 대상 및 주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면 일반 시민이 경험하는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sup>23)</sup> 시민들이 향유하는 사회적 현실은 가치가 포함된 사실들인데, “시민들은 사실-가치 구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한 구분 자체는 “정치적 현상에 대한 시민적 이해로부터 생경한 것”이다. (“The Crisis of Our Time”)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탐구를 스트라우스는 “정치적 현상을 비정치적 자료들로 치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한다. (“An Epilogue”) 이러한 스트라우스의 비판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하는 바는 연구의 재현 가능성인지 연구의 목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담론 연구와 사회 ‘과학’의 간극 좁히기

우리는 담론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만 사태를 이해하는, 즉 담론 내에서 제시되는 개념과 논의를 통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이때 해석자는 언제나 의미를 구성하는 담론들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 이미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언어적·사회적 매개 없이 연구 대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 관점은 배제된다.<sup>24)</sup>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현실(physical reality)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사실(social fact)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러한 접근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다.<sup>25)</sup> 관련된 흔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제기는 질적 연구를 행하는 연구자들이 “자료를 처리·정리·분석하는 전과정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는 인식을 안겨다 주는데 있다. 대부분 “연구자의 축적된 숙련과 예술적 감, 그리고 사전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자들마다 해석의 지평이 다르고 이에 따라 해석결과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26)</sup> 일견 타당한 지적이며, 계량적 분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언은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 뒤바뀔 수 있는 ‘지식(knowledge)’의 위치를 너무 높이 상정한 것이 아닐까? 인류가 쌓아온 ‘지혜(wisdom)’는 오히려 세계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수많은 경쟁 ‘담론’이 충돌함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북한정치 담론 연구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23) 관련하여 은용수는 담론 내 연구자를 두고 “연구질문이 도출되고 지식이 생산되는 역사적 시공간과 현 질서에 대한 자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인지해야 한다는 관점을 공유한다. 은용수, “비판이론의 학술적 공헌과 실천적 함의: 한국외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2015), 75쪽.

24) 이기형,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권 3호 (2006), 125쪽.

25) 필자가 무지한 사회학에서도 ‘객관성’과 ‘과학성’은 근대 학문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로 제시되어 왔지만, 실제 연구자가 그러한 “신화”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었다. 관련해서는 김성경, “공감의 윤리, 그 (불)가능성: 필드에서의 연구자의 마음,” 『북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6), 110쪽.

26)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28쪽.

부분을 간략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현재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론적 결합, 즉 기존의 담론분석과 내용분석 방법론 간의 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다.<sup>27)</sup> 살펴본 것처럼, 두 연구방식은 연구수행이나 목적에서 상이한 전제를 내세우고 있기에 단순히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다고해서 더 나은 연구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가 요청된다. 본문에서 제기한 것처럼 오히려 양 연구 방식에서 제기되는 비판점들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담론 분석을 통해 무엇을 규명하고자 하는지 좀 더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담론 분석은 일반적으로 인과추론(causal inference)보다 구성추론(constitutive inference)과 친화력이 높은 방법론으로 인식되기에<sup>28)</sup>, 이를 북한정치연구에 적용한다면 “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보다는 사실 “어떻게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줄 개연성이 더 크다. 상황상 제한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의 자료를 대할 때 우리는 해당 데이터가 무엇을 말해줄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다시금 해박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27) Andrew Bennett, “Found in Translation: Combining Discourse Analysis with Computer Assisted Content Analysis.” *Millennium*, Vol. 43 No. 3 (2015), pp. 984-997.

28) Kevin Dunn, “Historical Representations,” in Audie Klotz and Deepa Prakash (eds.), *Qualitative Metho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Pluralist Guid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막스 베버(Weber), 『직업으로서의 학문』, 전성우 옮김 (나남출판, 2006).
- 퀸틴 스키너(Quentin Skinner), 『역사를 읽는 방법: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황정아·김용수 옮김 (파주: 돌베개, 2012).
-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제17권 1호(2014).
- 김성경, “공감의 윤리, 그 (불)가능성: 필드에서의 연구자의 마음,” 『북한학연구』 제12권 제1호(2016).
-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2013).
- 박나라, “질적 연구의 심화와 확장: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의 근거이론 방법 적용 가능성” 『정치·정보연구』 제23권 2호 (2020)
-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9집 2호 (2015).
- 신동일, “언어학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전통, 그리고 비판적 담론연구의 출현,” 『질적탐구』 4권 3호 (2018),
- 이상숙, “북한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의 특징: 김일성·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2019).
- 은용수, “비판이론의 학술적 공헌과 실천적 함의: 한국외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2015),
- 임도빈,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9)
- 임수진,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와 담론 연구: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장세룡, “언어와 문화로의 전환과 역사학 연구의 방향,” 『계명사학』 12권 (2001).
- 허재영, 홍용표, “김정은 시기 북한 핵 담론의 지속과 변화: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 분석의 병행,” 『국제정치논총』 제60집 4호 (2020).

### 국외 문헌

- Bennett, Andrew. “Found in Translation: Combining Discourse Analysis with Computer Assisted Content Analysis.” *Millennium*, Vol. 43 No. 3 (2015)
- Denzin and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1).
- Dunn, Kevin, “Historical Representations,” in Audie Klotz and Deepa

- Prakash (eds.), *Qualitative Metho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Pluralist Guid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 Feyerabend, Paul. *Against Method (4th edition)* (Brooklyn, NY: Verso, 2010).
- Hopf, Ted, "Discourse and Content Analysis: Some Fundamental Incompatibilities," *Newsletter of the APSA's Organized Section on Qualitative Methods*, Vol. 2, No. 1 (2004), pp. 31-33.
- Hymans, Jacques "Assessing North Korean Nuclear Intentions and Capacities: A New Approach,"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8 (2008)
- King, Keohane and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Pocock, "Introduction: The State of the Art," in *Virtue, Commerce, and History: Essays on Political Thought and History, Chiefly in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p. 1~34.
- Rabinow, Paul and William M. Sullivan (eds.), *Interpretive Social Science: A Second Look*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 Rich, Timothy, "Deciphering North Korea's Nuclear Rhetoric: An Automated Content Analysis of KCNA News," *Asian Affairs* Vol. 39 (2012)
- Strauss, Leo. *Persecution and the Art of Writing* (Free Press, 1952).

# 북한 내부정치에 대한 정량적 접근:

북한 엘리트 데이터셋 소개

김택빈(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 내부 정치에 대한 정량적 접근: 북한엘리트 (NKE) 데이터셋 소개

김택빈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 ABSTRACT

대체로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족과 체계적인 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주류 비교 정치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지 못하였다. 최근 일부 연구들이 북한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나, 북한 내부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은 아직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연구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움직여온 403명의 북한 정치 엘리트에 대한 데이터셋을 소개한다. 북한 엘리트 데이터셋 (NKE)은 패널 데이터로써, 1948년부터 2019년 사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급 엘리트들의 임명, 좌천, 숙청 등을 포함한 경력 궤적 (career trajectory) 와 그들의 개인적 배경 (biographical information)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데이터셋은 독재 지도자가 엘리트들을 임명, 좌천, 숙청시키는 시점과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엘리트들의 개인적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북한의 내부 정치에 대한 새로운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 엘리트 데이터셋은 북한학 분야와 비교 권위주의 연구 분야 사이의 학문적 간극을 해소하고 북한 체제 연구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서론

북한은 여전히 외부세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북한 체제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치학자들에게 북한은 경험적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북한에 대한 기존 연구들 중 상당수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던 ‘크렘린놀리지 (Kreminology)’와 같은 단편적 정보에 의존한 해석적 접근방식을 취하거나 부족한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져 왔다 (Armstrong, 2004; Hassig, 2004; Jeon, 2000; Lee, 2000). 북한과 관련된 학술적 주제들은 주로 북한의 대외정책이나 핵무기에 집중되거나 (Cha, 2010; Pardo, 2014) 국가 형성 초기의 권력 독점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Armstrong, 2013; Choi, 2017; Chung, 2004; Cumings, 2004; Lankov, 2014; Mansourov, 2004).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서술적으로 이해하거나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데는 일정부분 유용성을 지니지만, 학술적 차원에서 보편이론의 발전과 주류 정치학과와의 통섭이란 측면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지녀왔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비교정치학 분야, 특히 비교 권위주의 분야의 주된 연구 흐름 속에서 북한체제 내부는 언제나 미답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최근 몇몇 새로운 연구들은 북한의 내부정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Greitens, 2016; Haggard and Noland, 2007; Ishiyama, 2013; Mahdavi and Ishiyama, 2020; McEachern, 2010; Kim, 2021). 일부 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북한 내부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은 지난 십여 년간 상당히 향상되었지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북한 정치체제를 연구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194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체제의 핵심 그룹에 속하는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데이터셋을 소개한다. 북한엘리트 (NKE) 데이터셋은 각 개별 엘리트 (노동동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급) 403명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이 데이터셋은 지난 70여 년간 북한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이너서클 엘리트에 대한 ‘체제 내부 개인 수준 (within regime individual-level)’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셋에 수록된 자료는 세 가지 주요 정보 소스 (통일부 북한 주요 인물정보, 연합뉴스 북한포털, 노동신문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되었다. 각 정보 소스들 사이의 정보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록자료들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데이터셋은 개별 엘리트들의 임명, 좌천, 숙청 등의 경력 궤적과 소속 기관, 전문분야, 핵심 보직 임명 및 교체 날짜, 연령, 출신학교, 유학 경험, 지도자와의 관계, 항일 빨치산 활동 참여 여부 등의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북한엘리트 데이터셋은 북한 내부 정치에 대한 분석, 특히 체제 내 엘리트 변동의 시계열적인 추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북한과 관련된 기존 데이터셋과 엘리트 개인 수준 접근방식을 사용한 최근의 데이터셋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엘리트 (NKE) 데이터셋이 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보여줄 것이다. 그 이후에 이 데이터셋의 구성과 향후 사용 가능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 기존 연구 검토

북한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 질적인 차원에서 수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연구들은 양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대체로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탈북민, 또는 인권을 주제로 한다. The CSIS Beyond Parallel 데이터베이스는 1953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셋은 미사일 및 핵 실험,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 총격전, 특수부대 침투, 국지도발 등 280개 이상의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포함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탈북민의 인식조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 데이터셋은 탈북민들이 지닌 북한 체제와 남한 사회, 통일 및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The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는 북한의 인권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여기서 운영하는 NKDB 아카이브에는 12만 개 이상의 인권침해 사례와 2만 개 이상의 탈북민 서베이가 수집되어 있다. 이렇듯 소수의 데이터들은 북한의 대외행동, 탈북민들의 인식, 또는 인권침해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엘리트 개인 수준에서 북한 내부 정치적 역동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이터를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연구 분야를 제외하고, 일부 학자들은 개인 수준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엘리트 관리 방식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개인 수준에서 독재체제 내부의 정치적

역동성을 분석하는 접근방식이 최근의 비교 권위주의 분야의 두드러진 연구 경향이라는 점이 다 (Bokobza et al., 2022; Nyrup and Bramwell, 2020; Sudduth, 2021; Goldring and Matthews, 2021). 특히 Shih and Lee (2018)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의 승진과 계파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을 주제로 엘리트 개인 수준에서 체제 내부의 정치적 역동성을 다룬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엘리트(NKE) 데이터셋은 개인 수준의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북한 체제 내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데이터셋: 정의, 코딩 절차, 변수

#### 정의

북한엘리트 데이터셋의 주된 오리지널 데이터 소스는 1980년대부터 매년 통일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북한 주요인물 정보’이다. 이 자료에는 당 부부장급 이상, 내각 부상급 이상, 인민군 상장 이상급 북한 주요 정치 인사들의 이름, 직책, 생년월일, 고향, 주요 커리어 경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많은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엘리트들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에 동시에 속해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11조에 언급된 것처럼,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서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당-국가체제라는 점에서 당의 주요 노선 및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당 중앙위원회는 명실상부한 핵심 이너서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셋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혹은 그와 동급의 당, 내각, 군대, 외곽기구의 엘리트들을 ‘핵심 엘리트’로 정의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Table 1).

Table 1. The Inner Circle Elites of North Korea

Inner circle category	Party	Government	Military	Other
Alternate member of WPK CC-Level (About 230 elites)	Alternative member of WPK Central Committee, Member of WPK Central Auditing Commission	Chairman of Municipal & Provincial People’s Committees, Vice Minister of Cabinet	Lieutenant-General	Chairman of Religion, Social, Academic, and Sports Committees
Full member of WPK CC-Level (About 130 elites)	Full member of WPK Central Committee, Deputy Director of WPK, Member of WPK Control Commission	Minister of Cabinet, Chief of Central Court, Chief of Central Public Prosecutor Office	Colonel-General, Commander of Army corps	
Alternate member of WPK Politburo-Level (About 50 elites)	Alternative member of WPK Central Political		Army General	

	Bureau, Chairman of Municipal & Provincial WPK Committees, Chairman of WPK Central Control Commission, Director of WPK Department			
Full member of WPK Politburo-Level (About 20 elites)	Full member of WPK Central Political Bureau, Vice Chairman of WPK Central Committee, Member of WPK Central Military Commission, Director of Major WPK Departments (Organization & Guidance Department, Propaganda & Agitation Department, Cadres Department, Light Industry Department, Economy Department, International Department, Machine-Building Industry Department, United Front Department)	Prime Minister of Cabinet, Vice Prime Minister of Cabinet, Vice Chairman of State Affair Commission, Member of State Affair Commission, Minister of People's Armed Forces,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Minister of State Security, Minister of Foreign Ministry, Chairman and Vice chairman of State Physical Culture and Sports Guidance Commission	Army General, Vice Marshal, Marshal	

북한 체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당국에서 개별 엘리트들의 숙청이나 인사 이동 등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거나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엘리트들의 경우, 그들의 세부적 개인 정보나 커리어, 인적 배경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북한엘리트 데이터셋은 포괄적인 접근방식 (inclusive approach) 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즉, 이 데이터셋에서는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주요인물 정보’를 메인으로 활용하되 추가적으로 다양한 정보 소스를 통해 개별 엘리트들의 임명, 좌천, 숙청과 관련한 가능한 많은 양의 정보를 수록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정보의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이를 교차검증하였다. 또한 이 데이터셋은 ‘정치적 숙청’ 변수를 포

함하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의 숙청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코딩하였다.

북한엘리트 데이터셋은 패널 데이터 포맷을 취하며 기본 분석 단위는 ‘개인-연도’이다. 각 개인이 ‘핵심 엘리트’ 집단에 들어온 이후의 연도별 임명, 좌천, 숙청 이벤트가 일어난 횟수를 코딩하였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여러 차례의 이벤트가 발생된 경우도 있었다.

## 데이터 코딩 절차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개별 엘리트에 대한 정보가 크게 세 가지 소스를 통해 수집되었다. 통일부 정세분석국은 1908년대부터 지난 40여 년간 북한 엘리트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발간하는 ‘북한 주요 인물정보’가 첫 번째 정보 소스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사, 노동신문, 조선신보 등 북한 관련 매체의 국내 독점 배포권자인 연합뉴스의 ‘북한 포털’ 내 인물 정보를 참고하였다. 연합뉴스의 ‘북한 포털’ 내 인물정보는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북한 주요 인물정보’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들의 정보나 이미 사망하거나 퇴임한 인물들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또한, 정치적 목적의 숙청을 퇴임이나 자연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노동신문 웹사이트도 참고하였다. 북한은 정치적 숙청을 할 경우, 해당 엘리트의 모든 기록을 공식 매체에서 삭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신문에서의 기록 존재 여부는 정치적 숙청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경우, 개별 엘리트들에 대한 정보는 부정확하거나 소스별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럴 경우는, 다른 한국 언론 매체들의 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코딩을 위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 주요 변수들

북한 엘리트데이터셋에는 개별 엘리트들에 대한 지도자의 엘리트 관리 전략이 시간별로 코딩되어 있다. 지도자의 엘리트 관리전략은 임명, 좌천, 숙청 등을 포함하며, 아울러 그러한 전략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엘리트들의 배경정보 또한 다양한 변수로 수록된다.

먼저, 각 엘리트별 인사이동이 임명인지, 좌천인지, 숙청인지 여부가 **엘리트 관리전략 변수들**로 코딩되었다. ‘임명’ 변수는 개별 엘리트가 핵심 엘리트 집단 내에 새롭게 들어오거나 그 안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보직에 임명될 경우를 의미한다. ‘좌천’ 변수는 일시적인 해임이나 이전 보직보다 더 낮은 등급의 보직으로 이동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숙청’ 변수는 핵심 엘리트 집단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데이터셋에서는 추가로 ‘정치적 숙청’ 변수와 ‘핵심 임명’ 변수를 설정하였다. ‘정치적 숙청’ 변수는 은퇴, 질병, 자연사 등 비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숙청과 정치적 목적으로의 숙청을 구분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정치적 숙청이라는 것은 1) 지도자의 정치적 라이벌 제거, 2) 지도자와 다른 정책적 선호를 가진 인물의 제거, 3) 무능한 엘리트에 대한 제거, 4) 범죄를 저지른 엘리트에 대한 제거, 5)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회피 등의 목적을 지닌 숙청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숙청을 당한 것이 확인될 경우, ‘정치적 숙청’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숙청’ 변수와 ‘정치적 숙청’ 변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하나의 숙청 사건이 양쪽 변수로 모두 코딩될 수 있다. ‘핵심 임명’ 변수는 당 중앙

위원회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 소속 여부에 대한 변수이다. 즉, 해당 엘리트가 50여 명의 최측근 핵심 그룹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임명’ 변수와 ‘핵심 임명’ 변수 역시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하나의 임명 이벤트가 양쪽 모두로 코딩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개별 엘리트들의 **개인적 배경 변수**들이 코딩되었다. ‘소속’ 변수는 개별 엘리트들이 소속 기관이 당인지, 내각인지, 군인지, 아니면 외곽기구인지 여부를 지칭한다. 북한 엘리트들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다수의 직책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초기의 커리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다수의 직책 중 가장 비중 있는 직책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 변수를 코딩하였다. ‘분야’ 변수는 임명된 분야에 대한 변수이다. ‘분야’ 변수는 총 17개의 서브 카테고리 있는데, 이것은 산업, 건설, 검열, 경제, 국방, 교육 문화예술, 교통, 농수산, 대남, 무역, 보건, 보안, 사법, 선전선동, 외교, 지방조직, 그리고 정무로 구성된다. 각 임명된 보직의 성격을 17개의 하위 분야로 구분하기 위해 코딩하였다. 이 ‘분야’ 변수는 지도자의 엘리트 관리전략이 분야별 엘리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유용한 변수이다 (e.g., 김정은 시기에는 경제/무역 분야 엘리트일수록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숙청을 당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혹은 대북제재가 특정 분야 엘리트들의 임명/좌천/숙청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 이외에도 개별 엘리트들의 출생지역 (12개 특별시 및 도), 출신학교 (17개교), 유학 경험 여부, 지도자와의 친인척관계 여부, 그리고 항일 빨치산 유격대 활동 여부 등이 변수로 코딩되었다.

### 기술 통계

각 변수들에 대한 최종적인 기술통계는 데이터셋이 최종 완성이 되는 2023년 봄에 최종 페이퍼를 통해 제시될 예정이다 (Table 2 참조).

Table 2. Variables and Descriptions

Variable name	Descriptions
Origin of institutional affiliation	Party, government, military, and other
Appointment	Number of appointments
Demotion	Number of demotions
Purge	Permanent removal from the inner circle
Political purge	Purges for political purposes
Core appointment	Appointment to members of WPK politburo
Field	17 sub-fields: industry, construction, censorship, economy, national defense, education-culture-arts, transportation, agriculture-fisheries, inter-Korean relations,

	trade, public health, security, law, propaganda, diplomacy, local organization, and political affairs
Birthyear	
Entry date	Year and month of entry to the inner circle
Exit date	Year and month of exit from the inner circle
Birthplace	12 places: Chagang, North Hamgyong, South Hamgyong, North Hwanghae, South Hwanghae, Kangwon, North Pyongan, South Pyongan, Ryangang, Pyongyang-si, Nampo-si, and foreign countries
Education	Name of schools where individual elites graduated
Studying abroad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Blood ties	Blood ties with the Kim family
Partisan experience	Members of the Guerilla group led by Kim Il-sung or their descendants

#### 데이터셋의 적용

독재 지도자가 엘리트들로부터의 리더십 교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독재체제의 지도자들은 엘리트 그룹의 불만과 도전을 억제하기 위해 포섭 (cooptation), 순환 (reshuffle), 숙청 (purge)과 같은 다양한 엘리트 관리 전략을 사용한다 (Geddes et al., 2018; Frantz, 2018). 북한과 같이, 독재자의 손에 모든 권력이 주어진 공고화된 독재체제라 할지라도, 독재자는 정치적 라이벌의 등장을 막고 정치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엘리트 관리 도구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고도로 개인독재화된 체제를 70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3대에 걸쳐 권력 세습에 성공한 북한의 사례는 독재체제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풍부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비교 정치학 분야에서는 최근 10년 간 독재자의 엘리트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크게 증가해왔다 (Bove and Rivera 2015; Shih, Adolph, and Liu 2012; Woldense 2018; Sudduth 2017). 하지만 독재자의 엘리트 관리전략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독재자가 처한 구조적 조건들, 예컨대 쿠데타 방지의 기회와 인센티브 (Sudduth 2017; Svolik 2012), 혹은 독재자의 성향과 과거 경험 등 (Wong and Chan, 2021) 에 초점을 맞춰왔다. 독재자와 엘리트 사이의 관계에서 독재자 측면에만 더 많은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어온 편향성은 독재체제의 내부정치에 관한 풍부한 이론적 발전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소수의 독재자들에 비해, 다수의 엘리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분명 훨씬 더 번거롭고 많은 노력이 투여되는 작업이다. 하지만 독재자-엘리트 간 관계는 독재자에 의해서만 일방향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 사이의 관계는 독재자-엘리트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는 유동성과 역동성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엘리트 집단의 역할과 특성에 집중하는 연구는 향후 독재정치 분야의 이론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엘리트집단의 역할과 개인

수준 분석에 기반한 접근방식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Bokobza et al., 2022; Goldring and Matthews, 2021; Nyruup and Bramwell, 2020).

북한엘리트 (NKE) 데이터셋은 북한의 핵심 엘리트 그룹 내부의 인사이동을 다루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로 임명되고, 좌천되고, 숙청되었는지’ 추적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학문적 흐름을 가속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데이터셋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움직이는 엘리트들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셋은 북한 체제 내부의 정치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엘리트들의 어떠한 개인적 배경이 독재자의 엘리트 관리전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김정은 체제는 이전 시기의 지도자들보다 더 불안정한가?, 권력승계는 체제 내부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권력 공고화 과정은 엘리트 관리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와 같은 북한학과 일반 비교정치 분야의 핵심적 질문들에 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엘리트 관리전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엘리트데이터셋 (NKE)을 활용하여 간단한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종속변수는 ‘엘리트 임명 횟수’이고, 핵심 독립변수는 ‘소속’ 기관 변수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Elite Appointment in the Kim Jong Un era

	1	2	3	4	5	6	7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s						
Dependent Variable	Elite Appointment						
Military	<b>0.367**</b>				<b>0.513**</b>	<b>0.562**</b>	<b>0.669**</b>
	<b>(0.108)</b>				<b>(0.117)</b>	<b>(0.120)</b>	<b>(0.187)</b>
Party		0.161			<b>0.366**</b>	<b>0.416**</b>	<b>0.601**</b>
		<b>(0.105)</b>			<b>(0.113)</b>	<b>(0.116)</b>	<b>(0.157)</b>
Government			<b>-0.463**</b>		(base)	(base)	(base)
			<b>(0.099)</b>				
Other Org.				0.0736		0.370	0.050
				<b>(0.204)</b>		<b>(0.212)</b>	<b>(0.285)</b>
Age							<b>-0.030**</b>
							<b>(0.006)</b>
Tenure							0.044
							<b>(0.025)</b>
Log(GDP per capita)							<b>-5.674*</b>
							<b>(2.595)</b>
Log(GDP growth rate)							<b>0.395**</b>
							<b>(0.074)</b>
N	1591	1591	1591	1591	1591	1591	74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5$ , \*\*  $p < 0.01$



Table 3 은 김정은 정권 시기 전체 (2012년~2019년)를 분석하였을 때, 각 엘리트들의 소속기관이 임명 이벤트 발생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모델은 군, 당, 내각, 외곽기구의 각 변수가 임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보여주며, 5부터 7번까지의 모델은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내각을 reference category로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는지 검증하였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의 모델은 소속기관 변수들 각각의 효과를 나타낸다. 각 변수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군과 내각 소속 엘리트들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그 방향성은 반대였는데, 군 소속 변수는 엘리트 임명에 긍정적 효과를, 내각 소속 변수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모델 5에서는 응집력과 통일성이 높은 두 집단 (군과 당)을 응집력과 통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두 집단 (내각과 외곽기구)과 비교하였다. 집단 간 비교를 할 경우, 응집력과 통일성이 높은 두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임명 이벤트 발생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델 6에서는 내각 소속 변수를 reference category로 설정한 상태에서의 결과를 보여준다. 내각 소속 엘리트들과 비교하였을 때, 당과 군 소속 엘리트들은 핵심보직에 임명될 확률이 더 높았다. 이 결과는, 달리 말해, 내각 소속 엘리트들이 김정은 체제 하에서 다른 기관 엘리트들에 비해 보직 임명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 7번 모델은 통제 변수를 설정한 상태에서의 결과를 제시한다. 엘리트 임명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 변수들이 포함된 상태에서도 앞선 모델에서의 경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결론

북한엘리트 데이터셋은 다양한 이론적 주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경험적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내부 정치와 독재자의 엘리트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일반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대외행동에 관한 연구나 탈북민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이론적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체제 내부 정치의 작동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제한적이다. 이 데이터셋은 향후 많은 북한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이론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체제 내부 개인 수준 (within regime individual level)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언제 독재 지도자가 엘리트들을 임명하고, 좌천시키고, 숙청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엘리트들의 개인적 요인이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포착할 수 있다. 북한엘리트 데이터셋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학 분야와 비교정치 일반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북한학 연구분야의 이론적, 경험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References

- Armstrong, C. (2004)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Armstrong, C. (2013) *Tyranny of the Weak: North Korea and the World, 1950–1992*.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Bokobza, L., Krishnarajan, S., Nyrup, J., Sakstrup, C., & Aaskoven, L. (forthcoming) The morning after: cabinet instability and the purging of ministers after failed coup attempts in autocracies. *Journal of Politics*.
- Bove, V. and Rivera, M. (2015) Elite co-optation, repression, and coups in autocraci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41(3): 453–479.
- Cha, V. (2012)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New York: Harper Collins.
- Choi, YS. (2017) North Korea's hegemonic rule and its collapse. *The Pacific Review* 30(5): 783–800.
- Chung, YC. (2004) North Korean reform and opening: Dual strategy and 'Silli' [practical] socialism. *Pacific Affairs* 77(2): 283–304.
- Cumings, B. (2004) *North Korea: Another Country*. New York: The New Press.
- Frantz, E. (2018) *Authoritarianism: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University Press.
- Geddes, B, Wright, J., and Frantz, E. (2018) *How Dictatorships Work*.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ring, E., and Matthews, A. S. (2021) To purge or not to purge? An individual-level quantitative analysis of elite purges in dictatorship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9.
- Greitens, SC. (2016) *Dictators and Their Secret Police: Coercive Institutions and State Viol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ggard, S. and Noland, M. (2007) *Famine in North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ssig, KO. (2004) Executive summary and introduction to the report. In: Kangdan OH (ed.) *North Korean Policy Elites*. Alexandri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es1–es3.
- Ishiyama, J. (2013) Elite volatility and change in North Korean politics: 1997–2010.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49(3): 570–583.
- Jeon, JG. (2000) North Korean leadership: Kim Jong-il's intergenerational balancing act. *Third World Quarterly* 21(5): 761–779.
- Kim, T. (2021) Who is purged? determinants of elite purges in North Kore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54(3): 73-96.
- Lankov, A. (2014) *The real North Korea: Life and politics in the failed Stalinist utop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CS. (2000) Kim Il Sung of North Korea. *Asian Survey* 7(6): 374–382.

- Mahdavi, P. and Ishiyama, J. (2020) Dynamics of the inner elite in dictatorships: Evidence from North Korea. *Comparative Politics* 52(2): 221–240.
- Mansourov, A. (2004) Inside North Korea's black box: Reversing the optics. In: Kangdan OH (ed.) *North Korean Policy Elites*. Alexandri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IVs1–IV52.
- McEachern, P. (2010) *Inside the Red Box: North Korea's Post Totalitarian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Nyrup, J. and Bramwell, S. (2020) Who governs? A new global dataset on members of cabine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4(4): 1366–1374.
- Pardo, RP. (2014) *North Korea–US Relations under Kim Jong Il*. Abingdon: Routledge.
- Shih, V., Adolph, C. and Liu, M. (2012) Getting ahead in the Communist Party: explaining the advancement of Central Committee members in Chin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6(1): 166–187.
- Sudduth, JK. (2017) Strategic logic of elite purges in dictatorship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0(13): 1768–1801.
- Sudduth, JK. (2021) Purging militaries: introducing the Military Purges in Dictatorships (MPD) dataset. *Journal of Peace Research* 58(4): 870–880.
- Svolik, M. (2012)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ldense, J. (2018) The ruler's game of musical chairs: shuffling during the reign of Ethiopia's last emperor. *Social Networks* 52: 154–166.
- Wong, SH-W. and Chan, KC-M. (2021) Determinants of political purges in autocracies: evidence from ancient Chinese dynast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58(3): 583–598.

제2회의

**북한의 대남·대외전략과  
북한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

사회: 양병기(청주대학교)



# 북·중·러 연대의 심화:

신냉전적 흐름인가? 일시적 연대인가?

최재덕(원광대학교)

**북·중·러 연대의 심화: 신냉전적 흐름인가? 일시적 연대인가?1)**  
**-한국의 대응전략**

**최재덕**  
원광대 교수·한중정치외교연구소 소장

**I. 서론**

인류가 기후위기, 전염병의 대유행, 4차 산업혁명 등 문명사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북중러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강대국의 지정학적 대결은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경제 블록화, 자원 무기화, 기후위기 대응 정책 후퇴를 촉발함으로써 국제질서는 대격변기에 접어들었다.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질서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미중패권경쟁을 미국·유럽 대 중국·러시아의 진영 경쟁으로 확대하는 변곡점이며, 미국에 대항하는 북중러 연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 및 국제 사회의 대응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동 대륙의 동쪽 끝에 있으면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완충지이자, 미·중·일·러의 균형점으로 지정학적 위험 지역에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 본 발표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질서의 변화와 진영 경쟁으로 확대된 미중패권경쟁, 북중러 연대 강화와 한반도에서의 신냉전적 안보 구도 강화라는 배경 하에,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인식하여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가치외교를 강화하고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추구하며, 안보 최우선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가 미·중의 지정학적 격전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질서의 대전환에 대비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비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맞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 4강과의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사안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미중패권경쟁과 북·중·러 연대가 심화되는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하여 한반도가 직면한 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II. 북·중·러 연대의 심화 신냉전적 흐름인가? 일시적 연대인가?**  
**-한국의 대응전략**

1) 본고는 평화학연구 제20권 3호 (2019)에 게재된 「일대일로 2.0과 중러관계의 제한성」과 중소연구 제46권 4호 (2022)에 게재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 연대의 심화- 미·중·러의 지정학적 대결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A. 신냉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1) 북·중·러 연대

유라시아 대륙 중심에 ‘중러 연대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은 한반도에 북·중·러 대 한·미·일의 냉전적 구도가 강화되고 한반도 안보의 구조적 제약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북한은 동북아 안보 환경이 신냉전으로 이행하는 국제 정세의 대혼란기를 자국의 영향력을 키울 기회로 삼고 있다. 최근 북.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북 제재 문제를 매개로 상호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양자 관계의 진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2022년 3월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데 이어 2월 말부터 5월 사이에 빈번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나토의 지속적인 동진 및 팽창 등 미국의 패권 정책에 있다고 거칠게 비난해왔다.<sup>2)</sup> 7월에는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을 독립국으로 승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칠순 기념 축전에서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하여 국가의 존엄과 근본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는 것은 푸틴의 탁월한 영도력과 강인한 의지에 의한 것’이라며 북러 친선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sup>3)</sup> 북한은 시진핑 주석 3연임에 대해서도 노동신문을 통해 대서특필하면서, 사실을 통해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탁월한 영도가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제적 지위를 더욱 높인 근본 요인이며 습근평 동지가 중국공산당을 영도하는 중임을 계속 지니게 되어 중국은 자기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오늘 조중(북중) 친선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사회주의를 위한 두 나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현실은 두 당, 두 나라 인민이 굳게 단결하고 협조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북중관계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sup>4)</sup>

### 2) 핵무력 완성 시도 및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 증가

북한은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무력 사용 기준을 ‘자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에서 ‘근본 이익 침탈시’로 확대하고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위협 상황’에 대응하여 김정은 총비서의 판단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한미연합훈련 ‘울지프리덤실드(UFS)’ (2022.09.26.~29)에 대해 북한은 빈번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sup>5)</sup>와 군용기 시위 비행<sup>6)</sup>으로 대응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

2) 장세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와 한반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대유라시아 전략의 방향과 추진체계, 아태지역연구센터 (2022.6.24.)

3) 임수근, “우크라진 굴욕과 씩씩한 칠순 맞은 푸틴...김정은 축전 보내,”

[https://www.ytn.co.kr/\\_ln/0104\\_202210071540555170](https://www.ytn.co.kr/_ln/0104_202210071540555170) (검색일: 2022.10.7.)

4) 박광연, “‘시진핑 3연임’ 곧바로 대서특필한 북한… 북·중관계 ‘새로운 전성기’.” 경향신문, (검색일: 2022.10.24.)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210241206001>

5)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9월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1발, 28일 평안 순안에서 2발, 29일 평안남도 순천에서 2발, 10월 1일 평양 순안에서 2발씩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22차례, 순항미사일 2차례 발사했다. (김지현, “北,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 향모 포함 한미일 훈련 반발,” <https://www.yna.co.kr/view/AKR20221> (검색일: 2022.10.6.))

6) 2022년 10월 6일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에 대한 반발로 북한 전투기 8대와 폭

널드 레이건호가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수함전에 참가한 후 일본 해협으로 물러났다가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이례적으로 동해상에 재진입해 한미연합 해상 기동훈련에 참여했다. 이에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과 남측의 위협적인 군사연습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며 미사일 도발의 원인과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렸다. 이례적으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진행 중 각기 다른 지점에서 여러 기종의 미사일 성능을 검증하며 북한의 강화된 실전 역량을 과시했다.<sup>7)</sup>

우크라이나는 1994년 소련 시절부터 보유했던 당시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1800여 개의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의 대가로 미국·영국·러시아가 영토와 안보를 보장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20년 후인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만 가하고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이 양해각서는 무용지물이 됐다.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나토 가입 요구에도 나토는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우려하여 이를 유보했고 8년 후인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공했음에도 서방은 경제 제재와 무기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북한은 리비아의 핵 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핵 포기 후 약소국이 당할 배신, 서방이 보증하는 안전보장의 허상과 냉혹한 국제질서를 다시 자각하고 핵무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022년 9월 발표한 북한 보고서에서 비핵화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음으로써 북한 내에서 비핵화하면 강대국의 위협에 취약해진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국가와 중러 주도의 권위주의 국가의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나 미사일 시험을 해도 중러가 북한을 제재하지 않을 것이며, 냉전 시절과 같이 북한의 정권 안정을 위해 중러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sup>8)</sup>

실제로 2022년 5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후 UN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러 양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며, 10월 4일 북한의 4500k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문제로 UN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중러는 안보리 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린다-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중이라고 보고했다”면서 “중러가 북한에 ‘보호 장막’을 제공하여 북한의 반복된 도발을 정당화하고 제재 체제를 갱신하려는 모든 노력을 막았다. 안보리의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현재와 같은 행동을 가능하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만 강화하자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소극적 조치가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시간만 벌어주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022년 10월 9일 “미국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

---

격기 4대가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편대비행을 벌여 한국군 항공기 30대가 출격해 대응했으며 대응 상황은 1시간여 가량 지속됐다. 10월 8일에는 북한 전투기 150대가 동시에 출격해 우리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우세한 전력으로 우발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

7) 조선중앙통신은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장거리포병부대, 공군비행대의 훈련을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지도했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억제력 가동태세에 대한 검증인 동시에 국가핵방어태세의 철저한 준비상태의 신뢰성을 증명한 계기이며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태세, 공격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이자 명백한 과시”라면서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욱, “김정은 ‘대화할 필요성 느끼지 않아...핵전투 무력 백방 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0005251504?input=1195m> (검색일: 2022.10.10.)

8) North Korea: September 2022 Update b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p.15,2022),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7242/3> (검색일: 2022.9.20.)



하는 캠페인이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대신 위기 감소와 군비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도했고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 개발은 꾸준히 진행중이며, 핵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sup>9)</sup>고 말했다. 강대국의 지정학적 대결과 국제질서의 변화로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이며 모두 무장을 강화하는 때에 북한이 비핵화를 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다만 해협에서의 긴장과 북핵 문제는 한.미.일 군사 공조와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여<sup>10)</sup>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B. 한국의 대응 전략

### 1) 가치외교와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양립 추구

미중패권경쟁이 도래하면서 나타난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 경쟁이 진영 경쟁으로 확장되면서 더 명확해졌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민주주의 국가의 결집과 동맹 강화로 중.러를 견제하고자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힘을 얻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기점으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의 구조적 도전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게 됐고 생존을 위해 번영을 희생할 결심을 하게 됐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권위주의 국가의 체제적 도전에 맞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갖게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결집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합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상당 부분 회복됐고<sup>11)</sup>,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신냉전 시기를 앞당기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많은 경제, 안보협력체 구성과 보호주의 경제법안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인식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2022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IPEF, 칩4 동맹 등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가치외교를 지향하고 있다. 5년 만에 한미안보훈련을 재기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했다.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범위를 넘어 에너지, 식량, 기술, 경제 등 포괄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반도체·바이오 생산의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하고 가치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체제와 이념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넘어 경제 발전과 안보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9) 김경희, “美前합참의장 ‘北, 핵담재 미사일 가능성 5년 전보다 한층 높아,’”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9049200071> (검색일: 2022.10.11.)

10) 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를 43~45조 엔(약 421조~441조 원) 규모로 책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길윤형, “일본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 440조 원대...1년에 88조 원,” <https://english.hani.co.kr/arti/international> (검색일: 2022.10.9.)) 일본 헌법 9조 ‘전쟁 포기 조항’ 수정 개헌안에 참의원 찬성 비율 3년 새 61%에서 73%로 상승, 17% 찬성 하던 민주당에선 75% 찬성, 50% 이상이던 일본 국민 반대 의견은 33%로 격감했다. 北 미사일 고도화,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미국과 중.러 견제에 대한 이해관계 일치 등을 이유로 헌법 9조 수정 개헌안에 대한 일본 내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김범수, “북중 안보 위협에 일 우경화 심화...”평화헌법 개정“ 31%→51%로,”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3520036> (검색일: 2022.8.24.))

11) 2022년 9월 21일 세계지식포럼에서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미국의 리더십이 중동에선 상당히 약화된 게 사실이나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더 강력해졌다”며 “나토, 한미.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중·일·러 4강의 힘의 균형점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 신냉전이라는 비우호적 전략 환경하에 한반도에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안보 구조적 제약이 심화되고 있다. 남과 북은 휴전 상태이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북·중·러 연대와 일본의 재무장, 대만 해협에서의 미·중 대결이 동북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힘이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토에 가입하려 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강대국의 힘의 균형점을 이동하려는 무리한 나토 가입 추진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러시아의 안보적 위협에서 벗어나 서유럽과 같은 경제적 번영과 안전한 유럽 안보협력체의 보호 아래에 편입될 청사진만을 강조하고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시한 우크라이나의 외교 전략은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가치외교와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양립을 모색해야 한다. 외교적으로 가치외교에, 안보적으로 한미 동맹에 무게 중심을 두되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 2)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

강대국의 지정학적 대결은 중간국에 부정적인 압력을 투사한다. 동북아에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러 연대가 힘을 강화하고 북한이 더욱 대담한 도발을 이어가면 중러의 대척점에 있는 미국과 일본은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 투사되는 강대국의 부정적인 힘이 강해져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지고 힘의 균형이 더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에서 강대국이 투사하는 힘의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으로 집중된 강대국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미·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민감하게 교차하는 지정학적 공간 우크라이나에서 외교 노선의 양자택일은 결국 스스로 대외정치적 입지를 좁혔고 국익을 침식시켰으며,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sup>12)</sup> 러시아와의 완전한 단절, 서방으로의 완전한 편입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사활 이익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완전한 단절과 서방으로의 완전한 편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지정학적 상황에 있었다. 한국은 강대국과의 적대적 관계 형성, 또는 협력 단절은 해당 국가의 부정적 영향력이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안보적 차원에서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란 한반도에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강대국의 힘을 분산시키고 호혜와 신뢰의 양자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발전을 이루는 외교적 해법을 말한다. 한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상당 부분 협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가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에 적극 가담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한국은 주변 4강과 양자 관계 발전을 도모할 사안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양자 관계의

12) 홍완석, 「전쟁으로 비화한 우크라이나 사태- 진단과 시사점」, 『외교』, 제141호 (2022), 119-120쪽.

발전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한국 스스로가 힘의 균형점을 유지하고 강대국의 압력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무조건 한쪽 편에 서지 않으며 어느 국가에도 적대적이지 않고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추구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강대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국익에 반하는 강대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더 큰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한러 수교 32주년을 맞았다. 지금은 양국과의 발전을 기대하기보다 위기관리가 중요하다.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이때 한국은 역사의 고비를 넘어 어렵게 얻은 외교 관계를 잘 이어 나가야 한다.

### 3)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고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군사 공조가 강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질서가 다극 체제로 이행하고 미·중이 진영 경쟁을 벌임에 따라 아시아는 잠재적 패권국을 포함한 불균형적 다극체제(unbalanced multipolar system)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에는 군사 강국 러시아, 재무장하는 일본, 양 진영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도가 있고, 이들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불균형적 다극체제에서는 힘의 불균형적 배분, 가변적 연합 형성, 책임 전가 가능성, 전쟁 발발의 위험이 높아진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로 빚어지는 남북한 갈등의 극대화이다. 우크라이나에 가해진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은 국내 정치적 혼란과 일관성 없는 외교 전략을 가져왔고 친서방과 친러 세력의 대결이 돈바스 내전을 통해 무력 충돌로 이어지면서 서방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경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소련과 미국은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분할 통치를 결정했고, 소련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 정권을 수립하도록 도왔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김일성의 남침 제안을 소련 스탈린이 승인했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포함된 유엔군은 38선을 돌파해 북진했고 북한의 파병 요청에 중국이 응하면서 북·중 우호의 상징인 ‘혈맹 관계’가 형성됐다. 10월 2일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한반도에서 미국의 승리는 갖 수립된 중국공산당 정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참전을 알렸고 10월 25일 참전했다. 1953년 북한, 중국, 유엔군 사이에 맺어진 정전협정으로 지금까지 한반도는 휴전중이다. 한국 전쟁은 냉전 시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리전이며, 북·중·러 관계 심화와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한반도는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호르무즈 해협,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높은 지역에 속한다. 이중 강대국의 대리전이 지상에서 가능한 곳은 미·러가 대결하는 우크라이나와 미·중이 대결하는 한반도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중간국의 외교적 실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목도하고 있다.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적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의 소규모의 군사적 충돌도 강대국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중·러의 연대는 한반도 정세에 매우 위험하다. 한국과 중·러의 관계 단절은 북·중·러의 연대를 견제할 방안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위기를 관리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이어가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과 같이 북한은 핵 무력 고도화를 자위 수단으로 합리화하고 윤석열 정부는 ‘선(先)비핵화, 후(後)대화’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긴장 완화의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남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 합의를 상기고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관계는 가장 어렵고 절박할 때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남과 북이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한반도 안보 위기에 공동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2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면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역지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역내 미군 주둔 증강 및 전략자산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첫 미중 대면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동북아의 안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이 한반도에 투사되지 않도록 미국에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대북 정책을 촉구하고 북한이 다시 협상태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Ⅲ. 미국의 대중 전략과 북중러 연대의 심화

#### A. 미국의 대중 전략

##### 1) 나토의 새 전략개념과 유로-태평양 안보

나토는 2022년 6월 29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에 ‘신(新)전략개념 (New Strategic Concept)’<sup>13)</sup>을 채택했다. 2010년 리스본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10 전략개념에 ‘나토와 러시아는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true strategic partnership)’라고 명시한 데 반해 2022년 ‘신(新)전략개념’에서는 “러시아는 동맹의 안보와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the 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신 전략개념-협동안보’ 항목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우크라이나와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것을 분명히 했다.

신전략개념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대서양 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의지가 깊이 반영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항해 나토를 중심으로 단합하는 유럽을 미중패권경쟁의 프레임 안으로 확실하게 끌어들이려 한다. 신전략개념에서 중국을 ‘나토의 이익(interests)·안보(security)·가치(values)에 대한 도전하며 우주·사이버·해양에서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systemic challenge)하는 국가’로 규정했다. 중국에 대해 군사 증강에 대한 전략적 불투명성을 유지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 도구를 활용하며 악의적인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작전, 대립적 수사학(rhetoric), 허위 정보로 동맹 안보에 해를 끼치고, 주요 기술과 산업, 기반시설 및 공급망을 넓혀간다고 언급했다.

13) NATO 2022 STRATEGIC CONCEPT, <https://www.nato.int/strategic-concept/>(검색일: 2022. 7.20.)

또한, 나토는 ‘인도.태평양의 역내 상황 전개는 유로.태평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 안보가 나토에 매우 중요하며 인도.태평양의 파트너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을 넘어선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토 파트너국(AP4)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정상을 초청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는 나토를 매개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서양 동맹을 연계하여 ‘유로.태평양 안보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중국을 압박하도록 하고 미중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P)는 “나토가 중국으로 관심을 확대하며, 새로운 전선이 그려지는 ‘글로벌 신(新)냉전’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2022년 9월 8일 열린 ‘서울안보대화(SDD)’에 유럽연합과 나토회원국의 국방 관료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가 유럽.대서양 안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미국과 기타 나토회원국들의 SDD 참여는 나토 모델을 아시아로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sup>14)</sup>

## B. 북중러 연대의 강화와 향후 방향성

### 1) 중러 연대의 상호보완성

냉전 종식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1994년 9월 모스크바 회담에서 장쩌민 국가주석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의 건설’을 선언한 이후 1996년 4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11년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19년 6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신시대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 양국은 1998년 11월 정상회담에서 다극화 세계질서를 향한 국제 문제 공조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견제를 위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의 역할 강화에 합의했다. 2001년 ‘중.러 상호우호조약’에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러시아가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동년 6월 상하이 협력기구회의에서 양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군사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중러 연대는 2017년 5월 푸틴 집권 4기와 동년 10월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이후 공고해졌으며 동북아 정세뿐만 아니라 중층적 국제질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sup>15)</sup>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양국 관계였던 유라시아의 두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범위 내에서 상호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중러가 국제정치, 경제, 군사안보 등에서 유례없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역외 공격에 공동 대응해왔다. 중러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협력, 에너지 협력, 중러 연합군사훈련과 방산 협력, 북극해 개발과 더불어 이란 핵 합의(JCPOA), 시리아 내전 개입, 북핵 문제, 미중무역분쟁 등 국제적 이슈에 의견일치와 상호지지를 표명하면서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경제 발전, 군사안보에서 탈달러화(De-dollarisation)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는 상당히 공고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둔 지난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신시대 국제관

14) 문예성, “中, 미국 등 서울안보대화 참여 경계...‘나토 모델 亞 확장 시도,’”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8\\_0002007446&clD=10101&pID=101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8_0002007446&clD=10101&pID=10100) (검색일: 2022.9.9.).

15) 최재덕, 「일대일로 2.0과 중러관계의 제한성」, 『평화학연구』, 제20권 3호 (2019), 118-119쪽.

계와 글로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sup>16)</sup>을 발표하고 나토의 확장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연 100억m<sup>3</sup>를 중국 동북 지역에 공급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16)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막힐 것을 예상한 러시아가 중국에 에너지를 더 공급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중러 연대의 근간이 양국의 에너지 밀월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이 장악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는 에너지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늘려왔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 석유의 대체 에너지원인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얻고자 했던 중국과 유럽으로의 공급량 감소에 대비하여 아시아로 공급망을 다각화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러시아는 2016년 사우디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원유공급자가 되었다. 2014년 가스프롬과 중국석유 천연가스공사(CNPC)가 향후 30년간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2019년 12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이 개통되면서 에너지 협력이 본궤도에 올랐다. 중러 에너지 교역액은 2021년 1~3분기에만 349억 달러(41조 4158억 원)로 양국 전체 교역에 34.3%를 차지했다. 2020년 있었던 중국 호주 간 무역 분쟁에서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산 석탄으로 대체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면서 충전되는 배터리를 장착한 셈이다.

중.러는 202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 거래에서 위안화와 루블화 사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대미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 통화 비중을 늘리고 탈달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러 교역에서 달러화가 사용된 비중은 2015년 90%에서 2020년 상반기 46%로 감소했고, 위안화와 루블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중러 교역액은 2017년 이후 꾸준히 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400억 달러를 상회했고, 2022년에는 양국 무역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중러는 분리되기 어려운 한 몸처럼 작동하고 있고,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반드시 상대국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식하고 있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3월 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중러 협력의 전망은 매우 밝으며 국제정세가 아무리 험해지더라도 양국의 전략적 신념을 유지하고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sup>17)</sup>이라고 밝힌 것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른 어떤 관계보다 중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대외전략에 제약요인을 형성하였지만, 중국은 미국과 경쟁 상황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미국에 함께 대항할 러시아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중국과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양국 관계가 내포한 잠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반패권주의 연대, UN 안보리 차원의 협력, 브릭스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 탈달러화 공동전선 구축, 국제기구 내 협력, 대만 통일에 대한 지지, 한반도 정세에 공동 대응, 국경 안정 등이 중러 협력의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러관계는 대등한 관계에서 점차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중러 긴밀화의 이점이 한계성을 압도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긴밀화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고 권위주의 국가 결집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16) 유철중, “러, 중국 가스수출 확대 위한 ‘시베리아의 힘2’ 건설 박차.”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6063900009?input=1195m> (검색일: 2022.9.16.)

17) 김광수, “국제정세 험악해도 중러 전략적 관계 유지… 中 외교부장.”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BQHRK97> (검색일: 2022.3.10.)

## 2) 중러 주도의 권위주의 국가 단결

반패권주의 연대를 강화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용하여 회원국들이 함께 미국에 대항하기를 독려하면서 국제질서가 다극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참여하는 UN, WTO, WH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중국·아랍협력포럼(CASCF),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등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번영을 위한 공동협력, 상호 주권 자립, 각국 정치체제와 발전 방향 존중을 촉구하면서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의 안보’와 친중 향미적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2010년부터 글로벌 거버넌스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진 것과 2013년부터 시작된 일대일로 사업이 맞물려 회원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브레진스키는 정치적 동맹에 관한 시나리오 중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러시아·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의 형성이며,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불안감에 의해 통합된 ‘반패권 동맹’이라고 예견했다.<sup>18)</sup> 2022년 사마르칸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이란이 SCO 정회원이 되기 위한 의무 각서에 서명했다. 이란의 가입은 중·러·이란 3국의 반미 연대의 공식화, 중동으로의 SCO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국이 모든 약속을 위반한다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 간 협력관계는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 단극체제를 맹비난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법과 유엔의 중심적 역할에 기초한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다극적인 세계질서 형성을 지지한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을 규탄했다. 시진핑 주석은 비공식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표명했지만, 공식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상호 핵심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서로 강력하게 지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대표적인 친러국가인 벨라루스와의 외교관계를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sup>19)</sup>

중국·러시아·이란은 2019년 12월 오만해상에서의 3국 첫 해상합동훈련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1일 인도양 북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2022 해상 안보 벨트 연습’이라고 명명한 세 번째 3국 합동 훈련을 했다. 중국과 이란은 2016년 1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면 협력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2021년 3월 중국이 이란에 향후 4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이란은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했다. 2022년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중-이란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이란의 국가 주권과 존엄, 정당한 권익 수호를 지지한다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제안했다.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시 주석의 ‘글로벌 개발 구상(GDI)<sup>20)</sup> 및 ‘글로벌 안보 구상(GSI)<sup>21)</sup>을 지지한다면서 중국과 협력을 심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

18)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New York: Basic Books, 1997), pp.156-157.

19) 최수호, “中·러 주도 SCO 반미 색채 강화...이란 사실상 정회원 가입,”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6164900096?input=1195m> (검색일: 2022.9.16.)

20) 글로벌 개발 구상(GDI)은 시진핑 주석이 2021년 9월 유엔총회 영상 연설에서 제기한 것으로 ‘발전 우선’, ‘인민 중심’, ‘호혜와 포용·혁신 견지’, ‘인류와 자연의 공생’ 등을 주요 내용이다. 이는 미국의 동맹·가치 중심 외교에 맞서 경제협력으로 중국의 세력을 규합하려는 시도다. (조준형, “中, 다자무대에서 ‘시진핑 경제·안보구상 동조 확산’ 모색,” <https://www.yna.co.kr> (검색일: 2022.9.22.))

21) 2022년 4월 21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주권 존중, 영토 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sup>22)</sup> 시진핑 주석은 SCO 정상회의 연설에서 ‘SCO 개발은행’ 창립을 추진해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여 미국의 대러시아 금융제재와 향후 있을 수 있는 대중국 금융제재 가능성에 맞서 위안화, 루블화 등 지역 통화로 회원국 간에 결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용하는 독자적인 결제망을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SCO 회원국들로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시진핑 주석의 독자적 국제결제망 구축 제안은 “점진적으로 SCO 국가들의 통화를 상호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사마르칸트 선언’에 포함됐다.<sup>23)</sup>

2022년 6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확대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는 기존의 브릭스 회원국 이외에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13개 국가<sup>24)</sup>가 더 참가해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내세운 미국의 ‘가치 동맹’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도상국 연대’의 세(勢)를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서 미국을 겨냥해 “개발 의제를 정치화하고 작은 울타리에 높은 담을 치고 극한의 제재를 가하며 인위적으로 분열과 대항을 조성한다”고 비난하면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반대’와 개도국 경제 발전을 연결했다.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발전과 남남협력 기금’에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중국어 대규모 투자와 경제 발전으로 개도국을 규합하고 있다.<sup>25)</sup>

## IV.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재편

### A. 미국의 대중·대러 전략과 북중러 연대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Offensive Realism)을 바탕으로 ‘강대국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힘의 비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두 차례 세계 대전 참전은 어느 경우든 유럽의 평화가 목적이 아니라 위험한 적국이 지역적 패권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평화란 이런 행동의 결과로 얻어진 기본 좋은 부산물이라고 지적했다.<sup>26)</sup>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국으로서 다른 대륙에서 지역 패권국이 출현하여 그 대륙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유라시아 전략은 대륙의 동쪽에서 유럽으로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서쪽

전, 내정불간섭,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적 사고 및 일방주의 반대, 안보 불가분 원칙 등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주장해 온 내용을 포괄해 ‘글로벌 안보구상’을 제안했다. 일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안보 불가분 원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준형, “시진핑 ‘글로벌안보구상 제안...독자제재.확대관할 남용 반대,’” <https://www.yna.co.kr> (검색일: 2022.5.21.))

22) 조준형, “中.이란 정상회담… 시진핑 ‘이란의 정당한 권익 수호지지’”,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6112000083?input=1195m> (검색일: 2022.09.16.)

23) 임광빈, “시진핑, 달러권에 맞설 SCO 독자 결제시스템 제안,” <https://www.yna.co.kr/view/MYH20220919003100641?section=search> (검색일: 2022.9.20.)

24)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태국 등 13개 개도국 정상이 참가했다.

25) 구성모, “美동맹 ‘G7-나토 회의’ vs 中.러 ‘개도국 규합’… 新냉전 슈퍼워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7/114150971/1> (검색일: 2022.6.27.)

26)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Norton & Company Inc., 2001) pp. 362-365.



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서양동맹을 통해 서유럽을 미국 편으로 견인하고, 러시아의 제국 건설을 막기 위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NATO) 가입을 지원했다.<sup>27)</sup> 또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도왔던 중국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본격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충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발하였고, 미.중의 지정학적 대결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과 공세적 외교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과 민주주의 동맹 강화로 대응하면서 양국이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지정학 전략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동쪽 끝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충돌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두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질서 재편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 전쟁은 유럽과 러시아의 협력 단절, 미국과 유럽 및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강화, 나토의 유로·태평양 안보 개념 공유 및 중국에 대한 경계심 강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중러 중심의 권위주의 국가 결집 등의 변화를 추동했고, 미중패권경쟁이 진영 경쟁으로 확장되어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있는 동북아 지역에 냉전적 안보 구도가 강해지고 있다.

## B.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지정학적 의미

냉전 종식 이후부터 2018년 미중패권경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개방성과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강조되었던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지정학은 국제정치와 강대국의 세계전략에 상수로 작용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표면적으로 2021년 1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 서방에 제안한 안보 문서 초안<sup>28)</sup>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러시아가 제기한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공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정학적 위험 지역에 속한 중간국<sup>29)</sup>에서 일어난 강대국들의 힘의 충돌이며, 탈냉전 이후 나토의 동진으로 인한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변동과 취약한 중간국의 급격한 외교전략 변화를 그 원인으로 하고 있다.

## C. 미중패권경쟁의 확장

27)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Partnership for peace, PfP)는 나토와 소련 및 그 위성국 사이에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 현재 2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등 14개국이 나토 정회원이 되었다.

28) 2021년 12월 15일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에 '러시아-미국 간 안전보장 조약안'과 '러시아-나토 회원국 간 안전 확보 조치에 관한 협정안'을 전달했다. 이 안보 문서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의 나토 추가 가입 금지, 상호 영토 타격권 내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teve Pifer, "Russia's draft agreements with NATO and the United States: Intended for rejection?,"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1/12/21/russias-draft-agreements-with-nato-and-the-united-states> (검색일: 2022.2.13.))

29) 중간국(中間國)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국가'로 지역 국제정치 구조에서 지정학적 단층대 (geopolitical fault line) 상에 위치한다. (신범식, 「지정학적 중간국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적 딜레마」, 『국제.지역연구』 제29권 1호 (2020), 38쪽.)

### 1)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및 민주주의 연대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회복 및 동맹과의 다자협력 강화를 주창했다. 이는 미국 국력의 한계를 인지하며 동맹 및 우방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지경학적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미다.<sup>30)</sup> 2021년 2월 19일 제57차 뮌헨안보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맹의 현실주의적 도전으로 “중국과의 전략 경쟁”과 “러시아의 위협”을 상정했다.<sup>31)</sup> EU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서양동맹 복원은 환영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으로 상정하고 공동대응하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었다. 2021년 2월 19일 G7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미국과 유럽이 중·러에 대한 공통의 접근을 찾을 것을 요구하며 “대서양 양쪽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할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sup>32)</sup>고 말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토의 안보 구조 재건은 ‘러시아와의 대화’를 포함해야 한다”<sup>33)</sup>고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민주주의 동맹 및 대서양동맹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공공의 적이 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나토의 역할과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면서 유럽의 경제, 에너지, 군사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과 미국의 협력이 급진전하였다.<sup>34)</sup>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에너지 수급에 다각화를 모색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sup>35)</sup> 중국의 도전에 맞서 공동전선을 펴자는 미국의 요구에 미온적이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다방면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미중패권경쟁에서 미국과 공동전선을 펴게 됐고, 미국의 대(對)유라시아 전략에 편입되었다.

미국은 쿼드(QUAD), 오키우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 동맹(CHIP4), 블루 퍼시픽 파트너스(PBP),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GIP) 등 다자주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가치, 기술,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인 동맹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바이

30) 문정인, “[문정인 칼럼] 흔들리는 미국의 리더십, 불안한 세계질서,”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4812.html> (검색일: 2022.8.8.)

31) David E. Sanger, “Biden Declares ‘America is Back’ on International Stage,” <https://www.nytimes.com/live/2021/02/19/world/g7-meeting-munich-security-conference> (검색일: 2022.5.1.)

32) Melissa Eddy, “Merkel calls for common strategy in dealing with China and Russia,” <https://www.nytimes.com/live/2021/02/19/world/g7-meeting-munich-security-conference> (검색일: 2022.1.30.)

33) Roger Cohen, “French leader says the American-dominated world order should yield to new realities,” (검색일: 2022.1.30.) <https://www.nytimes.com/live/2021/02/19/world/g7-meeting-munich-security-conference>

34) Karen Deyoung, Michael Birnbaum, “U.S., allies plan for long-term isolation of Russia,”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2/04/16/us-nato-isolate-russia/> (검색일: 2022.4.26.)

35) 2022년 9월 27일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잇는 ‘발틱 파이프라인’이 개통된 데 이어 불가리아와 그리스를 잇는 가스관인 IGB(Interconnector Greece-Bulgaria)가 2022년 10월 2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억 4천만 유로(약 3천 390억 원)를 투입해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리스로 연결된 아드리아 횡단 가스관(TAP)에 IGB를 연결하여 연간 최대 30억 m<sup>3</sup>의 가스를 동남부 유럽으로 공급한다. 독일은 5개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신축하고 있으며 첫 LNG 터미널이 신축되면 울겨울부터 러시아 수입 천연가스의 20%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의 터미널이 모두 완공되면 노르트스트림1 수송량의 절반인 연간 250억m<sup>3</sup>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든 행정부는 쿼드를 군사동맹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 인권, 재난 대비, 기후위기 대응, 해양 안보 등을 내세운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켜 인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sup>36)</sup> 2021년 9월 15일 발족한 오키스(OCS)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하려는 미국, 호주와 브렉시트(Brexit) 후 아태지역 안보에 역할을 확대하려는 영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결성되었다. 미국 주도로 2022년 5월 23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sup>37)</sup>는 핵심 소재 및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자의 권리 등을 다룰 다자 경제협의체로 중국을 역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sup>38)</sup> 미국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특별히 기술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해온 미국은 반도체 생산을 대만과 한국에 의존해왔다. 미국은 2022년 미국 반도체 회사에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CHIP Act)’을 통과시켰지만 향후 5년 이내에 미국에서 최첨단 공정의 반도체 생산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긴 어렵다. 미국이 미국(설계), 한국(생산), 대만(생산), 일본(소재.부품.장비)이 참여하는 ‘칩4동맹’을 제안한 것도 자국이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확보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미국은 2022년 6월 24일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지역에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블루 퍼시픽 파트너(PBP)’를 결성했다. PBP는 2022년 4월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군 병력 및 군함, 무장경찰 파견을 골자로 하는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600만 달러(약 875억 원)의 차관을 통해 화웨이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미국은 2022년 9월 29일 국무부 청사에서 최초로 ‘미-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U.S. Pacific Island Country Summit)’를 개최해 태평양 파트너십 전략과 대규모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sup>39)</sup> 중국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면서 미중 경쟁이 연평균 성장률 1% 미만, 인구 25만 명 내외인 남태평양 도서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6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G7 차원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GIP) 구상’을 발표했다. GIP는 개발도상국들을 부채의 덩어리에 빠지게 하는 중국식 인프라 지원 모델의 대안으로 사회기반시설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2) 미중의 경쟁에서 진영 경쟁으로: 중국의 선택지 축소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패권경쟁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전략으로 대서양동맹 복원 및 민

36) Cambell &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a Strategy for restoring and Legitimacy,” <http://www.foreignaffairs.com> (검색일: 2022.5.15.)

37)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규합하여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다자경제협의체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적 성격을 가지며 IPEF 참가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38) 최윤정, 「인도-태평양 통상-안보 환경의 변화: 자유무역에서 공급망 경쟁으로」, 『정세와 정책』 2022 3월 제15호.

39) 태평양 파트너십 전략은 미-태평양 도서국 파트너십 강화, 태평양과 세계 연결성 강화, 기후 변화 및 21세기 도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태평양 섬 주민 번영 등을 핵심으로 하며 태평양 도서 국가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8억 1000만 달러(약 1조 1615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태평양 도서 국가 지역 인재 개발을 위한 대학 간 펠로십 프로그램 수립, 태평양 지역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1억 3000만 달러(약 1864억 2000만 원) 규모 투자 및 4억 달러(약 5736억 원) 규모 민간 투자도 포함했다. (Jack Stone Truitt, “U.S. warns of China threat in first Pacific islands strategy,”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Indo-Pacific/U.S.-warns-of-China-threat-in-first-Pacific-islands-strategy> (검색일: 2022.10.1.)

주주의 연대 강화, 다자주의 협력체 구성, 대(對)대만 관계 재설정을 추진하며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sup>40)</sup>을 강화해 왔다. 냉전 종식 후 시작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계화 기조에 맞춰 전 세계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단일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며 경제 발전을 추구해왔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에서 최대의 수혜를 누리면서 고속 성장했고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이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유럽이 중.러를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고 미국과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미중패권경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진영 대결로 확장되었다. 대서양동맹 복원 및 민주주의 국가의 결집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유럽의 경계심을 고조시켰다. 2022년 9월 독일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 장관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 관계에 대한 우려로 인권 침해 등 중국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할 수는 없다면서 새 무역 상대를 찾고 중국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sup>41)</sup> 영국 산업연맹(CBI) 사무총장 토니 댄커는 대중국 강경론을 내세우는 영국 정치권에 발맞춰 재계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염려되지만 저렴한 상품에 의존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sup>42)</sup> EU는 2017년 ‘유럽 배터리 동맹’을 결성하여 배터리의 유럽 생산을 지원했고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배터리 여권’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2월에는 ‘유럽 반도체법(Chip Act)’<sup>43)</sup>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14일 리튬과 희토류 등 원자재의 탈중국화를 골자로 하는 ‘유럽 주요 원자재법(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 Act, RMA) 제정을 선언했다. 원자재 확보의 새로운 파트너로는 호주.인도.칠레.멕시코.뉴질랜드를 언급했다.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했던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자 원자재 전쟁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국가들과 조율되지 않은 솔츠 총리의 방중(2022.11.4.)에 대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솔츠 총리의 방중 시기가 부적절하고 독일 정부의 전략에 어긋나며 동시에 EU 통합을 위태롭게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종속이 유럽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또 다시 유럽에 안보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그 약한 고리가 독일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 3기 출범 이후 G7 국가 지도자 중 처음으로 방중한 솔츠 총리는 “중국은 독일과 유럽의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이고, 독일은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고 탈동조화를 반대한다”면서 독일은 중국과 경제.무역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양국 기업이 서로 투자 및 협력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sup>44)</sup> 솔츠 총리는 11월 4일 프랑크푸르트알게마

40) Graham Allison, “Strategic Clarity: Statecraft in Biden’s First 100days.”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strategic-clarity-statecraft-bidens-first-100-days?>(검색일: 2022.2.3.)

41) Christian Kraemer, “EXCLUSIVE Germany drawing up new China trade policy, vows 'no more naivety'.”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ys-new-china-policy-will-not-be-naive-economy-minister-2022-09-13/> (검색일: 2022.9.15.)

42) Jim Pickard, George Parker, “UK plc is cutting ties to China, says CBI boss.” <https://www.ft.com/content/cd93dd29-7069-4e2e-baa8-7081b385c0c6> (검색일: 2022.8.5.)

43) EU는 총 450억 유로(약 63조 원)의 공공.민간 투자.지원과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9%인 유럽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네차이통(FAZ)에 실린 기고문에서 “독일과 EU는 보호주의를 추구하기보다 자체 회복력을 강화하고 실용주의 기반으로 현명하게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일방적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EU가 중국을 ‘협력자이자, 경쟁자, 라이벌’이라고 묘사한 것은 적절하며 최근 수년간 증가해 온 경쟁적 요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중국과 공동이 해가 걸린 문제에 있어 협력 가능한 부분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45)</sup>

중국과 유럽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미중패권경쟁에서 유럽이 중립적 위치에 있게 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발전과 외교적 입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고 중국은 유럽으로 일대일로를 확대하고 경제.기술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sup>46)</sup>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이 가까워지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에 우려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솔츠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은 서로 존중하고, 핵심이익을 배려하며,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고, 진영 대결 등 방해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면서 제3자의 제약을 받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미국을 견제하고 유럽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강조했다.

유럽이 경제보다 안보를 선택해 제1 교역국 중국과 급격한 탈동조화를 강행할지, 협력의 비중과 방향성을 조정해가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었던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경제협력 비중을 조절하여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및 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와 인프라 투자 등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sup>47)</sup> 유럽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유럽의 중국 견제로 ‘중국-중양아시아-러시아-유럽’으로 향하는 일대일로 육상실�크로드의 확장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0년 12월 30일 7년의 노력 끝에 중국과 EU가 합의한 ‘중-EU 포괄적 투자협정(CAI)’의 범위와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sup>48)</sup>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비우호적으로 바뀔으로써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선택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44) 중국은 솔츠 총리의 방중 기간에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여객기 140대에 대한 구매 계약(약 24조 550억 원 상당)을 체결했고, 독일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BMW는 11월 11일 BMW 배터리 생산 공장인 라오닝성 선양시 리디아 공장에 100억 위안(1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윤고은, “솔츠 다녀간 뒤...BMW, 中전기차 배터리공장에 1조 9천억원 투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5048600074?input=1195m>) (검색일:2022.11.15.)

45) 이을, “독일 총리 ‘분단 경험 독일, 중국 중심 블록형성 원치 않아,’”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4005900082?site=mapping\\_related](https://www.yna.co.kr/view/AKR20221104005900082?site=mapping_related) (검색일: 2022. 11. 4.)

46) 2020년 EU와 중국의 교역 규모는 5,860억 유로(약 780조 6,000억 원)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EU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Silvia Amaro, “China overtakes U.S. as Europe’s main trading partner for the first time,” <https://www.cnbc.com>) (검색일: 2022.7.2.)

47) 최근 ‘차이나시티’를 표방하던 독일 항구 도시 뒤스부르크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마트 시티’ 사업을 중단했다. 뒤스부르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20억 달러를 투자한 벨라루스 민스크 물류단지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의 함부르크 항만 지분 참여는 미국과 담당부처의 반대에도 솔츠 총리의 주장대로 허용했지만 참여 지분은 기존 35%에서 24.9%로 축소됐다. (윤고은, “독일의 ‘차이나 시티’ 뒤스부르크, 화웨이와 사업 중단,”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077900074>) (검색일: 2022.11.10.)

48) 2021년 3월 23일 EU, 영국, 캐나다, 미국이 중국 소수민족 인권탄압에 대한 공동제재에 중국이 맞제재를 하면서 CAI에 대한 EU 의회 비준을 보류했다. 2022년 4월 EU는 중국에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중국이 확답하지 않으면서 CAI 비준은 무기한 보류됐다. 2022년 7월 19일 중.EU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CIA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했지만, 원론적 사항만 확인했다.

## V. 결 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여는 이정표로 각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도전의 시기를 앞당기고 신냉전을 촉진하였다. 안보와 경제 발전의 양립을 모색하던 유럽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복원하고, 반대로 북·중·러 중심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결집하여 양 진영을 중심으로 신냉전적 안보 구도가 형성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되었던 나토의 동진과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러시아와의 대립은 우크라이나 안보에 비우호적 전략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가 무리하게 나토 가입을 강행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힘의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미·러 대리전 양상의 지정학적 충돌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강대국의 힘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중간국이 급격하게 균형점을 이동하는 경우 그것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더라도 핵심이익을 침해당한 강대국으로부터 중간국은 더 큰 안보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강대국의 힘이 대립하는 중간국이라는 점, 구조적 안보 제약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정권 교체에 따른 대외 전략 변화의 폭이 크다는 점 등이 매우 유사하다. 한반도는 휴전 상태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완충지이자 미·중·일·러의 균형점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강대국의 힘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 지역은 언제든지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 있다.

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비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맞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치외교와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양립을 추구하며,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변 4강과의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사안별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하고 한반도가 직면한 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한·러, 한·중 사이의 위기를 관리하면서 미국이 실질적인 대북 정책을 제안하고 북한이 다시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의 위기, 한반도의 신냉전적 구도 형성은 미중패권경쟁이라는 프레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긴 시계열과 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4차 산업 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무엇보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하여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Address by the President Vladimir Putin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en.kremlin.ru> (검색일: 2022.3.18.)
- Cambell &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a Strategy for restoring and Legitimacy.”  
<http://www.foreignaffairs.com> (검색일: 2022.5.15.)
- Christian Kraemer, “EXCLUSIVE Germany drawing up new China trade policy, vows ‘no more naivety’.”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ys> (검색일: 2022.9.15.)
- David E. Sanger, “Biden Declares ‘America is Back’ on International Stage.”  
<https://www.nytimes.com/live/2021/02/19/world/g7-meeting-munich-security-conference> (검색일: 2022.5.1.)
- Graham Allison, “Strategic Clarity: Statecraft in Biden’s First 100days.”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strategic-clarity-statecraft-bidens-first-100-days?>(검색일: 2022.2.3.)
- H. Mackinder, *Democratic Ideas and Reality*, New York: Norton, 1919.
- Humeyra Pamuk, Dmitry Antonov, “U.S.responeds to Russia security demands as Ukraine tensions mount.”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says-destructive-sanctions-wouldnt-hurt-putin-perso> (검색일: 2022.2.2.)
-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 Jim Pickard, George Parker, “UK plc is cutting ties to China, says CBI boss.”  
<https://www.ft.com/content/cd93dd29-7069-4e2e-baa8> (검색일: 2022.8.5.)
- Jack Stone Truitt, “U.S. warns od China threat in first Pacific islands strategy.”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 (검색일: 2022.10.1.)
-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Norton & Company Inc., 2001.
- John J Mearsheimer,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 (검색일: 2022.7.15.)
- Joint Statement, Meeting of NATO-Ukraine Commission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04 Apr. 2008, /cps /en/ natolive/official\_texts\_8964 .htm (검색일: 2022.5.29.)
- Karen Deyoung, Michael Birnbaum, “U.S., allies plan for long-term isolation of Russia.”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2/04/16/us-nato-isolate-russia> (검색일: 2022.4.26.)

Melissa Eddy, “Merkel calls for common strategy in dealing with China and Russia.” <https://www.nytimes.com/live/2021/02/19/world/g7-meeting-munich-security-conference> (검색일: 2022.1.30.)

Michael E. O’Hanlon, Melanie W. Sisson, and Caitlin Talmadge, “Managing the risks of US-China war: Implementing a strategy of integrated deterrence.” <https://www.brookings.edu> (검색일: 2022.9.10.)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2.10.12.)

NATO 2022 STRATEGIC CONCEPT, <https://www.nato.int/strategic-co> (검색일: 2022.7.20.)

North Korea: September 2022 Update b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p.15,2022),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 (검색일: 2022.9.20.)

Silvia Amaro, “China overtakes U.S. as Europe’s main trading partner for the first time.” <https://www.cnbc.com> (검색일: 2022.7.2)

Steven Erlanger, “Ally, Member or Partner? NATO’s Long Dilemma Over Ukraine.” <https://www.nytimes.com/2021/12/08/world/europe/nato-ukraine-russia> (검색일: 2022.5.3.)

Ted Galen Carpenter, “Ignored Warnings: How NATO Expansion Led to the Current Ukraine.” <https://www.cato.org/commentary/ignored-warnings-how-nato-expansion-led-current-ukraine-tragedy> (검색일: 2022.5.20.)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New York: Basic Books, 1997.

구성모, “美동맹 ‘G7-나토 회의’ vs 中.러 ‘개도국 규합’ … 新냉전 슈퍼워크.” <https://www.donga.com/3/all/20220627/114150971/1> (검색일: 2022.6.27.)

김범수, “북중 안보 위협에 일 우경화 심화...”평화헌법 개정“ 31%→51%로.”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3520036> (검색일: 2022.8.24.)

김승욱, “김정은 ‘대화할 필요성 느끼지 않아… 핵전투 무력 백방 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0005251504> (검색일: 2022.10.10.)

문정인, “[문정인 칼럼] 흔들리는 미국의 리더십, 불안한 세계질서.”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4812.html> (검색일: 2022.8.8.)

배인선, “[펠로시 대만 방문 후폭풍] 중국의 ‘종합세트’식 반격 … 군사.경제보복 ‘전위’.”



- <https://www.ajunews.com/view/20220803111112942> (검색일: 2022.8.10.)
- 신범식, 「지정학적 중간국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적 딜레마」, 『국제·지역연구』 제29권 1호 (2020), 46쪽.
- 이민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중소연구』, 제41권 1호 (2017), 43-44쪽.
- 유철종, “푸틴 ‘우크라 나토 가입시 나토 미사일 7분만에 모스크바 타격’.”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0160200080?input=1195m>  
 (검색일: 2022.6.18.)
- 장세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와 한반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대 유라시아 전략의 방향과 추진체계, 아태지역연구센터 (2022.6.24.)
- 정재흥·이동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 해협 위기 분석」, 『세종정책브리프』, 2022-06, 4쪽.
- 조준형, “中, 다자무대서 ‘시진핑 경제·안보구상 동조 확산’ 모색.”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2097500083> (검색일: 2022.9.22.)
- 최윤정, 「인도·태평양 통상-안보 환경의 변화: 자유무역에서 공급망 경쟁으로」, 『정세와 정책』 2022년 3월 제15호.
- 최재덕, 「일대일로 2.0과 중러관계의 제한성」, 『평화학연구』, 제20권 3호 (2019), 118-119쪽.
- 홍완석, 「전쟁으로 비화한 우크라이나 사태- 진단과 시사점」, 『외교』, 제141호 (2022), 119-120쪽.

#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에 대한 재평가:

남조선 혁명론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는가?

박수유(채널A)

#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에 대한 재평가 : 남조선혁명론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는가?

박수유(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채널A 기자)

## Ⅰ 목 차 Ⅰ

I. 민주화와 남조선혁명론

II. 민주화운동 시기 남조선혁명론

1.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
2.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

III. 권위주의 통치 종식과 남조선혁  
명론

1. 자주적 민주정부론
2. 민족공조론

IV. 민주화 이후의 남조선혁명론

1. 개정 당규약(2021)의 쟁점
2. 남조선혁명론의 미래

## I. 민주화와 남조선혁명론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 민주기지론으로 제시됐다. 남한이 미국에 대한 식민지 예속상태에서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에 놓여있다는 대남인식에 기초한다. 하지만 1980년대 남한에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지고,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을 거쳐 1998년 야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도약을 이루자 북한이 남한을 보는 시각, 대응양태는 물론 대남전략도 변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공세적 대남전략을 조정하는 데 ‘남한의 민주화’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남한 내 혁명세력을 통해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북한 대남전략의 목표는 탈냉전기를 거쳐 점차 남한 정부를 인정하고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는 체제생존전략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에 북한은 남한 민중들을 미국의 식민예속과 독재정권에 신음하는, 민주기지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수동적 존재로 인식했다. 하지만 남한사회가 절차적,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자 대남인식이 달라졌다. 북한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등에서 남한 민중들의 변혁적 지향성을 발견한 뒤로 이들을 조직화해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확고한 대남혁명역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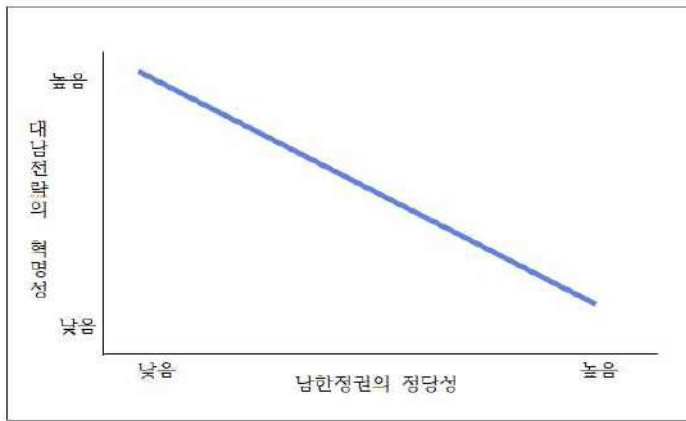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명기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서 ‘인민’이 삭제되고 당 규약이 개정된 시점은 2010년이지만 실제로는 남한의 민주화 역량이 올라서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달성된 198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6.10 민주항쟁으로 이룬 절차적 민주주의로 북한은 더 많은 남한 중간층들을 대남혁명역량으로 포섭하려 시도했다. 북한은 군사독재 아래 남한 민주화 세력을 처음에는 북한을 보조할 수 있는 역량 정도로만 여겼지만, 민주화운동 세력의 역량이 성장한 이후로는 이들을 공조 대상으로 적극 활용하려 시도했다.

민주화 세력의 역량은 1990년대 권위주의 통치 종식에 이은 야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한 단계 도약했다. 북한은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기대감이 축적된 결과, 선거혁명 등 합법적인 정치공간을 포함한 방식으로 남조선혁명론을 확장해 ‘자주민주정부론’으로 나아갔다. 중간세력과 진보정권을 동맹으로 삼고 당국 간 접촉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남한 정부를 규탄대상으로만 삼아왔던 북한이 진보정권과 대화에 나서며 반미공조를 함께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남한사회는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운동이 거의 사라져 민중봉기를 통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민주화된 남한 시민사회에 북의 정치적 공세가 먹힐 여지가 줄어든 데다 외교적, 경제적 우위를 점한 남한 정권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1980년대 민주화 투쟁 때와 달리 민주화된 남한사회에서 북한이 급진세력과의 대화만 고집할 경우 북한 역시 고립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대남전략도 남한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당국 간 공조로까지 대상을 확대시켰지만 미국과 공조하는 남한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미국에 맞서기 위한 ‘민족공조론’을 펼쳤다.

이처럼 1960년대만 해도 남한사회가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는 안이한 분석을 내놔던 북한은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성 끝에 민주기지론의 프리즘에서 벗어나 1980년대 후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 때는 북한이 남한을 혁명 대상으로 명시한 조선노동당 규약 속 ‘북 주도 혁명 통일론’ 관련 문구까지 삭제했다. 이것이 북한의 남조선혁명론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틀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민주화 실현을 비롯한 남한사회의 변화가 대남인식 및 대응, 대남혁명전략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규명하는 동시에 남조선혁명론의 변화상을 고찰해보려 한다.

&lt;그림 1&gt; 연구분석틀



## II. 민주화운동 시기 남조선혁명론

### 1.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

북한의 남조선혁명 전략은 지난 70여 년간 북한 지도부의 대남인식 변화에 따라 수정을 거듭해왔다. 1950년대 ‘민주기지론’과 1960년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전략’은 남한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데<sup>1)</sup>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와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민주기지론은 북한의 혁명역량을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남한 지역에 혁명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sup>2)</sup> 해방 직후 모든 면에서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세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유리한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 실현의 지름길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판단이 뒷받침된 결과였다. 1950년 6월 25일 감행했던 한국전쟁 역시 이 민주기지론에 기반을 두고 북한이 남침을 감행한 결과였다.

뒤이어 전후 복구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북한은 1958년에 이르러 전후 수습과 사회주의 개조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었다는 판단 아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sup>3)</sup> 북한은 해방 전부터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sup>4)</sup> 이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이어졌다. 미군의 남한 주둔에 따라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자본주의 요소보다 봉건적 잔재가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 반(半)봉건사회로 평가했다.<sup>5)</sup>

하지만 4.19 혁명으로 발현된 남한 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위당 구

1) 김갑식, “탈냉전기 동북아질서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정치연구』, 제19권 제3호 (2010), p. 116.

2) 방인혁, “김일성시대의 대남인식”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2호 (2012), p. 188.

3) 광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3), p. 95.

4)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7.

5) “30년 만에 개정된 당규약 서문 14개 항목,” 『통일뉴스』(인터넷판), 2010년 10월 25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98> (검색일: 2022년 5월 18일).

축을 통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직전의 민주기지론과 차이가 있다.<sup>6)</sup>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남조선혁명론과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남한의 혁명역량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여 남한 내부의 혁명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 북한 사회주의 역량과의 합작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sup>7)</sup> 하지만 북한은 박정희 정권 때 남한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뤄냄에 따라 북한과 경제력이 역전된 남한 정부를 상대해야 했다. 이런 배경에서 1970년 11월 5차 당 대회 때 등장한 새로운 남조선혁명 전략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이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은 남조선혁명에서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을 의미한다.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한다는 ‘단계적 혁명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8)</sup>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봉건적인 관계의 청산이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즉, 미군 철수를 통해 민족해방을 달성하고 미국에 예속된 남한 정부를 타도해 민주정권을 세운 후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전의 전략들에 비해 남한의 혁명역량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민주기지론 시기만 해도 북한의 역량이 남한보다 월등히 우세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으며 남한 민중의 저항과 역량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sup>9)</sup>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당시 북한 당국자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과 전략은 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은 남한 혁명과정에서 통일전선의 기본 강령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내세웠는데<sup>10)</sup> 여기서 자주란 외세인 미 제국주의의 축출을, 민주란 독재파 쏘정권 타도 뒤 인민정권 수립을, 통일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뜻한다.<sup>11)</sup> 남한 사회의 민주화라는 변화는 통일전선 기본 강령 중 하나인 ‘민주’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남한에 대한 인식 및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인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5.18을 계기로 남한의 민주화운동이 고조되어 군사독재를 종식시킬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보적인 청년층과 지식인 등 남한 중간층을 보조적 역량으로만 인식했던 북한이 5.18을 지켜보며 이들의 변혁적 지향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sup>12)</sup>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이 정식화된 1970년 제5차 당 대회 때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남한 민주화운동세력에서 보조동력이 아닌 주력군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시발점은 5.18로 볼 수 있다. 5.18 발발 직전인 1979년만 해도 북한은 자신들의 혁명을 보조할 수 있는 지하정당의 건설을 독려할 뿐 이었다.

“남조선 인민들은 광범한 군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로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그 합법적 지위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오래동안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어온 피어린 투쟁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주체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렸다.”<sup>13)</sup>

6) 구갑우, 『북한 연구의 성찰』 (파주: 한울, 2005), p. 267.

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61년 9월 11일),” 『김일성저작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35.

8)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20.

9) 방인혁, “김일성시대의 대남인식”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2호 (2012), p. 182.

10)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102.

11)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25.

12) 광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3), p. 142.

북한은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지하당 구축 전술이 남한 인민 스스로 독자적인 당을 결성하고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통일혁명당과 인민혁명당 등 북한의 지령에 의해 구축된 지하당들은 당시 북한 공작을 수행하는 연락당 정도의 위상으로 평가받았다.<sup>14)</sup> 1960년대 초 인민혁명당이나 1960년대 중반 통일혁명당 역시 혁명역량을 합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북한이 남파공작원을 파견해 비합법적으로 혁명역량을 구축한 전위당 조직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sup>15)</sup> 남한 혁명을 자체 혁명으로 위장하기 위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대남공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하자 북한은 이를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sup>16)</sup>이라고 평가하며 남한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다.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 주력군과 보조동력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주력군은 혁명의 완수를 위해 가장 철저하게 싸울 수 있는 세력으로 혁명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면, 보조동력은 끊임없이 동요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으로 평가된다.<sup>17)</sup>

북한 혁명이론은 미 제국주의와 투쟁을 벌이는 민족해방투쟁에서 주력군의 힘만으로는 혁명을 수행하기 어렵고 보조동력도 통일전선으로 함께 묶어 투쟁에 나서야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보조동력은 1단계 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곧바로 ‘혁명의 대상’으로 숙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단 주적 타도라는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제휴 연합했던 모든 비공산주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베트남 혁명 직후 혁명을 지지하던 종교인과 지식인들이 혁명 성공 후 숙청 대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 민주화세력들을 보조동력에서 점차 주력군으로 활용하려 시도했던 모습은 큰 의미가 있다.

한편 5.18 직후 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은 당시 남조선 혁명 전략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장기화와 남북한의 체제 고착화에 따라 상이한 두 제도가 장기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sup>18)</sup> 북한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 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안했다. 남북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현실화된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세의존 척결, 민주인사 석방, 군사파쇼정권의 민주주의적 정권으로의 교체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점을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역시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남한 내에서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진 직후에 이 연방제 방안을 내놓았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sup>20)</sup> 남한에서 군사파쇼 통치가 계속되고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상황에서는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단결이 불가능하며 “남조선에서 유신체제를 청산한 기초 위에서 군사파쇼 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해야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요구였다.<sup>21)</sup>

13)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0』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0), p. 198.

14)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27.

15) 곽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3), p. 197.

16)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1), p. 319.

17)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22.

18) 이종석, 『북한의 역사 2 : 주체사상과 유일체제 1960~1994』 (서울: 역사비평사, 2011), p. 140.

1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년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p. 158.

20) 최완규, “북한의 연방제 통일전략 변화 연구,” 『북한조사연구』, 제10권 2호(2006), p. 124.

21) 김일성, “축하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와 그 회원들에게(1981년 7월 1일),” 『김일성저작집 36권』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고 민주인사가 정권의 자리에 올라왔으면 우리나라는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민주인사가 정권의 자리에 올라왔으면 우리는 북과 남에 있는 두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sup>22)</sup>

6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당시 김일성이 강조했던 것도 5.18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이었다.<sup>23)</sup> 당시 남한 사회에 표면화되기 시작했던 반미 감정을 끌어내 남한 내 혁명 활동을 강화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해석된다.<sup>24)</sup> 북한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운 고려민주연방제 창립방안을 제안했지만 급진적인 남조선혁명의 가능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주화운동이 체제 전복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했던 북한 지도부는 반미자주화투쟁의 확산을 바라보며 반미 반체제 통일전선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 1970년대 후반 남북의 경제력 역전과 남한에서 거세진 민주화 열기 등 남한 사회의 정치 경제적 변화상을 고려해 북한 대남전략의 공세적인 성격이 과거에 비해 약화됐을 지라도 민주화가 실현되기 이전이었던 당시에는 대남혁명이 여전히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로 간주되었다.<sup>25)</sup> 이런 가운데 남한의 자생적인 혁명조직이 주도적으로 혁명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sup>2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로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원칙은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이나 1960년대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전략과는 차별화되는 큰 변화였다. 과거 민주기지론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전략에서 나타났던 자신감이나 남한에 대한 우월감은 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sup>27)</sup>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은 당시 북한의 경제적 열세를 반영해 과격한 혁명보다는 공존으로, ‘선 남조선혁명, 후 합작통일’로부터 ‘선 남북공존, 후 연방통일’로 대남정책의 목표를 조정하는 한편<sup>28)</sup> 남한사회 민주화의 가능성과 진전을 고려했다.

이처럼 1960년대만 해도 남한사회의 변화상을 포착하지 못했던 북한은 무력 통일에 입각한 ‘민주기지론’과 남한 사회가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등장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는 5.18 시기에 북한은 남한 인민들을 남조선 혁명의 주체로 여기며 1960년대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1년 김일성은 등소평과의 회담에서도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민주화투쟁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언했다.<sup>29)</sup> 이처럼 북한은 남한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비민주성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5.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1990), p. 77.

22) 김일성,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년 10월 10일),”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09.

2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80년 10월 10일),” 『김일성저작집 3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1987), p. 340.

24) 안문석, 『북한현대사산책 4』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6), p. 87.

25) 곽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3), p. 197.

26) 김갑식, “탈냉전기 동북아질서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정치연구』, 제19권 제3호 (2010), p. 117.

27) 방인혁, “김일성시대의 대남인식”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2호 (2012), p. 185.

28)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뉴스』(인터넷판), 2014년 3월 11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381> (검색일: 2022년 5월 23일).



과 이에 참여했던 남한 혁명세력을 활용했다.

## 2.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

1980년대 말은 탈냉전 시기의 도래와 함께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남한과의 타협이 절실한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1991년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통일방안이 ‘낮은 단계 연방제’다. 기존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대남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남한 사회에 계속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차원의 새로운 연방제 개념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 느슨한 연방제에는 각 지역정부가 외교와 국방, 중요 정치문제들에 더 많은 힘을 갖도록 하는 국가 연합적 성격을 가지므로 남한 당국의 호응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sup>29)</sup>

이처럼 탈냉전 이후 남한이 경제력, 외교력 모두 우위를 차지하고 민주화가 공고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은 과거에 비해 공존적, 타협적인 방향으로 변화해갔다.<sup>31)</sup> 대남혁명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남한의 민주화 진전 등 상황들이 북한을 보다 현실적이며 타협적인 남북관계로 유도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국제정세를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6.10 민주항쟁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로 이행한 남한과의 공존, 북한의 체제유지를 전제로 한 통일방안이 필요했다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만을 놓고 실제로 북한이 남한 정부와 당국자를 대화상대로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당시 남북의 통일방안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려는 의도 또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이 통일방안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통일방식을 선전하기 위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내놓았다며 오히려 이를 공세적인 제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sup>32)</sup>

이는 북한이 6.10 민주항쟁 이후 더 광범위한 남한 인민들을 대남혁명역량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1980년 6차 당 대회에 명기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서 ‘인민’이 공식적으로 삭제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으로 당 규약이 개정된 시점은 2010년이다.<sup>33)</sup> 하지만 실제로는 남한사회의 민주화 역량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서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달성된 198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10 민주항쟁으로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달성으로 북한은 5.18 때보다 더 많은, 다양한 남한 중간층들을 대남혁명역량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다.

북한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는 대남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소수의 핵심역량이 아닌 더 광범위한 동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남한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인민’이라는 용어는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34)</sup> 탈냉전 도래와 함께 북

29) 오진용, 『김일성 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파주: 나남출판, 2004), p. 81.

30) 오일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전술의 특징과 대응책,” 『국제정치논총』, 제43권3집(2003), p. 263.

31) 방인혁, “김일성시대의 대남인식”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2호 (2012), p. 189.

32) 정영재, “돌파와 협상의 북한 외교: 북한 대외 대남정책의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제42집 (2011), p. 54.

33)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2010년 9월 28일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 개정)

34) 김일기, “북한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변화 전망,” 『INSS 전략보고』, 제154집(2021), p. 7.

한의 국제적 역량이 약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대남혁명을 성공하려면 소수의 핵심역량 뿐 아니라 남한의 더 많은 혁명동조세력과 친북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성격론에 따르면, 70여 년 전 북한이 바라보는 남한의 사회성격은 ‘식민지반(半) 봉건사회’였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회’로 바뀌었다.<sup>35)</sup> 이러한 사회성격의 변화에 따라 남한의 혁명주도 세력도 농민계급에서 노동자계급 중심으로 변화했으며,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 만들어져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혁명의 성격도 전환됐다.<sup>36)</sup> 북한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 역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추구했던 목표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한의 민주화 등 사회성격의 변화에 따라 혁명주도 세력을 확대하려는 전술적 의도로 볼 수 있다.<sup>37)</sup> 북한이 당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투쟁들을 지켜보며 종교인, 인텔리, 자본가 등 광범위한 중간층을 대남혁명의 보조역량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점은 과거보다 유연해진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진보적 지식인’까지 남한 혁명을 주도할 주력군으로 격상시킨 것은 1990년대 들어 북한이 인텔리 계층에 대한 사상개조 사업을 강화하고 사회주의혁명 과정에서 인텔리의 역할을 강조했던 사실과도 관련 있다. 두 차례 민주화운동을 이끌며 1980년대 남한사회 변혁을 주도했던 청년학생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점을 보며 북한은 이들을 혁명 주력부대로 견인하려 시도했다.<sup>38)</sup>

즉, 6.10 민주항쟁이 일어난 뒤인 1980년대 후반은 남한 민주화 운동 세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함으로써 이들을 공조 대상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발휘되었던 시점으로 보인다. 북한이 1989년 9월 ‘정부,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조국통일방도에 관한 전 민족적 합의를 마련하자며 남한에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당시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하는 이유와 관련해 “다른 통일방안 등에 대해서도 허심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sup>39)</sup> 고려민주연방제만이 민족통일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고집해왔던 종전의 태도와 큰 차이를 보이며 남한 단체들과 적극 대화에 나섰다.

“각 당, 각 파의 정치세력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북을 방문하였거나 해외에서 우리와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였다고 하여 체포투옥한 각계인사들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모든 남조선인민들에게 북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sup>40)</sup>

한편 북한은 폭력혁명 위주의 대남혁명 전략을 사용하며 지하당을 바탕으로 삼아왔던 군부독재 정권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6.10 민주항쟁을 계기로 직접선거제가 도입돼 남한 사회 민주화가 진전됐고 한겨레민주당, 민중의 당 등 진보 정당이 창당되어 1988년 제13대

35) 곽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3), p. 60.

36) “30년 만에 개정된 당규약 서문 14개 항목,” 『통일뉴스』(인터넷판), 2010년 10월 25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98> (검색일: 2022년 5월 18일).

37) 김일기, “북한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변화 전망,” 『INSS 전략보고』, 제154집(2021), p. 6.

38)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22.

39) “북한, 「통일협상회의」 제의, 고려연방제 신축성 비쳐,” 『중앙일보』(인터넷판), 1989년 9월 2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3795#home> (검색일: 2022년 4월 24일).

40) 김일성,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1991년 1월 1일),”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29.

총선에 후보를 공식 출마시키기에 이르렀다.<sup>41)</sup> 이에 북한은 남한사회의 민주화로 인해 진보세력의 합법적인 정치활동과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가능해졌고 쿠데타 등 폭력적인 방식을 활용한 정권교체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 진보정당 창당으로 제도권에 북한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대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1991년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에 남한 내 종북세력을 양성하고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문서인 5·24 문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5·24 문헌은 종북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대남공작 방법과 지하당 조직, 반미 반정부 단체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42)</sup> 2010년 9월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발표된 민족해방 민주주의전략은 5·24 문헌을 통해 이미 밝혔던 내용을 20년이 지난 후 간략화해 공식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sup>43)</sup>

최근 북한 정찰총국 대좌 출신인 탈북자 김국성이 증언한 내용도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제도권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통해 남한의 정치를 북한에 예속시키려 한 대남혁명 전략을 뒷받침한다. 김국성은 “1990년대 초반 북한에서 직파한 공작원이 남한의 청와대에 잠입해 5~6년간 근무하다 복귀한 적이 있다”며 “이들이 남한에서 공작 임무를 수행한 것이 여러 건이고 공작원은 조선노동당 314 연락소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그가 개발했던 북한의 대남 전략 목표가 ‘남조선 정치의 북한 예속화’였다고도 주장했다. 당시에는 청와대에 남파 간첩이 근무했을 뿐 아니라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남파 간첩 이선실이 국내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조직해 사회 지도층을 입당시켰다가 발각되기도 했다.<sup>44)</sup>

한편 남한사회에서는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1988년부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노태우 정부는 급진 세력의 통일공세를 차단하고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해 7.7선언을 발표했다. 1989년에 발표된 새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이 선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북방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겨냥한 7.7선언을 북한은 강도 높게 비난했다. 주변 국가들과의 교차접촉에 의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두 개의 한국으로 분열을 영구화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7.7특별선언이 두 개 조선을 위한 분열주의적 단계론으로 시작되고 단계론으로 관통되어 있으며 교차접촉으로 결속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sup>45)</sup>

“남조선 대통령이 7.7선언이요 뭐요 하면서 좋은 말을 하였지만 70고령의 목사와 나이어린 처녀학생을 평양에 왔다갔다 하는 죄아닌 죄를 씌워 감옥에 넣었고 또 많은 청년학생들과 량심적인 인사들을 마구 체포구금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sup>46)</sup>

41) 임현진,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연구 -한겨레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 제23권 제1호 (2001)

42) 이병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관한 연구: 신제도주의적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6), p. 47.

43) 곽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3), p. 125.

44) “北공작원, 靑근무후 월북...시민단체 여러곳서 암약,” 『조선일보』(인터넷판), 2021년 10월 12일;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10/12/IPFHWH3QPZFCNGQ6GOKT6RW64Y/](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10/12/IPFHWH3QPZFCNGQ6GOKT6RW64Y/)(검색일: 2022년 7월 20일).

4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로동신문』, 1988년 7월 12일.

46) 김일성, “북과 남의 녀성들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1992년 9월 6일),”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31.

북한은 7.7선언과 북방정책 등을 정부여당이 단독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합동작품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sup>47)</sup> 남북한 관계를 ‘혁명적 투쟁기’로 바라보고 있었던 북측의 입장에서 이러한 평화의 움직임은 묵인할 수 없는 분노를 유발했다.<sup>48)</sup> 북한은 당시 민주화세력의 집권을 지원해 이들을 혁명역량으로 활용하려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막상 민주화된 남한사회에서 여야 정치세력이 합작해 단계적이고 현실주의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려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다. 따라서 북한은 보다 광범위한 남한 중간층을 영입해 펼치는 대남혁명과 당국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평화공존 추구 사이를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었다.

### Ⅲ. 권위주의 통치 종식과 남조선혁명론

#### 1. 자주적 민주정부론

남한의 민주화는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군부 권위주의 통치가 종식되면서 한 단계 큰 도약을 이뤄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내놓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도 “각 당, 각 파, 각 계 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한의 정당까지 포함한 다양한 세력들을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sup>49)</sup> 이처럼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인한 기대감이 축적된 결과 북한은 합법적인 정치공간을 활용한 선거혁명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남조선혁명론을 확장해 ‘자주적 민주정부론’으로 나아갔다. 북한은 “남북대화는 남과 북의 당국자들을 포함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이 광범히 참가해야 한다”<sup>50)</sup>며 남한 당국자들과의 접촉까지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함께 남한 정부와 당국자들을 규탄대상으로만 삼아왔던 북한이 김영삼 정권과의 대화를 시도하며 반미공조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였다.

이처럼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와 자본주의화가 동시에 진행된 남한사회에 대해 북한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이 과거처럼 남한체제 전복을 목표로 삼는 급진적인 혁명 전략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북한은 적화통일에 의한 한반도 통합이라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주장과 논리를 거두고 남북관계의 정착을 통해 우호적 대외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려 시도했다.<sup>51)</sup>

이러한 배경 아래 ‘자주적 민주정부론’이 싹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북한은 남한에서 대남혁명에 의해 달성된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불렀다. 한호석에 따르면 북한은 6.10 민주항쟁을 거쳐 1990년대 초까지는 남한의 군부 파쇼통치에 반대하는 ‘반파쇼민주전선’에 기반을

47) 박은주,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내 정치집단 간 역학관계 연구: 이슈와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8), p. 60.

48) 김창순, “시사논단: 7.7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 『북한』(1988), p. 8.

49)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9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4), p. 286.

50)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1998년 4월 18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 49.

51) 김갑식,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1호(2011), p. 69.

두고 민주화 과업에 집중해 공세를 펼친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남한의 진전된 민주화를 반영해 자주, 민주, 통일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족민주전선’이 새롭게 등장했다.<sup>52)</sup> 남한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의 구호도 ‘반봉건민주화’, ‘반파쇼민주화’의 단계를 지나 ‘반독점민주화’로 변천되어 온 점을 반영했다. 이는 북한이 바라보는 남한의 사회성격이 ‘식민지반(半)봉건사회’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회’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회성격론과도 연결된다.<sup>53)</sup>

이 민족민주전선은 진보적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목표로 삼으며 진보정당이 중심이 된 자주적 민주정부의 토대가 된다. 절차적 민주화를 통해 반파쇼민주화를 이미 달성한 남한 정권에 대해 펼치는 전략수단으로 반미자주화운동,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반독점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을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전선이다.<sup>54)</sup> 한반도의 통일전선은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국통일운동까지 포함되어있어 세력이 갈리는 반미자주화, 반독점민주화와 달리 모든 세력들이 협력할 수 있다는 논리다. 4.19 혁명에서 6.10 민주항쟁까지만 해도 군부파쇼통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반파쇼 민주화운동으로 진행되었던 통일전선은 1990년대에 이 단계를 넘어 반미자주화운동과 반독점민주화운동의 단계로 진입했으며 조국통일운동으로 확대했다. 통일전선이 확대되면서 포괄 범위도 제도권의 야당세력까지 확대되었고, 재야세력과 김대중, 김영삼을 대표로 하는 야당정치세력이 주도적으로 등장했다.<sup>55)</sup>

그리고 북한은 이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행할 민주주의를 북한이 지향해왔던 진정한 민주주의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다른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중간 단계로 구별했다.<sup>56)</sup> 진보적 민주주의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형성한다는 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데, 최종 목표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배제해야 할 대상까지 연합전선에 포함한다.<sup>57)</sup> 이처럼 북한은 자주적 민주정부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도로 광범위한 통일전선체의 구축을 제시했고, 그 전면에 진보적 합법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실천경로로는 대중투쟁을 통한 방법과 선거를 통한 방법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당시부터 북한은 이미 합법적인 정치공간을 활용한 선거혁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혁명 전략을 확장하고 선거를 통해 집권한 남한 정부와 공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었다.

이처럼 선거를 통한 집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폭력을 동원한 투쟁을 주장했던 북한의 과거 혁명이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무장봉기를 추구하는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운동이 문민정부 들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남한의 학생운동과 사회주의 세력에 의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성공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 이미 1988년 신년사에서도 남조선해방을 부정하며 민족적 대단결을 강조했던 것 역시 혁명 전략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58)</sup> 즉, 당시 군부독재정권을 물리력으로 타도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민간정부를 토대로 군부독재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주장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남한의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합법적인 정치 공간에서 친북 정당이 선거를

52) 한호석,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통일정부를 향하여』 (서울: 코리아미디어, 2005), pp. 5-30.

53) 곽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3), p. 60.

54) 한호석, 위의 책, pp. 5-30.

55) 한호석,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통일정부를 향하여』 (서울: 코리아미디어, 2005), pp. 5-30.

56) 통일연구원,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0.

57) 통일연구원, 위의 글, pp. 11-12.

58) 김현철, 『‘NL’론 비판1』 (서울: 도서출판 새길, 1990), p. 267.

통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남한의 합법 정치공간을 이용하는 정당 건설과 선거전술이 본격화되었다. 5.18 당시 청년이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하층 통일전선에만 집중했고 그 대상을 6.10 민주항쟁 때 확대했다면, 문민정부 집권 뒤에는 정계의 진보적 인사들이나 중간층의 정당 등을 포함한 상층 통일전선까지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탈냉전 도래 이후 남한의 우위가 이어졌던 상황에서 남한 민주화의 공고화가 대남인식과 전략을 공존적이고 타협적인 방향으로 유도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9)</sup>

당시 집권한 김정일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며<sup>60)</sup>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민주화된 남한 정부가 통일을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하층 통일전선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층 통일전선의 실현이 하층 통일전선의 강화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에서 비롯됐다.<sup>61)</sup> 당시 북한이 타도대상으로 표명했던 재벌이나 고위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연이어 방북 초청하고 대접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층 통일전선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이들이 반복 적대의식을 버리게 하고 친북 분위기를 유도해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고차원적인 영향공작인 것이다. 상층 통일전선은 이들을 따르고 있는 많은 추종자들에게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단이었다. 북한은 1990년 8월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개최한 이래로 1999년까지 모두 10번의 범민족대회를 열며 반미자주화 확산을 시도했는데 이 역시 북한이 상층 통일전선보다 범민련 중심의 하층 통일전선에 집중했음을 보여준다.<sup>62)</sup>

“남조선 농민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이미 추켜든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로 굳게 뭉쳐 매국반역적인 김영삼파썸 정권을 타도하고 그 무덤우에 진정으로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야 할 것이다.”<sup>63)</sup>

북한의 자주적 민주정부론에 의한 남한혁명의 경로는 통일전선체를 구성해 민주화세력이 집권한 정당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북한은 “자주적인 민주정권은 자주화, 민주화 투쟁에 참가한 광범위한 계급과 계층, 각당, 각파, 여러 갈래의 정치세력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4)</sup> 하지만 북한은 정작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대화를 시도하며 반미 공조를 유도하면서도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했다. 미국과 공조하는 남한 정부를 비판하며 재야세력에 대해서는 민족대단결론을 펼쳤다.

이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미국과 공조해 핵 사찰, 팀 스피리트 훈련 등을 펼친 남한 정부에 실망한 북한은 실질적인 화해를 추구하기보다 남한의 당국자와 급진적인 재야세력 간에 균열을 심화시키고 대화 결렬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전가했다. 사회주의권 붕괴 및 남한과의

59) 방인혁, “김일성시대의 대남인식”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2호 (2012), p. 189.

60) 김태영,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평양: 평양출판사, 2001), p. 200.

61)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02-113.

62) 김갑식, “탈냉전기 동북아질서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정치연구』, 제19권 제3호 (2010), p. 124.

63) “폭압은 자멸의 길이다,” 『로동신문』, 1994년 2월 12일.

64) “사대매국 정권은 자주적민주정권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1994년 3월 28일.

경제력 역전으로 위기감이 커진 데다 남한사회가 민주화를 이루자, 전략을 수정해 남한 정부와 공조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개입 여지를 줄이면서도 남한사회 분열을 야기하려는 투 트랙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한 재야세력과 연대를 시도하는 동시에 남한 당국자들을 비난하는 북한의 전략은 김영삼 정부 집권기 내내 계속되었다. 북한이 김영삼 정부 집권 초반 핵 위기가 심화되기 이전에는 남한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 민주화 세력의 집권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을 지라도 여전히 상층 통일전선보다 하층 통일전선에 기본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65)</sup>

북한은 남한 재야세력들의 활동 행보를 넓히기 위해 “남한 현실정치를 민주화하지 않고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청산해줄 것을 요구했다.<sup>66)</sup> 하지만 김영삼 정권 말기에는 공안정국으로 이어져 권위주의 정권 때로의 역행이라는 비난을 자초할 만큼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북한은 통일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남한 사회의 실질적인 민주화 도래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당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요구했는데,<sup>67)</sup>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기능을 무력화 등을 의미한다.<sup>68)</sup> 대남혁명론에 따르면 주요 전취목표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고 보조적인 전취 목표가 이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차후 전취목표가 자주적인 민주정권의 성격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sup>69)</sup>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가 파쇼적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민주화가 중요한 전제조건이었고, 문민정부가 출범했던 당시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에는 민주화라는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민정부 출범 무렵부터 북한이 합법적인 정치 공간을 활용한 선거 혁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론’이라는 대남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맞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야합을 통해 탄생했다는 한계와 집권 내내 이어졌던 북한과의 마찰을 감안할 때 실제로 북한이 남한의 합법 정치공간을 활용해 대남혁명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하층 통일전선을 다지는 데 집중했던 북한은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김대중 정부 집권 때 또 한 번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 2. 민족공조론

통일문제를 ‘전민족의 자주권 확보’라는 외적 측면과 ‘민족대단결 도모’라는 내적 측면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 온 북한이 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 1998년 김정일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할 즈음이었다.<sup>70)</sup> 초기에는 남한당국과의 화해를 전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남한 당국과 급진세력 간 남남갈등을 심화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으로 화

65) 김일성, “신년사(1993년 1월 1일),”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06.

66) “인권옹호단체가 김영삼에게 공개서한,” 『로동신문』, 1993년 2월 28일.

67) 장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p. 174.

68) 곽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3), p. 133.

69) 이병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관한 연구: 신제도주의적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6), pp. 147-148.

70) 김갑식, “탈냉전기 동북아질서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정치연구』, 제19권 제3호 (2010), p. 118.

해협력이 증진되고 북미 간 갈등이 심화되자 남한 정부를 협상파트너로 적극 인정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수세적 대응과정에서 민족주의의 긍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북한은 2000년 이후 변화된 위기상황에서 ‘민족공조론’에 매진하고 있다.<sup>71)</sup>

남한에서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발전, 대외적 위기상황 등에 맞춰 민족주의적 공세방법도 달라진 것인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공세적 위기대응으로서의 민족주의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미관계의 긴장에 대한 돌파구를 남북관계에서 찾으려 시도했다. 남한 정부와 일정한 경쟁과 대립관계를 유지하며 ‘민족통일전선론’을 고수했던 북한이 민주화 세력 출신 남한 대통령과의 대화 결과 도출된 6.15 공동선언 이후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며 ‘민족공조론’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실현할 데 대한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통일위업 실천에서 전환적 국면을 여는 근본담보를 마련하는 것’<sup>72)</sup>이라 주장했다. 또한 ‘남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집권당국가 간의 대화가 필요한데, 이는 실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국의 토의, 합의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sup>73)</sup>이라며 남한 당국자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미국과 남한 정부를 규탄대상으로만 삼아왔던 북한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정권과의 대화에 나서며 반미공조를 함께 해나갈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 합법적인 정치공간을 활용한 선거혁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혁명 전략을 확장한 데 이어 선거를 통해 집권한 남한 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02년 핵 위기 이후 북한이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한 민족공조 전략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북한은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한반도에서의 대결구도가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며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고 남한의 국론분열을 도모하려 시도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김일성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발전시킨 김정일의 ‘민족대단결론’도 함께 선전하며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는 대립구도, 반미자주화투쟁을 강조했다.<sup>74)</sup> 남한 정부를 협상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북한은 6.15 공동선언에 나타난 ‘우리민족끼리’ 표현을 시작으로 민족공조론을 정치담론화하며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통일문제를 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이 기존의 민족통일전선에서 민족대단결론으로 전환되었으며, ‘민족공조론’은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강화하려 제기된 것이다. 민족대단결론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기존의 통일전선전략과 명확히 대비된다는 분석도 나왔다.<sup>75)</sup> 북한은 민족대단결, 나아가 민족공조를 해나갈 단결의 주체에 각계각층 민중은 물론 당국자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2년에 발간된 북한 저서도 민족공조의 실현방도인 민족대단결론이 기존의 민족통일전선론과 달리 단결의 주체를 남북을 포함한 모든 민중, 당국자까지 포함하므로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이 아닐 뿐 아니라 통일전선론이라면 포함해야 할 영도계급 문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과의 결합문제 등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체의 통일전선론에서 민족

71) 김갑식,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민족공조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2006), p. 149.

72) 량창일, “6.15북남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 『김정일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48권 2호(2002)

73) 장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p. 96.

74) 김갑식, “탈냉전기 동북아질서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정치연구』, 제19권 제3호 (2010), p. 119.

75) 김갑식,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민족공조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2006), p. 159.



통일전선론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론으로 대남전략이 변화되는 흐름을 소개했다.<sup>76)</sup> 1980년대 대남전략이었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성사시키려면 광범위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이 혁명승리를 위한 필수 담보였다.

민족대단결론과 통일전선론을 구분한 장석의 의도는 통일전선에 대한 남한 내 부정적 인식을 의식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 민족대단결을 통한 민족공조론의 제기로 대남전략의 기본 축이었던 기존의 통일전선론 개념이 수정될 여지가 발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sup>77)</sup> 2000년 북한은 “우리가 하자는 통일전선은 북과 남의 각계층이 화해하고 단합하며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나가자는 것이고 누구나 다 단결하고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발전이 통일전선 자체라는 새로운 견해를 피력했다.<sup>78)</sup>

“누구든지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와 공조하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추구한다면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며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sup>79)</sup>

이처럼 북한은 대남전략을 펼치면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하지만 북한이 지칭하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동일의 지역, 언어, 생활양식, 문화와 역사를 갖는 인간의 집단’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계급적인 개념이다. 1990년대 민족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이어 2000년대 민족공조론 등 공세적 민족주의로의 변화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의 수정 및 확대를 동반했다. 과거에는 북한 지역 내부로만 한정해서 사용했던 민족이라는 개념이 남한까지 포함한 모든 한반도로 확장된 것이다.

당시 북한의 민족에 대한 강조는 남한 내 친북세력 뿐 아니라 각계각층 민중을 규합해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남한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남한의 민주화로 인해 친북세력이 상대적으로 ‘주변부화’된 상황 역시 북한이 과거와 달리 당국 간 공조까지 포함하는 등 민족공조의 범위를 확대시킨 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북한은 남한 사회를 ‘민족 대 반민족세력’ 구도로 분리해 친북 세력들은 전략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그 중에서도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전술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활용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들은 반민족주의 세력으로 분류해 반미전선을 형성하는데 활용했다.<sup>80)</sup>

민족공조론을 내세우며 북한은 “통일이란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동족과 공조하여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해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진행 중인 남한의 반통일적인 외세와의 공조, 친미공조 행위를 비난했다.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로 설정한 뒤 민족공조는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평화공조, 애국공조”이며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공조이자 매국공조로 비난했다.<sup>81)</sup>

북한 민족공조 주장의 목적은 남한 내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강

76) 장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평양: 평양출판사, 2002), pp 305-328.

77) 김갑식,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민족공조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2006), p. 164.

78) “자주통일의 21세기로 나아가는 민족의 발걸음은 막을 수 없다,” 『로동신문』, 2000년 12월 15일.

79) 김정일, “력사적인 북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돛기념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1997년 8월 4일),” 『김정일저작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 109.

80)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32.

81) “민족공조의 길에 참다운 애국애족이 있다,” 『로동신문』, 2004년 10월 5일자.

화하는 한편 한미공조체제를 약화시켜 대외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의 목표에는 구체적으로 연방제 통일방안 실현,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확대, 주한 미군 철수 관철, 반미전선 구축 뿐 아니라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고 친북 동조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었다.<sup>82)</sup>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에 대해 남한 내 보수와 진보 진영, 당국자와 재야세력 간에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민족공조론을 주장한 데에는 이처럼 남한 사회가 분열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급진적 재야세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화된 남한 사회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 이를 간파한 북한이 화해 협력 분위기로 접어든 남한 사회에서 급진적 재야세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세력 재편과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도록 유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남갈등’ 자체가 시민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사회의 민주화’라는 전제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당시 각계 통일운동 단체들은 민족 간 공조에 반대하며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반통일, 우익, 보수 세력들은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sup>83)</sup> 결국 민족공조론은 북한이 남한의 정부, 정당, 시민단체들에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중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남한 내부에 이념적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북한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sup>84)</sup> 북한이 민족공조 주장을 통해 남한 내 갈등을 조장하려 한 것은 과거 구소련이나 중국이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으로 공산화혁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전술적으로 ‘계급을 초월한 민족주의나 민족단결’을 주장했던 것과도 유사하다.<sup>85)</sup>

북한은 남한사회 내에서 국가보안법 존폐문제가 제기되는 등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민족공조론을 내세워 대남선전을 강화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민주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한 남한 사회 분위기에서는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이 수용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화와 탈냉전 등 대내외적 정세가 남한 민족주의의 핵심이었던 정서적이고 당위적이었던 통일인식을 현실적, 소극적으로 바꿔 대북 적대의식은 우월적인 반공의식으로, 친미의식은 현실주의적으로 전환됐다.<sup>86)</sup> 남한사회의 민주화가 초래한 정치공간의 확장이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뿐 아니라 통일운동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를 북한이 남한 사회를 선동하는 데 활용했다.

물론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했던 건 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다. 남한 정부를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보임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했으며<sup>87)</sup> 당시 국제정세와 북한의 경제적 난관이 이러한 정책 전환을 구조적으로 강요한 측면이 분명 있었다.<sup>88)</sup> 하지만 남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북한의 의지 표현이기도 했다.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은 과거와 달리 남한 지도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남한의 민주화 달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북한이 남한당국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82) 박선동,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민족공조론: 그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1권 2호(2008), p. 210.

83) “올해 공동사설의 기본체계,” 『로동신문』, 2004년 1월 4일자.

84) 최기환, 『6.15시대와 민족공조』 (평양: 평양출판사, 2005), p. 108.

85) 박승식, “북한의 민족공조의 실체,”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2005), p. 225.

86) 전재호,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5권 1호(2012), p. 95.

87) 정성장, “북한의 통일 및 대남 정책 목표의 변화 연구,” 『고향정치학회보』, 제2권(1999), p. 182.

88)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389

## IV. 민주화 이후의 남조선혁명론

### 1. 개정 당규약(2021)의 쟁점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개정된 노동당 규약을 공개했다.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정치시스템 전반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기존의 2016년 당 규약에서 상당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변화된 시대적 환경을 반영해 대남전략 관련 내용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이 삭제되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된 점을 두고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이 삭제된 점을 두고 북한이 사실상 남조선혁명론과 동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더 이상 우리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특수관계’가 아닌 우리나라제일주의 기조 아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접근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이라는 표현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문구를 풀어쓴 표현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사회의 자주적 발전’은 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는 민족해방혁명을 의미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의미해<sup>89)</sup> 개정된 당규약도 기존 남조선혁명론의 연장선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당 규약의 문장을 세세히 살펴보면 외세에 대한 거친 표현이 다소 순화되고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민주주의혁명’ 등의 표현이 삭제되는 등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통일’, ‘민족해방’ 등에 대한 언급은 변화되지 않고 유지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제의 종국적 청산’을 언급하고 있어 여전히 민족해방은 중시하지만 남한의 ‘민주주의혁명’ 필요성은 언급이 없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라는 해석도 있다.<sup>90)</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조선혁명론은 70여년에 걸쳐 사회변화상을 반영해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 본질과 목표까지 변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남조선혁명론은 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민족해방혁명과 남한 정권 타도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구성되는데, 후자를 북한은 반독재 민주화라고도 표현했다. 남한 사회가 민주화를 이뤄감에 따라 전술적인 차원에서 수정이 거듭됐지만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기본 노선은 2021년 당규약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된 당규약 역시 최종목적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의 공식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 역시 대남노선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조선혁명 폐기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sup>91)</sup>

1990년대에 권위주의 통치가 종식되고 민간인 정부가 최초로 집권하면서 북한이 합법적인 정치 공간을 활용한 선거혁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남조선혁명을 확장하려 했듯이 2021년 당규약에 포함된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당시에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운동이 약화돼 민중봉기를 통한 혁명의 성공가능성이 줄어들자 북한이 남한 당국자들과의 접촉을 모색하며 ‘자주적 민주정부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1990년대나 ‘사회

89) 오경섭, “개정 조선노동당규약의 핵심 쟁점 분석,” 『통일연구원』, 현안분석(2021), p. 2.

90) 진희관, “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북한학연구』, 제17권 제2호(2021), p. 36.

91) 김일기, “북한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변화 전망,” 『INSS 전략보고』, 제154집(2021), p. 13.

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명시한 지금이나 북한은 변함없이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변화된 정세를 반영해 당장 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대감을 현실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변경했을 뿐이다.

## 2. 남조선혁명론의 미래

남북관계를 두고 '불변론과 변화론' 간 논쟁은 수십 년간 계속돼 왔다. 지속적 교류협력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주장과 북한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주장이 논쟁을 이어왔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래로 사실상 북한의 매체에서는 '우리민족끼리'가 등장하며 남조선혁명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sup>92)</sup>이 기능주의적 입장이다. 반면 노동당 규약 전문에 여전히 존재하는 남조선혁명론 관련 용어들은 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 북한이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용어를 50여년 만인 2021년에 삭제하면서 관련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대남전략은 쉽게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주장<sup>93)</sup>과 달리 이종석은 1990년대 이후 대남정책의 변화는 "단순한 전술적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수정"이라고 보고 "탈냉전이 시작되는 1980년대 말 이후 크게 변모해왔다"고 평가했다.<sup>94)</sup> 서동만 역시 남북의 상호작용적 성격을 강조하며 북한이 과거와 같은 정책을 펴더라도 변화된 남한 사회에 먹힐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이미 변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sup>95)</sup>

하지만 남조선혁명론이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내외적 정세 등을 반영해 전략·전술을 수정해 왔을 지라도 '폐기'됐다는 판단은 쉽게 내리기 어렵다. 이는 미국과 남한이 더 이상 북한의 적이 아니며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내려오던 통일이라는 목표가 사라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96)</sup> 하지만 북한이 지난하게 주장해 온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미수교라는 선대의 유업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거두어들이기 어렵다. 북미 수교를 통한 평화체제 및 종전선언 달성, 남북연합 단계 진입 등 미국과 남한을 더 이상 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만으로 남조선혁명론을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를 기존처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볼 것인지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볼 것인지도 남조선혁명론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이다. 남북이 서로의 제도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해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실제로 당규약에서 '우리민족끼리' 표현을 삭제한 점을 미루어볼 때 '투 코리아'를 공식화하며<sup>97)</sup> '우리국가제일주의'로 나아감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북한이 점차 통일을 단기적 목표가 아닌 장기적 차원의 과제로 바라봄에 따라 당장의 통일보다 평화공존 및 분단관리를 추구하면서, 노동당규약에 아직 '통일'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투 코리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92) 진희관, "북한 변화론 쟁점 분석: 대남혁명전략과 경제관리방식," 『통일경제』, 2000년 1월호(2000).

93) 김성철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서울: 박영사, 1999), pp. 360-393.

9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378.

95) 서동만, "북한의 대남정책," 『통일시론』 창간호(청명문화재단, 1998), pp. 88-112.

96) 김일기, "북한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변화 전망," 『INSS 전략보고』, 제154집(2021), p. 13.

97) "정세현 "최근 北동향 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쉽지 않을 것", 『연합뉴스』, 2021년 6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127100504> (검색일: 2021년 11월 6일).

지금까지 남조선혁명론이 변화해 온 궤적을 살펴볼 때 향후 남북이 평화공존을 거쳐 평화 체제를 확립한다면 ‘민주주의 혁명’을 암시하는 일체의 표현들이나 ‘미제의 종국적 청산’ 등 문구들은 충분히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민주화를 이룩해 온 남한사회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로 지난 40여년간 대남전략과 당규약 표현이 조금씩 수정을 거듭해온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삼대 께 유지해 온 ‘통일’이라는 과업을 표현한 부분은 선불리 삭제되기 어려우며 남조선혁명론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북미수교, 주한미군 철수 등 지난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국가적 목표를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남조선혁명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이다.

#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분석

조현주(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분석

---

북한연구학회

12.9

조현주

### 남한 핵무장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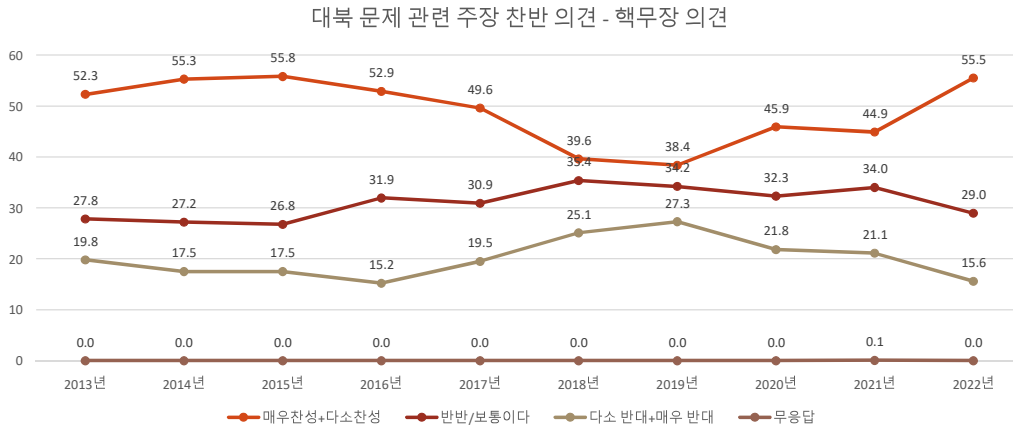
"전술핵 등 논의는 해야" vs "美 핵계획에 韓 참여 강화가 최선"

"남북경협 통해 北 핵포기하게 해야"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 필요"

"핵무장론은 정치 공방...비확산 규범 지켜야"

"미국과 핵전략 공유해야" 37.8%... "독자 핵무장"도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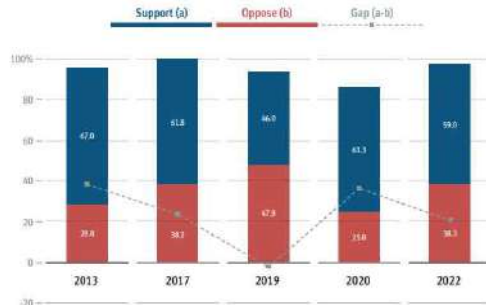
# 핵무장 의견 (서울대 통일의식조사, 2022)



# 핵무장 찬성 여론



Do you think that tactical nuclear weapons should be deployed in Sou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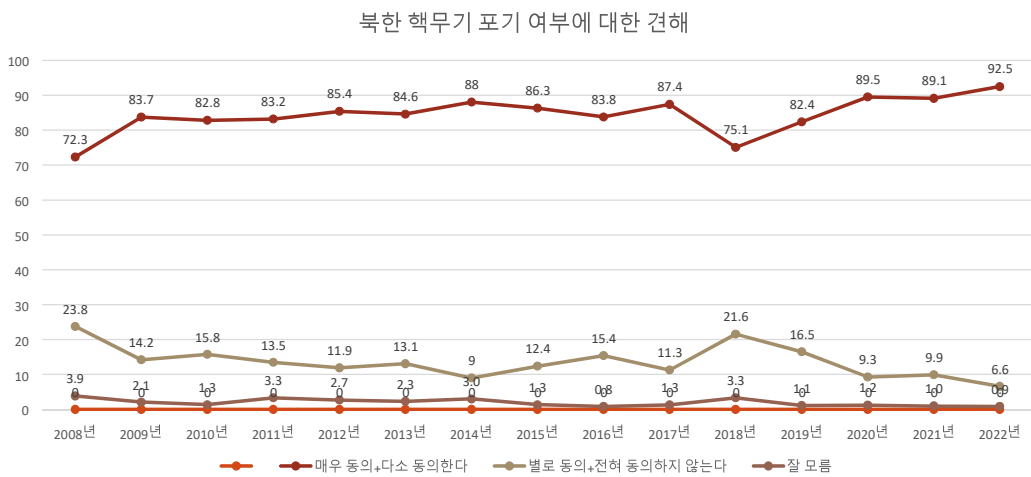
아산정책연구원 (2022년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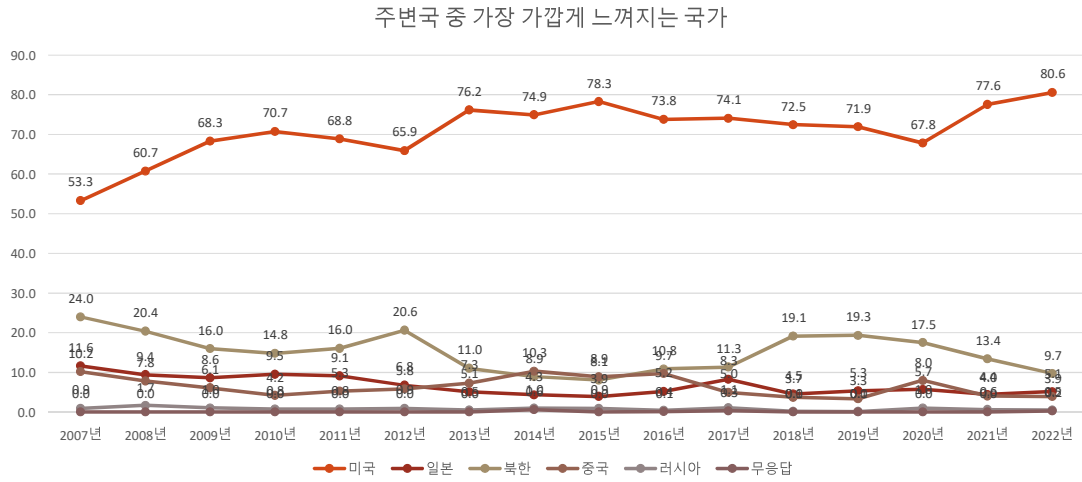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서울대 통일의식조사, 2022)



###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서울대 통일의식조사, 2022)



##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서울대 통일외교연구소, 2022)



## 연구 질문

- 한국 핵무장론의 대두
  -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
  - 미중 갈등 구조 격화
  - 우크라이나 분쟁
- 핵무장론에 대한 높은 찬성 의견이 여론 중심으로 형성, 핵무장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
-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과 전문가 의견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
-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기존 연구

- 핵 확산에 관한 기존 연구는 여론 중심이 아닌 국가 혹은 정부 중심으로 분석
  - 핵무기 개발 이유: 과학기술, 안보, 국내정치, 규범 (norms), 지위 (status) (Jo & Gartzke, 2007)
- 손성용 & 박종희 (2020)
  - 핵무기무장과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제는 설문조사만으로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존재
  - 실험 설문 기법을 통해 핵무기무장에 대한 여론이 전문가의 핵에 대한 지식 제공 (핵무기 비용, 경제 제재 가능성 등)으로 인해 크게 변화
- Dalton & Han (2020)
  - 북핵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정도, reliability of U.S. alliance commitments 가 한국인의 핵무장 찬성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여론조사 결과 없이는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
  - 많은 설문조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temporal influence 가 존재할 가능성

## 기존 연구

- “한국에서도 핵 확산 및 비확산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한국의 독특한 특징인 높은 핵무장 지지 여론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손성용 & 박종희, 2020, p.182)
- “실제 현실정치에서 여론이 정책결정권자의 핵 확산 혹은 비확산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는 매우 심각한 기존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손성용 & 박종희, 2020, p.182)
- 한국인들의 핵무장화에 대한 찬성 여론 형성에 (1) 주변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위협인식, (2) Credibility of the US security commitment, 그리고 (3) Effectiveness of the US security commitment 가 미치는 영향 분석 (손성용 & 임만성, 2021)
- Credibility of the US nuclear security guarantee 가 한국의 핵무장화 찬성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설문 기법으로 탐구 (Sukin, 2020)
- 북핵 해법 (유사시 대북 선제 공격, 대북원조)에 연령과 세대 변수가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분석 (장기용 2018)

# 이론

---

- 기존 연구들의 주요 전제: 핵무기 보유의 주요 동기는 안보위협 (threats to security)에서 기인한다
  -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정도 (핵, 무력도발)
    -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위협을 느낀다는 여론 (69.8%)
    - 지속되는 핵실험 (2009, 2013, 2016, 2017) 과 북한의 도발
      - 북한핵 위협
      -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 Credible nuclear security guarantees and nuclear proliferation
    - Conventional wisdom: Credible security guarantees 는 핵무기 획득을 대체할 수 있다 (Jo and Gartzke 2007; Sagan 1997; Singh and Way 2004). 즉,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 하지만, nuclear exploration, nuclear pursuit, nuclear acquisition 의 단계별 차이를 고려하면, evidence is mixed (Sukin, 2020)

# 이론

---

- Sukin (2020) 에 따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
  - Conventional wisdom: Credible security guarantee ↑ , support for nuclear proliferation ↓
  - The unwanted use theory: Credible security guarantee ↑ , support for nuclear proliferation ↑
    - (1) 동맹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miscalculation 등으로 인해)
    - (2) nuclear decision-making 에 대한 통제권을 정립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가능성을 줄인다
- 한미공조

# 변수

• 종속변수

- 남한 핵무장화 (2013~2022년)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 매우 반대 (1)
  - 다소 반대 (2)
  - 반반/그저그렇다 (3)
  - 다소 찬성 (4)
  - 매우 찬성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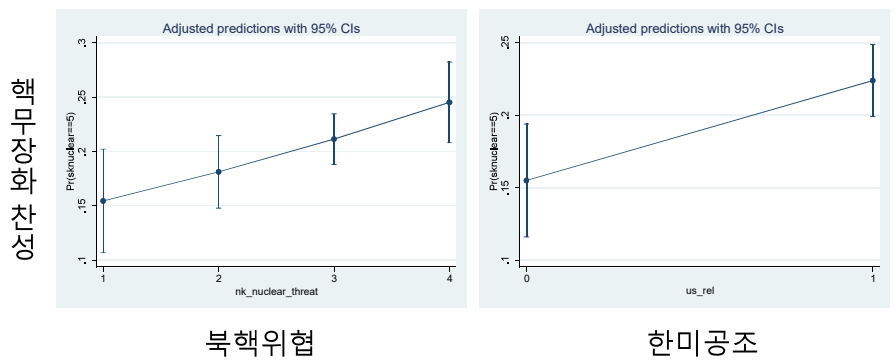
• 독립변수

- 북한 핵무기 보유 위협 (4단계 = 매우 위협)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4단계=매우 높다)
- 한미공조 (미국에 대한 인식)
  - 협력대상 =1, 적대/경계/경쟁 대상 = 0
- 이념성향 (5단계=보수)
- 성별 (1=남성, 0=여성)
- 연령대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 교육 (중졸이하, 고졸, 대졸 이상)
- 소득
- (정치관심 2007-2019)

VARIABLES	sknuclear
nk_nuclear_threat	0.192** (0.0820)
nk_provocation	0.0670 (0.0730)
us_rel	0.453*** (0.151)
ideology	-0.00121 (0.0633)
gender	0.189* (0.105)
generation	0.0291 (0.0441)
education	0.00803 (0.106)
income	-0.0813 (0.0624)
Observations	1,19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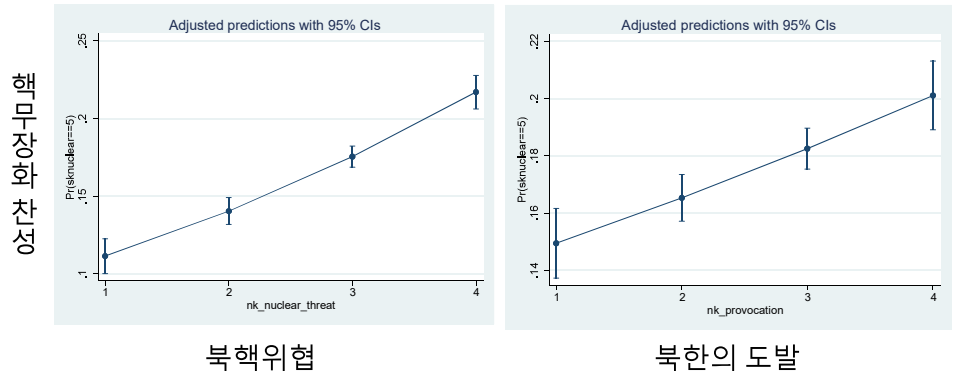
## 분석결과 (2022년) 및 한계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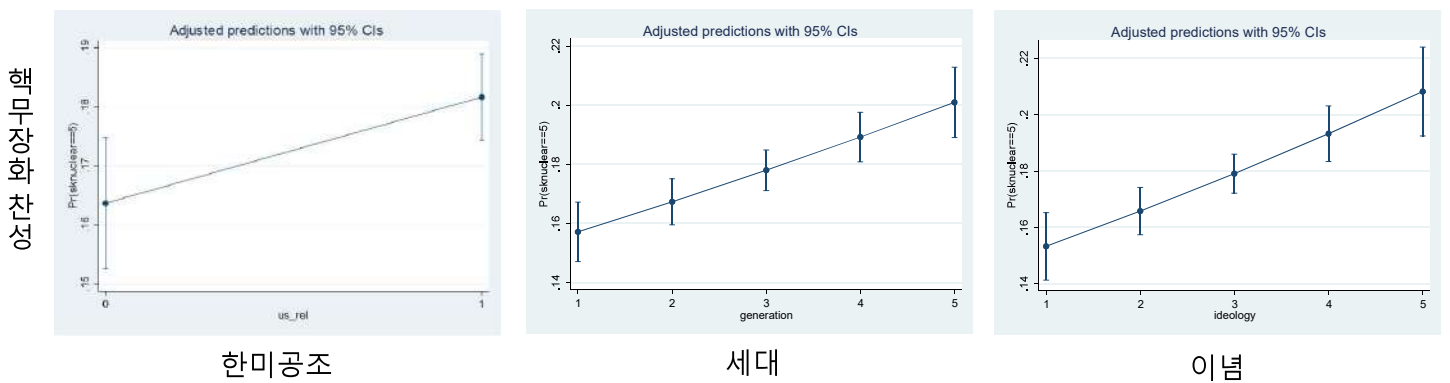
VARIABLES	sknuclear
nk_nuclear_threat	0.264*** (0.0247)
nk_provocation	0.120*** (0.0241)
us_rel	0.126*** (0.0414)
ideology	0.0934*** (0.0208)
gender	0.147*** (0.0332)
generation	0.0748*** (0.0150)
education	0.0405 (0.0334)
income	-0.0230 (0.0186)
Observations	11,95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분석결과 (2013-2022) 및 한계효과



## 분석결과 및 한계효과



## 논의

- 북핵위협 인식과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느낄수록 핵무장화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짐
-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도 핵무장화에 대한 찬성의견을 높임 (2013~2022)
- 보수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핵무장화 찬성의견이 높아짐
- 소득과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

## 함의

- 한미공조 인식이 남한 핵무장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연구 필요
  - Sukin (2020) 의 연구결과와 비교
- 북핵무장화로 인한 전문적 정보가 확대되고,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핵무장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손상용 & 박종희, 2020)
- 세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세대별 차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
- 핵위협이 단순히 북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혹은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위협 인식을 높이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필요
  - 손상용 & 임만성 (2021) 은 핵위협을 다각화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위협에 대한 인식도 중요 변수라고 주장)
-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대두는 핵무장화 의견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과 사회적 논의가 매우 중요

# 참고문헌

---

- 손상용, 박종희. (2020). 한국 유권자들은 정말 핵무장을 원하는가? 실험 설문을 이용한 핵무장 여론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4(2), 175-204.
- KBS News, "핵무장론은 정치 공방...비확산 규범 지켜야." 2022.10.2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6087&ref=A>
- Dalton, Toby, and Ain Han.2020. "Elections, Nukes, and the Future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October 26.
- Jo, Dong Joon and Gartzke, Eric 2007.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1(1): 167-194.
- Ko, J. (2019). Alliance and Public Preference for Nuclear Forbearance: Evidence from South Korea. *Foreign Policy Analysis*, 15(4), 509-529.
-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2013-2022. "Survey of Public Awareness on Unification (Longitudinal Survey)."
-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22.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 Sagan, Scott D. 1996. "Why Do States Build Nuclear Bomb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21(3): 54-86.
- Sukin, L. (2020). Credible Nuclear Security Commitments Can Backfire: Explaining Domestic Support for Nuclear Weapons Acquisi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4(6), 1011-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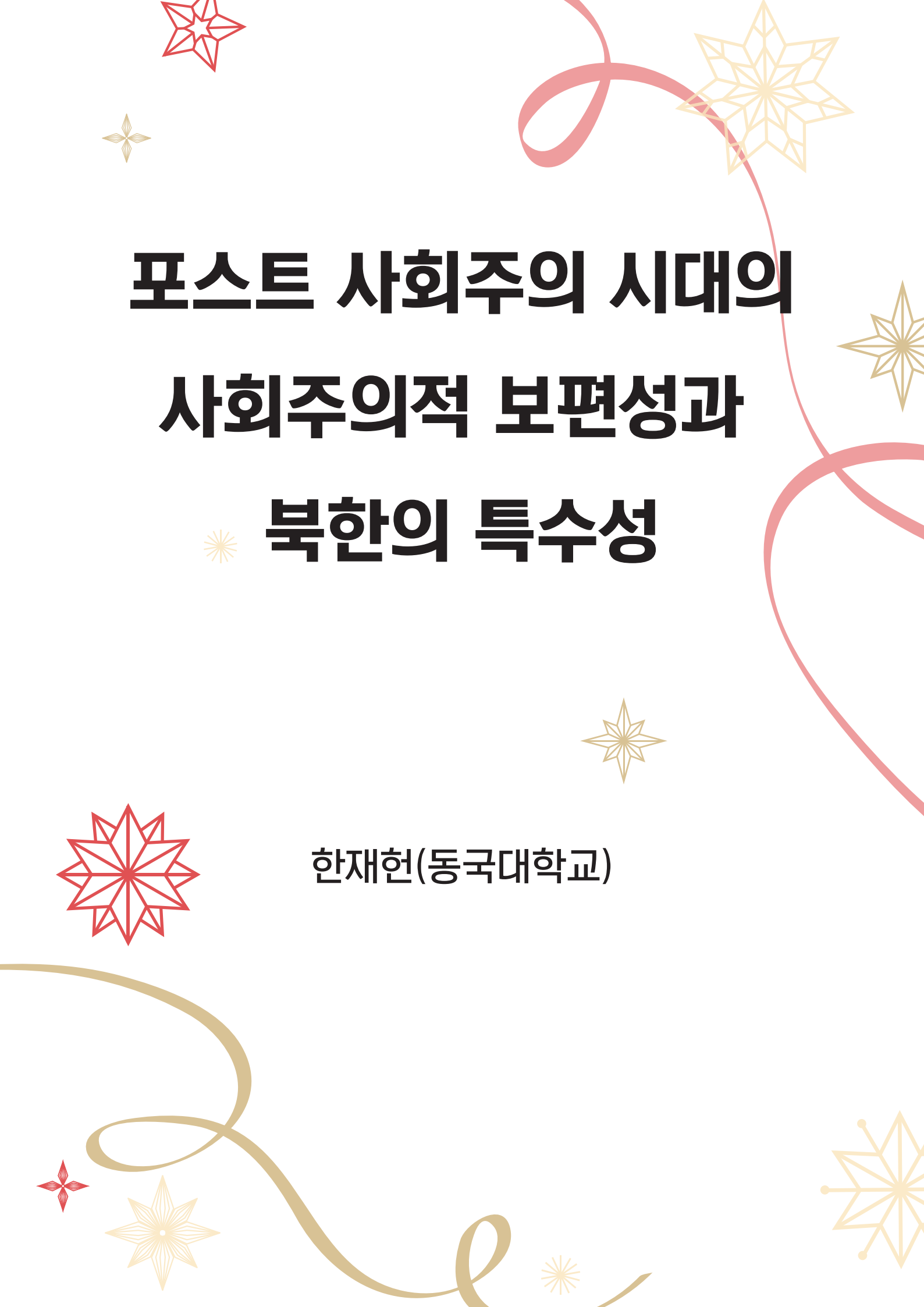




제3회의

# 북한연구의 시각과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

사회: 송영훈(강원대학교)



#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의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북한의 특수성

한재헌(동국대학교)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의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북한적 특수성**  
: <보편-특수>에서 <혼종성들의 비교>로<sup>1)</sup>

한재현(동국대 북한학연구소)

### 1. 포스트사회주의 시대?

본 발표문의 제목에 포함된 ‘포스트사회주의 시대’라는 표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학회 측으로부터 제안 받은 것이었다. 포스트사회주의에 ‘대한’ 연구, 혹은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처럼 분석 대상으로서의 ‘특정한’ 역사적 체제를 지시하는 의미로서 포스트사회주의는 너무도 익숙하다. 그런데 포스트사회주의를 하나의 ‘시대’로서 명명하는 제목을 제안 받고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하였다. 그러다가 이는 필자가 본 발표문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어찌면 가장 잘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는 “포스트사회주의적 조건(Postsocialist Condition)”이라는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표현과 연결된다. 그녀는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적 조건을 패러디해 포스트사회주의적 조건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세 가지 ‘구성적 특징’으로 정의한다.<sup>2)</sup> 하나는 불확실성과 신뢰할 만한 대안적, 포괄적 해방 프로젝트의 부재, 둘째는, 평등과 재분배의 계급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정치로의 이동, 마지막으로 강행적 시장화 등 경제주의의 확산 등을 들고 있다.<sup>3)</sup>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사회주의는 지구적 ‘보편’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을 표현하게 된다.

“김정은 시대를 ‘누구’의 ‘어느 시점’을 ‘무엇’과 비교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난감해진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비교하면 되는 것인가? 현재의 북한은 여전히 고전적 사회주의인가, 후기사회주의인가, 시장사회주의인가, 포스트사회주의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인가? 북한연구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논쟁은 역사학이나 내재적 접근법이 지닌 다소간 문헌 요약적 설명방식에 따른 과도한 특수성론을 사회주의체제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소개와 적용을 통해 교정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보편성론의 비판적 개입은 ‘특수하지 않은 것까지’ 특수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 대한 비판과 ‘특수한 것’에 대한 ‘개념적 이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즉,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메커니즘이라는 비교준거,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폭넓은 사회과학의 이론적 자원들에 북한적 현상을 개방시키면서 북한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해석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보편성론의 개입은 역사적 시기로는 주로 산업화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쨌거나 북한체제의 이러저러한 제도나 작동을 사회주의라는 틀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내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구권 해체와 탈사회주의, 북한체제의 시장화 등을 거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이 서로 상이한 발전수준과 논리에 따라 복잡하게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포스트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하면서 ‘사회주의적 보편성’이라는 보편/특수 판별의 비교준거 자체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본 발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산제적’ 유사성을 보거나 헝가리의 경험으로부터 영국의 극우 포퓰리즘 정치를 이론화하는 등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보다는 ‘지구적’ 수준에서 벌어지는 연결과 차이에 주목하는 포스트사회주의 비교연구, 포스트사회주의 지리학 등의 성찰적 연구

1) 아이디어를 거칠게 정리한 미완성 초고이니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Nancy Fraser(1997),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Routledge.

3) 물론 낸시 프레이저는 포스트사회주의적 조건처럼 이를 “증상”으로 성찰하기 보다는 비판적 성찰을 위한 계기로 이해하고 있다.

들을 참조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적인 것(정상, 보편성) 대 북한적인 것(예외, 특수성) 간의 대립을 넘어선 혼종성들의 비교라는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2. 북한체제 ‘특수성론’ 비판과 보편론: 사회과학적 정상화론 혹은 ‘일반성-특수성’ 관계론

### (1) 일반성(generality)과 특수성(particularity) / 보편성(universality)과 개별성(singularity)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혹은 별 고민 없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북한체제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식별의 개념적 쌍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개념적 쌍은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마치 자연화된 어떤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만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둘의 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할 것인지, 즉 북한체제에서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하고 지배적인지 혹은 그 결합관계가 여타 사회주의 체제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잘 해명하면 되는 문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하나와 여럿’의 문제에는 보편성과 특수성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성’과 ‘개별성(혹은 특이성, 단독성)’이라는 또 다른 항들의 존재를 제기하고자 한다. 필자는 여기서 거창하고 심오한 철학적 논쟁을 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다만, 사회주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최근의 ‘포스트사회주의적 조건’의 시대 속에서 ‘사회주의적’인 보편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기존의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항은 사실 일반성과 특수성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이다.<sup>4)</sup>

### (2) 북한체제 ‘특수성론’ 비판의 진정한 의미

북한체제 특수성론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역사특수적·내재적 분석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실상 그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내로 소개, 실천된 내재적 접근이 서독의 동독연구에서 사용된 문제의식(동독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과는 달리 북한체제에 종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해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방식이 바로 북한의 공식문헌을 인용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분석과 설명’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재적 접근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내재적 이해를 결과하는 역설을 초래했다.

따라서 북한체제 특수성론에 대한 비판과 교정은 내재적 접근의 본래 취지인 사회과학적 북한 연구를 가동한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보편-특수 논쟁이라기보다는 북한연구의 ‘사회과학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연구에 비교정치론에 입각한 전체주의 분석을 ‘적용’하거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수령제’의 발생동학을 이해한다거나 하는 등의 학문적 심화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과학적 보편이론과 개념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개념적 이해가능성으로서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과학적’ 연구”<sup>5)</sup>에서 강조되듯이 이는 ‘특수성’ 자체에 대한 ‘해체’라기보다는 그러한 ‘특수성’을 과

4) <일반성-특수성>은 양적 차이이자 재현적 관계로서, <보편성-특이성(개별성)>은 질적 차이이자 비재현적 관계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특수 관계는 특수성이 일반성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고, 특이성은 개별성 안에 보편성이 내재된 ‘구체적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성-특수성은 다만 일반성의 ‘예외’로서 개별성을 이해하게 된다.

5) 최완규(2001),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한울.

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국가의 공고화”라는 말에서 보듯이 이는 특수성에 기각이라기보다는 특수성‘론’의 비과학성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접근들은 북한의 특수성을 부정한 것인가?6)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연구와 그를 통한 북한의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다른 사회주의 체제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마저 특수한 것으로 이해되던 오류는 상당정도 교정되어 갔다. 따라서 북한연구의 ‘사회과학화’가 일정하게 학문적 주류를 형성한 후에는 북한의 특수성은 이념 형으로 상정된 사회주의적인 것(‘개념/이론’으로서의 사회주의)과 북한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는 차원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혁명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와 근대화 프로젝트로서의 사회주의’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시간성의 충돌 문제7), 민족/에스닉한 차원과 사회주의 간의 관계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소비에트 연구(Soviet Studies)와 러시아 연구(Russian Studies)의 차이, 북한의 “주체” 사회주의 등은 모두 동일한 문제틀 속에 존재한다.8) 비교사회주의의 발전은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간극,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등이 ‘보편성’임을 이해하고 북한의 그것이 특수한 현상이 아님을 이해한다. 전체주의체제의 비교대상이 사라진 것과 유사하게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비교사회주의론은 ‘독재의 정치경제학’과 같은 보다 보편적인 사회과학적 차원으로 비교 준거가 확장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야말로 특수성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정치체제와 사회경제질서의 다양한 결합 -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성체론을 21세기 중국에 적용한 ‘신계획(projectment)경제’론이나 중국의 “시장사회주의”를 새로운 사회경제구성체로 보는 접근 등 - 으로 설명되는 작금의 ‘포스트’시대는 앞서 설명한 대쌍 관계에 입각한다면 이는 사회주의적 일반성으로부터 예외적 거리를 재는 것으로서의 특수성이 아니라, 지구적 보편성 내에서의 특이성, 즉 ‘구체적 보편성’인 것이다. 불확실성과 위기, 민족주의의 발흥은 국가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체제, 세습 자본주의 등 수많은 형태의 혼합 체제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탈-사회주의(론)’과 ‘포스트사회주의(론)’

#### (1) 중첩된 시간성과 사회구성체론: ‘미래의 현재’ 대 ‘살아있는 현재의 미래’

북한은 포스트사회주의인가? 혹은 ‘현재’의 포스트사회주의는 북한의 ‘미래’로서 이해되어야

6) 이에 대해서 국내외의 인류학 전공자들 중심의 연구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특수성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을 변주하고 정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극장국가 북한』과 같은 인류학적 작업의 개입은 기존의 내재적 접근이 주목하던 북한적 특수성의 테마들에 인류학적 언어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이 지닌 한계는 분명하다. 그것은 북한체제의 작동과 재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기보다는, 한동안 주변으로 밀려나 있었던 주제를 다시 꺼내 기존과는 ‘다른 언어로 재기술’하는 데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북한에 대한 인식지평을 확장하는 데 인류학이 기여했다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인식지평은 고착된 채로 인류학 개념의 변주가능성을 실험하는 데 할애되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개념적 적용과 묘사의 탁월함이 새로운 통찰과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으로 이 책의 결론부가 다소 허망한 도덕적 주장으로 귀결되는 점은 결과적으로 북한체제의 작동과 재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7) Arif Dirlik(1989), “Postsocialism? Reflections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21(1), pp. 33-44.

8)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보편성-특수성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런가? ‘중국 특색’은 보다 사회주의적이고 ‘우리식’은 군사적 혹은 유교적인 것이기 때문인가? 김정은정권이 ‘정상국가화’로 가고 있다면 현재 푸틴의 러시아는 ‘비정상국가’인가?

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이분법적으로 단정하기를 잠시 멈추고, 포스트사회주의의 시간성에 관한 질문을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지점을 제기할 수 있다. 포스트사회주의는 “단순히 사회주의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며 또한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sup>9)</sup> 즉, “사회주의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의 문제는 “사회주의가 무엇이었는지”로부터 바로 도출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과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다.<sup>10)</sup> 그러나 이는 ‘전과 후’의 문제로 개념화될 수 없는 중첩된 시간성, 살아있는 현재의 미래 양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포스트사회주의 관련 주요 비판적 저작들이 보여주듯이, “포스트사회주의적 존재형태는 사회주의의 정치적 종언 이전에 이미 확립되었다”<sup>11)</sup> 이러한 시간성의 중첩이 역사적 시대 구분의 고정물 전제로 하는 ‘보편-특수’ 판별과 비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sup>12)</sup>

이런 측면에서 ‘포스트사회주의’는 불확실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를 묘사하기에 적합한 불가지론적 용어였다. 그것은 붕괴 직후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미결정의 상황으로 보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잠정적인 개념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sup>13)</sup> 예컨대,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은 1989년과 2014년의 25년이란 시차를 두고 작성한 논의에서 포스트사회주의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사용한다. 전자가 혁명의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와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로서의 사회주의 간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표현한다면, 후자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깊숙이 연결되면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사이의 긴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현실(상황) 사이의 근본적 양가성과 이중적 정체성을 딜릭은 포스트사회주의로 표착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사회주의는 탈-사회주의적 시간성으로 한정될 수 없는 시간성의 겹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성의 중첩은 개인과 집단이 특정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경험’되면서 동시에 ‘통일된 전체’로서 인식되는, 즉 ‘시각’의 차원과 ‘규범’의 차원 간의 공존과 긴장을 의미하기도 한다.<sup>15)</sup> 따라서 이러한 경험의 시간성과 규범의 시간성은 포스트사회주의를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간성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간성이 갈등하면서 포스트사회주의의 역사적 시간성을 둘러싼 정치를 발생시킨다. 즉, 포스트사회주의의 시간성은 세대와 지역, 국가와 개인, 집단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경험, 해석되면서 상이한 욕망과 실천들이 생산되지만, 동시에 이를

9) Martin, Dominic(2021), “Postsocialism”, in Felix Stein(ed.),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p. 13.

10) Verdery, K. (1996). *What Was Socialism, and What Comes Nex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1) Martin, Dominic(2021), p. 13.

12)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의 보편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사회주의라고 범주화할 수 있는 시-공간의 일치성을 담지한 공간성이 확정되어야 한다. 투비킨은 이러한 관점을 ‘컨테이너(container)’라는 이미지로 설명한 바 있다.

13) Müller, M(2019), “Goodbye, Postsocialism!”, *Europe-Asia Studies*, 71(4), p. 536.

14) Arif Dirlik(1989), *ibid.*; Arif Dirlik(2014), “Post-socialism Revisited: Reflections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ts Past, Present, and Future”, in Cao Tianyu et al(eds.), *Culture and social transformations : theoretical framework and Chinese context*. Brill.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자본주의는 ‘서구와는 다른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사회주의 전통은 이러한 의미 맥락에서 정당성의 원천으로 활용된다.

15) 조문영(2012), “중첩된 시간성과 별이는 협상: 중국 동북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속물성에 대한 인류학적 변명”, *한국문화인류학*, 45(2), 41쪽. 이러한 의미에서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는 널리 통용되는 표현과 이를 토대로 한 북한사회의 세대론은 소위 ‘MZ세대’론 만큼이나 비판적인 검토를 요한다. 한편, 이러한 포스트사회주의 시간성의 문제는 이른바 서방의 이행론적 시각이 포스트사회주의를 ‘후진성’의 끈질긴 영향이라는 의미로 담론화하는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포스트사회주의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현상이 이행론적 처방의 결과라는 인류학적 연구가 제공하는 담론 사이의 해석 투쟁으로도 나타난다.

규율하는 규범적 시간성을 통해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포스트사회주의의 역사적 위치성은 연대기적으로, 단일한 시간성의 지평 내에서 이해될 수 없는 미래의 지향과 과거의 소환, 갈등과 협상, 권위주의적 담론/기호와 시장·자본주의적 제도 및 실천 등이 우연적으로 접합하고 교차하는 ‘국면적(conjunctural)’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포스트사회주의 체제가 지닌 이러한 중층성과 우연한 접합이라는 문제는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라는 개념이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며 어떤 면에서는 긴요하기까지 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최근의 ‘혼합체제’ 논의나 ‘정치적 자본주의론’에 근거한 논의들, ‘문화정치경제(cultural political economy)’ 학파들과 ‘얼룩덜룩한 자본주의론(variegated capitalism)’<sup>16)</sup> 등의 논의들은 명시적으로 사회구성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설명의 과정이나 문제의식의 근거에서 이 사회구성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특정한 정치경제적 질서와 특정한 이데올로기 혹은 담론 간에 필연적인 결합관계가 내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이한 역사적 시간성과 모순적인 요소들이 이러한 구성체를 통해 접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면’은 사회구성체가 지닌 이러한 비-필연적 결합에 의한 안정화 상태를 드러내는 시간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 (2) 이행과 변형 사이: ‘포스트사회주의 도시’론

물러(Müller)는 “포스트사회주의여, 안녕!(Goodbye, postsocialism!)”이라는 논문에서 포스트사회주의가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주의 이후의 정체성을 사회주의적 과거와의 연관을 ‘중심계기’로 포착하기에는 신자유주의, 민족주의, 유럽화(EU 가입), 소비, 지구화 같은 다른 계기들이 등장하는 현실에서 1989/91을 전후로 한 역사적 단절(rupture)을 “특권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규범적으로도 ‘포스트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오히려 사회주의를 새롭게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효과를 내는데, 예컨대, 공공서비스나 보조금 등이 “사회주의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남은 유물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보더라도 ‘사회주의’라는 기표는 도리어 급진적 시장개혁을 정당화하는 “구성적 외부” 혹은 “이데올로기적 향산화제”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현실에서나 지향적 규범으로서나 사회주의가 사라져 버렸다는 탄식(영화 “굿바이, 레닌!”을 패러디 한 제목의 느낌표)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이행을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공간적 혼종성의 생산과 연결시키는 골롭치코프 등<sup>19)</sup>이나 포스트사회주의를 구사회주의권의 역사적 시공간으로 가두지 않고 다양한 연결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투비킨<sup>20)</sup>

16) ‘얼룩덜룩한 자본주의론’은 기존의 ‘자본주의 다양성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밥 제습과 나일링 섬이 중심이 된 ‘문화정치경제학’과 ‘얼룩덜룩한 자본주의’에 관한 소개는, 박지훈 (2020), “얼룩덜룩한 자본주의에 대한 문화정치경제학: 밥 제습과 나일링 섬의 초학파적 이론 기획”, *경제와 사회*, 통권 제125호.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얼룩덜룩한 자본주의’의 차이를 통해 포스트사회주의 경제를 비교 분석한 연구로는, Gareth Dale & Vladimir Unkovski-Korica (2022), “Varieties of capitalism or variegated state capitalism? East Germany and Yugoslavia in comparative perspective”, *Business History*.

17) ‘국면’의 개념과 분석적 의의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룬다.

18) Müller, M. (2019), “Goodbye, Postsocialism!”, *Europe-Asia Studies*, 71(4), pp. 530-550.

19) Golubchikov O., Badyina A. and Makhrova A. (2014) “The hybrid spatialities of transition: Capitalism, legacy and uneven urban economic restructuring”. *Urban Studies*, 51(4), pp. 617-633.

20) Tuvikene T. (2016), “Strategies for comparative urbanism: Post-socialism as a de-territorialized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0(1),

등은 밀러의 이러한 입장과 겹치면서도 미묘한 차이들을 보이는데 이는 결국 이행(transition, 보편성)과 변형(transformation, 특수성) 사이의 관계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포스트사회주의’는 ‘변형’을 강조하는데, ‘변형’이라는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이행이라는 개념이 변화를 일방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국가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각각을 동질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전제하며 자본주의 자체가 지닌 혼종적이고 진화하는 속성뿐만 아니라, 이행에 내재한 ‘지속, 적응, 전도’ 등을 포착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포스트사회주의의 이행 과정은 급진개혁, 긴축, 전도, 추가개혁의 시기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모두 과거의 유산과 당면한 선택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불안정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적 유산은 이행의 걸림돌을 넘어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사회주의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일부로 간주하는 골루치코프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거대-서사적 접근이 누락하는 “국가의 지배와 경제적 실천의 구체적인 특수성들 … 포스트사회주의의 우발적이고 국면적인 결과들”에 보다 많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적 신자유주의와의 연관이라는 ‘구조’적 설명 또한 전환의 ‘과정들’을 포착하지만 그러한 과정 “이면의 메커니즘과 행위성들”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신자유주의 서사에 잘 들어맞지 않는 국가의 역할이 존재한다. 이는 시장화의 우위를 미리 가정하기보다는 시장-주도와 국가-주도 간의 보다 미묘한(nuanced) 차이들을 밝혀내는 연구를 요청하는 것이다.<sup>21)</sup>

이러한 이행과 변형의 문제는 경로의존(Path-dependency)의 개념과 깊숙이 연결된다. 우선 골루치코프와 골루치코프 등은 경로의존의 개념을 새롭게 유형화한다.<sup>22)</sup> 기존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은 개혁을 가로막거나 제한하는 유산(legacy)의 측면에만 주목해왔다고 보면서 경로의존은 개혁의 진전을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특정한 방향으로 규정짓는 능동적인 힘을 지닌 것(endowment)으로 변환되기도 한다는 것이다.<sup>23)</sup> 사회주의 시대의 유산은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실천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받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경제주체들의 인식, 구상, 동원에 따라 탈사회주의적 불균등발전을 형성하는 ‘환경’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과거 사회주의시기의 공간적 유산(또는 보다 정확하게는 사회-공간성의 역사성)은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오래된 과정과 새로운 과정의 혼합 산물이며, 결코 단순히 둘 중 하나로 축소할 수 없는 연속적인 변화 과정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관련 행위자들의 임기응변적 선택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골루치코프 등은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경로의존”보다는 “혼종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혼종성”은 과거 유산과 변화의 힘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소간 대칭적이고 모호한 의미를 함의하는 “경로의존”보다는 그러한 유산이 전환의 목표에 따라 “위계-종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차원에 주목함으로써 공간의 정치-경제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데 더 유용하다고 주장한다.<sup>24)</sup>

한편, 이러한 경로의존의 ‘유산이자 자원’으로서의 성격은 변형의 속도 문제와도 연관된다. 경

---

pp. 132-146.

21) Nadir Kinossian(2021), “The post-socialist city: The current critiqu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FL.

22) Golubchikov O. (2016), “The urbanization of transition: Ideology and the urban experience”,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7(4-5), pp. 607-623; Golubchikov et al., Ibid.

23)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들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행론자와 변형론자들은 서로 절대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겹쳐있는 측면이 상당히 존재한다.

24) 이러한 의미에서 이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구조에 따른 이행론적 의미를 띠는 것이다.



로의존에는 연관되는 다양한 변화의 층위들이 개입되는데 각각의 층위들(제도, 정치, 일상, 공간성 등)에 따라 전환의 속도가 다르게 전개되고 그러한 중층적 과정들이 결합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인과성의 효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부자로프스키 등<sup>25)</sup>은 시장화와 민영화 정책이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비교적 개혁에 성공해 ‘선진’ 도시로 도약했다고 하는 체코의 북부도시 리베레크(Liberec)에서조차 사회주의적 유산이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메커니즘과 그 효과를 “단계적 경로의존성(rolling path dependancy)”에 의한 새로운 고착(lock-in)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여기서 rolling한 차원은 사회주의 시기 형성된 구역난방체계(district heat system, DH)의 대규모 중앙집중식의 물질적 유산과 국가 차원의 에너지 민영화 개혁이라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로생성의 결정적인 국면에 지방 관료들이 채택했던 일련의 정치적 선택들이 변화를 가로막는(lock-in) 역설을 의미한다. DH체계는 중화학공업과 고층(high-rise)의 집합적인 단지형 주택지구와 강하게 결합한 대규모의 중앙집중적인 난방체계를 의미하는데 저층(low-rise)의 가족형 주택 확산과 도시의 교외로의 팽창 등은 집합적 거주단지와 결합한 DH체계와 충돌하게 된다. DH체계의 비효율성과 인구유출이 결합해 조성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방관료들의 선택은, 기술적 혁신이나 소비자 규모의 합리화를 통한 수익창출을 통해 공적 자원을 확보하는 노력보다는 집합거주단지와 결합한 단일공급체계를 민간공급자에게 넘겨 기존의 사용자들을 묶어두는 보다 손쉬운 길을 택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평등의 제공을 의미했던 DH체계는 가장 비싼 에너지를 가장 빈곤한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역설적 경로를 만들어내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경로는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는 사회-기술적 매트릭스로 고착(lock-in)되게 된다.

이처럼 교통이나 에너지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체계의 변화는 사회주의적 유산의 물질성과 사회-공간적 역사성, 전환기의 인구이동과 거주 형태 등 도시경관의 변화와 통합되며, 시장 개혁이 발생시키는 비용, 그리고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활용해 대처하는 관료들의 정치적 선택들이 결합하는, 도시 재구성을 둘러싼 상이한 정치적 시간성, 제도적 시간성, 물질적 시간성들과 행위자들의 실천들의 충돌과 결합의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를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행과 변형 사이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포스트사회주의 도시’라는 문제는 유용한 계기를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도시>변화는 <체제>변화(민영화, 시장화 등)의 단순한 ‘결과’ 혹은 ‘반영’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인과성 혹은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코라와 부자로프스키(Sykora and Bouzarovski)가 요약하는 포스트사회주의 도시의 주류적 개념화에 따르면 이행과 관련한 사회경제적·정치적 변화, 그리고 도시 변화 각각은 “서로 분리된 요소들”로 상정되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방향적이고 순차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변화의 원천이 경제적·정치적 환경에 놓여있으며 도시는 다만 그러한 변화를 “수용, 반영”하는 것에 머문다. 이들은 이러한 관점이 도시와 도시의 정치경제적 환경 간의 공-진화에 관한 아이디어를 인식하는 데 실패하는 경직된 구분으로 비판하면서 도시 전환에 관한 그러한 낡은 이원 모델(추진력 대 수용자)은 도시와 경제적 환경의 공-진화 개념에 기초한 보다 역동적인 모델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sup>26)</sup> 러시아 도시개발에서의 국가 개입(“State-led Innovation Project”)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공간의 생산’, ‘도시성’과 같은 도시연구의 보편적 개념을 포스트사회주의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성공적인 로컬 프로젝트의 공간개입 형식을

25) Bouzarovski, S. Sýkora, L. & Matoušek, R. (2016), “Locked-in post-socialism: rolling path dependencies in Liberec’s district heating system”,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7(4-5), pp. 624-642.

26) Sykora L. and Bouzarovski S. (2012), “Multiple transformations: Conceptualising the post-communist urban transition”, *Urban Studies*, 49(1), pp. 41-58.

고급화(upscaling)함으로써 국가가 공간실천과 개혁을 어떻게 실험하는지 보여준다.<sup>27)</sup> 그러나 이러한 변형론의 미덕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골루치코프는 이행을 워싱턴 컨센서스로 표상되는 기술관료적(technocratic) 처방(민영화 등)으로 축소, 환원하는 전통적인 개발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변형론의 접근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행”이 지닌 경로의 복수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차이들을 해명하는 언어를 제공한 반면, 바로 그러한 이유로 포스트사회주의에 대한 특수성(idiosyncrasies)의 서사가 도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는 이행의 환원론과 추상성, 목적론과 그에 대비되는 포스트사회주의의 특수서사의 과잉 모두를 비판하면서 이행의 차원을 “이데올로기, 실천, 도시”라는 세 수준의 결합으로 볼 것으로 제안한다. 즉 이행은 구소련이나 동구권 지역에 한정된 지역-기반의 기술관료적 개혁이라기보다는 “전지구적 범위의 통합 프로젝트(totalizing project of planetary reach)”라는 이데올로기적 이행으로,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이행 프로젝트가 도시라는 무대를 통해 일상의 실천들과 뒤섞이면서 실질적인, 그리고 특수한 형태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이행과 전환은 변화의 원천이 특정한 영역에 놓여 있으며 다른 영역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 실천, 도시 등 서로 연관된 영역들이 매개되고 섞이는 “총체적(totalizing)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골루치코프는 이를 “이행의 도시화”로 명명한 바 있다. 즉 도시는 이행과 연관된 이데올로기, 일상, 실천 등이 서로 매개되는 장으로서 도시화 과정 속에서 이행이 실질적으로 달성된다는 것이다. 포스트사회주의 지리학자들은 “순수하게 사회주의적인 것”(여전히 이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에서 “순수하게 자본주의적인 것”(완전히 변형되거나 이행에 의해 생성됨)에 이르기까지 도시 형태의 유령을 식별하려고 하나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보면서, “연속성”은 유산(legacy)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유산 자체의 유동적 특성”을 무시한다고 본다. 또한 포스트사회주의 지리의 역사성은 이러한 “유산”에 의해 “신비화”되어 포스트사회주의 이행은 바로 그 과정이 “유산 대 전환”의 이분법을 따라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산은 과거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되고 현재에 의해 공동 생산되며,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이행=총체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접합(articulation)”되고 “도시적인 것이 생산”되며 “사회적인 것을 중재”하는, 도시가 지닌 혼합하고 매개하는 역할의 총체적 과정을 통해 이행이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행은 개발/발전주의 패러다임의 특정한 기술관료적 처방으로 축소, 환원될 수 없으며, 기존의 개발/산업적 관점이 아닌 구체적인 도시형태론적 관점의 중요성을 부각한다.<sup>28)</sup>

### (3) 포스트사회주의의 두 경로: 점점 더 보편으로 혹은 끈질긴 특수성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탈사회주의 경로와 메커니즘에 대한 대표적인 구분은 ‘점진주의’와 ‘급진주의’라는 유형론일 것이다. 필자는 보편과 특수라는 문제를 고려하여, 이러한 구분법과 무관하지 않지만 조금 다른 유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리 언급해두자면 그것은 사회과학적 개념의 보편과 탈사회주의적 전개 간의 거리를 통한 구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양한 논의들이

27) Kinossian N. (2017), “The cart before the horse: The perils of state-led metropolisation in Russia”, *Europa Regional*, 23(4), pp. 60-68; Zupan D., Smirnova V. and Zadorian A. (2021), “Governing through stolichnaya praktika: Housing renovation from Moscow to the Regions”, *Geoforum*, 120(2), pp. 155-164.

28) Golubchikov O. (2016), “The urbanization of transition: Ideology and the urban experience”,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7(4-5), pp. 607-623.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비공식 네트워크의 사회주의적 형태와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교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비공식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형태로 널리 알려진 ‘관시’와 ‘블라트(blat)’의 탈사회주의적 변화에 관한 레데네바(Alena Ledeneva)의 연구가 그것인데, 이는 비공식 네트워크가 포스트사회주의 체제변동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층위와 서로 중층적으로 연루된 문제이자 사회주의와 탈사회주의의 변화와 단절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이기도 하다는 점, 그리고 최근 북한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후견주의(patronage, clientalism) 등을 활용한 논의들이 보편성과 특수성 논의에 주는 함의를 비교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sup>29)</sup>

체제전환 이후 블라트와 관시의 변화 성격에 대한 레데네바의 비교 연구는, 블라트는 외부 관찰자의 언어로 해독되기 힘든 독특한 소비에트적 의미가 퇴색하고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 정실(crony), 올리가르히(oligarchy) 등 보다 보편적인 사회과학적 개념들로 이해될 수 있는 성격으로 전환되었음에 비해, 중국의 관시는 체면(face)과 인정(renqing)과 같은 고유한 문화적인 성격이 여전히 유지되는 한에서 변형되고 있다는 차이를 강조한 바 있다.<sup>30)</sup>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의 비공식 네트워크의 연속과 단절, 특수성의 소멸과 유지라는 상대적 차이는 변화의 급진성과 점진성, 블라트와 관시가 사회주의 하에서 형성되고 작동했던 방식 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향후 북한의 뇌물 현상에 대한 연구는, 뇌물 현상에 개입되는 사회주의적 비공식 연줄 관계의 형성과정과 작동 방식의 종별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회주의 산업화 시기, 1980년대, 1990년대 중반 전후, 그리고 2000년대 중반과 최근 김정은 시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러한 정치경제체제의 시간성을 넘어선 보다 뿌리 깊은 문화적 요소의 시간성을 중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뇌물이 목표로 하는 품목과 서비스의 이동 경로를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보다 세밀히 관찰함으로써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뇌물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신뢰, 선물 등)의 실천이 어떤 역할을 어느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해명하는 작업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4. 김정은체제 분석에 주는 방법론적 함의: ‘국면연구’를 중심으로

김정은시대의 북한체제는 후기사회주의와 혼합체제 사이의 어디쯤에 위치한다.<sup>31)</sup> 다만 여기서 ‘사이’라는 은유는 단일한 시간성(후기사회주의→혼합체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상이한 시간성들이 중첩되고 다층적으로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은시대의 특정 시간대를 단면으로 잘라내었을 때 이를 비교할 사회주의의 역사적 시간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물론 한 가지 방법은 있다. 이번 장에서는 북한연구에서 펼쳐졌던 특수성론 비판과 보편론의 전개, 그리고 포스트사회주의론이 비판적으로 개입해 들어갔던 몇 가지 지점들, 그리고 앞서 말한 비교의 난관 등을 염두에 두면서, 현 김정은 체제의

29) 여기의 논의는 한재현(2021), “북한사회 뇌물 연구의 성찰과 제언: 러시아 블라트(blat) 경험이 주는 함의” 북한학연구, 17(1), 27-28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30) Ledeneva, A.(2008), “Blat and Guanxi: Informal Practices in Russia and Chin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0(1).

31) ‘후기사회주의’는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이라는 책에서 규정된 스탈린 이후부터 붕괴 이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하는 알렉세이 유르차크의 시기 규정에서 가져온 것이며, ‘혼합체제’는 ‘정치적 자본주의론’ 등을 이론적 자원으로 하면서 최근 상당정도 논의되어온 바 있는, 권위주의체제로서의 형식적 민주주의와 시장체제 내지 자본주의질서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제를 의미한다.

분석에 주는 함의를 ‘국면연구(conjunctural analysis)’라는 방법론적 자원을 통해 고민하고자 한다.

#### (1) 국면이란 무엇이며, 왜 국면연구인가?

‘국면’에 대한 포착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 내지 정치적 질문들, 즉 그람시가 ‘국면적 conjunctural’이라 불렀던 것을 해명”하고자 한 스투어트 홀을 통해 본격화 되었다.<sup>32)</sup> 이후 밥 제습 등으로 이어지면서 주요하게 활용된 이 ‘국면(conjuncture)’이라는 개념은 “단지 한 순간의 시간이나 기간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의 중첩 및 압축, 그리고 다양한 흐름들이나 상황들이 겹쳐진” 순간들을 가리키며, 따라서 세상의 모든 시공간의 특정한 범위의 시간성들이 모두 ‘국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모습들과 흐름들이 겹치어 발생하여 ” “현실을 큰 폭으로 재편하는 동력을 ‘중층적’으로 발휘”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면’은 몇 가지 특징과 분석적 과제를 제공한다.<sup>33)</sup>

- 심대한 위기상황 속에 이미 다른 역사적 시기들 속에 구현되었던 사회경제적인 맥락의 효과와 상이한 역사적 조건들이 중첩된 영향을 발휘하는 측면에 주목한다.
- 동일한 위기관리의 체제 속에는 정책(police), 정치(politics), 정체(polity)의 수준들이 결합하며 각 요소들은 서로 필연적인 상응관계를 갖지 않는다.<sup>34)</sup>
- 결정론이나 환원론, 즉 다양한 힘과 요소들 간의 ‘필연적 상응관계’와 ‘필연적 비-상응관계’ 모두를 거부하며, 하나의 국면 속에 사회적, 물질적, 경험적인 것들의 비-필연적 접합이 발생한다.
- 다양한 공간적 기원과 범위, 시간적 주기를 가진 다양한 역사적 흐름들이 우연하게 교차하면서 … 특정한 사회현상들을 일으키는 … 끊임없는 덧쓰기의 과정이자 결과이다.
- 국면은 이데올로기, 정책, 정치프로젝트, 축적전략 등 어느 한 수준의 분석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들의 결합은 비-필연적이지만 그러한 결합을 견고하게 하는 구조적 효과를 인정한다.
- 헤게모니의 생성과 유지 및 재구성에 관여하는 일련의 이데올로기적인 동인들의 활성화 된 결합에 분석의 초점을 제기하며 … 장기간에 걸쳐서 구성되고 작동하는 특정한 역사·사회적인 요인들이 중첩, 압축되고 다양한 흐름과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균형 및 구조적인 안정을 의미한다.
- 하나의 국면이 또 다른 국면으로 언제, 어떻게 이동하는지, 국면들 속에 기성의 것과 새로

32) 스투어트 홀, 『문화연구 1983: 이론의 역사에 관한 8개의 강의』, 271쪽.

33) 조영한(2012),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 ‘국면적인 경제 읽기’를 제안하며”, 커뮤니케이션 이론, 8(2), 30~32쪽; 이기형·이종명(2019), “문화연구가 추구하는 ‘국면분석’의 활용과 재구성 작업의 의의”,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96호, 76~78; 전희진·박광형(2016), “역사적 기억의 덧쓰기에 대한 국면사적 접근”, 문화와 정치, 3(1), 6, 20쪽; 지주형(2011), “신자유주의의 복합질서: 금융화, 계급권력, 사사화”, 사회과학연구, 19(1), 228~230; Bob Jessop(2004d), “Recent Societal and Urban Change: Principles of Periodization and Views on the Current Period.” in Tom Nielson, Niels Albertsen and Peter Hemmersam(eds.). Urban Mutations: Periodization, Scale and Mobility. Arkitektiskolens Forlag, pp. 40~65; Flohr, Mikkel and Yannick Harrison(2016), “Reading the Conjuncture: State, Austerity, and Social Movements, an Interview with Bob Jessop.” Rethinking MARXISM, 28(2), pp. 306~321.

34) 예컨대, 외환위기 국면의 긴축은 긴축-정책, 긴축-정치, 긴축-정체의 수준으로 나타나며, 긴축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필연적 상응관계를 갖지 않으며, 정치적 자본주의 내지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국가 등과 같은 ‘포스트민주주의’ 정체와 결합한다.

운 것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다양한 지리적 공간과 영역들 사이에 연결과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찰한다.

- 특정한 단계의 복합질서를 분석하는 국면분석의 역량을 강조한다.

#### ※ 김정은시대 ‘국산화 레짐’을 국면으로 독해하기

##### • 국산화 레짐이 갖는 국면적 성격

- 일시적인 위기 타개 수준을 넘어 제도, 물질적 인프라, 실험, 경험들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적극적으로 생산
- 사회주의적인 제도와 물질적 유산, 시장화 경험과 소비주의 욕망,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배격법 등 상이한 요소들이 결합
- 국산화 레짐은 서로 다른 시간성과 맥락에서 발생한 요소들(제도, 경험, 이데올로기, 자원, 물질성 등)의 우연적인 결합을 통해 안정적인 체제를 구성
- 국산화 레짐의 구체적 형태와 작동은 위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될 수 없는 특수한 체제
- 현 국산화 레짐은 위기 이전 체제로 단순 복귀할 수 없는 새로운 구조 생성의 힘을 지님

이처럼 특정한 역사적 국면의 현상이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균질적이고 통합된 자기완결적인 시간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이 된 현상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적 시간성과 그에 따른 경로의존성, 제도와 역사성을 파괴하거나 거스르거나 우회하는 사회적 관계와 전술들의 시간성, 여기에 물질적 인프라의 물질적 속성이 제도와 만나면서 형성된 특유의 퇴행적 작동메커니즘 등 인간과 비인간, 제도와 실천이 결합하면서 체제를 작동시키고 재생산한다. 국산화 레짐의 형성과 작동,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도 어떤 단일한 이론이나 분석렌즈가 아닌, 이러한 중층적 시간성과 우연적이고 모순적인 요소들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안정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국산화 레짐이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국면적 비교(conjunctural comparative)

이러한 국면분석을 비교도시연구의 차원으로 확장한 일련의 연구그룹은 몇 가지 비교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sup>35)</sup> 이를 도시 간 비교의 차원에서 비교사회주의적으로 변용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면분석은 일반성을 구조로 인식하고 특수성을 그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을 통해 구조가 생성되는 관계로 인식한다. 따라서, 국면분석은 이론의 관점에서 비전형적이거나 예기치 않은 현실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현실은 이러한 이론의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이론을 지방화하기”)를 갖는다.<sup>36)</sup>

35) Sayın, Ö., Hoyler, M., and Harrison, J.(2020), “Doing comparative urbanism differently: Conjunctural cities and the stress-testing of urban theory”, Urban Studies; Ozgur Sayın, Michael Hoyler, John Harrison(2022), “Doing comparative urbanism differently: Conjunctural cities and the stress-testing of urban theory”, Urban Studies, Vol. 59(2), pp. 263-280; Jeffery M. Paige(1999), “Conjuncture, Comparison, and Conditional Theory in Macrosocial Inqui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5, No. 3, pp. 781-800.

- 도시를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탈식민주의 등과 같은 특정한 단일 이론을 통해 일반화/특수화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도시 분석에서 사용된 다양한 관점들(글로벌 도시론, 국가-규모 재조정, 발전주의, 탈식민주의)을 수집하고 혼합함으로써 이해한다.
- 도시의 '성격'을 도시의 '위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즉, 모든 도시는 다른 모든 도시들과 비교할 수 있다.<sup>37)</sup>
- 3차원의 시-공간성(수평적 연결, 수직적 스케일 관계, 역사적 궤적)의 접합 양상들을 비교한다.

이러한 '도시 간 국면비교'의 관점은 북한체제를 포스트사회주의와 비교하기 위한 연구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비교의 대상(국가), 시기, 주제 등)라는 실천적인 고민과 관련된다. 예컨대, 도시 비교를 상정해보았을 때, 기존의 국가 혹은 체제의 스케일에서의 비교 - 중국 "모델", 러시아 "모델", 베트남 "모델" 등 - 처럼 중국 도시와 북한 도시의 비교, 중국의 특정 도시와 북한의 특정 도시 간 비교와 같은 형식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즉 '도시 간 비교'보다는, 오히려 (서구) 이론과 포스트사회주의의 현실 간 괴리와 차이 - 다른 경로, 다른 전개 - 즉, '이론과 현실 간 비교'에 보다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면연구'의 관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북한의 특정 도시와 포스트사회주의의 특정 도시를 비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주제'를 놓고 이론과 달리 포스트사회주의에서 나타난 도시 간 불균등성의 이론적 특이성의 양상 등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북한의 도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어떤 주제에 대해 '중국은 이러 한데 북한은 이렇다'면서 (포스트)사회주의에 대비된 북한의 특수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포스트)사회주의의 다른 경로,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비교'가 '적용'이 아니라는 '비교도시론'의 관점을 수용한다면 북한도시연구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 북한과의 비교 대상을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관성화 된 지역 선정에서 지구적 남반구, 아프리카 포스트사회주의 등 지구적 차원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비교 사례를 특정한 국가나 체제로 특별히 제한할 필연성은 없다.
- 북한적 특수성을 이론으로 용해시키거나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지방화를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일반-특수' 비교에서 '이론-현실' 간 차이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사회주의 (도시)연구는 서구 이론의 학문적 헤게모니 속에서 포스트사회주의적 경험의 특수성, 고유성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로 모아져 왔다. 북한연구에서 전통적 의미의 비교 연구는 1990년대 포스트사회주의 연구의 주류였던 개발/발전주의 연구의 자장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발/발전주의 연구의 비교 패러다임은 개혁개방의 비교사회주의로서 사회주의적 저발전을 탈피하기 위한 기술관료적 처방의 리스트를 중심으로 '서구의 정상성'과

36) 이는 특정한 현실을 이론을 통해 '일반화'하거나 혹은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그 역의 관계를 의미한다.

37) 이는 Ordinary City라는 저작으로 유명한 로빈슨 등이 제창한 '비교도시론'의 기본적 입장이며, '어디서든 시작해서 연결하라'는 최근 포스트사회주의 비교연구의 입장과도 공명한다. 이러한 비교의 입장은 포스트사회주의를 과거 사회주의와의 역사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시-공간' 즉, 영토성으로 고착시키는 포스트사회주의적 특수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거리를 측정하는 형태를 띤다. 이러한 개발/발전주의 비교 패러다임은 지역적 특수성을 후진성으로 정의함으로써 <서구-포스트사회주의-----북한> 등의 거리를 잴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2, 3세대 포스트사회주의 (도시)연구 패러다임은 서구 이론의 지구적 확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디에서든 시작해서, 연결을 만들라!”는 비교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적용 불가능한 이론은 없으며, 특정 시공간에만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개념 또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구 도시이론의 주요 연구 영역들인 젠트리피케이션, 도시팽창(urban sprawl), 불균등 발전, 헤테로토피아 등은 포스트사회주의나 “북한에 맞지 않는” 이론일 수 없다. 서구 이론이 다루는 지구적 보편 문제에 대한 상이한 대응과 실천이 있을 따름이다.

또한 <북한>에 대응하는 시-공간적 용기(container)로서의 <포스트사회주의>라는 실체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컨테이너는 놓여있는 위치와 운송될 목적지를 매길 수 있지만 영토화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시간성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상의 위치와 좌표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이행’의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중국의 개혁 초기 제도개혁의 리스트와 그 묶음을 준거로 비교함으로써 총체적 거리를 재는 비교의 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사회주의 (도시)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북한의 최근 상황은 이러한 비교의 전략의 점점 더 심화된 난관과 함께 비교연구의 확장을 가능케 한다.

<북한>에 비교될 수 있는 “딱 들어맞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비교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시작해서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비교의 적합한 대상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미 비교대상과 북한 사이의 ‘정상과 예외’라는 ‘위계’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포스트사회주의>의 ‘이행 수준’에 비해 <북한>의 ‘이행 수준’은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개조 프로그램이나 지역개발의 거버넌스 전략과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들을 놓고 상이한 경로의존성의 과정들을 고찰하면서 그러한 차이가 어떤 결과적 차이들을 생산해내는지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이론으로 현실을 일반화해버리는 것과 다르다.

예를 들어, 포스트사회주의의 연속성과 도시의 혼종성은, 물질적 환경(소비에트 주택단지, 공장), 사회적 관행(비공식 전술), 기술(법제도, 문서), 주민들의 정서 등에서 발견될 수 있는 바,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의 경우는 이들 중 물질적 유산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도시 외곽의 소련 시대 주택단지가 그러하다. 오늘날의 탈린의 주거와 주거 패턴은 여전히 1991년 이전의 사회-공간적 경관을 나타낸다. 소비에트 시대에 도시 외곽이 지어진 사회주의 별장들은 교외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포스트사회주의 도시들 사이에서 연속, 단절, 혼종성을 이루는 물질, 제도, 관행, 정서 등의 영역에서 지배적인 유산으로 작동하는 층위들이 상이하게 존재하면서 결합하고 있다. 북한은 어떠하며, 그러한 상이한 유산의 시간성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쉘레니는 사회주의는 “존재”했는가에서 사회주의는 “무엇”이었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즉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는 ‘다르다’는 의미로 사회주의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금의 연구에서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보편성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고유’의 “인구 규모나 밀도”와 같은 것으로 (포스트)사회주의는 ‘존재’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것은 “다양성과 혼종성”(남영호) 그 자체였으며 따라서 비교는 사회주의적 보편과 북한적 특수성이 아닌 ‘어떤 혼종성인가’를 둘러싼 비교가 존재할 따름이다.

# 북한식 권위주의의 현재적 의미

박아름(강원대학교)



## 북한식 권위주의의 현재적 의미<sup>1)</sup>

박아름(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 1. 문제제기

북한은 민주화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북한이 민주화가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에는 많은 분석이 요구된다. 우선은 ‘민주화’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그 가능성의 수치나 근거를 포착해야 하고, 둘째는 그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의 수치가 생성된 원리를 분석해야 한다. 그 다음이 가능성의 조건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 연구들은 두 번째 과정이 생략되어 있거나, 극히 미비하다.

권위주의 사례연구에 의하면, 일당체제의 붕괴가능성은 낮고, 붕괴이후 민주화로의 가능성은 더욱 낮다.<sup>2)</sup> 그런데 왜 우리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설부른 제언을 반복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 전제하고 붕괴를 기대하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코로나 19는 북한을 더욱 기이하고 심지어는 ‘나쁜’ 나라로 만든 측면이 있다.

2000년대 이후 냉전의 해체와 함께 북한의 붕괴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지면서 남측의 학자뿐 아니라 해외에 여러 연구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하나의 연구주제로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이전의 연구자들과 달리 그들은 더 이상 북한을 미지의 나라가 아닌 분석 가능한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헤이즐 스미스(Smith, Hazel)는 ‘과학과 학문의 관습적 방법으로는 북한을 알 수 없으며, 이해하기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에 대한 도전으로 『장마당과 선군정치』라는 책을 집필하였는데, 그의 자신감은 “‘미지의 나라 북한’이라는 신화에 도전하다”라는 부제를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sup>3)</sup>

- 1) 본 논문은 2022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냉전기 ‘북한식’ 권위주의의 형성과 함의”라는 글을 보완 및 수정 한 글이며, 현재도 연구 중인 글입니다.
- 2) 1946년부터 2010년 사이 절반 이상의 경우(인구 100만 이상 110개국 대상) 기존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 다른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하였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일어난 경우는 약 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독재 정권이 개별 독재자보다 평균적으로 약 2배 더 오래 지속된다. Geddes, Barbara, Wright, Joseph and Frantz, Erica,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New Data,” *Perspectives on politics*, Vol.12 (2), (2014), p. 327.
- 3) 헤이즐 스미스 지음·김재오 옮김, 『장마당과 선군정치: ‘미지의 나라 북한’이라는 신화에 도전하다』(파주: 창비, 2017). 반면 루디어 프랑크의 저서 『북한: 전체주의 국가의 내부관점』이란 책도 출판되었다. 이 책이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성격이나 체제를 논한 연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들이 더 자주 등장한다.

헤이즐 스미스의 연구를 포함하여 2000년대 이후 북한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냉전시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북한이라는 국가의 형성과 유지의 근거로 분석한다. 둘째, 냉전이후에는 북한주민의 뛰어난 적응과 대응을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를 극복한 근거로 분석한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전환을 이룰 수 있는 주역으로 북한주민을 주목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sup>4)</sup>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은 북한 체제전환의 기대를 담은 상징어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 북한의 장마당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못했으며, 새로운 계급에게(소위 돈주) 북한이라는 체제를 전환 시킬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을 포착하기 어렵다. 실제 2000년대 이후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공포하면서 확산되었던 시장화에 대한 기대가 성급한 분석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시장화는 국가가 시장화를 주도 내지는 견인하고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라는 시장화의 자기운동성, 능동적 자기 확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sup>5)</sup>

화폐개혁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조치 외에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여러 징후들이 정치와 사회에서도 지속, 확산되고 있다. 36년 만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는 제8차 당대회까지 이어졌으며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미풍양속’, ‘사회주의 대가정’이란 표어들이 ‘인민대중 제일주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과 함께 김정은의 연설과 언론에 흔히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선부른 또는 단절적인 평가들이 등장했다. 당-국가 체제가 강조된 ‘정상국가’로의 회귀라는 것이다.<sup>6)</sup> 이 주장은 과거 북한에 대한 국가성격까지 규정하는데 김일성 시대는 개인이 중심인 주석제, 김정일 시대는 군이 중심인 선군정치, 김정은 시대는 당의 영도를 강조한 ‘정상국가’라는 것이다.<sup>7)</sup> 북한에 대한 분석은 냉전의 해체를 기점으로 분절되었으며, 2016년을 전후 하여 ‘지속 또는 단절 또는 회귀’라는 시각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 대한 권위주의적 접근은 북한 연구에 많은 자극을 준다. 중국의 권위주의에 대해 외부적 기준을 대입하지 않고 내부적 기준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독특성, 탄력성, 적응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기도 했다.<sup>8)</sup> 역사적 접근과 내재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4) 물론 이외에도 북한을 소련 및 중국과 비교한 연구(박영자, 2005),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군으로 분석한 연구(김연철, 2004), 북한과 쿠바와의 비교를 통해 위기의 대응(신석호, 2008)과 체제유지의 원인(최완규, 2006)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5) 박희진, “북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순과 사회의 혼종,” 『북한학연구』 제17권 제1호(2021), p. 74.

6) 표윤신·허재영,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정·군 현지도 네트워크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3호(2019), pp. 99-101.

7) 표윤신·허재영,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정·군 현지도 네트워크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3호(2019), p. 118.

8)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다양한 탈전체주의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전개되어 자본주의적·민주적 요소를 수용하였다. 물론 공산당 ‘일당체제의 존속’이라는 특징으로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속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개혁 과정에서 중국의 권위주의는 생물처럼 진화하여 기존 권위주의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특성을 갖게 되었다. 우선,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독특성은 여타 탈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 여타 탈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쟁선거를 다소 불안정하게나마 도입하였으며, 일부는 서구식 민주주의로, 다른 일부는 다양한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변화했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 차원의 경쟁선거를 전혀 도입하지 않은 채 비 선거일단권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개혁

러한 연구가 혹시 종종(중복과 유사한)이라고 비판받는지 궁금하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특수성이라고 강조되는 현상들(군중노선, 윤리적 민족주의)이 북한에서 지속되었던 측면들이며,<sup>9)</sup> 중국 사례로 인해 권위주의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에서 악이 아닌 다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0)</sup> 무엇보다 중국 모델이 성공적이라 평가 받는 이유(사회주의+자본주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제공한다.<sup>11)</sup>

북한을 권위주의 국가로 접근하자는 주장에 대해, 기존에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에 대한 연구가 비교의 범위를 확대시킨 흐름, 혹은 양적연구의 유행에 편승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sup>12)</sup> 하지만 본 연구는 세계 약 200여개의 나라 중에 권위주의적 국가가 제일 많기 때문에, 보편성의 측면을 주목하려는 의도가 아니다.<sup>13)</sup> 또한 북한의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전제한 체제전환국 사례연구를 확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sup>14)</sup> 일부연구들이 권위주의적 접근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포함한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조건들을 추출하였지만 본 연구는 북한의 변화가 아닌 지속의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밖으로 확장되는 ‘일반화’의 전략과 안으로부터의 ‘성찰적 재현’의 전략을 결합하여 양적 연구와의 교감 속에서도 질적 연구 본연의 가치를 강화하고자 한다.<sup>15)</sup>

구체적으로 북한을 권위주의 국가로 접근하자는 주장에는 세 가지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첫

- 
- 개방의 성공으로 중국 권위주의는 ‘성공의 주역’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았으며, 중국의 성공 비결을 발굴하던 학자들은 중국 권위주의의 ‘탄력성’과 ‘적응성’ 주목하였다. 중국의 권위주의가 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 그리고 권위주의 때문에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시장개혁의 성공이 공산당의 권위적 통치를 안정화 시켰다는 분석까지, 심지어는 중국의 권위주의가 자유 민주주의에 도전이 될 것 이라는 불안감을 수반한 예측까지 제기되었다. 정주영,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3호(2019), pp. 133-134, 142-143.
- 9) 가족적 정서 및 감정과 관계를 국가적 목표를 추진하는 운동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윤리적 민족주의’는 특정 목적을 향해가는 이념 지향적 성격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민족을 묶어주는 일체감과 소속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등 기본적인 원초적 감정을 바탕으로 조장되는 민족주의이다. 장윤미, “중국 공산당의 사회건설 구상: ‘군중노선’과 새로운 ‘인민’ 주체의 창조,” 『현대중국연구』 제23권 2호(2021), p. 262, 288.
- 10) 민주주의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민주는 ‘좋은 것’, 권위주의는 ‘나쁜 것’에 대한 편견이 보편화되었으나 민주주의의 결함과 역기능의 비판의 도마 우에 오르면서 그간 업그레이드 된 권위주의 정치를 새롭게 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정주영,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p.130.
- 11) 중국 모델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성공적 혼합체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치모델 영역에서도 중국정치모델이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현재 중국의 실험이 민주와 권위주의의 성공적 혼합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주영,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p. 131.
- 12) 북한 대 일국(남한, 소련, 중국) 북한 대 개혁개방 사회주의 국가(중국, 베트남), 북한 대 사회주의 고수국가(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 대 현실사회주의 국가(14개), 북한 대 체제전환국.
- 13) 향후 북한의 정치변동 또는 경로 변화도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에 주목한 비교연구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기존에 보편성에 주목하여 북한을 규정한 전체주의적 접근법이나 비교 공산주의적 접근법은 현존하는 비교대상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보편성에 주목하면서도 현존하는 국가들과 비교가 가능한 독재정권의 제도적 접근법에 기초해서 북한의 국가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이론적인 차원과 정책적인 차원 모두에 있어서 더 유용할 것이다. 유성현·남궁영, “북한의 국가성격연구: 서지학적 접근,”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집 3호(2020), pp. 159-160.
- 14) 상당 수의 체제전환 비교연구는 북한이 근시일내에 시장경제를 수용할 것이며 이것인 김정은 정권에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 노현중,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을 통해 보는 북한체제: 유용성, 개념활용 그리고 구조화된 비교,” 『2022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22), p. 24.
- 15) 강진웅, “북한연구와 질적 방법론의 활용,” 『아세아연구』 제58권 1호(2015), p. 67.

째, 특정시기가 아닌 70여년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특수성은 몇 개의 예외적 현상이 아닌, 예외적 현상의 지속성이기 때문이다.<sup>16)</sup> 둘째, 북한은 개인독재가 아닌 일당독재 국가이다. 이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세습에 대한 개인적 카리스마가 아닌 세습이라는 역사가 제도와 구조를 통해 형성된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용을 이끌어낸 점을 주목한다. 셋째, 북한 주민/공민/인민은 근대화를 경험하지 못한 순진한(혹은 야만적) 집단<sup>17)</sup>이거나 생존을 위해 갑자기 장마당을 이용하는 약삭빠른(또는 이악한) 존재가 아니다.<sup>18)</sup>

냉전시기 북한의 권위주의는 ‘현대’ 권위주의에서 ‘북한식’ 권위주의를 확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냉전의 해체라는 세계적인 구조변화와 고난의 행군이라는 국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2020년 이후에도 ‘사회주의 미풍양속’이라는 구호로 주민들을 결집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연구의 배경으로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현대’ 권위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론적 고찰과 북한 정권에 대한 적실성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냉전기 북한 정권이 ‘현대’ 권위주의에서 ‘북한식’ 권위주의를 확립한 과정을 조명할 것이다. 셋째, 현재 북한 사회를 통해 북한 권위주의가 주기성을 띠는 전략과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형성과 유지를 단절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냉전시기 확립된 ‘북한식’ 권위주의의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16) 냉전시대에 국가차원에서 송배받은 대부분의 카리스마적 인물들은 베버가 20세기 초반에 예견했던 대로 카리스마 권력의 역사적 운명을 따라 극적인 흥망성쇠를 겪게 되었다. 북한만이 예외다. 북한 정치체제의 예외적 성격은 그러므로 개인송배에 기반을 둔 국가와 사회의 특정한 관계에 있기보다는, 이러한 특정한 방식의 지배가 다른 대부분의 혁명적 사회들의 역사적 경향과는 달리 예상을 깨고 놀라운 탄력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정치가 오래 견뎌왔다는 점은 이론적인 관점에서도 예외적인데, 카리스마 권력의 비영속성을 주장한 베버 식의 현대 정치권력과 권위에 대한 설명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치체제의 수수께끼는 따라서 특이한 개인송배의 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행의 특이한 지속성에서 비롯된다.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파주: 창비, 2013), pp. 12-13.

17) 비록 대의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지만 사회에 내장되어 있는 ‘근대성’은 동독의 권력자와 대립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다. 반면 북한은 김씨 일가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종교적, 사회적 역량이 훨씬 허약했고 이것이 북한에서 ‘신정체제’를 운영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현종, “북한 사회주의 신정체제의 종교사회적 기원,” 『세계지역연구논총』제34집 4호(2016), p. 272.

18) 1990년대 총체적인 경제적 난관은 체제의 도덕적 지배를 정당화 하던 계획-재분배 체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도덕담론의 질서 속에서 위장된 순응의 형태로 존재하던 사회 각 층위의 ‘생계윤리’들이 경제난 속에서 현실적 생계논리로 적극화되면서 개인들의 생계활동을 정당화하는 도덕담론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존과 자기 보존이라는 생계윤리는 현실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현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과 자기 단위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했다. 홍민, “북한의 시장교환 질서와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통일정책연구』제15권 2호(2006), p. 127.

## 2. 연구의 배경

### 1)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북한의 국가성격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개별 연구자의 특수성 혹은 보편성에 입각한 연구결과들의 등장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해 (보편성/특수성으로) 분류하고 공통성을 추출하여 북한의 국가성격을 규명(정의)하려는 시도이다.

첫째, 2000년을 전후한 북한의 국가 성격에 대한 연구들은 해외학자와 국내학자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10여개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sup>19)</sup> 2000년대 이전에는 전체주의로 접근한 연구들이 그 외에 연구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경향은 국내에서 연장되어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에 대한 논쟁이 일부 전개되기도 하였다.<sup>20)</sup> 둘째, 기존 연구에 대한 분류에서 흥미로운 점은 특수성과 보편성으로 분류하는 공통의 작업을 진행하지만, 그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와다 하루키의 유격대국가론은 학자에 따라 보편성 또는 특수성으로 분류되었다.

구갑우(2013)외에 두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분류를 넘어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는데, 김연각(2006)은 북한 체제를 ‘수령중심 사회주의 체제’로<sup>21)</sup> 유성현·남궁영(2020)은 북한을 ‘세습적 개인·일당독재체제’로 규정하였다.<sup>22)</sup> 하지만 이런 정의에서 드러나는 단편적인 문제점은

19) 이상우, 『북한정치 변천: 신정체제의 진화과정』(서울: 오름, 2014); 전현준 외, “북한의 정치: 정치체제의 특성에 관한 일 고찰,” 『북한체제의 현주소』(서울: 통일연구원, 2002); 이종석, “북한체제의 성격 규명: ‘유일체제론’의 관점에서,”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13집(1995);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을유문화사, 2000); 와다 하루키, 서동만·남기정 역, 『북조선』(서울: 돌배개, 2002); 브루스 커밍스, “북한의 조합주의,” 김동춘 엮음, 『한국현대사 연구 1』(서울: 이상과 현실사, 1988); Gavan McCormack, “Kim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New Left Review No.198, March/April, 1993); 스즈끼 마사유키, 유영구 역,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 M&B, 1994); 권현익·정병호 지음,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파주: 차비, 2013) 등.

20)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제4권, (1988); 강정구, “연구방법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서울: 을유문화사, 1990); 이종석, “북한연구방법론, 비판과 대안; 남북한 연구방법론 비판,” 『역사비평』 가을호, (1990); 강정인,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가을호, (1994); 김연철,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논쟁의 성과와 한계,” 『현대북한연구』 제1권(1998) 등.

21) 수령중심 사회주의체제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물질 토대론 한, 형태상 사회주의적 당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내용상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체제로서, 주민들의 순응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물리력과 통제-감시-동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 정당화와 주민동원을 위하여 인간개조, 사상개조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부분적으로 맑스-레닌주의 전통에 따르면서 명백히 민족주의와 한국적 요소를 지닌 주체사상과 그 부속 이론들을 활용하고 있는 체제라 정의할 수 있다. 김연각, “북한 국가의 성격: 기존 논의의 검토와 제언,” 『북한연구학회보』제10권 2호 (2006), p. 110.

22)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북한의 주요 특징은 수령중심체제,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 그리고 세습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은 줄곧 수령 일인독재를 중심으로 한 통치 구조를 계승·발전시켜왔고 이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라는 기초 위에 형성됐다. 수령중심체제, 당·국가 체제 그리고 세습체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북한을 독재정권의 제도적 접근법에 따라 분석하면 북한은 개인·일당독재체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습제가 더해진 ‘세습적 개인·일당독재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유성현·남궁영,

개별 연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연구 간의 비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와다 하루키와 스즈키 마사유키의 수령제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sup>23)</sup> 가장 큰 의문은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 연구에 대한 분류나 혹은 규정이 필요한가?’이다. 혹자는 북한의 국가성격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척되어 이제는 북한의 국가성격이 대부분 다 드러났다고 한다.<sup>24)</sup>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 연구는 북한연구를 접근하는 데 기본적인 태도를 결정짓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북한연구에서 대표적으로 단절된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서는 기존연구에 더한 심화연구와 새로운 접근에 의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

<표-1>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에 대한 연구 분류

	일반국가로의 특성	특수국가로서의 특성
김연각(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론</li> <li>- 유격대국가론(와다 하루키)</li> <li>- 수령제 사회주의(스즈키 마사유키)</li> <li>- 전체주의론과 그 복합 모델(박형중, 최완규)</li> <li>- 당-군-정 역할분담체제론(서동만, 서대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정체제론(이상우)</li> <li>- 유일체제론(이종석)</li> <li>- 조합주의적 사회주의론(브루스 커밍스)</li> </ul>
구갑우(2013)	보편성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 체제론</li> <li>- 전체주의론</li> <li>- 신전체주의론</li> <li>- 신가산제 사회주의체제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주의론</li> <li>- 유격대국가론</li> <li>- 군사국가론</li> <li>- 수령체제론</li> </ul>
우성현·남궁영(2020)	보편성(외재적 접근)	특수성(내재적 접근) ‘북한적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주의(오일환)</li> <li>- 전체주의+술탄주의(최완규)</li> <li>- 탈전체주의+술탄주의 폭정(박형중)</li> <li>- 전체주의(맥코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정체제(이상우, 전현준)</li> <li>- 유일체제(이종석)</li> <li>- 군사국가체제(서대숙, 와다 하루키)</li> <li>- 조합주의적 사회주의체제(브루스 커밍스)</li> <li>- 수령제 사회주의체제(스즈키 마사유키)</li> </ul>

출처: 김연각, “북한 국가의 성격: 기존 논의의 검토와 제언,”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2호(2006), pp. 91-100; 구갑우, “지식사회학과 북한연구방법론,” 장달중 편, 『현대북한학 강의 제1판』(서울: 사회평론, 2013), p. 359; 우성현·남궁영, “북한의 국가성격연구: 서지학적 접근,”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집 3호(2020), p. 156.

“북한의 국가성격연구: 서지학적 접근,” pp. 162-163.

23) 김연각은 와다 하루키와 스즈키 마사유키의 연구에 대해 1998년 헌법에서 주석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령제’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다. 김연각, “북한 국가의 성격: 기존 논의의 검토와 제언,” p. 103.

24) 김연각, “북한 국가의 성격: 기존 논의의 검토와 제언,” p. 90.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에 대한 분석이 현 시기에 더욱 중요한 이유는 과거 ‘보편성/특수성’에 기반한 연구가 ‘외재적/내재적’ 논쟁을 불러 일으켜 ‘정상국가/비정상국가’로 북한을 구분짓는 과정에서 남남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현재 정상/비정상 논의는 대북 협상에 있어 ‘협상/제재’라는 정책적 입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속성에 대해 억압적 측면을 작동기제로 분석한다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재를 선택하게 된다. 반대로 내재적 순응성에 기초하면 북한을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협상을 선택하게 된다.<sup>25)</sup> 제재론은 북한이 붕괴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지만, 협상론은 공존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긴다.<sup>26)</sup>

북한의 특수성으로 거론되는 ‘수령제’는 김일성 개인에 대한 충성 또는 효성<sup>27)</sup>이나 ‘죽은자가 통치하는 나라’<sup>28)</sup>라는 서사적 표현이 아닌, 정권유지를 위한 제도와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sup>29)</sup>과 그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즉 죽은자의 나라를 지속시키는 제도와 구조들의 작동원리를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종석(1997)의 커밍스와 맥코맥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된다.<sup>30)</sup>

즉, 권위주의로 북한의 국가성격을 분석하는 시도는 보편/특수, 내재/외재의 논쟁을 뛰어넘거나 부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내재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공격, 그리고 후속연구의 부재는 북한연구 방법론의 침체기를 형성하였다. 당연하지만 접근 가능한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뤄진 내재적 접근은 “북한의 내재적인 사회작동원리”를 규명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 2) 권위주의와 ‘현대’권위주의

25) 이종석, “북한체제의 성격규명: 유일체제론의 관점에서,” 『현대한국정치론』(서울: 사회비평사, 1996), p. 81.

26) 김연철, “북한의 국가성격과 북핵 및 남북관계의 지정학,” 『동북아교통물류지역연구 시리즈』(한국교통연구원, 2017),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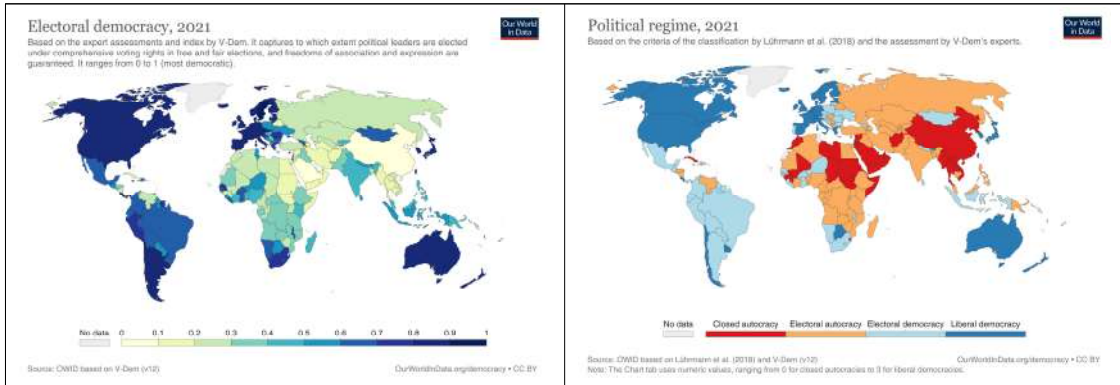
27) 암스트롱은 북한의 초기 혁명정치가 “유교적 가족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결합”시킨 것인데, 그중 김일성을 향한 집단적 효성이 가장 특이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권헌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p. 35.

28) 북한은 ‘죽은 자가 통치’하는 나라다. 김일성이 사망한지도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처럼 군림하며 북한을 전면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후계자에 의해 주도되는 ‘김일성 없는 김일성 체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위에 위치 지워진 것이 김일성 사후 북한 권력 이행기의 핵심적 성격이며 이는 북한정권의 정책범위와 정책방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연철, “김정일이 주도하는 김일성 없는 김일성 체제,” 『월간 사회평론 길』 제95권 2호(1995), pp. 80-86.

29) 북한 정권의 정당성 기반은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업적, 혁명역사이며 정권의 지지기반 역시 김일성에 대한 주민의 존경과 지지이다. 이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넘어서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연속성의 보장을 위해 김일성은 육체적 죽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들의 통치도구로 존재한다. 김윤희,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6권 2호(2016), p. 209.

30) 이종석은 유일체제론을 커밍스가 말하는 국가와 사회 간에 내재적 순응성이 기본구조를 이루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맥코맥이 말하듯 국가가 사회를 일방적으로 결박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 체제는 체제운용에서 평상시 가급적 대중의 동의적 요소들을 강조하며 물리력은 항상 장막의 뒤에 대기상태로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회체제에서는 대중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해내기 위한 일련의 기제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석, “탈냉전기 북한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연구의 신지평 시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27: 한국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5』(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7), pp. 337-368.

북한을 전체주의적 접근으로 분석하거나 임의로 분류하거나, 단순히 전제했던 연구들의 실수<sup>31)</sup>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권위주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 온 권위주의는 분명 주류 연구가 있지만, 주류에 도전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021년 V-Dem(민주주의의 다양성) 프로젝트가 제시한 정치 시스템에서 북한은 ‘폐쇄된 독재정권’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북한에게는 1948년 이후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남한에게는 1987년 이후 변화된 것이다. 북한과 함께 중국도 ‘폐쇄된 독재정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2> 2021년 V-Dem(민주주의의 다양성) 프로젝트가 제시한 정치 시스템 분류

<b>폐쇄된 독재정권</b>	시민들은 다당제 선거를 통해 정부의 수장이나 입법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b>선거 독재 체제</b>	시민들은 다당제 선거를 통해 최고 경영자와 입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의미 있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만드는 결사 또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일부 자유가 부족합니다.
<b>선거 민주주의 국가</b>	시민은 의미 있고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b>자유 민주주의 국가</b>	시민은 더 많은 개인 및 소수자의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며 행정부의 행동은 입법부와 법원에 의해 제한됩니다.

출처: Bastian Herre, “In most countries, democracy is a recent achievement. Dictatorship is far from a distant memory. How old are democracies across the world?” 『Our World in Data』(February 03, 2022),

<https://ourworldindata.org/democracies-age> (검색일: 2022. 08.15).

31) 우선 북한을 전체주의로 규정한 연구들의 많이 있지만 북한을 전체주의로 규정할 때 사용하는 모델은 연구자마다 각각 다르다. 북한을 전체주의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무엇이 북한을 전체주의로 만드는가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전체주의 여부를 판단할 때 강조하는 기준도 서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을 전체주의로 규정할 때 어떤 모델에 따라 그렇게 규정했는지를 적시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어떤 특징을 바탕으로 전체주의라 규정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사실 북한의 국가성격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논문들은 대부분 북한을 전체주의라고 규정하지만 누구의 모델에 따른 전체주의 국가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유성현·남궁영, “북한의 국가성격연구: 서지학적 접근,” pp. 159-160



린츠(Juan J. Linz)는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를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독자적인 정치체제로 분류하면서, “사회적 다원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책임성은 부여되지 않으며, 강도 높고 광범위한 대중 동원은 없으며, 정교한 통치 이데올로기는 결여되어 있으나 특징적인 멘탈리티는 있으며, 일인통치자 또는 소수의 통치자 집단에 의해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로 정의하였다.<sup>32)</sup>

이후 린츠와 스테판(Alfred Stepan)은 비민주주의 통치 유형을 권위주의, 전체주의, 탈전체주의, 술탄주의로 분류하고 북한을 술탄주의에 포함시켰다.<sup>33)</sup> 오도넬(Guillermo O'Donnell)은 ‘관료적 권위주의’ 개념을 제시하였다.<sup>34)</sup> 이후 권위주의에 대한 연구는 게디스(1999)<sup>35)</sup>와 브루커(2009)<sup>36)</sup>에 의해 확장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권위주의를 통해 북한을 분석하려는 시도<sup>37)</sup> 또는 권위주의를 포함하는 독재정권에 대한 연구들의 경향 속에서 대북정책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sup>38)</sup>

최근에는 게디스의 데이터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높지만<sup>39)</sup> 본 연구에서 게디스의 분류를 차용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독재체제의 독립성 때문이다. 게디스(2014)와 브루커(2009)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개인(일인)독재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필자는 일부 학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모든 독재 체제 그 자체가 ‘개인 중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개인’체제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한다.<sup>40)</sup> 또한 게디스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자면, 독재자가 자신을 권좌에 앉게 만들어준 제도, 즉 정당이나 군대로부터 자립하여 군림하는 경우를 ‘개인독재정권’이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서 난점은 개인독재 지도자가 권력의 토대가 되는 정당이나 군대로부터 과연 자립했는가의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sup>41)</sup> 이후 게디스의 분석에 기대 개인독재와 일당독재의 혼합으로 북한을 분석한 연구들도 등장하였는데 혼합적인 구분에도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게디스의 분류에서 북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불리는 후계체제에 대한 대입이 어

32) Juan J. Linz, ‘An Authoritarian Regime: The Case of Spain’, in Erik Allardt and Yrjö Littunene (eds), *Cleavages, Ideologies, and Party Systems: Contributions to Comparative Political Sociology* (Helsinki: The Academic Bookstores, 1964), p. 265.

33)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p. 44-45.

34) 김은주, “권위주의적 생존의 역학-벨라루스 루카셴코 정권의 국내외 변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 7.

35) Geddes, Barbara.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1999), pp. 115-144.

36) Brooker, Paul. *Non-Democratic Regim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37) 오경섭, “권위주의 지배의 정치,” 『KINU 통일+ 연구 동향과 서평』(통일연구원, 2016), 72.

38) 박형중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서울: 통일연구원, 2012).

39) Geddes, Barbara, Wright, Joseph and Frantz, Erica,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A New Data Set.”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2. No. 2, (2014), pp. 313-331.

40) Wahman, Michael, Teorell, Jan and Hadenius, Axel. (2013). “Authoritarian Regime Types Revisited: Updated Data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temporary Politics*. Vol. 19. No. 1, pp. 19-34.

41) 박형중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p. 25.

려우며<sup>42)43)</sup> 둘째, 1992년 조선로동당의 영도가 헌법으로 명문화 된 것을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오독이기 때문이다.<sup>44)</sup> 만약 이 근거가 소련과 중국에 적용된다면, 소련은 1936년부터, 중국은 2018년부터 개인독재와 일당독재의 혼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sup>45)</sup>

본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권위주의를 비민주주의 통치의 한 유형으로 전제하고, 대중을 의식하고 제도와 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아모스 펄뮤터(Perlmutter, Amos)가 정의한 ‘현대’ 권위주의 정권으로 북한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모스 펄뮤터가 제시한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재정치와 전제정치는 지배자의 성격을 기술하는 반면에 권위주의는 정권의 성격과 관리구조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독재정치는 절대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한 개인에 의한 지배로서 정의된다. 전제정치는 사실상 독재정치와 동의어이지만 법에 의한(제도화된) 왕이 존재하지 않는 자의적인 정부이다. 권위주의 정권은 집합적인 독재, 과두제, 또는 군사정부 등일 것이다. 이 개념은 집합적 지배를 의미하지만, 한 사람에게 부여될 수도 있다.<sup>46)</sup>

권위주의 앞에 ‘현대’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면, 대중을 의식한다는 정치를 의미하게 된다. 초기의 ‘권위주의’는 소수의 이름으로 소수에 의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현대’ 권위주의는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에 의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7)</sup> 고전적인 전제정치에서는 어떠한 정치 엘리트들도 존재하지 않으며 대중들은 아무런 정치적 의미도 지니지 않는 반면 ‘현대’ 권위주의는 대중운동의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다.<sup>48)</sup>

따라서 대중을 의식하고 대중을 조작 및 유지하기 위해 ‘현대’ 권위주의 체제는 내부구조와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지적인 자원이 희생되며 사회를 정치화하고 관료제화하게 된다.<sup>49)</sup>

42) 게디스의 군사독재/일당독재/개인독재 분류에서 개인독재의 조건 중 “개인이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극단적인 자유를 가지고 통치하지만 후계자 선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없고, 독재자는 리더십 교체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이 후계자를 직접 지목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43) 이런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북조선 연구의 특수성이다. 당인가? 김씨 일가인가? 영향력 있는 소집단인가? 우리는 모른다. 뤼디거 프랑크, 『북한: 전제주의 국가의 내부관점』(서울: 한겨레출판사, 2020), p. 89.

44) 북한에서는 군이나 국가기관도 당의 영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선노동당은 모든 사람들의 조직생활을 장악하고 통제하며, 국가의 모든 대내외정책의 작성과 결정, 그리고 집행을 감독한다. 북한을 개인독재와 일당독재의 혼합정권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성현·남궁영, “북한의 국가성격연구: 서지학적 접근,” p. 161; 표윤신·허재영,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정·군 현지도 네트워크 분석,” p. 100.

45) 소련은 1936년 헌법 제126조에서 공산당이 모든 국가적 및 공공적 조직의 지도적 핵심이라 하여 공산당의 국가기관에 대한 지도적 지위를 명문화하였다. 장명봉, “공산주의의 정당론과 공산당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헌법상 공산당의 우위성 보장과 관련하여”, 『법학논총』 제6집(1984), p. 212; 2018년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수정을 통해 중국공산당 영도를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켰다. 정주영,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p.130.

46) 아모스 펄뮤터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현대국가와 권위주의』(서울: 정음사, 1986), p. 11

47) 아모스 펄뮤터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p. 12.

48) 아모스 펄뮤터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pp. 42·235.

49) 아모스 펄뮤터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p. 20.

북한을 권위주의로 접근하는데 아모스 펄뮤터의 이론을 차용한 기본 이유는 ‘대중’에 대한 태도이며,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 이데올로기에 대한 견해<sup>50)</sup>과 둘째, 권위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역할<sup>51)</sup>, 셋째, 사건이 아닌 전체시기에 대한 적실성을 목표로 하는 점이다.<sup>52)</sup>

아모스 펄뮤터가 정리한 권위주의 정권 유형 및 ‘현대’ 권위주의 정권 사례는 <표-3>과 같다.

<표-3> 권위주의 정권 유형 및 ‘현대’ 권위주의 정권 사례

정권유형	제도화된 유형		비제도화된 유형	
	공산주의	파쇼	조합주의 (corporatism)	집정관주의 (praetorianism)
정권모형	당-국가	경찰국가	조합주의 국가	집정관주의 국가
사례	볼셰비키 러시아, 쿠바와 베트남	나치독일	스페인(1930년대), 포르투갈(1931~1975) 라틴아메리카 정권	페루, 칠레, 우간다(아민), 자이레(모부투), 이티(두발리에),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출처: 아모스 펄뮤터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현대국가와 권위주의』(서울: 정음사, 1986), pp. 17-65.

<표-3>에서 북한이 직접적인 사례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산주의 국가이며 당-국가 모형을 정치체제로 대중을 동원하여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춘 북한을 ‘현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전체주의학파는 이데올로기(메시아주의, 인종주의, 반유태주의)를 대중 권위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구성요소라고 주장하지만, 각 권위주의 유형의 존속은 그것이 전체주의적이든 아니든 이데올로기의 성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단과 조직의 정도, 범위, 수준에 달

50) 린쓰의 전체주의 개념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구별된다. 전체주의 체제가 배타적인 이데올로기를 소유하는 반면에 권위주의 체제에는 ‘독특한 정신상태들을 지니는, 정교한 지도 이데올로기’가 결여되어 있다. 대부분의 전체주의 체제에서, 이데올로기는 체제와 국가 및 사회를 움직이는 추진기관이 아니다. … 비록 이데올로기가 권력을 장악할 때 혹은 몰락해 가는 현대 독재정치를 재생시키려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정치적 무기이긴 하지만, 당-국가의 성공은 그의 이데올로기적 헌신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에 당-국가는 정치권력의 기구들에 의존하며 이데올로기는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레닌주의가 순수한 마르크스주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것이 성공한 것은 스탈린화, 관료화, 그리고 당-국가와 그것의 법적, 준법률적 구조 및 보고구조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룩되었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다. … 우익과 좌익 권위주의의 권력장악, 재생, 운영은 결국 이데올로기가 아닌 권위주의적 정치구조들에 의존한다. 아모스 펄뮤터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pp. 90-97.

51) 현대의 비민주적 국가는 다소 효율적이고 야만적이며 또한 보통 완전한 국민동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작용하는 권위주의 국가이다. 아모스 펄뮤터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p. 93.

52) 전체주의 학파의 저술가들은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가 이전의 체제 혹은 가상의 새로운 적에 대항한 총력전에 몰두하는 시기와 그 체제가 억압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기능할 수 있는 기간을 혼동한다. 권위주의의 ‘전체주의적’ 기간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때나 혹은 즈다노프주의와 모택통주의적 문화혁명 같은 강제적인 쇄신의 기간에 발생한다. 일단 혁명적 혼란이 가라앉으면 체제와 그 정치구조들은 안정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태진전은 이데올로기 쇠퇴의 전조다 되는 것이다. 아모스 펄뮤터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p. 95.

려 있다고 할 수 있다.<sup>53)</sup> 우리가 주체사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첫째, 주체사상의 영도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는 점이다. 즉, 인간이 개조될 수 있다는 믿음, 그로 인해 개인의 카리스마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54)</sup> 둘째, 주체사상을 유지 및 확장시키는 도구에 대한 것이다. 주체사상이 제법 오랜 시간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주체사상 자체의 논리성 혹은 완결성의 여부가 아니라 주체사상을 존속시키고 선전하는 각종 기구와 제도가 성공적으로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모스 펄뮤터는 권위주의 체제들은 정치적 지지, 정당성 및 질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배와 동원 및 영향력 행사 기구들(병렬구조와 보조구조들)이 필요하지만, ‘현대’ 권위주의 체제가 제도화될 때 결국 보조기구들은 소멸되거나 그 규모와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아니면 병렬구조들에 통합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권위주의 체제가 일단 안정되면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준정치적 구조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sup>55)</sup>는 것이다.

일례로 ‘현대’ 권위주의 체제가 헌법의 권위나 법의 지배 및 직능대표제 같은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은 질서와 안정을 절대적으로 우선함으로써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56)</sup> 북한 사회에서 헌법과 당규약은 엄격한 준수 원칙으로 작동하지만, 1972년을 전후하여 김일성의 언설이 그 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이 ‘현대’ 권위주의 체제를 통하여 안정적인 후계체제를 완성하였다면, 이후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체계화를 통해 ‘북한식’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현대’ 권위주의 체제가 합의 형식으로 소수의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면 ‘북한식’ 권위주의체제는 소수의 지배를 김일성 1인에 대한 충성으로 포장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김정은 시기에 사회주의적 제도와 구호들이 다시 강조되는 측면은 북한이 안정화되었거나 정상국가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 ‘북한식’ 권위주의가 약화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53) 아모스 펄뮤터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pp. 84-242

54) 주체사상은 정치적 자결과 경제적 자립의 원칙 이외에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의지와 실천이 역사의 진보에서 진정 의미있는 유일한 특질임을 주장하고 그럼으로써 맑스주의의 역사적 유물론 원칙을 거부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체사상은 역사적 과정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인간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의지를 올바르게 집결시켜 지도하면 특별한 역사적 진보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이 마지막 부분, 즉 집결과 지도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주체이론은 집단적 의지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김일성이라는 유일한 원천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극단적으로 인간중심적인 이론에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함축한 광범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 메시지는, 적절하게 지도만 한다면 인간사회는 개인적 카리스마의 지속성을 막는 역사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현익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p. 213.

55) 아모스 펄뮤터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pp. 37-38.

56) 아모스 펄뮤터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pp. 40-41.

### 3. ‘현대’ 권위주의의 형성

만주파를 중심으로 한 김일성 중심의 지도부가 확고한 권력을 장악한 시점은 196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김일성은 경쟁적인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조선로동당 일당독재체제라는 운영방식 위에 김일성이 바로 군림한 것은 아니었다. 즉 김일성은 타 독재자들과 달리 독재자가 되기까지 제법 긴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sup>57)</sup>과 1962년 사회주의 국제분업 이탈<sup>58)</sup>, 1967년 ‘갑사파 사건’과 1968년 ‘군부강경파 사건’을 거치고 나서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은 집단지배에서 1인 지배의 형태를 갖출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각 사건을 거치며 김일성이 개인을 선택 또는 제거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일성 중심의 지도부는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을 통해 ‘중공업 우선노선’을 확보하였으며, 1962년 사회주의 국제분업 이탈을 통해, ‘중공업 우선노선’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와 ‘4대군사로선’을 채택하였고, ‘갑사파 사건’과 ‘군부강경파 사건’을 통해서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변용과 해석의 독점권을 확보하였다. 즉 국가운영의 방식과 구조, 국제사회로 부터의 자율권, 주민생활과 문화의 정체성까지 순차적으로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1) 사회주의 국제분업의 이탈과 ‘현대’ 권위주의 강화

1962년 미·소 공존과 중·소 분쟁이 혼재된 시기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 국가가 국제분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에게 기계제작이 포함된 중공업이 아닌 원자재(a producer of raw materials and agricultural goods) 생산국의 역할을 제안하였다.<sup>59)</sup> 북한과 소련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돼 온 갈등이었다. 하지만, 북한 내의 소련계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세력은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중공업 우선노선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다만, 자본주의적 요소의 활용과 농업협동화에 대한 속도의 문제에서 이견이 있을 뿐, 상대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sup>60)</sup>

<표-4>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입장차이

주요 정책 사항	연안계	당내 주류 세력	소련계
사회주의 이행문제	유예	사회주의(급진) 사회주의 개조	사회주의(점진) 사회주의 기초 건설
통일의 실현문제	단기과제(선행)	장기 과제(후행)	장기 과제(후행)
중공업과 경공업·농업의	경공업·농업 우선	중공업 우선	중공업 우선

57)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pp. 76-79 참고.

58) 박아름, “1962년 북한의 ‘사회주의 국제분업’ 이탈 분석,” 『역사문제연구』 제45권(2021), 참고.

59) “June 29, 1964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794> (검색일: 2021.02.09.)

60) 조수룡,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립과 소련의 개입-말렌코프 ‘신노선(New Course)’의 영향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1권 제3호(2018), p. 215.

우선순위 문제			
자본주의적 요소의 활용 문제	유예	청산	활용
농업협동화 실현 속도의 문제	유예	급진적 추진	점진적 추진

출처: 조수룡,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립과 소련의 개입-말렌코프 '신노선(New Course)'의 영향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1권 제3호, (2018), pp. 215-217쪽을 참고하여 필자가 표로 정리.

1962년 소련의 국제분업을 거절했던 결정에서도 당시 지도부는 명백한 명분이 있었다. 그것은 중공업우선 노선을 관철하여 사회주의 공업화를 달성하는 것이었으며, '4대 군사노선'을 전 인민과 전 국토에 적용하여 국가안보를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반제·반미'라는 이념적 고수를 강조하였다. 이후 '3대혁명 역량강화'를 대외정책에 적용하여 비동맹운동과 국제기구 및 서방권과의 접촉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시 지도부의 대내외 정책 결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발전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권위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현대' 권위주의는 대중운동의 권위주의로, 대중동원은 지배자들과 정권으로 하여금 발전주의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이다.<sup>61)</sup> '4대 군사노선'의 실현은 인민들에게 경제적 육체적 희생을 초래하였지만, '현대' 권위주의 체제인 북한은 소련과 관계악화라는 결정에 대해 발전주의적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선전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이 되면, 북한은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주민들에게 초과근무와 군사교육을 병행시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까지 내몰고 있었다.<sup>62)</sup>

대외적으로 북한은 1962년 코메콘을 탈퇴하면서 소련과 관계 악화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일정 이탈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마련하고, 비사회주의 권과의 관계 강화를 실현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63)</sup>

## 2) 북한식 사회주의 기반 마련과 김정일 후계 구축 시작

현실 사회주의는 발전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극복 대안을 모색하면서 첨예한 '과도기' 논쟁을 거치게 된다.<sup>64)</sup> 1960년대 중반 조선로동당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인한 성장률의

61) 아모스 펠뮤터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p. 235;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민주화 물결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발전이라는 뚜렷한 국가목표가 동반된 권위주의 통치 아래서 경제 수준 향상이 선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채윤·김면희, "헝가리 권위주의 체제의 가속화에 관한 연구: Covid-19 전후 오르반 정권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9권 3호(2021), p. 54.

62) "1968년 북한의 경제발전에 관한 정보(평양, 1969년 2월 6일)," 통일연구원 편, 『독일지역 북한기밀문서집』(서울: 선인, 2006), p. 245.

63) 김응서,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외교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 93.

64) 장인숙, "1970년대 북한의 발전위기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2011), p. 257.

둔화는, 소련과 중국에 이어 북한에서도 과도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였다.<sup>65)</sup> 소위 ‘5.25 교시’라고 불리는 북한의 과도기 논쟁은 사회주의에 진입하기 위한 과도기를 무한대로 연장하여 첫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지속을 정당화 하고 둘째,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경제관리 법칙의 수정을 허용하였다.

첫째, 1960년대 후반 갑산파 사건과 함께 과도기에 대한 김일성의 정리가 시작되었다. 1967년 5월 4~8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박금철, 김도만, 허석선, 이효순을 숙청한 얼마 후 김일성은 1966년 10월 5~12일 ‘조선로동당 제2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문제라면서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김일성은 ‘과도기의 임무가 완수되면 프롤레타리아독재가 더는 필요없게 될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략) 다시 말하여 과도기가 끝나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계혁명이 완수되지 못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 있으면 일부지역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의 위협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셔도 국가는 조락될 수 없으며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의연히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sup>66)</sup>

김일성은 과도기 정리를 통해 ‘완전한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모택동(毛澤東)이 설정한 과도기 보다 더 길게 세계적인 혁명이 달성될 때 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과도기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북한에도 상품이 존재하며 가치법칙 등의 시장경제 모습이 나타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sup>67)</sup>

둘째, 김일성은 과도기 정리를 통해 북한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을 인정한 경제법칙을 성립하였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통해서 중간관료와 노동계급을 비롯한 대중의 자율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과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sup>68)</sup>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은 이전까지 경직되었던 ‘사회주의 경제’의 여러 부분을 이완시키는 조치를 가능케 만들었다. 북한은 지방분권화와 독립채산제를 실시했으며, 대미접촉을 시작하고, 사회주의 진영 외에 자본주의 국가 및 개도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여러 형태의 차관을 받아들였다.<sup>69)</sup>

1974년은 ‘북한 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조치를 전면에 도입한 시기로 1975년 출간된 『주

65) “1968년 북한의 경제발전에 관한 정보(평양, 1969년 2월 6일),” 통일연구원 편,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p. 240.

66)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당사상사업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259-276.

67) 『정치 경제학 참고자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 182.

68) 윤철기, 『북한 계획경제의 정치학』(서울: 선인, 2021), pp. 268-271.

69)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1961~1967년 기간의 연평균 19.2%에의 1971~1976년 기간의 연평균 30.3%로 증가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임현진, 『제3세계 연구: 종속, 발전 및 민주화』(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 273; 양문수, “1970년대 북한 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2003), p. 62.

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이론』<sup>70)</sup>은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1969)”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3)”등에 나타난 김일성의 문제의식을 크게 결합하여, 가치법칙의 제한적 활용과 기업분권화 및 지방분권화 등 사회주의 과도기에 ‘계획과 시장’의 공존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sup>71)</sup>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는 김일성의 권력강화로 지목된 측면이 아닌, 과도기 논쟁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과도기의 지속이 결정되면서 ‘계속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혁명위업 계승’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권력강화는 제도와 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후계자 문제의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직접적으로 김정일을 후계자로 호명하지 않았지만 변화된 제도와 구조들은 김정일의 역할을 서서히 확대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

70)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71) 구체적으로 독립채산제, 새로운 계획화체계(세부적인 계획의 대부분은 생산자를 포함한 하부의 기업소에서 스스로 작성), 기업 분권화, 지방 분권화, 제2경제위원회(1971), 지방예산제(1973), 연합기업소(1973) 등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창희, “북한 경제의 재고찰과 시사점,” 서보혁 외 엮음,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서울: 선인, 2015), p. 132.



#### 4. ‘북한식’ 권위주의의 확립

##### 1)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

북한의 후계체제에 대한 모색은 중국과 소련의 영향<sup>72)</sup>을 받은 것으로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sup>73)</sup>, 국내정치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70~1972년으로 볼 수 있다.<sup>74)</sup> 북한당국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경험’을 근거로 후계자문제에 접근했다고 밝히고 있으며,<sup>75)</sup>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구체적인 지위를 획득한 시기를 1973년과 1974년으로 정리하였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1973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추대하는데 이어 1974년 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추대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한 후계자,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당과 혁명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추대하였다.<sup>76)</sup>

이후 김정일은 1980년 6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확고한 지위<sup>77)</sup>와 함께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북한의 1981년 활동을 기록한 『조선중앙년감 1982』부터 김정일의 공식화

72) 북한은 소련에서 스탈린의 후계자로 등장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와 개인숭배 비판,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목된 린뱌오의 반란 등 형제국가들의 대내 정치상황을 의식하였다.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서울: 선인, 2007), p. 110.

73) 정창현, “1967년 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 김정일 연설-김정일 후계체제의 서막,” 『역사비평』 제 112호(역사비평사, 2015), pp. 132-152.

74) 북한의 역사를 시기구분하면 가장 특징적인 시기는 단연 1970년 5차 당대회라고 할 수 있다. 5차 당대회는 곧 이은 1972년의 헌법 개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북한은 기존의 보편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제도 자체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1970~1972년을 거쳐 ‘북한식 사회주의’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한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다. 이주철, “북한의 국가의 역사적 변천: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본 시기구분,”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서울: 한울, 2001), pp. 75-76; 실제로 김정일 정권의 출발은 그가 1970년대 초에 이미 국가사무에 관여했으며, 사실상 그 이후 북한정권이 수행한 정책을 그와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류길재,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北韓研究學會報』 제3권 제1호(북한연구학회, 1999), pp. 11-12.

75)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경험은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옹계 해결할 때에는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전진하며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혁명이 우여곡절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지어는 혁명위업이 중도반단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 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69

7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p. 473.

77)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공식 부상은 제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비서국·군사위에서 고위직을 차지함으로써 김일성 다음으로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의 제2인자가 된 셈이다. 석승용, “북한의 대내정책과 대소정책의 상관성에 대하여-로제나우의 연계이론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p. 40-42; 새로 선출된 당지도부의 면면을 보면, 정치국의 경우 지난 5차대회에서 정위원의 90%가 항일무장투쟁 관련 혁명 1세대였지만 6차당대회에서는 그 비율이 50%대로 낮아졌다.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비서국의 경우 제5차 당대회에서는 10명 중 7명이 항일무장투쟁 관련자였지만 6차대회에서는 총비서 김일성만이 혁명 1세대에 속했다. 이제 김정일이 국방, 외교 등 일부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정을 김정일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종석, 『북한의 역사 2』(서울: 역사비평사, 2011), p. 117.

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sup>78)</sup> 『조선중앙년감 1983』부터는 ‘김정일의 실무지도’ 외에 ‘김정일의 문헌’이 함께 실렸으며<sup>79)</sup>, 『조선중앙년감 1984』에는 김정일에 대한 호칭 앞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덧붙이고 관련 문헌과 중국 방문이 기록되었다.<sup>80)</sup>

김정일을 찬양하는 각종 전기와 문학예술 작품이 창작되고 김정일의 ‘혁명역사’가 새로운 교과목으로 추가되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김정일선집』,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등 도서들이 대대적으로 출판·보급되었다. 김정일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각종 신화가 창조되고, 1982년에는 김정일의 생일이 정식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85년에 나온 『철학사전』 개정판에서부터 김일성 교시문의 인용과 함께 김정일 교시문이 인용되었다.<sup>81)</sup> 김정일이 후계자로 전면 등장한 1980년대 북한 국내정치에 대해, 조선로동당 당조직의 권한이 박탈되고, 최고권력자의 자의적 권력이 지배하는 ‘제도의 무력화’로 개념 짓기도 한다.<sup>82)</sup> 하지만, 북한의 후계체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법적·제도적으로 확립된<sup>83)</sup>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실제 김정일이 국가 운영 전반에 관여한 시기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6차 당대회 이후 김정일이 경제·군사·외교 등 국정 전반에서 전략의 설계와 수립을 담당했다는 주장<sup>84)</sup>과 1982~1983년경부터 외교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sup>85)</sup> 김정일이 국가사무 대부분을 장악한 시점은 1985년부터로 1985~1994년을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sup>86)</sup>

주목할 것은 김일성이 1986년 5월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주년을 맞으며 발표한 강의록에서 김정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고 언급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의 완성을 암시했던 점이다.

당의 위업을 계승해 나가는데서 기본은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후계자문제는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입니다. 수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은 그 후계자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을 누가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 것은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당의 위업을 옳게 계승해나가기 위하여서는 후계자를 바로 내세우는것과 함께 그의

7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실무지도,” 『조선중앙년감 198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2), p. 210.

7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실무지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조선중앙년감 198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p. 124·210.

80) 『조선중앙년감 198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4), pp. 95·144.

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북한현대사 문헌연구』(서울: 백산서당, 2001), p. 233.

82) 이주철, “북한의 국가의 역사적 변천: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본 시기구분,” p. 59.

83) 김구섭·차두현,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p. 132.

84)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 p. 143.

85)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527

86) 사실상 김정일이 국가사무를 대부분 장악했던 시점이 1980년대 중반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고영환, 『평양25시』(서울: 고려원, 1992) 고영환은 김정일이 외교업무를 관장하기 시작한 것이 1985년이라고 한다. 최주환은 김정일이 1975년부터 군부 업무를 관장하여 자신을 통한 보고체계를 세웠다고 한다. 최주환, “김정일 30년 노력 끝에 군부 완전 장악,” 『WIN』(1996.6.) 황장엽은 최근 1974년부터 85년까지는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이었고, 85년부터 94년까지는 ‘김정일-김일성 공동정권’이었다고 증언한다. 황장엽, 『새천년 emerge』(1999.10), p. 92; 류길재,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p. 12, 재인용.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은 당건설에서 이 사업을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sup>87)</sup>

위의 김일성의 담화를 근거로 김정일 후계체제를 분석한다면, 공식적인 후계자 지위 확정으로만 1972년부터 1986년까지 약 15년이 걸린 셈이다.

## 2) 김정일의 ‘우리 식 사회주의’ 확립

사회주의 진영과 비동맹 운동에서 국제유리나 국제연대를 추구했던 초기와 달리 내부 불안정과 각국의 경제적 곤란은 ‘민족주의’를 부활시키는 경향을 보였다.<sup>88)</sup>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 한미일의 관계가 공고화 되고, 미·소 관계와 중·소 관계가 회복되는 추세와 반대로 북한은 비동맹 운동의 한계를 깨달았으며, 남한에 접근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들을 막을 수 없었고 북한의 대미접근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냉전이 해체되기 이전 북한의 대외관계 기초는 사회주의로 선회하는 반면에 내부에서는 ‘민족주의’, ‘애국주의’가 활발히 거론되었다.<sup>89)</sup>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김정일이 있었으며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이를 ‘우리 식 사회주의’로 완성하였다.

김정일은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sup>90)</sup>를 발표하고, 1986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sup>91)</sup>를 통해,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으로 수정하였다. 1980년대 중반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주체사상’ 체계화 작업의 핵심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역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 주체사상 개발자도 도입한 핵심적인 개념이었다.<sup>92)</sup>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사상의 변형은 민족에 대한 재정의와 함께 완성되었다. 북한에

87) 김일성,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 경험(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 1986년 5월 31일),” 안상결 외, 『조선중앙년감 198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p. 64.

88) 정치적 황무지일 법한 곳에 사회적 정착제로서 문화적 민족주의가 자라난 것은 제3세계 몰락의 원인이자 결과다. 곤경은 나름의 모순을 만들어냈다. 불만과 분노는 각국에서 동원 가능한 전통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다. 좌파가 제거된 곳에서는 가중되는 불평등에 대한 끓어가는 분노가 격렬한 증오와 폭력뿐 아니라 독재 포퓰리즘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소수자에 대한 공격 또는 반미 무장항쟁에 대한 환상이 한때 진보적 운동의 성지였던(수단과 인도네시아 같은)지역에서 자라났다. 라틴아메리카 각지에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세력들이 다시 복구하였다. 비자이 프라샤드 저·박소현 역, 『갈색의 세계사: 새로 쓴 제3세계 인민의 역사』(서울: 뿌리와이파리, 2015), p. 381.

89) “[편집국논설] 참다운 애국자의 숭고한 품모를 지니자.” 『근로자』 제1호(평양: 근로자사, 1985), pp. 9~14; 손성필, “[정치사상론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품모.” 『근로자』 제11호(평양: 근로자사, 1985), pp. 15~20.

9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김일성 70회 생일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조선중앙년감 198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 124.

9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조선중앙년감 198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p. 160.

92)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79.

서는 1980년대 이전부터 ‘맑스-레닌주의와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와 민족주의’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국제주의적 민족주의’ 등의 유사한 용어로 모순보다는 공통성을 강조하였다.<sup>93)</sup> 1985년부터 북한은 갑자기 ‘민족’ 및 ‘민족주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대대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민족’에 대한 정의에서 1970년대까지 견지하던 스탈린적 정의를 탈피하고 ‘핏줄’을 도입<sup>94)</sup>하면서, 이를 김정일의 논리로 강조하였다.

민족: 피줄과 언어, 령도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씨족공동체가 해체된 다음 사람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장구한 력사적인 투쟁과정에서 피줄과 언어, 령도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sup>95)</sup>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을 피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sup>96)</sup>

1985년 무렵 민족의 징표와 민족주의를 해설하는 논문이 대거 출판되었고, 1989년에는 206페이지에 달하는 『우리 민족제일주의론』<sup>97)</sup>이라는 단행본이 출판되기에 이르렀다.<sup>98)</sup> 1985년 8월 15일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sup>99)</sup>에서 ‘애국’이란 말을 강조하였다. 이후 1986년 7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우리 민족제일주의’론 등을 통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선전하였다.<sup>100)</sup>

따라서 발전주의적 태도를 견지했던 1960년대와 달리, 북한지도부는 수령의 교시 실행을 주요과업으로 대내외 정책 결정에 있어 신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권위주의 체제가 안정화 되어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준정치적 구조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김정일 후계자 구축은 이를 극단적으로 가속화시켜 국가안보를 정권안보와 등치시켰다고 할 수 있다.

93)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서울: 책세상, 2001), p. 123.

94) 김갑식,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민족공조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18권 제1호(2006), pp. 154-155.

95)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46.

96)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정치사전 1』(평양: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5).

97) 고영환, 『우리 민족제일주의론』(평양: 평양출판사, 1989); 송승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평양: 평양출판사, 2004).

98)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97.

99) 김정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8월 15일).”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62~266; 하지만 당시 『조선중앙년감 1986』과 1985년 9월 6일 발행된 『근로자』 제9호에서는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없다.

100) 고유환, “사회주의의 위기와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 『통일문제연구』 제7권 제1호(1995), p. 40.

## 5. ‘북한식’ 권위주의의 함의

독재정권을 포함하는 전제정치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위 관리들에 의한 배신이다. 둘째, 가장 높은 사례는 외국의 개입이다. 셋째,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이 민주봉기이다. 민주봉기가 실제 독재자 타도의 사례에서 극히 드문 이유는 성공은 분산적인 혜택을 낳지만 실패는 개인의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최악의 독재자들도 윤리라는 외관상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여 민주봉기를 억제한다.<sup>101)</sup>

북한에서 첫 번째 위험은 잠재되어 있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위험은 선군정치와 핵무장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재자가 강한 군대를 유지하면 독재자가 그 군대에 의해 타도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그 독재자가 외국에 의해 타도될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sup>102)</sup> 세 번째 위험은 실제 역사상 가능성이 낮은 사례이기도 하지만, ‘북한식’ 권위주의의 특징으로 보완되는 측면이 있다.

‘북한식’ 권위주의의 특징은 ‘현대’ 권위주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주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설명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최고지도자가 되는 ‘순간’이나 ‘사건’이 아닌 ‘기간’을 거쳤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치·경제·외교 분야의 제도와 구조를 마련하면서 변화된 이데올로기와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의 등장보다 당규약의 개정, 헌법의 수정, 조직의 변화가 선행되었으며, 경제적 정책의 이완 이전에 이데올로기의 해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사회주의 붕괴 이전 차별화된 정체성을 준비하였다. 즉 티머시 스나이더가 말한 ‘필연의 정치학(politics of inevitability)’을 주민에게 내재화 시킨 것이다.<sup>103)</sup>

비록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재적으로 김정은의 정책은 ‘현대’ 권위주의부터 ‘북한식’ 권위주의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시장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은 주민의 능동성이 약화되어서가 아니다. 반대로 김정은의 독재정치가 갑자기 강화되어서도 아니다. ‘현대’ 권위주의적 기제들을 다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권위주의 체제는 정치적 지지, 정당성 및 질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배와 동원 및 영향력 행사 기구들(병렬구조와 보조구조들)이 필요하지만, ‘현대’ 권위주의 체제가 제도화될 때 결국 보조기구들은 소멸되거나 그 규모와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아니면 병렬구조들에 통합된다고 설명하였다. 1980년대 이후, 2000년까지 북한의 권위주의는 ‘현대’ 권위주의를 넘어 ‘북한식’ 권위주의를 완벽히 구축하고 있었다.

101) 고든 탈렉 지음, 황수연·황인학 옮김, 『전제정치』(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1), pp. 32-35.

102) 고든 탈렉 지음, 황수연·황인학 옮김, p. 6.

103) 미래는 단지 더 많은 현재이고 진보의 법칙이 밝혀졌으며, 다른 대안은 전혀 없으므로 실제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이다. 이 이야기의 미국 자본주의식 판본에서는 자연이 시장을 낳고, 시장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는 행복을 낳았다. 유럽식 판본에서는 역사가 민족을 낳고, 민족은 전쟁을 통해 평화가 좋은 것임을 배웠으며, 따라서 통합과 번영을 선택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공산주의에는 나름의 필연의 정치학이 있었다. 자연은 기술을 허용하고, 기술은 사회 변동을 초래하며, 사회 변동은 혁명을 야기하고, 혁명은 유토피아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유강은 옮김,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서울: 부키, 2019), p. 30.

하지만 2010년 이후 김정은 정권에서 보여주는 여러 현상들은 ‘영향력 행사 기구들’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일 정권이 창조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수령’에 대한 ‘그리움의 정치’도 그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다시 제도와 구조가 필요하다. ‘현대’ 권위주의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이 ‘인민’을 호명하였고, 김정일이 ‘군인’을 호명한데 이어 ‘청년’을 호명하였다.<sup>104)</sup> 이러한 설명이 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의 북한을 구별하려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은 헌법에서는 ‘공산주의’를 삭제했지만, 실제 당대회 말고도 오랫동안 개최되지 않았던 모임과 회의를 부활시켰다. 대표적으로 1980년 이후로 처음 열린 조선로동당대회는 물론 사회주의적 특징을 내포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이벤트는 당-국가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의 회귀나 정상화 국가로의 전환의 근거가 아니다. 첫째,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건설된 나라이며, 아직도 혁명 중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주의적 제도와 구조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권위주의가 주기성을 띠는 현상을 포착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변화 혹은 변질의 시기는 1970년 전후이다. 이 시기의 발생한 제5차 당대회, 사회주의 헌법, 주석제, 유일사상 10대원칙, 주체사상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은 5.25 교시를 통한 과도기의 정리이다. 이 정리를 바탕으로 북한은 한편으로는 더욱 마르크스의 이념에 가깝게,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의 책무로부터 이탈가능하게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sup>105)</sup>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후자가 적극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의 모습은 전자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완되었던 시장(장마당을 포함한 사유재산 확대)의 수축(화폐개혁을 포함한), ‘혁명적 락관주의’, ‘사회주의 미풍양속(도덕)’의 강조 등이다.<sup>106)</sup>

적들의 검질긴 추격과 포위, 교활하고 악랄한 회유기만책동, 엄혹한 강추위와 모진 굶주림속에서도 우리의 항일혁명선렬들은 언제나 혁명가호를 힘차게 부르며 승리의 신심을 안고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놈들과 싸워이겼다. 불비쏟아지는 전화의 나날 화선악기를 만들어 적들을 전멸케 하였던 영웅전사들과 혁명적랑만으로 시련의 고비를 넘고헤친 천리마시대 인간들, 가는 길 험난해도 언제나 웃으며 뚫고헤쳐 고난의 천리를 행복의 만리로 이어놓았던 강계정신창조자들을 비롯한 전세대들의 가슴마다에 끓어넘친것도 다름아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 그것이 아니었던가.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인간의 생리적년령이 생활을 얼마나 락천적으로 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는것처럼 한 나라 혁명의 성패나 생명력은 혁명적락관주의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시였다. 그렇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혁명적락관주의를 더욱 높히 발휘하여야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 력사에 관통되어있는 철의 진리이다.<sup>107)</sup>

104) 황일화, “북한의 청년중시정책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05) 홍민(2006)이 주장한 1990년대 이전 북한에서 시장교환이 말살되지 않고, ‘물허’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과도기 논의를 통해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106)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년 1월 1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며 연속공격> 계획보다 많은 석탄을 증산,” 『로동신문』 2021년 1월 6일.; “편지에서 울리는 감사의 목소리” 『로동신문』 2021년 1월 21일.; “우리는 사회주의생활이 제일 좋다,” 『로동신문』 2022년 1월 23일. 등.

도덕은 집단의 화목과 단합을 이룩하고 단위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집단의 가장 큰 힘, 전진과 발전의 힘있는 활력소가 바로 도덕이기 때문이다. 도덕을 떠나서는 참다운 동지적관계, 혁명적동지애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에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울수 없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기자신보다 동지를 먼저 생각하고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을줄 아는 집단주의도덕의 체현자, 당과 국가의 고민을 풀기 위해 남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집단주의도덕관을 뼈속깊이 체질화할 때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위한 오늘의 전 인민적대진군은 더욱 가속화되게 될 것이다.<sup>108)</sup>

우선 기본적으로 짐멜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이념에 근접하는 질서가 무리 없이 실현 될 수 있는 것은 원래 소규모 집단에서이다. 작은 집단에서나 무리없이 가능한 사회주의가 세계혁명을 자신의 실현 조건으로 삼은 것은 역설적인 귀결인데<sup>109)</sup> 북한의 과도기 정리가 이에 적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시장의 축소를 통해 목표한 한 것은 시장의 말살이 아니라 불평등의 폭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짐멜이 사회주의를 통째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개인주의적 경향과 사회주의 경향 사이를 오가면서 고찰한 사회주의(최대 행복의 증진과 평등한 분배)는 불평등이 ‘근본적 불평등’으로 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sup>110)</sup>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회주의가 기본적으로 긍정적 인간상, 도덕적 인간성에 기반하여 출발점에서도 목표점에서도 전적으로 낙관주의라는 분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11)</sup>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수령’의 영도와 역사에 대한 언급을 지속하지만, 역사의 기적을 일군 주인공도, 현재의 역사를 만들어갈 주인공도, 그래서 감사의 대상으로 ‘인민’을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인민에 대해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자기 제도, 자기 생

107) “시련과 난관이 겹쌍인데도 승리의 신심 안고 웃으며 가자,” 『로동신문』 2022년 3월 3일.

108) “집단주의적도덕기풍이 선 단위에 혁신자, 위훈자 많다,” 『로동신문』 2022년 1월 14일.

109) 장춘익, “‘규제적 원리’로서의 사회주의 - 짐멜의 사회주의론 -,” 『시대와 철학』 제30권 4호(2019), p. 145.

110) 짐멜은 불평등 그 자체가 아니라 너무 큰 불평등이 고통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것, 또는 불평등의 ‘근본적 불평등’이 되지 않게 하는 것, … 위와 아래 사이의 차이를 없애지 않더라도 간격을 촘촘히 채움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짐멜에겐 가장 위와 가장 아래 사이의 간격이 좁혀질 필요는 없다. … 즉 개인에 따른 처지의 차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바로 위의 처지와 바로 아래 처지 사이의 차이가 무한히 작아지게 하는 것이다. 장춘익, “‘규제적 원리’로서의 사회주의 - 짐멜의 사회주의론 -,” p. 147.

111) 짐멜 스스로 말하듯이, “사회주의는 출발점에서도 목표점에서도 오히려 전적으로 낙관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인간상, 즉 행복과 도덕을 지향하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주의는 인구가 그런 인간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회적, 역사적 조건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강제로부터 자유롭고 “일과 동료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하게 되는 상태로 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이런 낙관주의적 경향은 워낙 강해서, 사회주의가 비관주의로 될 수는 없다. 장춘익, “‘규제적 원리’로서의 사회주의 - 짐멜의 사회주의론 -,” p. 132.

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은 없다'며<sup>112)</sup>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인민'으로 칭하고 있다.<sup>113)</sup> 물론 개인이나 가정이 아닌 국사를 우선하는 참다운 애국주의적 집단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sup>114)</sup>

김정은 정권은 '현대' 권위주의를 형성하고 '북한식' 권위주의를 다시 획득하기 위해 '현실' 사회주의가 아닌 '이념' 사회주의를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 6. 나가며

'현대' 권위주의의 확립과 발달로 북한을 보자는 제안은 북한연구가 귀납적 방법이 아닌 연역적 방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맥락과 비슷하다. 북한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주장의 엄밀성이 필요할 뿐이다. 박형중은 1990년대 중반 한국의 대부분의 북한정치연구자들이 북한체제는 다른 국가의 사회주의체제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라는 핵심 명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특수성론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였다.<sup>115)</sup> 이에 대해 이종석은 "공식문헌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수성론'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혹시 자신은 공식문헌에 대한 초보적인 독해조차 없이 무매개적으로 가장 공식적인 『경제사전』이나 『김일성저작』 혹은 에세이 수준의 2차 문헌의 언술 몇 마디로 '동구의 경험이 북한에 들어맞음'을 입증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응대하였다. 또한 "북한의 역사, 군대, 대중단체, 주민의식구조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초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이슈를 적실성 있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정보중심의 현실연구의 과잉과 역사나 구조에 대한 심층연구의 빈곤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sup>116)</sup> 필자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고유환(2015)이 제시한 북한학이 객관적 학문으로 자리잡기 위한 네 가지 과제도 '기초연구'와 '역사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117)</sup> 특히 역사연구는 '해석'보다 '실증'이 우선되어야 한다.<sup>118)</sup> 북한 연구에서 서대숙<sup>119)</sup>, 정규섭<sup>120)</sup>, 그리고 강성운<sup>121)</sup>의 지적을 늘 염두해야 한다.

112) "우리는 사회주의생활이 제일 좋다." 『로동신문』 2022년 1월 23일.

113)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상의 뜻을 조금이나마 받들고 싶습니다》." 『로동신문』 2022년 1월 20일.

114) "집단주의적도덕기풍이 선 단위에 혁신자, 위훈자 많다." 『로동신문』 2022년 1월 14일.

115) 박형중, "북한정치 연구에서 '북한 특수성론'," 『통일문제연구』 제9권 1호(1997).

116) 이종석, "탈냉전기 북한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연구의 신지평 시대."

117) 북한학이 객관적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째,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희망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방법론에 충실한 북한연구에 전착해야 한다(정세분석 지양). 셋째, 북한 기초연구와 역사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제 간 또는 다학문적 접근을 적극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유환, "북한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2015), pp. 50-51.

118) 나는 1991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사회과학자협회의 역사가들이 나와 토론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초대 책임자인 당역사연구소의 강석송 소장은 나에게 '당신의 연구는 자료에 기초해 있는 점이 좋다'고 평가해주었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원했던 것도 자료에 입각한 토론이었다.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파주: 창비, 2014), p. 4.

119) 서대숙은 조선로동당, 최고인민회의, 사상, 통일, 대외관계, 군사 및 안보, 경제발전, 사회, 법을 중심으로 1946년부터 2002년까지 북한의 각종 공식 문헌 중 가필과 수정이 가해지지 않은 1차 사료만을 엄선하여 총 6권의 책을 펴낸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서대숙은 북한 정권이 1930년대 당시 출판했다고 주장하는 50여개의 문헌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1970년대에 가공되어 출판되었던 것이라고 지적



그리고 북한의 4대 세습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이 아닌 이런 의문을 연구 주제로 삼아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화의 진전이 가하는 정치도덕적 압력을 이겨내고 북한 인민을 자립적이고, 집단주의적이며, 이타적인 인간으로 끝내 개조해낼 수 있을까?”<sup>122)</sup>

본 연구는 ‘현대’ 권위주의 체제로 북한을 분석하는 것을 심화하기 위해 ‘북한의 선거’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교착되는 지점’에 대한 연구를 후속과제로 이어갈 예정이다.

---

하고 이 문헌들을 분석에서 배제했다.

120) “조선로동당 당기의 마크를 ‘낫 붓 망치’로 기록하는 학자와는 말도 하지 말라.”

121) “5.25 교시를 모르는 북한연구자는 북한을 정확히 모르는 연구자이다.”

122) 김진환, “천리마 운동: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제20권 2호(2016), p. 57.

[참고문헌]

- 강진웅, “북한연구와 질적 방법론의 활용,” 『아세아연구』 제58권 1호, 2015.
- 고든 툴록(Gordon Tullock) 지음, 황수연·황인학 옮김, 『전제정치』,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1.
- 고영환, 『우리 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 고유환, “북한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 , “사회주의의 위기와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 『통일문제연구』 제7권 제1호, 1995.
-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정치사전 1』, 평양: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5.
- 구갑우, “지식사회학과 북한연구방법론,” 장달중 편, 『현대북한학 강의 제1판』, 서울: 사회평론, 2013.
- 권헌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파주: 창비, 2013.
- 김갑식,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발전: 민족공조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6.
- 김구섭·차두현,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 김연각, “북한 국가의 성격: 기존 논의의 검토와 제언,”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2호, 2006.
- 김연철, “김정일이 주도하는 김일성 없는 김일성 체제,” 『월간 사회평론 길』 제95권 2호, 1995.
- ,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 , “북한의 국가성격과 북핵 및 남북관계의 지정학,” 『동북아교통물류지역연구 시리즈』, 한국교통연구원, 2017.
- 김윤희,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6권 2호, 2016.
- 김은주, “권위주의적 생존의 역학-벨라루스 루카셴코 정권의 국내외 변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김응서,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외교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 경험(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돛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 1986년 5월 31일),” 안상걸 외, 『조선중앙년감 198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김일성 70회 생일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조선중앙년감 198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 ,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8월 15일).”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조선중앙년감 198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 김진환, “천리마 운동: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2호, 2016.
- 노현중, “북한 사회주의 신정체제의 종교사회적 기원,”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집 4호, 2016.
- ,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을 통해 보는 북한체제: 유용성, 개념활용 그리고 구조화된 비교,” 『2022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22.
- 뤼디거 프랑크, 『북한: 전체주의 국가의 내부관점』, 서울: 한겨레출판사, 2020.
- 류길재,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北韓研究學會報』 제3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1999.
- 박아름, “1962년 북한의 ‘사회주의 국제분업’ 이달 분석,” 『역사문제연구』 제45권, 2021.
- 박형중, “북한정치 연구에서 ‘북한 특수성론’,” 『통일문제연구』 제9권 1호, 1997.
- 박형중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박희진, “북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순과 사회의 혼종,” 『북한학연구』 제17권 1호, 2021.
- 비자이 프라샤드(Vijay Prashad) 저·박소현 역, 『갈색의 세계사: 새로 쓴 제3세계 인민의 역사』, 서울: 뿌리와이파리, 2015.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서진영·류길재, “김일성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초국가적 관계, 국내정치구조, 대외정책 변화의 동학,” 『아세아연구』 제40권 제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7.
- 석승용, “북한의 대내정책과 대소정책의 상관성에 대하여-로제나우의 연계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손성필, “[정치사상론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품모.”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1985.
- 송승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 평양: 평양출판사, 2004.
- 아모스 펄뮤터(Amos Perlmutter) 지음·김문조, 임현진 옮김, 『현대국가와 권위주의』, 서울: 정음사, 1986.
- 양문수, “1970년대 북한 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 2003.
- 오경섭, “권위주의 지배의 정치,” 『KINU 통일+ 연구 동향과 서평』, 통일연구원, 2016.
-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파주: 창비, 2014.
- 유성현·남궁영, “북한의 국가성격연구: 서지학적 접근,”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집 3호, 2020.
- 윤철기, 『북한 계획경제의 정치학』, 서울: 선인, 2021.
- 이종석, “북한체제의 성격규명: 유일체제론의 관점에서,” 『현대한국정치론』, 사회비평사,

- 1996.
- , “탈냉전기 북한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연구의 신지평 시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27: 한국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5』,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7.
- ,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 『북한의 역사 2』, 서울: 역사비평사, 2011.
- 이주철, “북한의 국가의 역사적 변천: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본 시기구분,”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서울: 한울, 2001.
- 이창희, “북한 경제의 재고찰과 시사점,” 서보혁 외 엮음,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 서울: 선인, 2015.
- 임현진, 『제3세계 연구: 종속, 발전 및 민주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장명봉, “공산주의의 정당론과 공산당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헌법상 공산당의 우위성 보장과 관련하여,” 『법학논총』 제6집, 1984.
- 장윤미, “중국 공산당의 사회건설 구상: ‘군중노선’과 새로운 ‘인민’ 주체의 창조.” 『현대중국연구』 제23권 2호, 2021.
- 장인숙, “1970년대 북한의 발전위기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 2011.
- 장춘익, “‘규제적 원리’로서의 사회주의 - 짐멜의 사회주의론 -,” 『시대와 철학』 제30권 4호, 2019.
-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 서울: 책세상, 2001.
- 정주영,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3호, 2019.
- 정창현, “1967년 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 김정일 연설-김정일 후계체제의 서막,” 『역사비평』 제112호, 2015.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조수룡,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립과 소련의 개입-말렌코프 ‘신노선(New Course)’의 영향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1권 제3호, 2018.
-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최광승, “박정희 유신체제와 헤게모니 권위주의 정당성: 성역화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통일연구원 편, 『독일지역 북한기밀문서집』, 서울: 선인, 2006.
-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유강은 옮김,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서울: 부키, 2019.
- 표윤신·허재영,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정·군 현지도 네트워크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3호, 201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북한현대사 문헌연구』, 서울: 백산서당, 2001.
- 헤이즐 스미스 지음·김재오 옮김, 『장마당과 선군정치: ‘미지의 나라 북한’이라는 신화에 도전한다』, 파주: 창비, 2017.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 홍 민, “북한의 시장교환 질서와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 황일화, “북한의 청년중시정책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편집국논설] 참다운 애국자의 숭고한 품모를 지나자.” 『근로자』 제1호, 평양: 근로자사, 1985.
- 『정치 경제학 참고자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Bastian Herre, “In most countries, democracy is a recent achievement. Dictatorship is far from a distant memory. How old are democracies across the world?” 『Our World in Data』(February 03, 2022), <https://ourworldindata.org/democracies-age> (검색일: 2022. 08.15).
- Brooker, Paul. *Non-Democratic Regim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 G. 사르토리((G. Sartori) 지음·이행 옮김,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I』, 경기: 인간사랑, 1999.
- Geddes, Barbara, Wright, Joseph and Frantz, Erica,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New Data,”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2 (2), 2014,
- Geddes, Barbara.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1999.
-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Juan J. Linz, ‘An Authoritarian Regime: The Case of Spain’, in Erik Allardt and Yrjö Littunene (eds), *Cleavages, Ideologies, and Party Systems: Contributions to Comparative Political Sociology* Helsinki: The Academic Bookstores, 1964.
- Juan J.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 Wahman, Michael, Teorell, Jan and Hadenius, Axel. “Authoritarian Regime Types Revisited: Updated Data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temporary Politics*. Vol. 19. No. 1, 2013.
- 『조선중앙년감 198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2.
- 『조선중앙년감 198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 『조선중앙년감 198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4.
- 『로동신문』
- “June 29, 1964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794> (검색일: 2021.02.09.)

제4회의

# 북한체제의 기원, 동태성, 미래

사회: 김영미(국민대학교)



# 한국인의 통일외식에 있어 결정요인 분석

피터 워드(빈 대학교)

# 한국인의 남북통일방식에 대한 의식적 결정요인 분석

컨조인트 분석 조사를 중심으로

Peter Ward, 비엔나 대학교 박사  
Steven Denney, 비엔나 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Christopher Green, 레이던 대학교 지역학연구소 교수

## 개요

- 기존연구와 이론
  - 기존 방법론
  - 정치갈등, 세대별, 편익계산, 시계열적 분석
- 기존 이론을 검증해주는 방법론
  - 통일은 선택의 최적화 문제
  -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어느 조건이 나은지
- 조사결과
  - 정치진영간의 분열
  - 세대간, 성별 간 등의 통합



## 기존 연구의 방법론

문 2)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1. 매우 필요하다    | 2. 약간 필요하다    |
| 3. 반반/보통이다    |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문 4)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5년 이내  | 2. 10년 이내 |
| 3. 20년 이내 | 4. 30년 이내 |
| 5. 30년 이상 | 6. 불가능하다  |

○ 국가통일편익: "귀하는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개인통일편익: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 5점 척도로 측정(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 4=다소 동의; 5=매우 동의)
- 위 문장에 대한 부정응답을 "민족주의 통일관", 긍정응답을 "탈민족주의 통일관"이라고 코딩하여 위의 그래프를 작성함.

## 기존 연구 이론

- 정치갈등 측면, 특히 보수-진보 간의 통일의식차이
- 세대별 통일의식차이
- 편익계산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론론
- 우발적 요소 등 시계열적 분석

## 기존 방법론과 이론의 한계

- 문항별 이변수적 기술통계분석
- 하나의 문항을 종속변수 (통일 필요성 등) 특정 독립 변수의 영향 검증 (단순 가설검증)
- 연령대, 세대, 시계열적 효과, 편익계산 인식 등을 하나의 문항으로 축소하는 경우
- 기존 조사방법론을 통해 조건부 통일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확인할 수 없음

## 컨조인트 분석 [설명]

- 다변량기법 (multivariate technique); 어떠한 자극물의 각 속성 (attribute)에 대한 선호도 파악 목적
  - 프로필에서 나타난 각 속성의 수준 (attribute level)은 독립변수로서 어느 자극물을 선택할 확률 (종속변수)에 영향미친다는 가정.
- 우리의 자극물은 대한민국 전 국민 투표 실시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 속성 총 8개.
- 각 응답자는 자극물 2개씩 8번에 거쳐 양자택일하고 7점수 척도로 반대-찬성의 정도도 가라킴

## 컨조인트 분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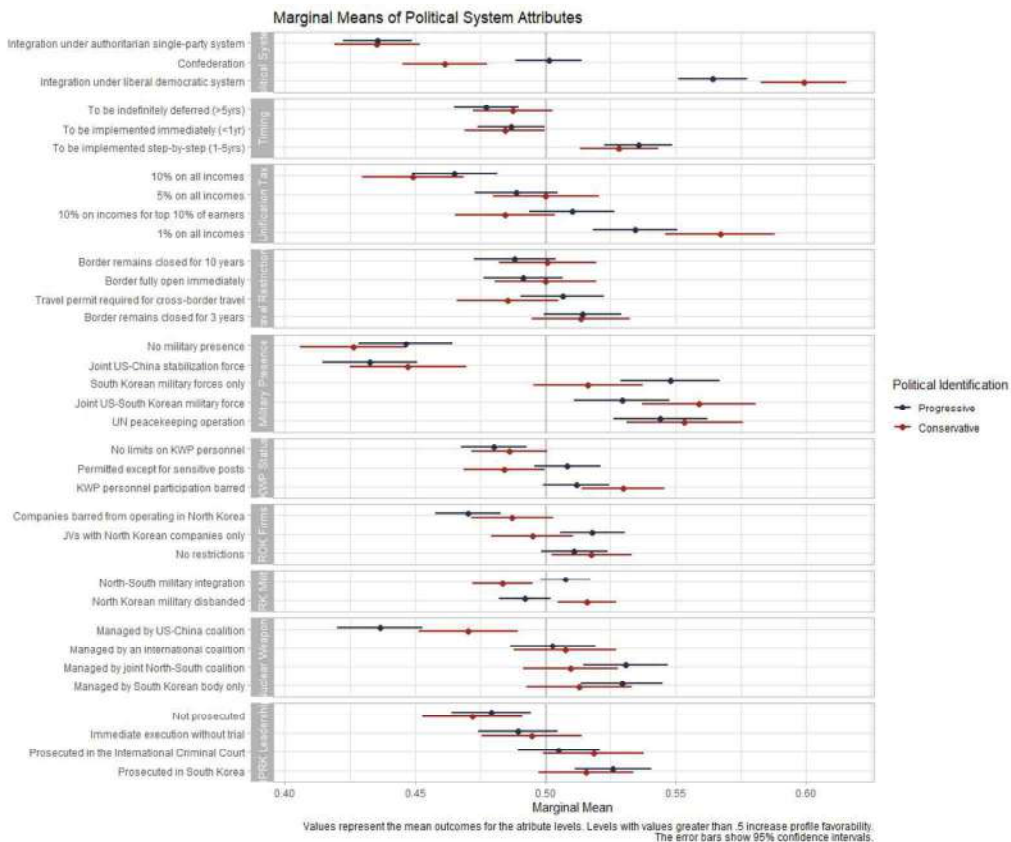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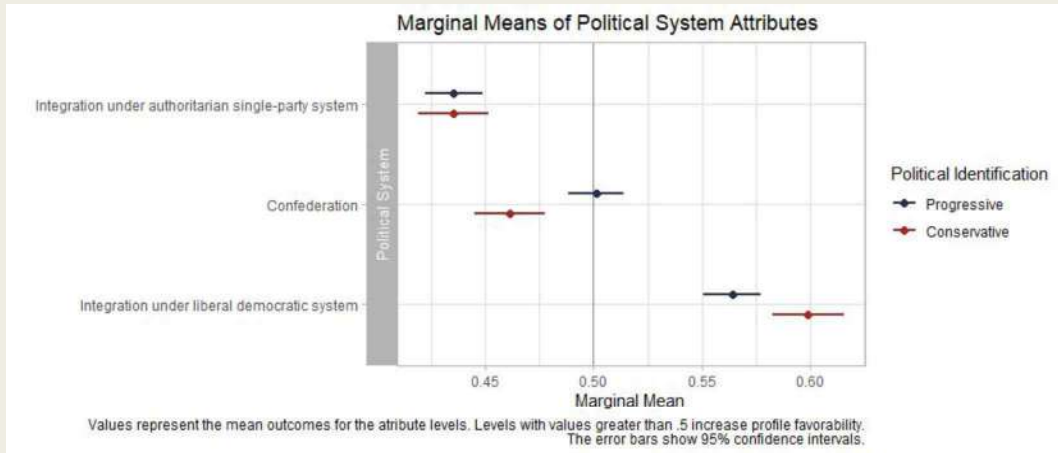
	시나리오 A	시나리오B
통일 후 정치 체계	연방제통합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남북 통합
이행 기간	즉시 이행(1년 미만)	단계별 이행(1~5년)
통일세	국민 전체 소득의 5%	국민 전체 소득의 1%
남북 이동 제한	광범위하게 즉시 완전 개방	국경을 넘는 이동에 대한 허가 필요
북한에 군대 주둔	군대 부재	UN 평화유지군
새로운 정치 체계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참여	조선노동당원에 대한 제한 없음	조선노동당원의 참여 금지
남북 경제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북한 기업과의 합작투자에만 기업 허용	제한 없음
북한군 상태	북한군 해산	남한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 통합
북한 핵무기	미국 및 중국 연합에서 관리	한국 기관에서만 관리
북한의 리더십	기소 없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
두 개의시나리오 중 어느 것을 선호 하십니까?	시나리오 A	시나리오 A

시나리오 A	1	2	3	4	5	6	7
시나리오 B	1	2	3	4	5	6	7

## 속성 수준 및 주요 결과

- 통일 비용과 관련, 정치진영 간/성차/세대 간의 유의한 결과 X.
  - 저렴할 수록 좋고 최상 10% 소득계층에 집중하지 말 것.
- 과거사 청산과 통일 이후 정치 체제에 있어 각 계층 간의 차이 X.
  - 국제재판을 통한 지도부 정리 + 민감한 직책에 노동당 당원 금지
- 통일 이후 북한 군대 주둔 찬성
  - 중국 참여 반대.
- 유일한 차이는 정치 진영 간에
  - 연합제 (진보) 및 자유민주주의 하의 단일통일 (보수) 찬성도
  - 양측 일당독재 하에서 통일 실현 반대.

# 진보-보수 간의 통일한국 정치체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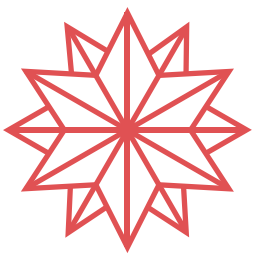


## 이론적-정책적 합의

- 정치진영 간의 주요 차이점 (단일-연합 문제)
  - 여기서 각 진영 유권자들에게 연합제의 의미를 더 심층적 파악 필요.
- 편익계산 (분배 공정성 문제)
  - 모든 납세자 소득세의 1% 증가라는 찬성도가 가장 높음. 통일비용 인식 전환 문제가 제기될 수도.
- 노동당과 지도부 정리 문제 (과거사 청산 문제)
  - 앞으로 '친 김파'의 인식 파악과 정책적 시사점을 고민해야 할지도
- 갈등과 분열보다 통일 방식에 있어 거의 모든 차원에서 세대간, 정치진영간, 그리고 성별 간의 합의가 실현 가능

감사합니다!!

# 가짜 김일성론의 흥망사



표도르 짜르치즈스키(국민대학교)

# 가짜 김일성론의 흥망사

표도르 짜르치즈스키(이휘성)  
국민대학교 학국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가짜 김일성론의 내용

- 1937년 6월 4~5일 보천보 전투를 지휘한 김일성과 북한 지도자 김일성은 같은 인물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라는 음모론



북괴 수령 김성주 (1940)



제2방면군장 김일성 (1937)



#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쓴 사람들

- 첫 번째 김일성(金一成, 1888~1926)
  - 함경도 단천군 출신 구한말 빨치산 지휘관
  - '김일성'은 본명이었을 가능성 있음
- 두 번째 김일성(金一星)
  - 본명 김봉환(金奉煥)
  - 김좌진을 암살한 사람
- 셋 번째 김일성(金日成)
  - 본명 김현충(金顯忠), 가명 김광서(金光瑞), 김경천(金擎天), 김일성(金日成)
  - 일본 육사 출신, 기병소위 임관
  - 내전시에 러시아 이주, 고려인 강제 이주 당함, 수용소에서 사망
- 넷 번째 김일성(金日成)
  - 본명 김성주(金聖柱)
  - 1930년대 만주항일운동 지휘관
  - 북한 지도자



# 1930년대에 북한 김일성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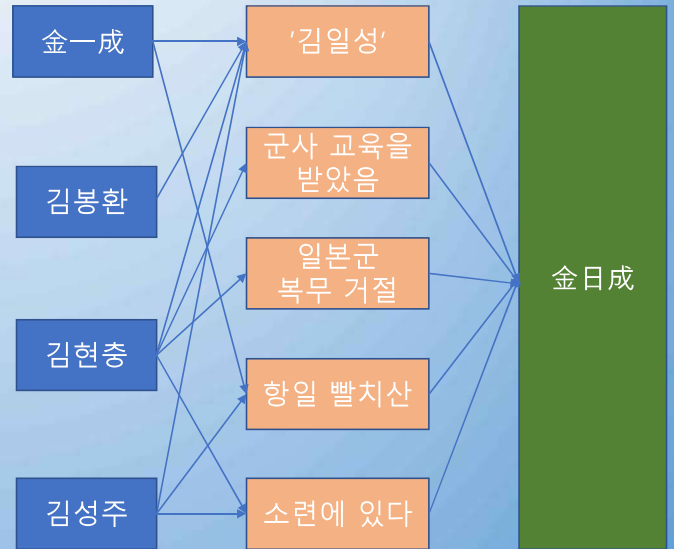
- 망명자의 아들, 만주 거주자
- 1931년에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한 후 빨치산 부대에 입대, 김일성으로 개명
- 왕더린의 중국 국민 구국군에 입대한 후 중국공산당 부대에 소속
- 1930년대 후반 직위:
  - 제3연대 참모장, 정치위원
  - **제6사단 사단장**
  - 제1집단군 제2방면군 사령관

김일성(金一星)의 활동 기록 (1930년대 후반)	
1. 1931년 11월 14일	만주에서 활동하는 빨치산 부대에 입대하여 김일성으로 개명함.
2. 1932년 1월	중국 국민 구국군에 입대하여 왕더린의 지도 아래 활동함.
3. 1933년 1월	중국공산당 부대에 소속되어 활동함.
4. 1934년 1월	제3연대 참모장, 정치위원 직책을 맡음.
5. 1935년 1월	제6사단 사단장 직책을 맡음.
6. 1936년 1월	제1집단군 제2방면군 사령관 직책을 맡음.



# 1940년대 초반 조선반도에서 김일성에 대한 인식

- 1944년 경성지방법원 판결
  - 피고인의 주장: 일소(日蘇) 개전에서 일본이 패배하면 그것을 기회로 김일성(金日成)이 여러 명의 부하를 모두 모아 조선에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다
- 1945.8.16
  - "동진공화국" 선포: 이승만 대통령, 김구 총리대신, 김일성(金日成) 육군대신(陸軍大臣), 외교대신 여운형
  - "金日成 外大"
- 조선인민공화국 전국인민위원회
  - 55명 중 한 명 金日成
- 1945.10.14 민중일보 보도
  - 김일성은 "병학(兵學)을 수(修)하였다(배웠다). 제국주의 시대의 장교되기는 싫어하였다"



## 가짜 김일성론의 1단계: 소문

- 최태응, 金日成 氏에게, 『大潮』, 1949년 4월호, 37~40쪽.
  - 실상 김일성 장군이라면, 어쨌든 그 이름이 떨친 바 무용담보다도 오래된 역사성이 노상 우리의 인식 속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물론 소련의 한개 주졸인 동시에 먼저 나이에 있어서 삼십을 갓 넘은 애송이 金日成이인 당신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 李北, 『蘇聯의 傀儡 金日成 偽造史』 (서울: 三八社反共教育新聞社, 1950).
- 鎌田澤一郎, 『朝鮮新話』 (東京: 創元社, 1950).
- 吳泳鎭, 『蘇軍政下の 北韓: 하나의 證言』 (서울: 中央文化社, 1952).
- 金昌順, 『歷史의 證人』 (서울: 亞細亞反共聯盟, 1956), 67~78쪽.
- 金昌順, 『北韓十五年史』 (서울: 知文閣, 1961), 55~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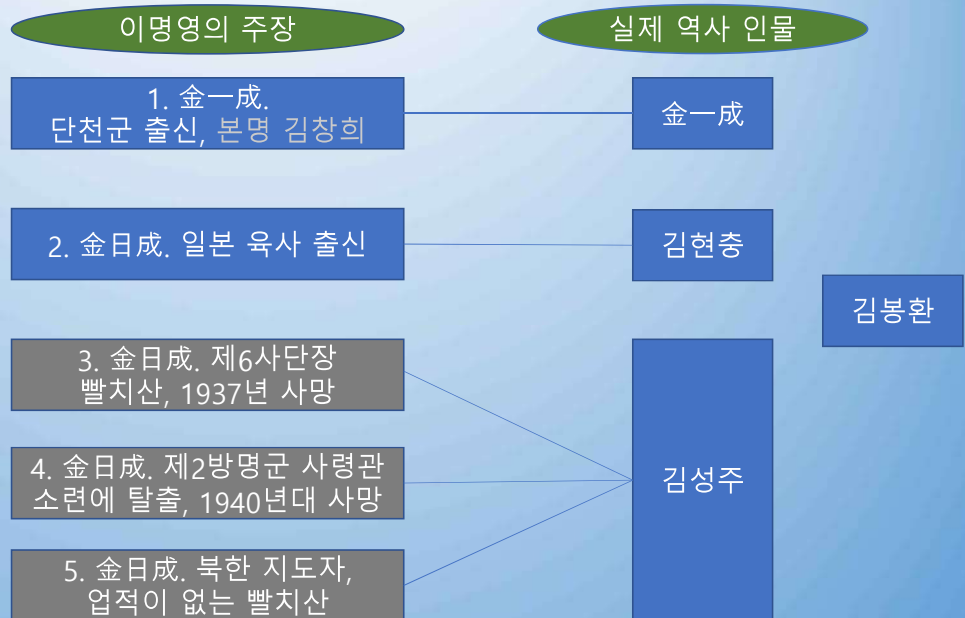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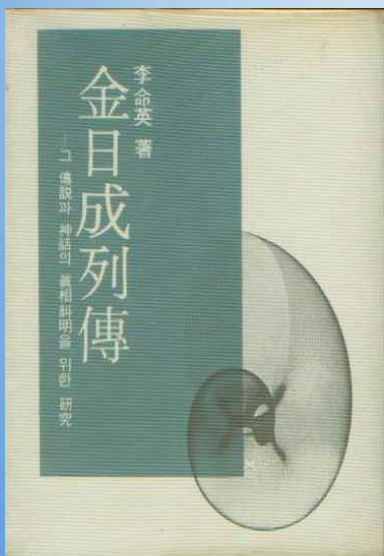


## 가짜 김일성론의 2단계: 가설 반증과 1인 투쟁

- 1960년대에 김일성 전기 연구자, 가짜설 반증
  -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北韓總覽: '45~'68』, (서울: 共產圈問題研究所, 1968)
- 60~70년대, 성균관대 이명영 교수, 가짜설 지지 캠페인 개시



## 이명영의 '5인 김일성'론



# 가짜 김일성론의 3단계: 음모론

- 가짜설을 완전 반증하는 사료 발견
  - 咸鏡南道國境地帶思想淨化工作概況, 《思想彙報》, 第20号, 1939年 8月 31日, 7-41頁
  - 김일성 이력서(Личное дело Цзин Жи-чена)
- 중국, 소련 관계자, 가짜설 부인 증언
- 2000년 이명영 사망 후 한국 극우 세력은 가짜설을 계속 지지

사상  
후보

이력서(Личное дело Цзин Жи-чена)의 일부 내용. 김일성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다.

김일성  
이력서

일련번호	내용	비고
1	咸鏡南道國境地帶思想淨化工作概況	1939年 8月 31日
2	김일성 이력서	1939年 8월 31일
3	김일성 이력서	1939年 8월 31일
4	김일성 이력서	1939年 8월 31일
5	김일성 이력서	1939年 8월 31일
6	김일성 이력서	1939年 8월 31일
7	김일성 이력서	1939年 8월 31일
8	김일성 이력서	1939年 8월 31일
9	김일성 이력서	1939年 8월 31일
10	김일성 이력서	1939年 8월 31일

진짜 김일성, 81년 전 전사...북한 김일성은 가짜

남조선 최대 '혁명당론'을 펴는 나라 대한민국

## 부록

## 북한 정치사 속 동명이인



김일  
총정치국 부국장



김일  
정무원 총리



강상호 중장  
빨치산 출신



강상호 중장  
내무성 부상

## 가짜 김일성론과 대한민국의 국가 반공주의

- 이명영은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의 요원이라는 주장까지 있음
- 다만, 이 것은 사실이 아닌 듯
- 공산권 문제연구소, 안기부 관계자들은 가짜설 부인
- 金炯旭(김형욱), 『회고록』, 제2권. (서울: 아침, 1985): 가짜설을 직접 부인



감사합니다



제5회의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사회: 박종철(대전대학교)

# 김정은 집권 후 금융 부문 변화:

✧분권화인가 집권화인가?

최재헌(동국대학교)

김미연(이화여자대학교)

# 김정은 집권 후 금융 부문 변화

: 분권화인가 집권화인가?



## 목 차

I |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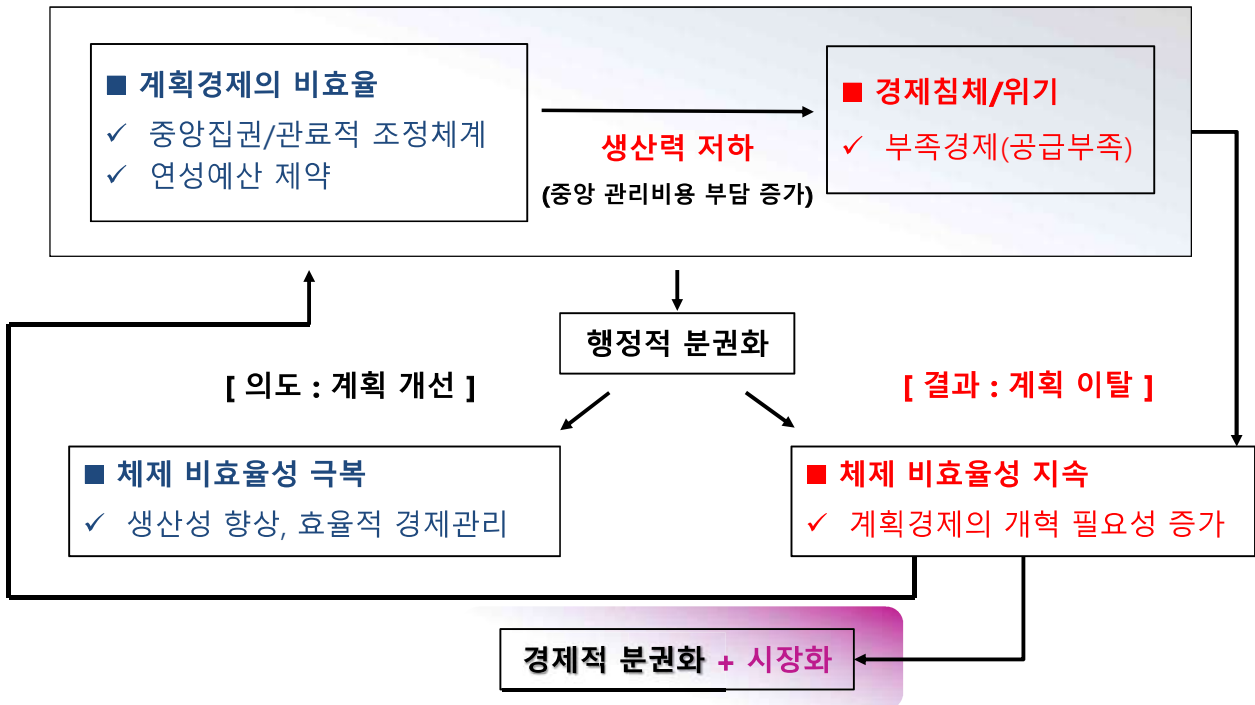
II | 북한의 금융 부문 연구 경향

III | 금융 측면에서 본 경제 변화

IV | 결론 및 시사점



##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분권화 과정



자료 : 이무철(2006),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 경향과 정책적 대응”

## “주안점 둘(2)”

## 사회주의 경제개혁

권한 배분 정도 | 시장화

1 Step

• 분권적 의사결정구조



2 Step

• 소유의 독점 완화



3 Step

•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 “경제적 분권화 양상

#. 권한 분산 < 권한 위임 < 권한 이전

- 지방 및 기업단위 책임 확대
- 간접적 통제수단으로 시장 활용
- 시장화를 통한 경제/제도적 개혁

# 금융 부문 주요 작동 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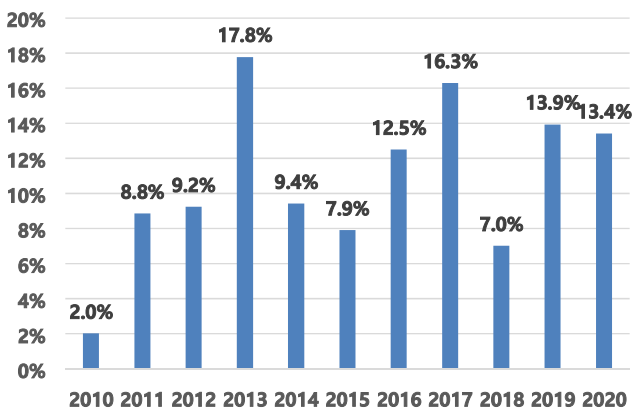


## II. 북한의 금융 부문 연구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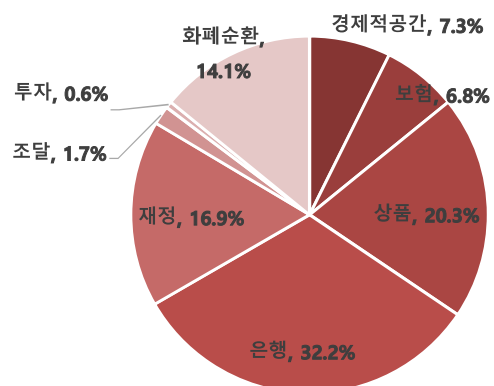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10~'20년) 『경제연구』 게재 논문 수록 추이

- 총 1,585편 중 금융 관련 주제는 177편으로, 전체 게재 논문의 약 10.8%
- 시기별 금융 관련 논문 증감 추이 시현('13년, '16년 이후 대체로 증가)
- 주제별로는 은행(57편, 32.2%), 상품(36편, 20.3%), 재정(30편, 16.9%), 화폐 순환(25편, 14.1%), 경제적 공간(13편, 7.3%), 보험(12편, 6.8%), 조달(3편, 1.7%), 투자(1편, 0.6%) 순

금융 관련 주제 게재 논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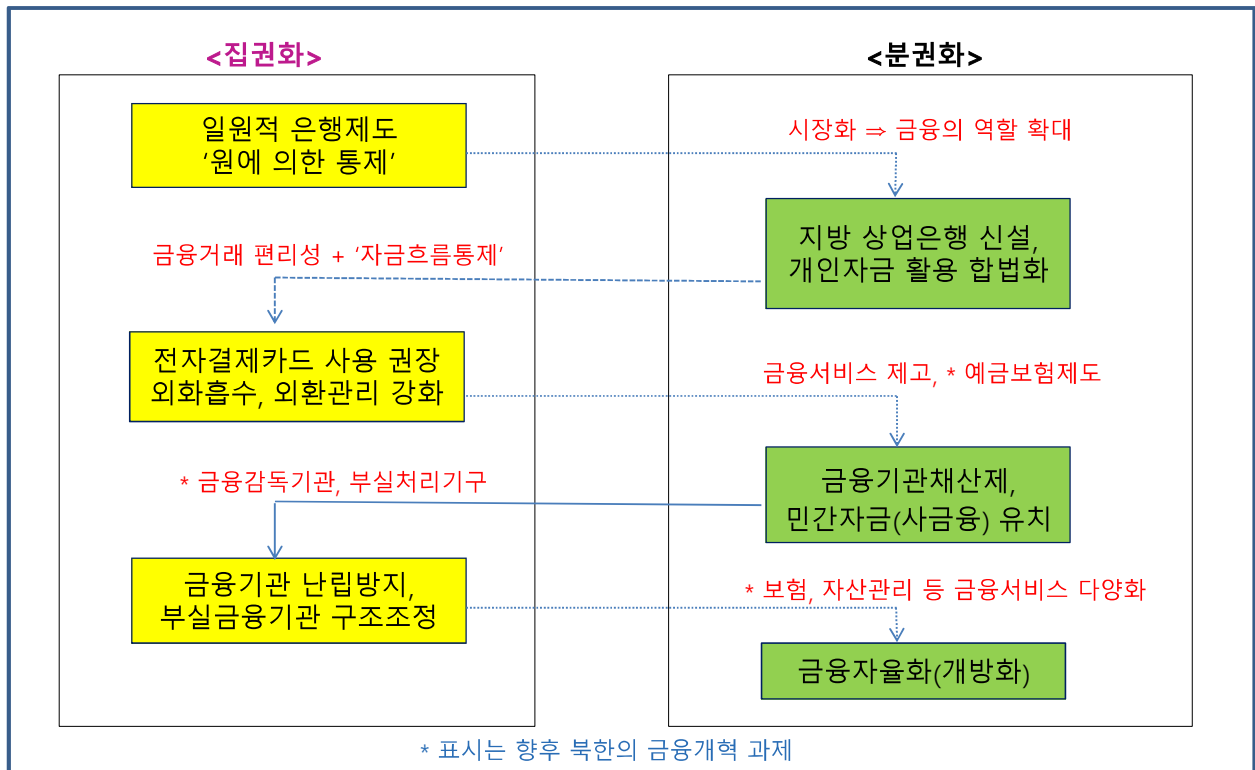
금융 부문 세부 주제별 게재 논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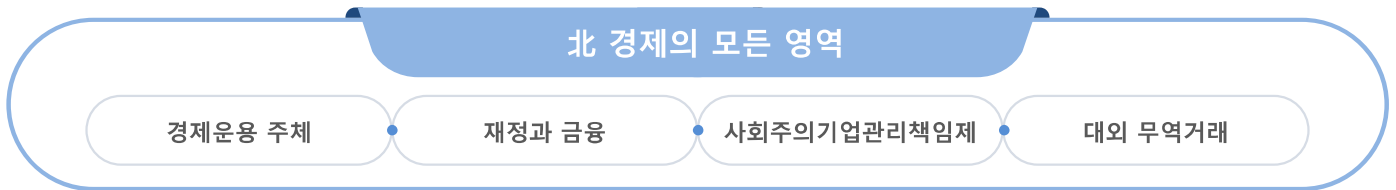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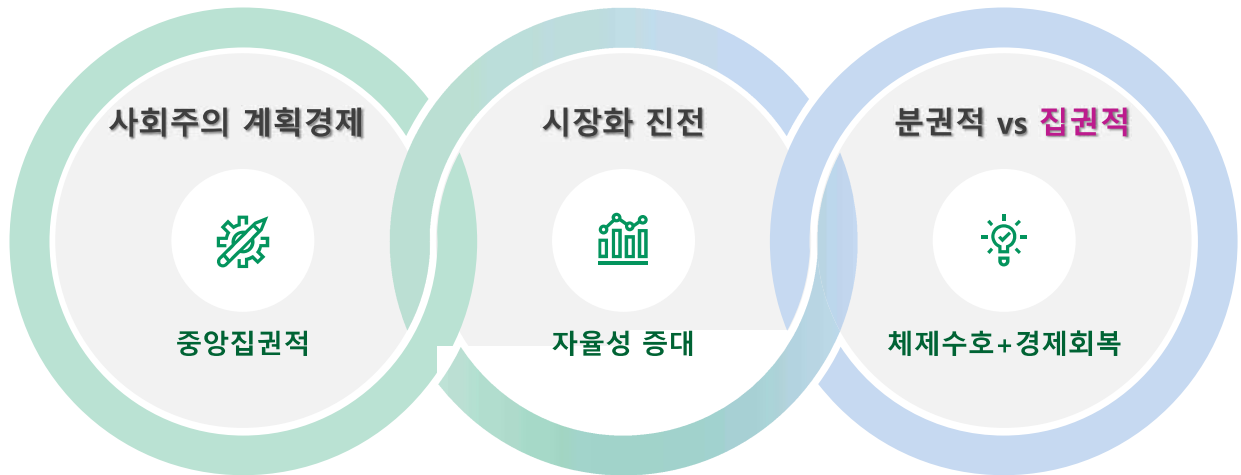


구분 <sup>2022</sup>		관찰 요소(분권적 / 집권적 / 이중적)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금융(은행) 연계</li> <li>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관리 정보화</li> <li>재정 통제 강화</li> </ul>		
금융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휴화폐의 기능화폐 전환</li> <li>신용업무 확대</li> <li>국제은행 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동통신망을 통한 금융 서비스 활성화</li> <li>금융기관 채산제</li> </ul>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업무 정보화</li> <li>재보험거래 다양화</li> <li>보험종류 다양화(선주책임보험, 관광보험, 생명보험, 혼합보험 등)</li> </ul>	-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기회분석(시장 수요·공급 기반)</li> </ul>	-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상품 다양화(증권, 선물, 옵션, 통화교환, 금리교환, 신용채권 등)</li> </ul>	-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T(Build-Operate-Transfer) 활용 인프라 건설</li> <li>외국투자 활용 원칙</li> </ul>	-	
화폐 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휴화폐자금 동원</li> <li>외화관리사업 개선</li> <li>지방 자체 외화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폐수지균형표 등 화폐유통 규모 파악</li> <li>현금유통 규율 엄격화</li> <li>통화안정 보장을 위한 금융 관리 (현금보유한도 규정 등)</li> <li>전자화폐(은행카드) 이용</li> <li>저금사업 정보화</li> </ul>		
경제적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과정에 작용하는 도구(가격, 원가, 이윤, 상금 등)</li> </ul>	-		

### III. 금융 측면에서 본 경제 변화

• 분권화 vs 집권화





01 일원적 은행시스템 탈피

- 중앙은행법 개정('15년)
- 상업은행법 개정('15년)

02 전자결제수단 도입

- 영수증법 제정('21년)
- 전자결제법 개정('21년)

03 금융정보 교류사업 참여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법 제정('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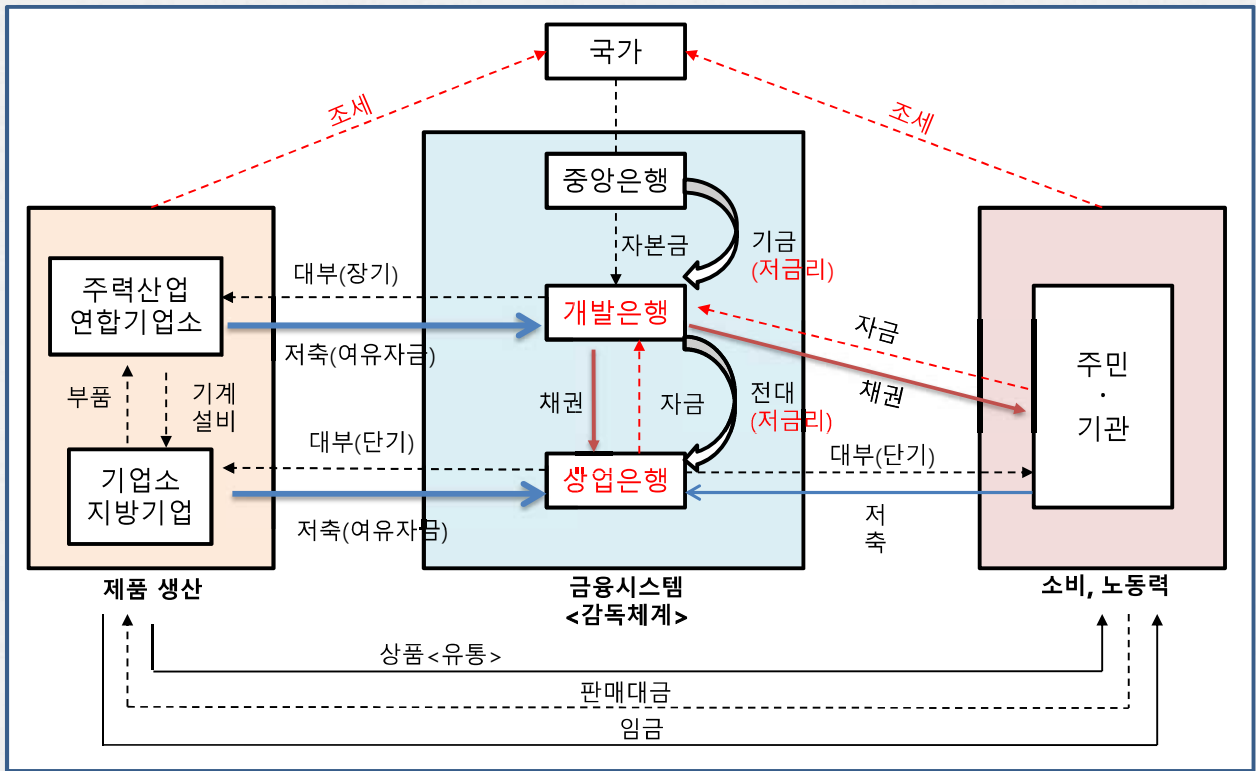
04 한계점

- 공공융에 대한 불신
- 예금 규모 부족
- 계획경제 유지
- ☞ 상업은행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미흡

제도적  
뒷받침

# IV. 결론 및 시사점

## • 북한이 구축해야 할 산업자금 순환 시스템



## • 단계별 금융개혁 과제



개혁단계	금융제도 개혁	금융기관 개혁
(1단계) 다원화	이원적은행제도의 실질적 도입	- 상업은행 경영 활성화 * 예금보험제도 및 신용보증제도 도입 - '개발은행'의 설립·운영
(2단계) 자유화	금융 감독기능 강화	- 상업은행 설립 자유화 (국영, 합작 등) - 보험 상품별 보험사 신설
(3단계) 구조조정	부실채권 정리계획 수립	- 부실전담기구(배드뱅크) 설치
(4단계) 자본확충	자본시장제도 도입을 통한 자금조달 다양화	-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및 외화자금 도입
(5단계) 사유화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 국영상업은행의 지분매각

감사합니다. ☕



# 대북제재 장기화와 북한의 재정·금융제도 변화

최지영(통일연구원)

# 대북제재 장기화와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

2022.12.9

통일연구원

최지영

본 연구는 2023년 1월 발간 예정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최지영, 양문수, 이해진 공저, 통일연구원, 2022)의 4장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 발표순서

- 전체 연구 소개
- 대북제재 장기화와 북한 재정여건
- 재정제도 변화
  - 2020년 최고인민회의 예산 보고
  - 2021년 최고인민회의 예산 보고와 제8차 당대회 논의 내용
  - 2021년 재정법 개정
  - 2022년 최고인민회의 예산보고
- 금융제도 변화
  - 강제저축 확대
  - 전화돈 사용 제한
  - 중앙은행 돈표 발행
- 대북제재 장기화와 북한 재정금융 제도 변화의 특징



# 전체 연구소개

## ▪ 목차

- I. 서론
- II. 사회주의 재정금융 제도와 북한
- III.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
- IV. 대북제재 장기화와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 V. ‘경제연구’를 통해 본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서울대 데이터마이닝센터 이해진 박사과 공저)
- VI. 결론

# 전체 연구소개

## ▪ 2022년 수행 연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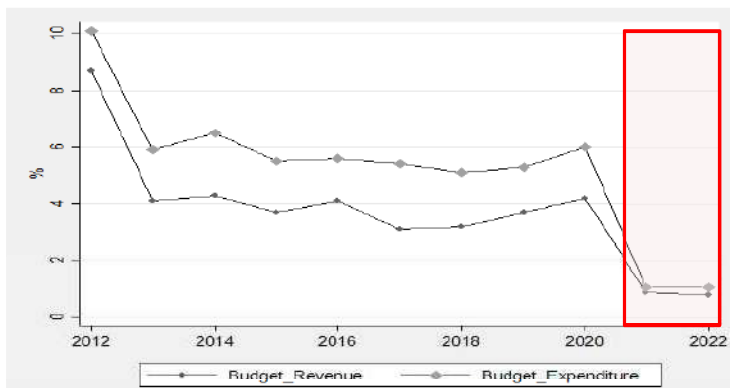
### ▪ 연구목적:

- 현실 사회주의 경제의 재정금융 개혁은 재정과 금융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분담되는 과정
  - 재정개혁과 금융개혁은 상호 연계
  - 국가의 재정부담 축소(재정개혁) →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배분 확대(금융개혁)
- 현실 사회주의 재정금융 개혁 과정에 비추어 김정은 집권 이후 재정금융 제도 변화를 분석
  - 김정은 집권 초기 재정금융 제도 변화: 기업의 재정관리권 부여, 지방예산제 강화, 상업은행의 조직적, 기능적 분리
  - 대북제재 장기화와 재정금융 제도 변화: 국가예산수입 변화, 재정법 개정, 금융정책 변화 등
- 경제연구 텍스트마이닝: 김정은 집권 이후 재정금융 제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
  - 김정은 집권 초기 재정금융 제도 변화는 주로 공간문헌에 대한 “정성적” 분석에 근거
    -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정량 분석으로도 기존 주장들이 확인되는지 검증

# 대북제재 장기화와 재정금융 제도 변화

## 배경

-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 국경봉쇄: 무역충격
  - 1) 무역회사의 이익 감소, 2) 국내 생산 악화→ 기업소 수익성 악화
  - 국가재정의 분열: 당, 군, 특수기관, 내각의 재정 전체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
- 국가예산 규모의 증가율 둔화가 관찰(2021-2022년)



출처: 노동신문, 재인용: 홍민 외(202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분석, 온라인시리즈 22-05, 통일연구원, <그림1>

# 대북제재 장기화와 재정금융 제도 변화

## ■ 재정제도 변화

➢ 재정법 개정, 당대회, 당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의 발표 등 공식문헌을 통해 제도 변화가 관찰

	2020	2021	2022
최고인민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업이익금, 거래 수입금 증가율 둔화</li> <li>■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 예산동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단위에서 예산수입을 달성하지 못함을 지적</li> <li>■ 지방예산집행의 결함 지적</li> <li>■ 예산증가율 1%대로 둔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업(협동단체)이익금→ 국가기업(협동단체)리득금으로 명칭 변화</li> <li>■ 농업 부문 예산 항목 별도 구분</li> <li>■ 집금수입 6.8배 증가</li> </ul>
당대회 당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공간의 이용 강조</li> <li>■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한 확대(재정에 대한 검열과 통제에서, 당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12월말)</li> <li>■ 농촌발전 강조</li> <li>■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협동농장 미상환대부 탕감 조치 발표</li> <li>■ 국가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의견 전달</li> </ul>
재정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기업소, 단체의 예산납부 방식 변경</li> <li>■ '재정관리권'과 경영자금 손실 보상 강조</li> <li>■ 중앙예산의 부문 예산제 실시</li> <li>■ 재정통제 강화</li> <li>■ 재정업무의 전문성 강화</li> </ul>	

# 대북제재 장기화와 재정금융 제도 변화

## ■ 금융제도 변화

➢ 법 개정 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시적이고 시범적인 정책개입으로 추정, 공식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네트워크 기반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다는 한계가 있음

➢ 기존 금융개혁의 연장선에 있으나, 강제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

	2019	2020	2021-2022
강제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보험 가입 확대(살림집 가정재산 보험)</li> <li>■ 상업은행 금리 인상, 저축 유도</li> </ul>	<p>2020-202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저축 확대, 세대별로 통장 개설, 입금 의무화, 출금은 제한</li> </ul>	
전화돈 사용 제한		<p>2020년 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돈 송금 한도 제한, 대금결제나 현금화를 금지</li> <li>■ 충전용 외화카드 이용도 제한</li> <li>■ 공식금융기관 발급 전자결제카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유도</li> </ul>	
돈표발행			<p>2021년 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은행 돈표 발행(5천원권)</li> <li>2022년 상반기</li> <li>■ 중앙은행 돈표 발행 확대 (5만원권)</li> </ul>

## 재정제도 변화

# 2020년 최고인민회의 예산 보고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개최 (2020.4.18)
- 국가 예산수입 주요 항목인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수입 계획 증가율 둔화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 계획 증가율 (2012~2020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증가율	8.7	4.1	4.3	3.7	4.1	3.1	3.2	3.7	4.2	0.9	0.8
거래수입금	7.5	3.5	4.5	2.6	3.3	2.4	2.5	4.1	1.1	0.8	0.6
국가기업이익(득)금	10.7	6.0	7.9	4.3	4.5	3.5	3.6	4.3	1.2	1.1	0.9
협동단체이익(득)금	5.3	5.3	4.8	3.2	1.5	1.6	0.9	1.1	0.4	0.4	0.4

주: 1) 2022년 국가기업이익금과 협동단체이익금은 각각 국가기업리득금과 협동단체리득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국가 예산수입 가운데 '집금수입' 6.8배 증가 계획도 발표되었다.

출처: 노동신문

# 2020년 최고인민회의 예산 보고

-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의 국가예산 동원 이용
  - 고정재산감가상각금: 고정재산의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액을 적립, 자본재의 보수와 교체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 김정은 집권 이후 2015년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의 기업내 유보하는 것으로 제도 변경
- 고정재산 두 종류: 1) 국가투자고정재산, 2) 기업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정재산
  - 이석기 외(2018, pp. 127-128): 2015년 재정법 개정에 반영된 감가상각금 기업내 유보 조치가 1), 2) 모두 해당인지 모호하다고 지적
    -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계획에 예견된 설계예산 범위에서 국가예산과 **기업소에 적립된 감가상각금**, 기업소기금 같은 자체 자금에서 쓴다(2015 재정법 32조)”
  - 2020년 예산보고를 통해 명확해짐. 즉, 기존에는 1), 2)의 감가상각금 모두 기업내 유보 → 2020년부터 1)에 대한 감가상각금에 한해 국가예산에 동원
  - 기업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정재산의 이관 및 임대도 유지(2020년 11월 기업소법 개정)

##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의 예산동원

- ‘국가투자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 동원: 경제관리 정책의 진전과 후퇴의 흐름과 대체로 일치
  - 2002년 7.1 조치 개혁 흐름(기업내 유보) → 2005년 이후 보수화(국가예산수입 동원) → 김정은 집권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2015년 (기업내 유보) → 2020년 보수화(국가투자고정재산만 국가예산수입 동원)

	2002년	2005년	2015	2020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처리 방식	기업내 적립	국가예산수입 동원 (국가투자고정재산)	기업내 적립	국가예산수입 동원 (국가투자고정재산)
근거자료	최고인민회의 예산보고 (2002.3.27.)	국가예산수입법 제정 (2005.7.6.)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생산적 고정재산은 감가상각금 납부 제외 대상(제30조)	재정법 개정 (2015.4.8.), 기업소법 개정 (2015.5.21.)	최고인민회의 예산보고 (2020)

---

# 2021년 재정위기 인식과 재정법 개정

- 2021년 예산규모가 둔화하며, [북한당국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정황](#)
  - 2021년 제8차 당대회
    -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금융, 가격”의 경제적 공간 활용 언급
    - 당재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 당 규율 위반까지 감독(기존 당 검열위원회 폐지)
  - 2021년 최고인민회의
    - “재정,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지적
    - 예산집행의 결함 지적 확대 “일부 단위들에서 예산수입 계획을 미달”했다고 적시
    - “경제조직사업과 재정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지방예산집행과 기업체경영관리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
  
-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 → 재정법 개정\(2021년 8월\)으로 이어짐](#)
  -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수입을 확대하고, 생산단위에 대한 재정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

---

## 2021년 재정법 개정

- “수정보충된 재정법에 대하여” (민주조선 보도, 2021년 10월)
  - 민주조선에 실린 해설기사는 최근 제, 개정을 이루어진 법들을 대상으로 함
- 2022년 북한법령집: 2021년 8월 재정법 개정 반영
  -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예산납부 방식 변경 → 202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익공제금 명칭 변경
    - ✓ 예산수입의 원천, 과세대상의 조정
    - ✓ 국가예산납부금과 초과분의 자체 사용 제한
    - ✓ 모범단위에 대한 재정적 특혜
  - 2) 재정관리권과 (대부한) 경영자금 손실 발생시 보상
  - 3) 중앙예산의 부문 예산제 실시
  - 4) 재정통제 강화
    - ✓ 재정계획의 작성과 수행 과정 통제, 물적계획과 결부 강조
    - ✓ 재정법 위반시 처벌 강화 (esp. 민사적 책임 강조)
  - 5) 재정업무의 전문성 강화

# 2021년 재정법 개정: 예산수입 납부

## ■ 기관, 기업소 단체의 예산수입(이익공제금) 납부 방식 변경

	(구) 재정법 (2015.4.8.일 수정보충)	(신) 재정법 (2021.8.17.일 수정보충)
제2장 국가 예산	<b>제14조 (국가예산수입금)</b>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의 과학화수준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b>순소득 또는 소득</b> 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	<b>제13조 (수입예산의 집행)</b>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의 과학화 수준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b>사회순소득</b> 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
	<b>제21조 (중앙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b> 중앙예산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b>순소득 또는 소득</b> 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b>제15조 (중앙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b> 중앙예산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b>사회순소득</b> 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b>제22조 (지방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b> 지방예산은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b>순소득 또는 소득</b> 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b>제19조 (지방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b> 지방예산은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b>사회순소득</b> 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b>제36조 (순소득, 소득의 리용)</b>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b>순소득 또는 소득</b> 에서 국가납부금을 국가예산에 먼저 바치고 나머지를 자체총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 <b>계획기간에 채 쓰지 못한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 상금기금 같은 자체로 쓰게 된 자금은 국가예산에 동원하지 않는다.</b>	<b>제38조 (수입의 분배)</b>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b>수입</b> 에서 국가예산납부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원가보상을 하며 자체의 실정에 맞게 <b>확대재생산과 과학기술발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b> 을 분배하여야 한다. (삭제)

출처: 국가정보원, 『2020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20); 국가정보원 『2022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22)

# 2021년 재정법 개정: 예산수입 납부

## ■ 기관, 기업소 단체의 예산수입(이익공제금) 납부 방식 변경

- (구) 재정법 : 예산수입의 기본원천과 과세대상이 '순소득 또는 소득'으로 동일
- (신) 재정법: 기본원천과 과세대상을 구분
  - ✓ “중앙예산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 ✓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수입**에서 국가예산납부금을 우선적으로 납부”

2002년 이전	2002-04년	2005-07년	2012-2014	2015-2021	2022 (2021.10)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거래수입금과 통합)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거래수입금 유지)
이윤	변수입(소득)	소득(2005) 순소득 또는 소득(2007)	이윤 또는 소득	순소득 또는 소득	순소득



## 2021년 재정법 개정: 예산수입 납부

- 2002년 국가기업이득금 도입 당시도 유사 (기본원천과 과세대상이 상이: 사회순소득/변수입)
  - 국가기업이득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모두 ‘사회순소득’을 국가예산에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중앙 집중적으로 국가예산에 동원하는가 아니면 기업순소득의 일부를 분배하여 국가예산에 동원되는가”에 있어 차이 (김영수, 2004, 경제연구)
  - 2002년 국가기업이득금 도입: 거래수입금(1차 분배)과 + 국가기업이익금(2차 분배)을 통합 → 변수입에 근거하여 부과(1차 분배)하는 “중앙집중적 동원”
- 2021년 국가기업이득금 도입: 거래수입금을 유지, 국가기업이익금을 국가기업이득금으로 변경
  - 국가기업이득금의 과세대상을 “수입”으로 변경 (수입은 원가 전체를 포함) 변수입은 생활비를 공제한 원가만 포함
  - 판매수입에 “국가납부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소득분배방법’이 제도화되었을 가능성
    - 새로운 소득분배방법(최정욱, 북한의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2019)
    - 과세대상을 소득(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시장가격이 반영된 기업소 실적을 포함하여 ‘원가정보를 파악할 필요없이’ 판매수입에 국가납부율을 적용하여 ‘국가납부금을 계산’

## 2021년 재정법 개정: 예산수입 납부

- 국가예산수입계획 초과분의 자체 사용 제한( (구)재정법의 36조 내용 변경)
  - 국가예산수입계획 초과분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 삭제
  - “계획기간에 채 쓰지 못한” 자금의 국가예산 동원 금지 → 삭제
- (구) 재정법 32조(기본건설과 대보수자금), 33조(과학기술발전자금) → 삭제
- (신) 재정법 제37조(경영수입 조성) 추가: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영수입을 늘려야 한다.”
- 생산단위가 국가예산납부금을 납부한 이후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는 축소한 반면, 경영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체적으로 자원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은 확대



# 2021년 재정법 개정: 예산수입 납부

## ■ 모범단위에 대한 재정적 특혜

- (신)재정법에서는 (구)재정법의 지방예산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모범단위에 대한 ‘재정적특전’을 전체 국가예산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추가
- 재정법 개정 이전에는 예산수입계획초과분을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등 다양한 용도로 처분
- 개정 이후에는 ‘모범적인 단위’에 한하여 예산수입계획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우대기금’으로 사용

	(구) 재정법 (2015.4.8.일 수정보충)	(신) 재정법 (2021.8.17.일 수정보충)
제2장 국가 예산	<b>제23조 (지방예산제)</b>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지도밑에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에 의거하여 균을 기본단위로 실시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지방의 살림살이를 짜고들어 지방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지방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재정적특전을 준다.	<b>제18조 (지방예산제의 실시)</b>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지도밑에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에 의거하여 균을 기본단위로 실시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의 살림살이를 짜고들어 지방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  <b>제20조 (재정적 특혜)</b>  국가는 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에 재정적특혜를 준다. 예산집행기관은 해당 예산수입계획초과분의 일정한 몫을 우대기금으로 적립하고 리용할 수 있다.

출처: 국가정보원, 『2020 북한법령집』(서울: 국가정보원, 2020); 국가정보원 『2022 북한법령집』(서울: 국가정보원, 2022)

# 2021년 재정법 개정: 2) 재정관리와 경영자금 손실 보상

## ■ (신) 재정법은 제23조 재정관리권을 신설

-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하는 권한”이라고 정의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유지 (개혁의 연속성 유지), 기업소법과의 일관성 확보

	(구) 재정법 (2015.4.8.일 수정보충)	(신) 재정법 (2021.8.17.일 수정보충)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b>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관리임무)</b>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사회주의재정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인민경제계획실행을 보장하는 기본수단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관리를 인민경제계획실행과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b>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관리에서 나서는 기본요구)</b>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사회주의재정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관리권을 옹계 활용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자금적으로 담보하며 경영수입을 체계적으로 늘리고 지출을 줄여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원칙에서 재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b>제38조 (경영손실의 보상)</b>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를 잘하여 경영손실을 내지 말아야 한다.  경영손실은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b>제23조 (재정관리권)</b>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실정에 맞게 경영자금의 조성, 리용을 주동적으로 하여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수행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며 중업원생활을 재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b>제39조 (경영손실의 보상)</b>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를 잘하여 경영손실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은행대부금이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의 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 모든 경영손실은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정보원, 『2020 북한법령집』(서울: 국가정보원, 2020); 국가정보원 『2022 북한법령집』(서울: 국가정보원, 2022)

# 2021년 재정법 개정: 2) 재정관리와 경영자금 손실 보상

- 은행이나 주민으로부터 경영자금 조달한 후 손실 발생시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구체화
  - (구) 재정법의 제38조에는 “경영손실을 자체로 보상”한다고만 명시
  - 기업소법과 일관성(제38조, 부족되는 경영활동자금의 종류를 언급)차원에서, 손실보상이 필요한 ‘조달한 경영자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
  - 재정법 위반시 처벌에서 “민사적 책임”을 별도로 추가한 것과 연관
  - 민간으로부터 자체적인 자금조달을 허용한 데 따른 사후 조치로, 이를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의 책임을 규정

# 2021년 재정법 개정: 3) 부문예산제 실시

	(구) 재정법 (2015.4.8.일 수정보충)	(신) 재정법 (2021.8.17.일 수정보충)
제2장 국가 예산	<b>제21조 (중앙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b> 중앙예산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순소득 또는 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경제, 문화건설과 국방건설, 대외활동,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예산으로 보장한다.	<b>제15조 (중앙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b> 중앙예산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경제, 문화건설과 국방건설, 대외활동,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예산으로 보장한다.
		<b>제16조 (부문예산제의 실시)</b>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예산안에서 부문별로 부문예산제를 실시한다. <b>부문예산집행기관</b> 은 경제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부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
		<b>제17조 (부문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b> <b>부문예산</b> 은 해당 부문의 중앙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창조된 <b>사회순소득</b> 을 기본원천으로 한다. 해당 부문에 필요한 자금은 부문예산수입으로 보장한다.
제4장 재정 총화	<b>제42조 중앙지방예산 집행총화</b>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분기, 반년, 년간 총화는 내각에서, 중앙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년간총화는 해당 중앙기관에서 한다.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년간총화는 지방정권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년간총화보고는 해당 인민회의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b>제43조 (예산별집행정형총화)</b>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분기, 반년, 년간총화는 내각에서 한다. <b>부문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분기, 반년, 년간총화는 해당 중앙기관에서 한다.</b>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분기, 반년, 년간총화는 지방인민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년간총화보고는 해당 인민회의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출처: 국가정보원, 『2020 북한법령집』(서울: 국가정보원, 2020); 국가정보원 『2022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22)

## 2021년 재정부 개정: 3) 부문예산제 실시

-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예산안에서 부문별로 부문예산제를 실시한다.”
  - “해당부문에 필요한 자금은 부문예산수입으로 보장”
  - 중앙예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문별로 수입과 지출이 최소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
  - 한 부문의 예산수지 흑자가 다른 부문의 적자를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문별로 흑자나 균형을 달성
- 중앙예산의 징수 방식 변화? (가능성은 낮아 보임): 부문별 수납체계 vs. 지역별 수납체계
  - 부문별 수납체계 ;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관할하는 위원회, 관리국, 성 등 상급기관이 조세를 징수 (경영활동 통제와 조세 징수가 일원화)
  - 지역별 수납체계 ; 개별 기업소의 수입금을 지방 인민위원회가 징수하여 중앙 재정기관으로 이전 (경영활동 통제와 조세 징수가 이원화)
  - 일원화 조치 → 재정계획과 물적계획을 연계 → 계획 정상화를 위한 노력

1993~1994 이전	1993~1994년	2000년	2002년
	거래수입금 납부대상 확대(소비재 → 소비재+생산재)	중앙집중적 징수 강화 목적으로 추정	7.1조치 도입으로 다시 변경
부문별 수납체계	지역별 수납체계	부문별 수납체계	지역별 수납체계

## 2021년 재정부 개정: 4) 재정통제 강화

	(구) 재정부 (2015.4.8.일 수정보충)	(신) 재정부 (2021.8.17.일 수정보충)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b>제26조 (재정계획의 작성)</b>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재정계획을 세우고 <b>해당 기관의 승인</b> 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정계획은 실행할수 없다.	<b>제29조 (재정계획의 작성)</b>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따라 재정계획을 세우고 <b>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b> 하여야 한다.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재정계획은 수행할수 없다.
		<b>제28조 (재정등록)</b>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b>제39조 (재정회계문건의 작성과 보관)</b>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회계문건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재정회계문건의 내용은 고칠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b>제40조 (재정회계문건의 작성과 보관)</b>  기관, 기업소, 단체는 <b>증빙문건에 기초하여</b> 재정회계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재정회계문건의 내용은 고칠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2021년 재정법 개정: 4) 재정통제 강화

- 재정계획과 물적계획의 결부 : 계획 실패 방지
- 재정법 위반시 처벌 구체화
  - 행정적, 형사적 책임 이외에 민사적 책임 추가
  - 재정계획의 작성, 수행과 관련한 새로운 조항에 대한 강제성 부과

	(구) 재정법 (2015.4.8.일 수정보충)	(신) 재정법 (2021.8.17.일 수정보충)
제4장 재정총화	<b>제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총화)</b>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진행하는 재정총화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을 주기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계획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생활비, 자체기금, 상금기금, 국가에 리익을 준 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b>제4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총화)</b>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계획에 반영된 경영수입과 지출, 국가에 산납부와 자체총당금조성리용, 로동보수자금지불, 국가예산자금의 리용정형 등 재정활동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순, 월, 분기, 반년, 년간 <b>재정총화는 생산총화와 결부</b> 하여 진행한다.
	<b>제5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b>  이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b>제59조 (민사적 책임), 제60조 (변상처벌)</b> <b>제61조 (벌금처벌), 제62조 (중지처벌)</b> <b>제63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제64조 (형사적 책임)</b>

출처: 국가정보원, 『2020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20); 국가정보원 『2022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22)

# 2021년 재정법 개정: 5) 재정업무의 전문성

- 재정법 개정의 전체 내용
  - 생산단위의 경영활동 결과인 예산수입을 재정당국이 빠짐없이 감독하여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수입 확보 과정의 누수를 막고자 함
- 국가의 재정일군의 양성과 전문성에 대한 강조도 이러한 법 개정 의도의 연장선
  - 국가가 전문적인 재정일군을 양성하면, 국가예산수입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생산단위의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가능

	(구) 재정법 (2015.4.8.일 수정보충)	(신) 재정법 (2021.8.17.일 수정보충)
제1장 재정법의 기본		<b>제6조 (재정일군양성원칙)</b>  국가는 <b>재정일군양성체계</b> 를 정연하게 세우고 재정일군을 체계적으로 키워 <b>부문별, 지역별, 단위별에 따르는 재정일군수요를 원만히 충족</b> 시키도록 한다.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b>제54조 (재정일군자격)</b>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일군은 <b>해당 전문자격과 급수</b> 를 가진자만이 될 수 있다.

출처: 국가정보원, 『2020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20); 국가정보원 『2022 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22)

# 2022년 최고인민회의 예산보고

- 이익공제금 명칭 변경
-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항목 별도 구분, 전년대비 증가(수치로 제시하지 않음)
  -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항목을 따로 내오고 지난해에 비하여 대폭 늘어 편성”
  - 2021년말 제8기 4차 전원회의의 농촌발전정책과 연관,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협동농장의 미상환 대부**에 대한 **상환면제**라는 특혜 조치를 선포
  - 농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 → 제재 장기화에 대응
- **집금수입을 6.8배 증가**
  - 최고인민회의 예산보고에 언급된 것은 이례적
  - **생산단위나 개인이 시장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 일부에 대해 과세**
  - 새로운 세원 발굴 → 재정수입을 확충
  - 재정법 개정과 연관 : 재정당국이 생산단위의 재정여건을 잘 파악하도록 개정
  - 계획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 → 근거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시장 영역으로부터 예산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의도

## 금융제도 변화

# 강제저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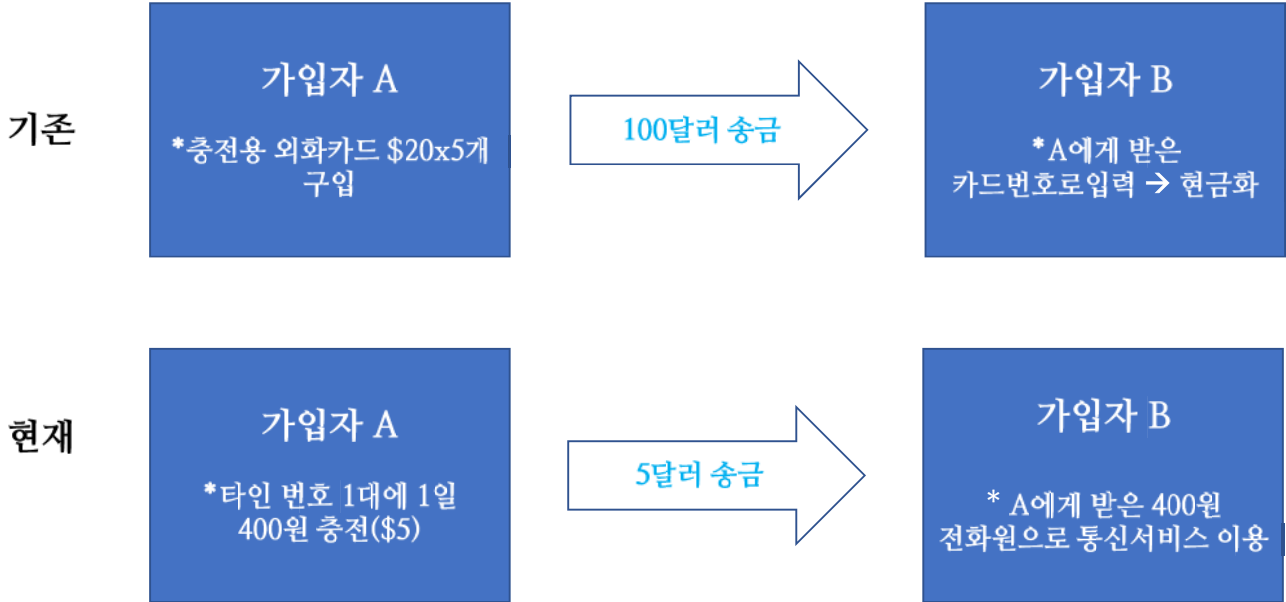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식 금융개혁의 연장선, 2019년부터 강제성 두드러짐
- 손해보험 개혁 (양유식, 2021년)
  - 조선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이 분리, 기존 조선중앙은행이 담당하던 생명보험 업무가 조선민족보험총회사로 이관
  - 그러나, 보험판매는 여전히 조선중앙은행의 지방지점에서 수행: 방카슈랑스 형태
  - 보험회사들의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해 손해보험 판매에도 주력(북한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회사가 분리되지 않음)
  - 손전화기 보험, 제품질보증보험 → 2019년 살림집가정재산보험 확대(전 세대 대상, 보험료 징수)
- 강제저금 확대
  - 초기에는 상업은행 저금 금리 인상을 통해 저축을 유도
  - 2021년경부터 가구별 통장 개설, 입금 강요, 출금 제한
  - 지역별 차이, 금융기관 채산제 실시의 결과일 가능성 고려
  - 과도한 상업은행 이자 규제에 나섰다는 보도

# 전화돈 사용 제한

- 전화돈의 기존 사용 사례
  - 휴대전화 분기별 기본요금(2,850원)을 충전 : 월 200분의 음성통화와 월 20개의 통보문(문자메세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돈 450원이 충전(기본요금은 내화로 납부)
  - 기본 음성통화와 통보문 소진시 1) 기존 충전된 전화돈(450원) 사용하거나 2) 충전용 외화카드를 구입하여 추가로 전화돈을 충전한 후 사용
  - 송금방식의 편리성 : 1) 충전된 전화돈 150원을 타인의 번호로 송금, 2) 충전용 외화카드의 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외화카드 종류: \$5, \$10, \$15, \$20, \$10달러=800 전화돈=약 200분) → 대금결제나 현금화에 용이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600~800만명(대략 가구당 1대 보유) → 긍정적인 네트워크 외부성 확보
- 2020년 7월 전화돈 사용 제한
  - 1일 송금의 한도와 횟수를 축소, 충전용 전화카드 폐지
  - 전화돈 추가 충전은 1일 2대, 체신소에서 충전, 상한액 100분/400원
  - 5달러=400원 전화돈 충전 가능 → 1일 5달러의 소액 송금만 가능(본인 번호를 제외한 타인 번호 1대에 대해, 5달러 충전 가능)



# 전화돈 사용 제한



# 전화돈 사용 제한 효과

- 전화돈을 소액 송금에 한정
  - 기존에는 상업은행 송금 서비스와 전화돈 송금이 일종의 경쟁 관계
- 충전용 외화카드 폐지 → 민간이 보유한 유동성을 공식 금융기관에 일시 동결
  - 개인, 돈주, 전화돈 장사꾼을 통한 송금과 외화거래 금지
- 통신서비스와 연계된 금융거래를 공식 금융제도와 연결
  - 전성카드, 나래카드 등 공식금융기관이 발급한 전자결제카드와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울림 1.0, 울림 2.0 연동)

---

# 중앙은행 돈표 발행

- 2021년 10월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확인
  - 북한 내부자료(아시아프레스보도), “중앙은행돈표는 국가가 담보하고 발행하는 현금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립시통화”
  - 2021년 하반기 5천원권, 2022년 상반기 5만원권
- 기존 연구
  - 김미연(2021), 외화와 바꾼 돈표의 재등장, 시중 외화 흡수
  - 임송, 조태형(2022)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현금 유통 경색을 정상화하기 위해, [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무현금 결제수단](#)으로 ‘중앙은행 돈표’를 발행
  - 두 연구 모두 재정여건 악화를 원인으로 지적

---

# 중앙은행 돈표 발행

- 중앙은행 돈표를 무현금 결제수단의 재등장으로 보는 견해(임송, 조태형, 2022)
  - 무현금 결제수단 → 주로 기업 거래에 사용 (enterprise money) → 2022년 5만원권 추가 발행, 기업 거래에 사용하도록 권고
- 중앙은행 돈표와 무현금 행표의 차이
  - 1) 사용범위의 차이: 무현금 행표(기업 거래중 운임, 도서대금, 소비상품 대금 등) vs. 중앙은행 돈표 “기관,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한 자금,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생활비, 주민들의 저금돈, 은행카드돈](#) 등 여러공간을 통하여 지출”
  - 2) 미래의 현금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금 지불청구서에 가까움(무현금 행표는 기업간 이체 거래, 현금 행표는 은행과 기업, 개인간 현금 거래)
- 중앙은행 돈표: 현금행표+외화행표를 통합한 형태
  - 현금행표는 현금계획을 토대로 은행잔고 범위내에서 지불
  - 외화행표는 외화와 바꾼 돈표 폐지 이후 외화 현금 거래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



# 중앙은행 돈표 발행 의도

- 현실 경제생활에서 현금 유통이 이미 크게 확대
  - 특히, 가게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금 거래 확대, 현금 돈자리, 외화 돈자리 허용되면서 현금 행표와 외화 행표의 사용이 사실상 크게 축소 → 이를 통합한 형태의 '중앙은행 돈표' 발행
  - 현금행표는 용도가 '생활비, 상금, 각종 보조금, 장학금, 려비'에 한정 → 경영활동 전반에 사용하기 어려움 → 사용범위를 확대한 '중앙은행 돈표' 발행
  - 은행 잔고 범위내 현금 대신 지급 되면, 일시적으로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현금 유동성을 동결 시키는 효과 (전화돈 사용 제한 조치와 유사)
  
- 중앙은행 돈표가 현금행표+외화행표를 통합한 형태이기는 하나 '임시적' 성격이 강함
  -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 액면가치가 최대 5만원에 불과한 점 → 생산재 거래를 완전히 대체하기도 어려워 보임
  - 임시통화로 내화의 외화 유동성을 동결, 흡수하고 금융 거래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임

## 대북제재 장기화와 재정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

# 재정위기, 계획실패에 대한 대응

- 2019년말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경제관리정책의 보수화 감지
  - 당 전원회의, 당 대회, 내각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일관된 입장이 유지
  - 재정, 금융, 가격과 같은 경제적 공간(수단)을 강조
  - 큰 틀에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유지
  - 법 개정과 임시적 조치를 병행하면서 국가 통제를 강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도입과정과 유사)

## 1) 특징1: [재정] 국가의 생산단위에 대한 재정 통제 강화

- 재정당국이 생산단위의 재정여건을 잘 파악 → 등록, 증빙자료, 위반시 처벌 구체화
- 중앙예산의 부문 예산제 → 계획과 집행과정의 통제 강화

---

# 재정위기, 계획실패에 대한 대응

## 2) 특징2: [재정] 추가적인 세원 발굴, 특정 부문에 대한 예산 지출 확대

- 집금수입 확대, 농업 부문에 대한 예산항목 구분 및 예산 지출 확대
- 과세 증빙 자료 → 재정수입 누수 제한

## 3) 특징 3: [재정,금융] 법개정과 임시적, 시범적 조치가 병행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재정제도(재정법, 기업소법 제정 및 개정) + 금융제도(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개정, 기업소 현금/외화 돈자리, 주민유희화폐자금동원은 내각 지시나 시행세칙 등 하위 규정 변경을 병행)
- 대북제재 장기화 : 재정제도는 법 개정, 금융제도는 임시적, 시범적 조치 병행

## 재정위기, 계획실패에 대한 대응

- 4) 특징 4: [재정, 금융]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 큰 틀에서 유지
- 기업소의 재정관리권 유지, 재정법에도 재정관리권 추가
  - 기업소의 권한은 축소(국가예산수입계획 초과분의 자체처분 명목은 축소)
  - 기업소의 상환 책임을 강조(은행대부금, 주민유희화폐자금 조달 → 경영자금 손실 보상 책임 강화)
- 5) 특징 5: [금융] 가계와 기업의 내화와 외화 현금을 동결 및 흡수하는 시도
- [민간보유 여유자금을 공식 금융제도내로 편입하려는 김정은 집권 초기 조치들의 연장선](#)
  - 그러나 대북제재 장기화 이후 관찰되는 조치들은 [강제성과 임의성이 뚜렷](#)
  - 김정은 집권 초기: 전자카드 사용, 상업은행 송금, 결제, 저축 유도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
  - 최근 강제저축(일반 통장 개설, 손해보험 가입 확대), 전화돈 송금 제한, 돈표 사용 조치 들은 강제성 부여
  - 그러나 화폐개혁과 같은 [전면적 개혁이 아닌 임시적 수단을 사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 종합평가

- 큰 틀에서 개혁의 방향을 유지하고 미세조정하는 접근은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경제관리정책의 보수화 시도에 비해서는 진전](#)
- 그러나, 임시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유인에 반하는 조치들은 공식금융기관의 신뢰도를 저하
- 김정은 집권 이후 개혁에도 불구하고, 가계 금융에 대한 정책적 관심사는 낮은 편 → 금융소의 현실 시사
- [공식 금융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 북한당국의 가계 금융에 대한 경시 → 최근 보수화 흐름이 이를 촉진할 경우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작용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



# 만성화된 식량위기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지속인가 개선인가?



김일한(동국대학교)

## 북한이 만성화된 식량위기와 농업정책 재검토 - 식량생산량 검토와 글로벌 이슈 대응

김일한  
(동국대 DMZ 평화센터)

### 1. 북한은 해마다 식량위기를 겪고 있을까?

최근 한 대북 언론에 2022년 북한 식량생산량이 “100만톤 감소” 할 것이라는 기사가 등장했다. 이유는 가뭄과 장마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sup> 북한 식량생산량이 일반적으로 500만톤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022년 북한의 전체 식량생산량이 20%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이 가능한 이유가 가뭄과 장마라면 지구상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일정 수준의 가뭄과 장마는 반복된다. 그런데 유독 북한에서는 나타는 기상이변은 특별히 더 가혹할까. 2022년 북한 식량문제를 다룬 국내외 우수 언론 기사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North Korea's dire food shortage** may become more acute(*economist*, 2022/07/06), Analysis: COVID crisis could deepen **N.Korea food shortages** amid drought warnings(*reuters*, 2022/05/12), **North Korea** documentary makes rare admission that country is in the midst of **‘food crisis’** (*washingtonpost*, 2022/02/03), 북한, **만성적 식량 부족**… ‘올해도 2~3개월치 부족’ (*BBC코리아*, 2022/06/21), **식량난**에 허덕이는 北, 양식업 독려… “승산이 확고한 사업” (*YTN*, 2022/11/26), **‘식량난’** 北, 최룡해도 먹거리 현장 지도… 농장·목장 등 점검(*동아일보*, 2022/11/06), 北 올해 **식량난** 가중…중국서 쌀 수입 대폭 늘려(*newsis*, 2022/11/22)<sup>2)</sup>, 북한 **‘최악의 식량난’** 대책, 결국 농민 쥐어짜기?(*KBS*, 2022/09/26) etc.

고난의 행군이후 **‘북한(North Korea)’** 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식량난(food shortage)’** 과 매우 친화성이 높다. 국내외 수유의 언론은 물론이고, 유력 연구자나 기관 역시 이러한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data 역시 무시되기 일췌다.<sup>3)</sup>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아졌다는 기사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량난’ 과 원인에 대한 국내연구는 북한의 식량부족을 경제력, 제도나 정책과 같은 북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외<sup>4)</sup>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외부요인<sup>5)</sup>에서 찾고

- 1) “북, 가뭄이어 장마… 올 수확량 100만톤 감소할 듯”, 자유아시아방송, 2022년 8월 15일.
- 2) 북한이 수입을 대폭 늘렸다는 양은 16,450톤이다. 9월까지 수입한 양과 합산하면 27,350톤이다. 식량 총생산량을 500만톤으로 가정하면, 0.547%에 해당한다.
- 3) 북한이 UN에 제출한 VNR보고서는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외 언론은 물론 국내외 연구결과에도 반영되는 사례가 없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21.
- 4) 이지선, “북한의 식량난과 당국 대응에 대한 평가,” 이슈브리프 39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9. ; 최용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KREI 농정포커스, 193호, 2020. 11. ; 정은이 외, “한반도 신경계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KINU 연구총서 21-33, 통일연구원, 2021. ; 이규창 외,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 KINU

있다.

해외 연구도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농무부(USDA) 산하 경제조사서비스의 ‘국제 식량 안보 평가 2021~2031’ 보고서는 2031년에도 식량안보에 큰 진전이 없는 나라로 예멘,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북한을 포함했다. 장기적 분쟁이나 경제난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2031년 식량안보 지표가 전체 주민의 절반 정도가 식량이 부족하며, 1인당 평균 섭취 열량도 하루 필요량인 2천100kcal보다 397Kcal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식량 부족량은 79만 2천으로, 2021년 부족량 104만1천보다 약 25만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6)</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박사의 최근 연구결과는 북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산림문제 등 국내의 연구결과가 다루고 있는 변수를 망라해 북한 식량생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생산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오히려 더 퇴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권 초기 2012~14년 기간에는 3개년 평균 생산량이 475만 톤이었으나 최근 3년(2019~21년) 평균 생산은 457만 톤으로 감소해 연간 식량부족 규모는 더욱 늘어났다. 식량 생산의 침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농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 즉 개혁 부진과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는 동기 유발이 취약한 집단농업 체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경제는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의 능동적인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북한농업의 획기적 성장과 식량 생산 증대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북한농업이 봉착해 있는 자본공급 부족 문제는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에너지, 비닐 등 투입재 공급 부족, 그리고 현대적 생산기술 개발과 보급의 실패**에만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침체 기간에 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낙후되고 식량난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산림이 광범위하게 훼손**되었다. 이는 기상재해가 빈발하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농산물 작황 저조를 일상적인 일로 만들기도 했다.”**<sup>7)</sup>

위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북한의 식량증산정책은 어떤 성과도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퇴보했다. 원인은 다음 세가지 경우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동안 북한 당국은 식량증산을 위해 첫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거나, 둘째, 노력은 했지만 실패했거나, 셋째, 그것도 아니면 노력의 성과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거나.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국가가 국가 내구력을 지탱하는 핵심산업인 농업을 방치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정책이 실패했거나, 충분한 정책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농업, 즉 식량산업은 호흡이 매우 긴 산업이다. 필수적인 경제적 체력인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에너지, 비닐, 현대적 생산기술 개발과 보급’, 그리고 기상이변, 국제정치, 글로벌 쇼티지

정책연구시리즈 20-01, 통일연구원, 2020. ; 이규창 외, “북한인권백서 2020,” 통일연구원, 2020. ; 이규창 외, “북한인권백서 2020,” 통일연구원, 2020. ; 박성열, 한지만, 정원희, “북한의 식량위기론: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 비교 분석-FAD와 FED 접근법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vol 91, no -, pp. 49-99, 2022. ; 권태진, “[북한 식량수급 전망] 북한, 춘궁기 식량 위기 어떻게 넘기나?” 북한 2020 4월 통권 580호, 2020, pp.54-59. 등

5) 이용희,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식량 위기와 대책,” 통일전략, vol 21, no 2, 2021, pp. 67-102. ; 강택구, 정기웅, 홍윤근, 김일기, 이준호,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KEI 사업보고서, 2021-09-03, 한국환경연구원, 2021. ; 전동진, 김익제 외, “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III),” KEI 기후환경정책연구 2021-01, 한국환경연구원, 2021. 등

6) “미 농무부 전문가 “북한 식량난, 10년 후에도 큰 개선 없을 것,” VOA, 2021년 8월 6일.

7) 김영훈, “이상기후와 북한농업, 그리고 협력과제,” 『북한농업동향』, 22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9. pp.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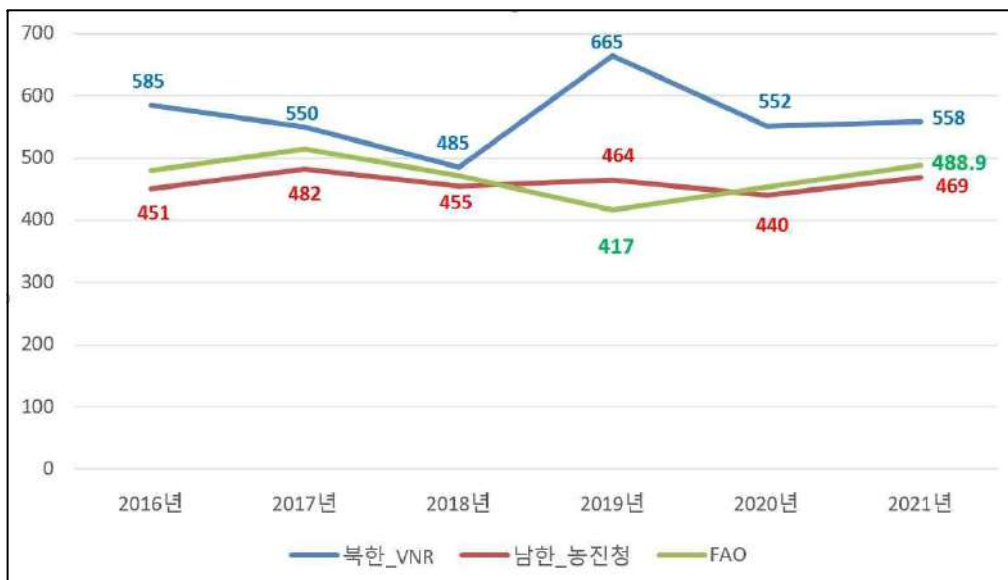
등 가변적인 대외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거기에 생산자들의 증산의욕이 결합되어야 하는 고도의 복잡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식량산업은 장기적인 계획과 전망, 그리고 당국의 불가역적인 정책적 일관성과 정치적 지지를 요구한다.

이 글은 북한 식량문제와 관련해 몇가지 점검이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남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 북한이 제시하는 식량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몇가지 단서를 점검하고자 한다. 둘째, 실패한 것인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북한 농업정책의 최근 동향과 변화를 평가해 볼 것이다. 셋째,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구조 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미중패권경쟁 등 글로벌 변수가 북한 식량증산 정책에 어떤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 2. 북한은 식량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을까?

북한 식량생산량은 매년 다수의 기관이 추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기구인 FAO/WFP와 남한의 농촌진흥청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VNR을 보고하면서 생산량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FAO와 농진청에 비해 북한의 공식발표에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1년을 비교하면 북한이 발표한 558만톤에 비해 FAO와 농진청은 각 488.9만톤, 469만톤이 낮게 추정했다.

북한 식량생산량 추이



※ 자료: ▲ 북한발표, VNR, 2021년 생산량은 북한 농업위원회 안춘갑책임부원\_식량생산 전년대비 101.1% 증산, 『조선신보』, 2022년 2월 15일. ▲ 농진청 발표, ▲ FAO. 각년도.

\* FAO, 2020년 생산량은 2019-2021년 평균값. \* 단위: 만톤.

생산량 추정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농진청은 매년 “북한 지역의 ▲ 기상 여건과 ▲ 병충해 발생 및 ▲ 비료 수급 상황, ▲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와 ▲ 위성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를 취합해 생산량을 추정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연합체인 세계식량위기 네트워크(Global Network Against Food Crises 2021)가 발표한 ‘세계 식량위기 연례보고서(2021 Global Report on Food Crises)’는 북한을 식량 위기상태(Crisis)로 진단하고 있다.<sup>8)</sup> FAO/WFP는 북한사무소에서 북한 현지를 샘플링 방문하고,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생산량을 추정한다.<sup>9)</sup>

북한은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농장은 ▲ 위성정보해석기술과 ▲ 농작물생육모의 기술에 의한 논벼, 강냉이에상수확고판정과 해당 기관 일군, 농장원의 립회밀에 진행되는 ▲ 평뜨기방법에 의한 포전별농작물예상수확고판정을 결합하여 그 과학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0)</sup>

FAO 북한 식량생산량 추정치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경사지 생산량	203	203	n/a	n/a	n/a	n/a
텃밭 생산량	75	n/a	n/a	n/a	n/a	n/a
수확후 손실분	754	799	737	871	947	1,023
총 생산량	4,801	5,150	4,722	4,170	4,529	4,889

※ 자료: FAO. 각년도.

\* 주: 2020년 생산량은 2019-2021년 평균값. \* 단위: 천톤

식량생산량 추정방법은 기술적인 차이, 농업현장의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FAO/WFP의 발표내용에는 data와 관련해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 경사지(Sloping land), ▲ 개인텃밭(Household gardens), ▲ 수확후 손실(Post-harvest losses)분에 대한 평가이다.

먼저, 경사지(Sloping land) 생산량이 2017/2018년 추정치에서 제외되었다. 북한 정부의 조림사업(Government’s reforestration programme)에 따라 2018부터 55만ha에서 5만ha로 경사지 면적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2016/17년까지는 경사도 15° 이하의 55만ha 산지에서 생산한 추정치 약 22만톤을 제외한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2018년 위성영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사지(개간산지, 산림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다락밭, 비탈밭 형태의 토지) 면적 59만 2천ha가 유지되고 있다.<sup>11)</sup> 경작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생산량에서는 제외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8) Global Network Against Food Crises,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2021*, 2021. 세계식량위기네트워크는 식량부족 국가를 최소상태(Minimal), 긴장상태(Stressed), 위기상태(Crisis), 비상상태(Emergency), 기근상태(Catastrophe/Famine) 등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북한을 세 번째 단계인 위기 상태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9) 최근에는 북한 농업성에서 농업관련 data를 제공받아 생산량을 추정하고 있다. 2020년 이후는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 국가정보원, 『북한 법령집』, 2022. p. 1243. ; <허풍방지법>, 202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972호 채택

11) 김경민 외,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북한산림정보 구축 방법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2020. 국립산림과학원은 북한의 행정구역별로 개간산지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개간산지 총 59.2만 ha중 ▲ 평양시 1.3 ▲ 남포시 0.1 ▲ 개성시 0.3 ▲ 강원도 4 ▲ 황해남도 0.8 ▲ 황해북도 5.8 ▲ 평안남도 8.9 ▲ 평안북도 2.8 ▲ 자강도 15.1 ▲ 양강도 7.1 ▲ 함경남도 7.6 ▲ 함경북도 5.4(만 ha) ; FAO/WFP는 2016년부터 북한의 작황을 추정하는 공식 보고서에서는 경사지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사지 재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탈북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태진,



## 북한의 경사지/개간산지



※ 자료: 김경민 외, 2020. 경사지/개간산지, 2018년 헤산시

개인텃밭(Household gardens)도 2016년 이후 생산량에서 제외했다. 2015년까지 25만 ha에 7만 5천톤 규모의 생산량이 특별한 설명없이 통계에서 사라졌다. 개인텃밭 생산량은 주민들의 식량안보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년 농장책임관리제 시행이후 개인텃밭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로동신문은 최근 재미있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농민들이 농장에 거름을 투입하는데 “자기 집터밭을 가꾸는 심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sup>12)</sup> 자기 텃밭처럼 농장을 가꿔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텃밭이 농장보다 생산량이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경사지와 개인텃밭의 곡물생산량은 북한의 식량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실제적인 영향이 매우 큰 영역이다. 농장, 기관, 기업소의 부업지, 개인텃밭, 경사지(뺨기밭) 생산곡물은 계획의 생산량으로 지역 시장의 자생력과 시장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sup>13)</sup>

수확후 손실(Post-harvest losses)분 추정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FAO에 따르면 수확후 손실분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추수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 추수가 늦어질 경우 수확 현장에서 낙과가 발생하고, 건조한 벼를 방치할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한다. ▲ 침수 등 논의 물이 충분히 빠지지 않거나 수확 후에 비가 올 경우 작물이 부패한다. ▲ 추수한 작물의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도 쥐, 다람쥐 등의 설치류나 곤충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다. 둘째, 운반 및 탈곡과정에서도 손실이 발생한다. ▲ 논 밭의 작물을 탈곡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인력으로 운반수단에 상차하고 다시 하차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 또한 탈곡과정에서 노후했거나 비효율적인 탈곡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 ▲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탈곡이 지연되고, 벼를 쌓아두는 과정에서 부패, 들짐승 등에 의한 손실이 또한 발생한다. 셋째, 탈곡과 포장이후 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처럼 작물을 수확하고 탈곡하고, 보관하는 모든 단계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4)</sup>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5월호. p. 40.

12) “질 좋은 거름이 나간 것만큼 쌀이 들어온다,” 『로동신문』, 2022년 11월 14일.

13) 2020년 코로나 국경봉쇄이후 곡물과 비료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곡물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장 큰 이유는 계획외 생산된 곡물량이 시장가격을 지탱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확후 손실분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FAO/UNDP가 김일성종합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쌀 15.6%, 옥수수 17%, 밀 등 기타 곡물에 16.5%의 수확후 손실분 data를 도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총 생산량에 따라 수확후 손실분의 증감이 연동된다. 그러나 2018년을 제외하면, 총생산량 증감과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손실분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총생산량이 515만톤에 손실분이 약 80만톤(15.5%)인 반면, 2021년에는 약 49만톤에 손실분이 100만톤(20.9%)을 상회한다. 총생산량의 약 20%가 수확후 손실분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이후 8년 동안 영농 기계화, 도정 및 보관시설이 최소수준으로 꾸준히 개선되어왔다고 가정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손실분이 감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다. 따라서 수확후 손실분 처리를 위해 변화된 영농환경을 반영해 후속연구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북한도 최근 국가의 식량생산량 통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972호로 <허풍방지법>을 제정하고, 당 중앙위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2022.9.25.)는 양곡유통 및 식량생산량 통계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5장 49조로 구성된 허풍방지법은 제3장 전체를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로 규정할 정도로 식량 및 농업관련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농작물예상수확고관정에서 허풍을 방지하기 위해 ▲ 위성정보해석기술, ▲ 농작물생육모의기술, ▲ 평뜨기방법을 통해 포전별농작물예상수확고를 과학적으로 판정하고, (16조) 계량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계량수단으로 모든 농업생산물을 정확히 계량(17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지도하기 위해 내각,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국가정책을 장악(36조)하고,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직접 감독통제(39조)하고, 사안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48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4)</sup>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식량생산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가장 최근의 평가는 제8차 당대회의 농업부문 평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 (개회사)했지만, “농업부문에서는 지속된 흑심한 가물과 큰 물,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과학농사,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생산량을 전례없이 높이는 성과” (제7기 사업총화)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올곡식과 올과일생산목표 점령을 위한 2020년 사회주의경쟁총화(로동, 2020.9.27.),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전원회의 보도(로동, 2020.1.1.),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진행(로동, 2017.4.21.) 등 정치행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식량증산 실적을 공식화하고 있다.

#### 북한 식량생산 관련 공식발표

	내용	출처
2021	“농업부문의 알곡생산량을 전례없이 높이는 성과” 김정은	제8차 당대회 제7기 사업총화(로동, 2021.1.9)
2020	“과학농사열풍,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2020년) 올	올곡식과 올과일생산목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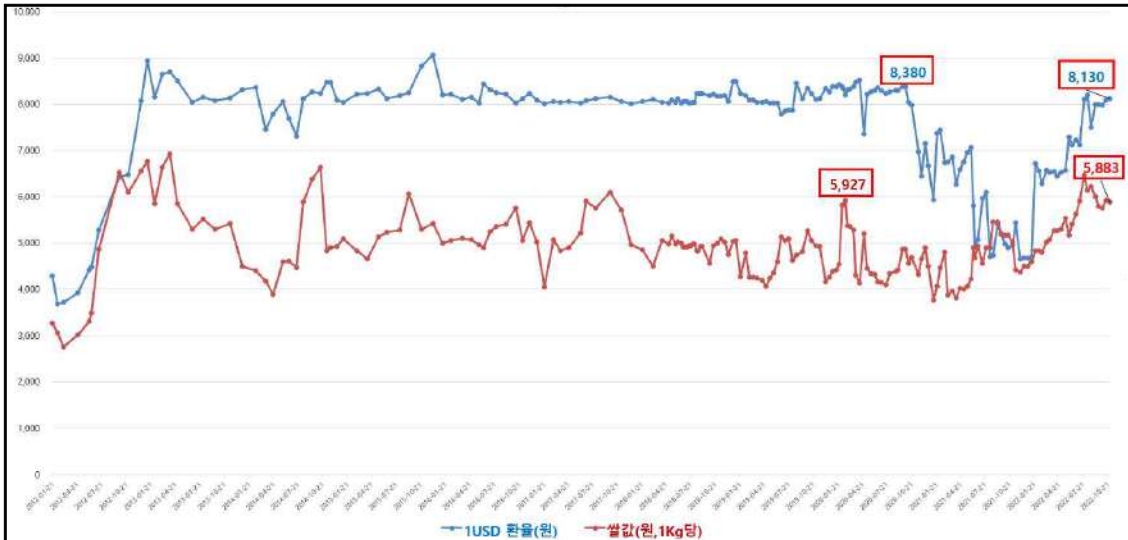
14) FAO/WFP, special report, 2003. ; 2014년 수확후 손실분 추정 연구 이전에는 총생산량의 15%를 손실분으로 처리해 왔다. ; 최근 황해남도에 지원한 군수부문의 농기계 5,500대, 금성트랙토르공장 1단계 준공은 농업노동력 수확후 손실분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 국가정보원, 『북한 법령집』, 2022. pp. 1241-1249. ; <허풍방지법>, 202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972호 채택

	내용	출처
	곡식생산계획을넘쳐 수행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령을 위한 2020년 사회주의 경쟁총화(로동, 2020.9.27.)
2019	“적대세력들의 악착한제재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고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2019년) 올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이 마련”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전원회의 보도(로동, 2020.1.1.)
2016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집중해 (2016년) 알곡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돌파하는 자랑찬성과를 이룩”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진행(로동, 2017.4.21.)

식량공급량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은 시장 쌀가격 변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현재까지 시장 쌀가격과 환율 변동 추이를 보여준다. 시기별로 가격 등락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김정일 체제와는 달리 시장을 단속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가격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정도 형성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북한 시장 쌀가격은 5,000원 내외로 등락해 왔다.

시장 물가/환율 추이(2012-2022.10월말)



※ 자료: dailynk, \* 단위: 북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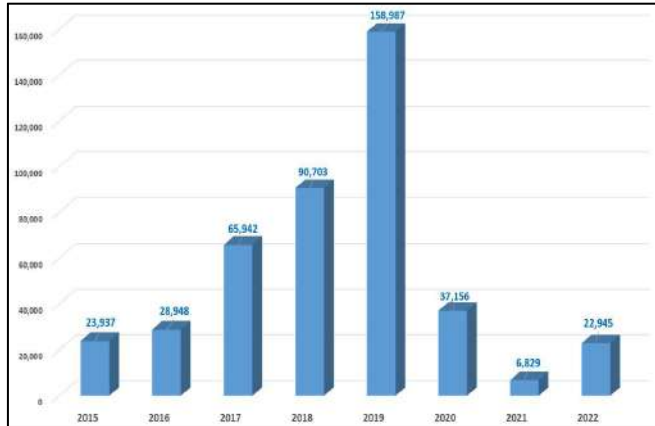
시기를 세분해서 가격 변동폭을 살펴보면 최근의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기를 크게 3시기로 구분해보자. 2022년 코로나 발생시기, 대북제재 강화시기, 김정은 집권 10년기간 등이다. 기준 가격으로 김정은 집권 10년 평균가격 대비, 2017년 하반기 대북제재 강화기에는 98.6%로 오히려 소폭 하락했고, 코로나가 발생한 2022년 5월이후 현재까지 평균가격은 17.4%가 증가했다. 최근의 가격상승 원인으로는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글로벌 곡물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그림. 국제곡물가격 추이 참조] 또 다른 이유는 북한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지역간 상품과 인력이동이 엄격히 통제되면서 시장 공급체계에 교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물론 2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최근의 가격 상승이 식량부족 때문이라면 오히려 곡물 수입액이 훨씬 적은 2021년에 식량가격이 상승했어야 했다.

기간별 평균 시장 쌀 가격

	기간별 평균가격 (상대비율)
코로나 발생시기 2022.5~2022.10	5,799 (117.4%)
대북제재 강화시기 2017.8~2022.10	4,871 (98.6%)
김정은 집권 10년 2012.1~2022.10	4,940 (100%)

※ 자료: dailynk, \* 단위: 북한 원

북한의 곡물 수입액



※ 자료: kita.net. \* 2022년은 10월 기준. \* 단위: 천달러. 곡물은 쌀, 옥수수, 밀가루, 보리, 대두 등

식량부족과 시장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아래 그래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밀가루국수와 옥수수국수의 가격 변동폭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data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두가지 상품의 가격변동은 독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밀가루국수 가격은 저점대비인 0.41 달러에서 2022년 2분기 1.64달러로 약 4배 상승했다. 반면에 옥수수국수는 저점인 0.18달러에서 최근 0.29달러로 0.6배 상승했다. 밀가루와 관련하여 위 그래프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곡물수입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수입곡물의 종류를 세분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곡물수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밀가루는 쌀을 포함해서 전체 곡물대비 월등히 높은 비율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 밀가루국수/강냉이국수가격 추이



※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각년 ※ 자료: kita.net. \* 2022년은 10월 기준. \* 단위: 천달러. \* 단위: 북한 원/달러

기타 곡물에 비해 수입비율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은 밀가루 및 관련 제품이 북한에서는 기호식품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밀농사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밀가루국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3분기에 하락하기 시작했다. 2021년 하반기 시작된 밀농사 확대에 따라 봄밀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밀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농사 확대 정책은 다음장 참조]

### 3. 북한의 농업-식량증산 ‘정책’ 은 작동하고 있을까?

북한의 식량증산이 ‘퇴보’ 했다는 평가로 돌아가보자. 북한의 산업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라면 북한 당국이 농업-식량증산 또는 먹는문제에 진심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 10년 동안 북한의 농업정책은 식량문제에 대한 인식, 정책, 제도화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가설을 기각되어야 하고, 노력은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목표로 했던 정책의 성과가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가설이 타당해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북한의 농업정책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 농업-식량증산정책



김정은 체제 10년은 농업정책 발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12년 6.13시범조치(포전담당제), ▲ 2013년 농업개발구, ▲ 농장법 개정(2012-2022년, 8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농업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할수 있는 ▲ 2019 농업발전 5대요소가 구축되었다. 더불어 농업 및 국토관리 인프라정책으로 ▲ 2020년 간석지개발 5개년계획(2020-2024)과 ▲ 2021년 치산치수전망계획(2021-2030)이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2022년 북한식 새마을운동 ▲ 농촌발전 10개년계획(2022-2031)이 추가되었다.

북한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업발전 5대요소’ 다. 2019년말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는 농업분야 정책으로 농업발전 5대요소를 채택했다. 기존의 개별적인 농업정책을 패키지화한 것이

다. 기존의 ‘6.13조치’ 를 포함해서 기존의 농업 관련 정책을 망라한 식량증산정책의 종합판을 제시한 것이다.

### 농업발전 5대요소

농업분야 정책		주요내용	
영농 과학 기술	① 육종, 품종개량 ② 연구기술 ③ 영농기술	종자혁명 과학화 수자화	- 높은 수확고, 낮은 비료 요구량, 짧은 생육기일, 각종 피해(온도, 병충해 등)에 강한 우량품종 육종 - 생물공학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육종기술 및 방법 확립 - 과학연구기관 및 기술적 토대 구축 - 적지적작, 적기적작 원칙에 따른 품종배치와 비배관리, 토지리용률, 집약화수준 강화 - 정밀농업기술 확립을 통한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 선진 영농기술, 방법 연구도입 -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활용의 습관화
농자재 보급	① 종자 ② 비료(화학/유기) ③ 농약(화학/유기) ④ 농기계, 비닐박막 등 농자재 개발 및 보급	종자, 비료, 비닐박막, 농기계	- 우량품종 및 새 품종 보급사업 개선 - 환경 영향 최소화 수준의 비료, 농약 등 영농제품 개발 도입 - 능률성 다용도성의 로력절약형 농기계 및 농자재 연구 개발 및 공급
농업 인프라	① 간석지 ② 토지정리 ③ 물길공사, 저수지, 댐 등	새땅찾기 인프라 조성	- 계획된 논벼, 강냉이재배면적 확보 - 10만 정보 간석지개간, 유실농지 원상복구 - 지방 뚝배기포함 토지정리사업 지속 추진 - 농장원 1인당 비경지 1,000포기 이상 알곡작물 심기사업
증산 영농	① 저수확지 증산기술 ② 기관·기업소 분양 ③ 수확효율화	저수확지 영농기술	- 간석지 등 저수확지의 효과적인 영농기술 개발 - 비탈밭과 모래, 자갈, 석비레발 등 저수확지의 구덩이파기, 랭습지개량, 흙깔이, 밭돌추기, 비옥도 강화 사업 - 저수확지 다수확 경험 기술경험발표회 및 일반화
증산 경쟁	① 증산경쟁요강 ② 분배 ③ 현지도(료해)	정책	- 포전담당책임제, 사회주의분배 원칙 구현을 위한 당적지도 강화 - 정보당 10t이상 알곡내기 운동을 통해 다수확단위, 농장원 배가 - 농업생산목표 수행 달성

※ 자료: “농업발전의 5 대요소에 관한 당의 사상의 기본요구,” 「로동신문」, 2019년 12월 30일. ;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농업발전 5대요소는 영농 과학화, 농자재 보급, 경지면적 확대 및 보호, 저수확지 증산, 생산의 욕 고취의 5대 영역에서 식량증산을 도모하고 있다. 분야별로 관련 정책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구체적인 정책의 성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료 생산 및 공급능력 확대를 정책으로 채택했다면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방법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량증산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정책인 비료생산 및 공급능력 확대 정책이 생산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비료는 크게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로 구성되고, 다시 화학비료는 질소(N), 인(P), 칼륨(K)의 3대 요소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화학비료는 질소비료 1종이 지탱하는 생산체제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2곳이 질소비료를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유기질 비료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상대적으로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비년도 질소비료 생산 능력(2012-2022)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2022	(9월) <b>지난해보다 높아진 비료생산계획</b> 수행에서 혁신 <sup>16)</sup> (8월) 생산계획 완수 <sup>17)</sup> (7월)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 완수 <sup>18)</sup> (2월) 비료생산계획 수행 <sup>19)</sup>	(8월) 생산계획 완수 <sup>20)</sup> 및 <b>높아진 새 시비년도계획</b> 수행 독려 <sup>21)</sup> (7월) 시비년도비료생산계획 박차 <sup>22)</sup> (5월) 생산계획 일별, 순별계획 완수 <sup>23)</sup>
2021	(10월) 비료생산계획 수행 <sup>24)</sup> (9월) 생산계획 완수 <sup>25)</sup> (7월) 시비년도 비료영농공급계획 완수 <sup>26)</sup>	(7월) 시비년도 비료영농공급계획 완수 <sup>27)</sup>
2020	(7월)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줄 비료생산 결속 <sup>28)</sup> (9월) <b>추가로 받은 계획</b> 까지 포함하여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 수행 <sup>29)</sup> , <b>영양액비료공장건설 완공(흥남액비료공장), 생산 진입</b> <sup>30)</sup>	(7월) 시비년도비료생산계획 수행위해 현행 생산 박차 <sup>31)</sup>
2019	(7월) 시비년도 영농비료생산 성과 <sup>32)</sup> (3월) 지난해 동기 대비 주체비료 증산 <sup>33)</sup>	(5월) 종전보다 하루평균 1.4배이상 증산 기록, 4월말 전년 두달분 생산량과 맞먹는 주체비료 증산 <sup>34)</sup> (3월) 지난해 동기 대비 주체비료 증산 <sup>35)</sup> (1월) 한주일동안 수천t 비료 생산 <sup>36)</sup>
2018	(8월) 설비 만가동, 만부하 보장, 주체비료생산 혁신 <sup>37)</sup>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 미달 <sup>38)</sup> (3월) 현재 하루평균 천수백t 생산실적 기록, 새 시비년도비료생산 진입해 지금까지 수십만의 주체비료 생산 <sup>39)</sup>
2017	(8월) 올해 농촌에 보내줄 비료생산 결속 <sup>40)</sup> (11월) 암모니아합성탑에 들어가는 수십t의 촉매 자체 생산보장 <sup>41)</sup>	(5월) 중순까지 지난 시기보다 2만여t의 비료 증산 성과 <sup>42)</sup>
2016	(7월)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수행 <sup>43)</sup>	(8월) 남양탄광 올해 시비년도비료생산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평남 덕천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sup>44)</sup>
2015	(5월) 올해 화학비료생산계획 무조건 수행을 위한 성과 계속 확대 <sup>45)</sup> , <b>새로운 혼합 비료생산공정건설</b> <sup>46)</sup>	(10, 11월) 비료생산계획 수행 <sup>47)</sup>
2014	(8월)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 완수 <sup>48)</sup>	(8월) 시비년도비료생산계획 완수 <sup>49)</sup>

- 16) “농업전선의 병기창에 맥박치는 전진의 숨결-지난해보다 높아진 비료생산계획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로동신문』, 2022년 9월 6일.
- 17)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8월계획 완수,” 『로동신문』, 2022년 9월 3일.
- 18)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 완수-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22년 7월 24일.
- 19) “뜻깊은 올해를 새로운 승리로 빛내일 열의 안고 힘차게 전진,” 『로동신문』, 2022년 3월 4일.
- 20)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8월계획 완수,” 『로동신문』, 2022년 9월 3일.
- 21) “화학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토대 구축,” 『조선중앙통신』, 2022년 8월 27일.
- 22) “인민경제의 많은 단위에서 하반기도 생산을 다그치며 기세 좋게 전진,” 『로동신문』, 2022년 7월 19일.
- 23)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5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조선중앙통신』, 2022년 6월 2일.
- 24) “올해 전투의 승리적결속을 위해 더 큰 분발력 발휘-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10월생산계획 완수,” 『로동신문』, 2021년 11월 3일.
- 25) “당결정을 결사관철할 기세드높이 계속 분투-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9월생산계획 완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흥과 흥남은 해마다 시비년도(전년도 8월~당해년도 7월)에 맞춰 차이는 있지만 질소비료 생산계획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최근 흥남을 중심으로 생산계획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능력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흥남과 남흥은 매년 2~3회에 걸쳐 설비보수 및 능력확장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생산능력 확장공사 내용은 보론 참조]

한편, 기존 질소비료를 증산하고, 2020년 5월 준공한 순천린비료공장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필수

- 수,” 『로동신문』, 2021년 10월 3일.
- 26)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시비년도 비료영농공급계획 완수,” 『로동신문』, 2021년 7월 22일.
  - 27)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시비년도 비료영농공급계획 완수,” 『로동신문』, 2021년 7월 22일.
  - 28)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줄 비료생산 결속-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20년 7월 21일.
  - 29) “사상전의 명증포화로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2020년 8월 12일. “45일은 걸릴것으로 타산했던 3호가스발생로습식공사는 35일만에 끝났으며 추가로 받은 계획까지 포함하여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을 제기일에 수행하였던것이다.”
  - 30) “영양액비료공장건설 완공, 생산에 진입 -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20년 9월 11일.
  - 31) “인민경제의 많은 단위에서 하반기도 생산을 다그치며 기세 좋게 전진,” 『로동신문』, 2022년 7월 19일.
  - 32) “유훈관철을 제 1 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 『로동신문』, 2019년 7월 8일.
  - 33) “주체비료와 기초화학제품생산성과 확대 - 화학공업부문에서,” 『로동신문』, 2019년 3월 4일.
  - 34) “주체비료생산에서 최고수준을 기록하고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 『로동신문』, 2019년 5월 3일.
  - 35) “주체비료와 기초화학제품생산성과 확대 - 화학공업부문에서,” 『로동신문』, 2019년 3월 4일.
  - 36) “시비년도비료생산에 박차를-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9년 2월 3일.
  - 37)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화학비료를 -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8년 8월 9일.
  - 38) “주체비료생산에서 최고수준을 기록하고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 『로동신문』, 2019년 5월 3일. “지나해 7월말, 비료생산토대 정비보강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장소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떠돌고있었다. 련합기업소가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을 미달하여 농업생산에 적지 않은 후과를 미치었던것이다.”
  - 39) “조선에서의 주체비료생산성과,” 『조선중앙통신』, 2018년 3월 20일.
  - 40) “올해 농촌에 보내줄 비료생산 결속 -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7년 8월 2일.
  - 41) “설비집중보수 성과적으로 결속 -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7년 11월 16일.
  - 42) “지난 시기보다 2만여t의 비료 증산-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7년 5월 27일.
  - 43)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 완수 -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6년 7월 18일. “암모니아합성탑의 능력개조를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촉매량을 새롭게 결정하고 랭가스관을 확장하여 암모니아를 매일 300여t이나 증산할수 있게 하였다. 국가적인 큰 투자가 없이도 현존 암모니아합성능력을 높일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이 창안도입됨으로써 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 70일전투목표를 열흘이나 앞당겨 수행”
  - 44) “국산화실현을 위해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남양탄광 일군들이 들려준 이야기,” 『로동신문』, 2016년 8월 21일.
  - 45) “비료이자 곧 쌀이다 -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5년 5월 31일.
  - 46) “우리 식의 새로운 혼합비료생산공정 확립 -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5년 3월 18일. “10여종의 설비장치물들이 짧은 기간에 제작설치되고 여러차례의 시험생산공정을 성과적으로 끝내여 마침내 혼합비료생산”
  - 47) “비료생산공정마다에 드높은 만부하의 동음-황철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떨쳐나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동계급,” 『로동신문』, 2015년 12월 22일.
  - 48) “조선속도창조기풍으로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자-시비년도비료생산계획 빛나게 수행-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4년 8월 4일.
  - 49) “시비년도비료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자랑찬 위훈-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4년 8월 7일.



소재 생산체계가 구축되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지난 6월 탄산소다생산공정의 개건현대화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시작했다.<sup>50)</sup> 로동신문은 남흥의 탄산소다생산공정은 “수백대의 설비들과 장치물을 제작하고 조립, 설치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가 계속됨으로써 탄산소다의 대규모 생산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탄산소다공정은 2018년 3월 현대화 시작이후 5년 3개월만에 종료<sup>51)</sup>되었는데, 제8차 당대회에서 “자립경제의 쌍기둥 금속과 화학공업”에 대한 재정 투자가 집중된 결과인 셈이다.

대규모 탄산소다 생산공정이 준공되면서 특히 비료생산능력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북한 농업의 숙원사업인 순천린비료공장의 △ 린비료 생산정상화와 함께 질소비료인 △ 유안(유황) 및 요소비료 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up>52)</sup> △ 질소비료와 △ 유기질비료에 이어 △ 린비료가 투입될 경우 유의미한 식량증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질소와 린비료가 제한적이지만 복합비료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합비료(21-17-17, NPK 성분비) 1톤을 추가 투입하면 쌀 증수효과는 대략 2~3톤 정도로 추정할 정도로 비료의 식량증산 효과는 절대적이다.<sup>53)</sup>

#### 강원도 안변린비료공장-문천탄산소다공장 모델<sup>54)</sup>

##### ○ 안변린비료공장-문천탄산소다공장 모델

- 2020년 12월 동시 준공한 강원도 안변린비료공장과 문천탄산소다공장 연계 생산모델은 린비료생산에 탄산소다가 필수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해줌.
- 안변린비료공장의 핵심원료인 탄산소다를 생산하기 위해 문천탄산소다공장에서 소금을 원료한 탄산소다 공정을 확립하고 생산을 정상화했다고 보도

##### ○ 린비료 생산의 핵심소재 탄산소다

- 안변린비료공장과 문천탄산소다공장의 연계를 통해 린비료를 생산하는데, “**린비료를 생산하자면 콕스와 탄산소다**”가 필수적인데, 문천탄산소다공장에서 “소금을 출발원료로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기술적으로 완비”했다는 것임.
- 안변과 문천이 26km(일반도로 기준) 근접 위치

##### ○ 안변린비료공장 조업: (2019년 대비) 린비료 2.5배 증산 토대 마련

-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강원도내 “모든 협동농장에서 린비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는데 맞게, 도에서는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생산공정들에 대한 개건”을 진행해 “소성로 1개를 더 증설하여, 소성능력을 2배”로 높였고, “자연건조에 의존하던 원료건조를 건조로 1기를 더 설치해 건조능력”을 더 높였음.(기사장 박명일)
- 그 결과 “앞으로 **린비료 생산을 지난해보다 2.5배**” 증산의 기술적 토대 마련

50) “탄산소다생산공정 개건현대화공사 결속, 시운전 진행-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22년 6월 1일.

51) “탄산소다생산공정개건 추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8년 3월 23일. ;

“희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 개건완비” 주문은 김정은 위원장 2018년 신년사 ;  
52) 순천린비료공장 준공, 인광석 개발 등 북한의 린비료산업정책은 김일한, “선군에서 인민으로, 국가정상화 전략 평가와 전망,”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학술회의자료집(2021.11.2.), pp. 102-106. 참조.

53) 권태진, “북한의 비료 수급 동향과 시사점,” 『KREI 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4월, p. 15.

54)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전진발전의 토대를 마련해가는 강원도사람들,” 『로동신문』, 2020년 12월 28일.



\* 자료: “안변린비료공장이 조업하였다” Sam jiyon, 2020. 12. 24.  
<https://www.youtube.com/watch?v=waQOvhPRI3s>

북한 농업분야가 그동안 만성적인 비료부족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은 유기질비료의 생산확대였다. 유기질비료 생산 로동신문 농업 관련 기사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주제이기도 하다. 북한 농업에서 유기질비료는 식량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만큼 유기질비료 의존도가 높다. 최근 유기비료 생산과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기질(복합)비료생산공장(기지)”의 개건(보수) 현대화와 건설이 강조되고 있다. 농장 등 개별 생산 단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던 유기질비료 생산이 국가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작한 것이다. 도, 시, 군 등 행정기관은 물론 개별 협동농장별로 ‘생산기지, 생산공장’을 개건 현대화하고 신규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늘이고 화학비료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로동신문은 2020년 전국적으로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이 건설된 결과 ▲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유기질복합비료”가 생산되었으며, 질적으로 ▲ “성분함량이 기준에 도달한 유기질복합비료” 농촌에 공급하고 있으며, ▲ “유기질복합비료공장 종업원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 “생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sup>55)</sup> 전국적으로 추진된 “유기질복합비료공장(기지)” 건설 및 개건현대화 사업은 2021년 상당수가 완공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말까지 여러 구역, 군에서 유기질복합비료공장건설이 속속 끝나고 생산에 진입” 했다는 것이다.<sup>56)</sup>

로동신문 기사는 재령군의 저수확지를 보유한 농장 사례를 보도하면서 지력을 높이기 위해 재령군 단위에서 거름, 《신양 2》호발효퇴비, 흙보산비료를 포함해서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 보급하고 있다. 특히 군의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에서는 “지난해에만도 수천의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하여 농장”에 공급해 “많은 농장, 작업반, 분조들이 다수확을 내는데 큰 작용”을

55) “질 좋은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 박차를,” 『로동신문』, 2021년 4월 24일.

56) “지역적발전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남포시에서,” 『로동신문』, 2021년 2월 28일.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sup>57)</sup> 또한 황해북도의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을 맡은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도에서는 3월 한달동안에만도 수만의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sup>58)</sup>하고 있다.

내각총리도 농사현장을 방문해 유기질복합비료공장 건설과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평안북도 “철산군, 선천군, 정주시의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방문해 비료생산을 독려<sup>59)</sup>하고, 황해남도 “도안의 유기질복합비료생산토대” 구축을 독려했다.<sup>60)</sup>

유기질복합비료공장: 2018-2022.08 북한언론 보도기준

지역	공장 및 생산기지	지역	공장 및 생산기지
강원	천내군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평북	운전군 대오협동농장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개성	개성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운전군 보석협동농장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남포	남포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정주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남포	남포시 천리마구역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평북	창성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남포	남포시 강서구역 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천마군 신시협동농장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라선	라선복합미생물비료공장	평북	철산군유기질복합비료생산공장
량강	백암군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평북	태천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량강	삼수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양	강남군유기질복합비료생산공장
자강	위원군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평양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
자강	희천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양	대동강돼지공장 유기질복합비료직장
평남	대동군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평양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남	대흥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양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 광물질살균영양제생산기지
평남	덕천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함남	고원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남	북창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함남	단천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남	숙천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함남	리원군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평남	순천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함남	북창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남	순천시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함남	신포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남	신양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함남	신흥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남	안주시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함남	영광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남	증산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함남	정평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남	평성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함남	함주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남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함남	함흥시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평남	회창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함남	홍원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동립고치생산사업소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함북	경성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정주고치생산사업소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함북	경원군 고건원오지공장 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태천고치생산사업소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함북	명간군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평북	운전고치생산사업소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함북	어랑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57) “최근년간 알곡생산을 계통적으로 장성시킨 좋은 경험-재령군일군들의 농사지도정형을 놓고,” 『로동신문』,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58)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들이 만부하를 걸었다-황해북도에서,” 『로동신문』, 2022년 4월 2일.

59) “김덕훈 내각총리 평안북도, 황해북도의 여러 시, 군을 현지료해,” 『로동신문』, 2022년 4월 3일.

60)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료해,” 『로동신문』, 2022년 4월 10일.

지역	공장 및 생산기지	지역	공장 및 생산기지
평북	구장고치생산사업소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함북	은성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운산고치생산사업소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함북	청진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구성담공장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함북	화대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곽산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함북	회령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구장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황남	과일군 고산과수종합농장 물거름생산기지
평북	녕변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황남	과일군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물거름생산기지
평북	대관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황남	배천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동림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황남	신천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황남	안악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룡천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황남	연안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박천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황남	은천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삭주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황남	재령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선천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황북	봉산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신의주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	황북	사리원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신의주담공장 유기질복합비료생산장	황북	승림시농기계작업소 유기질복합비료작업반
평북	염주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황북	승림시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평북	염주군 내중협동농장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황북	수안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염주군 룡북협동농장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황북	신계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운산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황북	연탄군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평북	운전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황북	황주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북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95개, * 2018~2022.08 보도기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비료공급 정책의 주요 변화는 3가지 측면에서 전환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당면한 변화로는 첫째, 흥남과 남흥의 질소비료 생산능력확대<sup>61)</sup>, 둘째, 순천린비료공장의 준공과 인비료 생산 정상화 추진, 셋째, 남흥의 탄산소다공정 개건으로 화학비료 증산체계 구축, 넷째, 유기질비료공장의 전국적 체계화와 통일적 관리체계 구축, 중장기 과제로 다섯째, 칼륨비료공장<sup>62)</sup>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화학비료(질소와 인)와 유기질비료(공장시스템)의 공급체계가 조직적이고 시스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화학비료(N, P, K)의 종합생산 능력과 유기질비료 생산체계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북한 농업은 또 한번 새로운 ‘변침점’을 맞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영농기계화 정책 역시 주목할 만하다. 최근 북한은 제8차 당대회 농업부문 과제로 제시된 영농기계화 강화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황해남도에 공급된 5,500대 농

61) 흥남이 ‘새로운 화학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 남흥이 ‘새로운 축매생산기지’ 건설을, 순천화학련합기업소가 ‘새로운 영양액비료공장’ 건설을 추진중이다. “난관을 박차며 올해 전투목표수행에 총매진,” 『로동신문』, 2022년 6월 28일. ; 한편,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축매생산기지”를 건설중으로 비료증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6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0년 6월 8일. ; 최근 3년간 대중 카리비료(HS 3104) 수출실적이 △ 2019 55만 달러, △ 2020 46만 달러, △ 2021 87만 달러인데, 완제품보다는 카리장석 등 원자재의 분말형태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계는 ▲ 이동식벼종합탈곡기 1,500대, ▲ 소형벼수확기 2,500대, ▲ 강냉이종합탈곡기 500대, ▲ 종합토양관리기 1,000대로 경작지에서 직접 탈곡이 가능한 농기계를 공급했다. 최근 농기계 지원은 “군수공업부문이 총궐기하여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부문들을 지원” 한 것이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공업부문이 여러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 했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 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sup>63)</sup> 그러나 최근까지 군수공업의 민수전용 사례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아왔지만, 최근 사례에 비추어 군수공업이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 등 민수경제로 전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로 2022년 농기계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 황해남도 농기계전달식(로동, 9.27), ▲ 금성 트랙토르공장 1단계 준공(로동, 11.3),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수십대 농기계 생산 결속(로동, 10.17), ▲ 청진트랙토르부속품공장, 흐름식경운기생산공정 확립, 각종 농기계용원동기생산 토대 구축(로동, 10.5), ▲ 황해남도, 천수백대의 벼종합탈곡기 능률 개조 마감단계(로동, 8.20), ▲ 청진련결농기계공장에서 소형벼수확기를 생산 추진(로동, 8.12), ▲ 삼자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 19일 감자수송용화물자동차 지원(로동, 7.20), ▲ 강계농기계공장 개건현대화, 강계트랙토르부속품공장 생산능력 확대 추진(10.3), ▲ 해주농기계공장, 지난해 가공, 조립직장건물 개건현대화(로동, 2.8)가 진행되었다. 농기계 부품 생산, 수리 등 관련 주요 동향으로는 ▲ 각급 직맹, 전국적으로 1,000개 농기계수리지원조활동(중통, 10.6), ▲ 평안북도 피현군 량책베아링공장, 농기계부품 생산 추진(로동, 9.12), ▲ 황해남도, 천수백대의 벼종합탈곡기 능률 개조 마감단계(로동, 8.20), ▲ 평안남도, 밀, 보리 수확용 농기계가동률 확대 진행(로동, 6.16), ▲ 남포시, 밀, 보리수확과 탈곡을 위한 농기계수리정비 박차(로동, 6.4), ▲ 해주농기계공장, 지난해 가공, 조립직장건물 개건현대화(로동, 2.8) 등이 보도되고 있다.

영농기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력 지원 효과와 함께 수확후 손실분을 줄이는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농기계 5,500대를 집중 지원한 이유는 평야지대이면서, 상대적으로 경지정리율이 높은 곳이 농기계 활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나아가 농기계의 효과가 높을수록 수확과정에서 손실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황해남도 농기계전달모임



\* 자료: 『로동신문』, 2022년 9월 28일.

63)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은 정책 당국의 의지와 생산자들의 신뢰에 기반해 경제적 성과가 나타난다. 특히 식량정책은 국가 내구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섬세한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북한 당국은 농업-식량증산정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의 체계화와 재정투입 등 국가 최우선 이익과제이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우선순위만큼이나 생산현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긴 산업적 특성으로 고려하면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는 만큼 성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농업정책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중국은 삼농(三農, 농업農業, 농민農民, 농촌農村)문제 즉, 농촌과 도시의 경제사회적 불규형, 영농체계의 영세성, 취약한 농촌지역의 사회보장체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19년동안 삼농문제 해결을 주문하는 중국공산당, 국무원 중앙1호 문건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식량안보, 도농간 격차 해소 등 삼농문제의 해결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이 어렵다는 절박함이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19년 동안 농업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 중앙1호 문건: ‘3농(三農, 농촌·농업·농민)’

	정책 목표	핵심 정책
2022	2022년 농촌 진흥 중점 업무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의견	* 식량안보 중요성 강조 * 19년 연속 삼농정책
2021	향촌진흥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의견	* 식량 생산량 확보
2020	포괄적 소강사회 실현을 예정대로 보장하기 위해 삼농분야 핵심업무 수행 의견	* 농업부문 금융서비스 강화
2019	농업·농촌 우선발전 견지와 삼농 업무 수행을 위한 의견	* 가정형 농가와 농민합작사 집중 지원
2018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할데 대한 의견	* 농민과 도시주민의 소득 격차 해소
2017	농촌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시키고 농업과 농촌 발전 신동력의 육성을 가속함에 관한 의견	* 농업 산업체계와 생산체계, 경영체계 최적화
2016	농업 현대화의 촉진을 통해 전면적인 소강(小康)의 현실화를 위한 의견	*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식량 생산 ‘12년 연속 증가’ 실현
2015	개혁과 혁신 폭을 확대하여 농업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할데 관한 의견	* 경제발전의 뉴노멀 진입, 농업기반 강화와 농민소득 지속증가 추진
2014	전면적인 농촌개혁 심화와 농업현대화 가속화 추진에 관한 의견	*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속도에 따른 농촌 혁신 과제
2013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와 농촌발전 활력 증진에 관한 의견	* 농산물 공급보장 메커니즘 구축, 강농 해농 부농 정책강화
2012	농촌과학기술 혁신 추진 강화와 농산물공급 보장능력 지속 강화에 관한 의견	* 과학기술 현대농업 건설 농업지원 강화
2011	수리개혁 및 발전을 가속할 것에 관한 결정	* 수리기초시설 인프라건설 전면 가속화
2010	도시와 농촌 통합발전 강화 및 농업, 농촌발전 기초강화에 관한 의견	* 농촌 민생개선, 도농간 공공서비스 격차 축소
2009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의견	* 농업 지원 및 보호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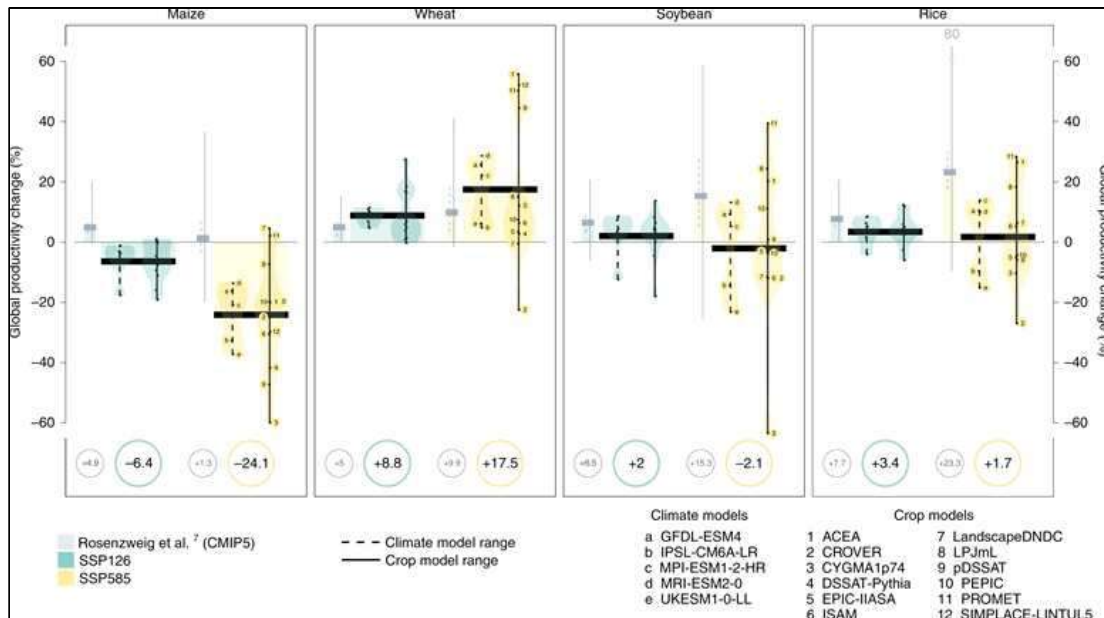


	정책 목표	핵심 정책
2008	농업의 기초 건설 강화, 농업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의견	* 농업기초강화를 위한 장기효과메커니즘 구축 가속화
2007	현대농업의 적극적인 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에 관한 의견	* 삼농투자강화 강화로 현대농업 건설 촉진 투자보장 메커니즘 구축
2006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관한 의견	*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공동발전추진
2005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농촌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정책적 의견	* 농촌지원정책 안정화로 농민의욕 고취
2004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정책적 의견	* 식량산업발전 역량 집중으로 농가소득 증대 촉진

※ 자료: 중국공산당, 국무원 공동 1호문건. 각년도.  
\* 주: 1982-1986년 5년 삼농문제 중앙1호문건 발표

#### 4. 글로벌 기후변화에 북한농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글로벌 곡물생산체계 변화



※ 자료: Jonas Jägermeyr. *NATURE FOOD*. VOL.2. NOVEMBER 2021.  
\* 주1. ■ 2014년 추정결과, ■ 저탄소 시나리오, ■ 고탄소 시나리오  
\* 주2. Climate Model, [예시, GFDL-ESM4: 프린스턴대학 지구물리유체역학연구소(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GFDL) 지구시스템모델 4(Earth System Model version 4, ESM4)]  
\* 주3. Crop Model, [예시, ACEA, 옥수수 종자]

2021년 10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고다드연구소<sup>64)</sup>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sup>65)</sup>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유지된다면 2030년까지 글로

64)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GISS는 Columbia University Earth Institute와 제휴한 NASA의 Goddard 우주비행센터 지구과학부문 실험실

65) Jonas Jägermeyr..., Climate impacts on global agriculture emerge earlier in new generation of

별 옥수수 생산량은 24% 감소하고, 밀 생산량은 17%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정 작물의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식량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연구결과는 포함하고 있다.

2021년 연구결과는 2014년 연구를 연장한 것인데, 2014년 당시에는 연구결과는 옥수수와 밀 생산량이 각각 1%, 9% 증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옥수수는 현재 적도 인근 지역에서 대량생산되는데, 북중미, 서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브라질 등이 미래에 기온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밀은 현재 미국 북부, 캐나다, 중국 북부, 중앙아시아, 호주 남부 및 동아프리카 등 온대기후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온이 상승할수록 밀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21세기 중반에는 재배 면적 확대가 중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북한의 농업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가뭄, 폭우, 폭풍, 폭염 등이 발생하면 대응이 쉽지 않고, 작물 성장에도 피해가 발생한다. ‘재해성 이상 기후’에 대응한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시정연설(2021.9.21.)에서 드러난다. ▲ 작물 품종의 배치와 파종시기 조절, ▲ 선진 영농기술과 방법 연구 적용, ▲ 과학적 물관리체계 수립, 관개 구조물과 설비·저수지·물길의 정비·보강, ▲ 기상 관측수단의 현대화 등이다.

주목할 부분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밀농사 확대정책이다. 시정연설이후 밀 재배 면적이 2배 이상 확대되었다. 그런데 밀농사 확대 정책은 기존의 ‘옥수수 농사를 제한’하는 조건에서 ‘알곡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식량증산 정책과는 차이가 드러난다. 북한 사회과학원의 『사회과학원학보』 2022년 1호는 김정은 위원장의 인용문을 통해 밀농사 확대가 기존 곡물생산구조를 유지하면서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작물배치에서 강냉이농사는 최대한 제한하고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에 의해 방향전환”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66)</sup> 더불어 최근 수정된 북한 ‘농장법’ 제5조 역시 “농작물배치에서 강냉이농사는 최대한 제한하고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에 의해 방향전환을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7)</sup>

더불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2022.1.1.)에 또 다시 밀농사 확대 정책을 확인하고 있는데, ‘세계농업발전 추세’에 맞게 향후 ‘10년 동안 알곡생산목표 제시’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는 것이다.

밀 농사 확대 정책의 사업추진 배경 및 목표는 첫째, 인민의 식생활개선(백미와 밀가루 보강), 둘째, 밀 증산을 통한 식료공업, 경공업 원료 자립 강화, 셋째, 옥수수 대비 밀, 보리의 유리한 생물학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8)</sup>

한편, 기후변화, 즉 대기온도 상승은 북한 농업에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작용한다. 대기온도 상승은 중부 이남에서만 생산하던 작목이나 품종의 식재가 북한 지역에서도 가능해지기 때문

climate and crop models. *NATURE FOOD*. Vol.2. 11 2021.

66) 리성영, “현시기 농업부문에 알곡생산구조를 바꾸는데서나서는 중요문제,” 『사회과학원학보』, 2022.1호. pp. 15-18.

67) 국가정보원, 『북한 법령집』, 2022. pp. 1077-1078. ; 2021년 1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78호 농장법 개정

68) 리성영, 2022.1호. pp. 15-18.



이다. 작물의 이모작이나 밭작물의 다모작도 확대할 수 있다. 농업용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농업에서 준비하려는 대응책들도 장기적으로는 실행에 옮길 수 있으므로 이들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sup>6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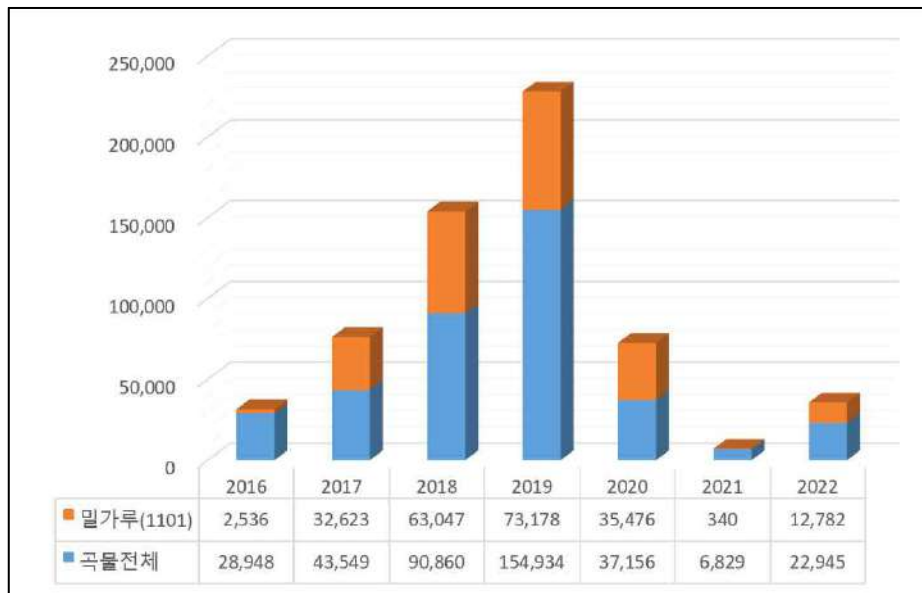
#### 북한의 밀농사 재배 면적 확대 추진 과정

	내용
2021년 하반기	밀,보리 재배면적 2배 확대
2021년 10월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마감
2022년 상반기	밀,보리재배적지 선정
2022년 7월중순	봄 밀,보리 추구 마감
2022년 10월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마감

※ 자료: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밀 증산정책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시장에서는 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식량이 쌀과 옥수수로 편중된 환경에서 시장의 밀 수요가 증가했고, 대북제재, 코로나 무역봉쇄 등의 영향으로 공급능력이 약화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2016년 이후 북한의 밀가루 수입액은 쌀을 포함한 기타곡물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곡물수입량이 줄어는 상황에서도 밀가루는 전체 곡물수입량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수입되고 있다.

#### 곡물/밀가루 수입 추이



※ 자료: kita.net. \* 2022년은 7월 기준. \* 단위: 천달러.

69) 김영훈, “이상기후와 북한농업, 그리고 협력과제,” 『북한농업동향』, 22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9. p. 9.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식량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목할만한 사실을 보여준다. 즉, 밀제품 가격상승이 식량부족과는 상관관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인데, 밀의 대체품인 옥수수 가격은 보험세를 유지하는 반면, 기호품인 밀가루 가격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으로 7월까지 매월 수입된 품목이 밀가루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sup>70)</sup>

2022년 월별 밀가루 수입액

1	2	3	4	5	6	7	계
2,214	1,536	512	3,731	847	2,886	1,056	12,782

※ 자료: kita.net. \* 단위: 천달러

따라서 밀 증산정책은 인민들의 밀가루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정책적 대응인 셈이다. 북한 당국은 2021년 하반기부터 밀, 보리 증산을 위해 ‘밀, 보리 파종면적을 2배이상 보장’ 함으로써 ‘흰쌀과 밀가루로 식생활을 개선’ 하기 위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에 전국적으로 밀, 보리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7배 확대’ 되었고, 2022년에는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2022년 7월 전국적으로 밀, 보리수확 실적이 98%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022년 7월 16일).

더불어 2022년 정책 추진 1년을 맞아 전국적인 밀농사 성과를 보도하면서 전국적으로 밀가공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밀 가공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지역마다 량곡판매소를 설치해 밀가공품을 신속하게 판매’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71)</sup> 시장의 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입량을 늘이는 한편,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가공품 생산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 스스로도 대규모 밀농사 확대를 위해 준비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앞그루 밀보리 종자 확보 문제, 지력보강을 위한 비료 투입량 문제, 두벌농사용 물 및 관개시설 문제, 기계화 영농 관리체계 문제, 생산작물 보관 및 가공처리 문제 등이라는 것이다.

70) 2년여 만에 최근 재개된 북러 화물열차를 통해 수입된 물품은 “밀, 식용유, 치즈 등 식료품과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등 에너지 제품” 이라 알려지고 있다. “北, 러시아서 식료품 등 들여와…갑자기 왜 화물열차 재개했나,” dailynk. 2022년 11월 21일.

71) “당정책관실에서 진일보를 내짚기까지-밀농사와 밀가공에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온 함주군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22년 11월 5일. ; 평안남도 덕천시의 경우, 올해 앞그루밀농사면적 3배 확대, 생산계획 150%이상 수행 성과(로동, 10.26) ; 한편,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식료공업상을 평양곡산공장 지배인(2010-2021) 출신 박형렬을 임명했다.

### 함경남도 함주군 밀가공 공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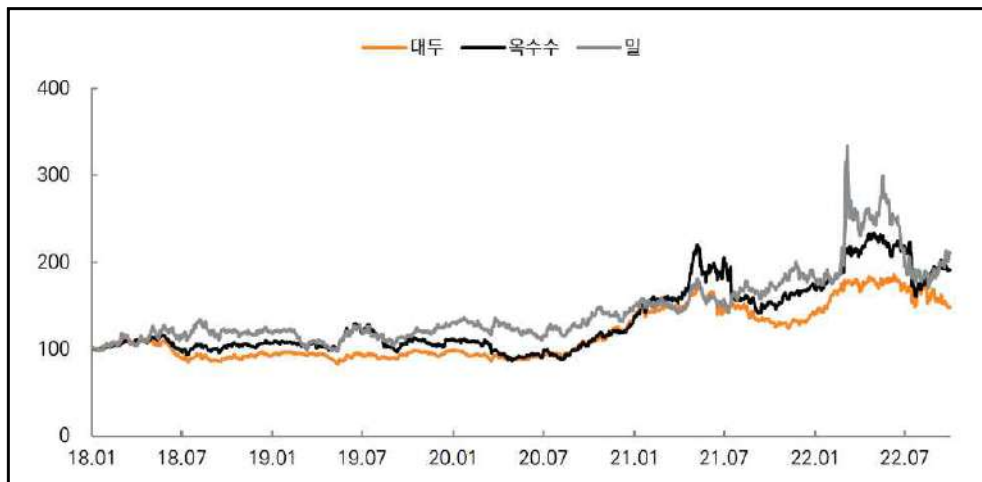


※ 자료: 『로동신문』, 2022년 11월 5일. 함경남도 함주군 밀가공시설 설치

## 5. 글로벌 식량가격과 비료가격 상승은 북한 농업에 기회일까 도전일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곡물가격 상승과 비료 쇼티지(Global chemical fertilizer Shortage)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곡물가격의 급상승과 가격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은 인구증가와 글로벌 국제정치의 위기이다.

### 국제 곡물가격 변동 추이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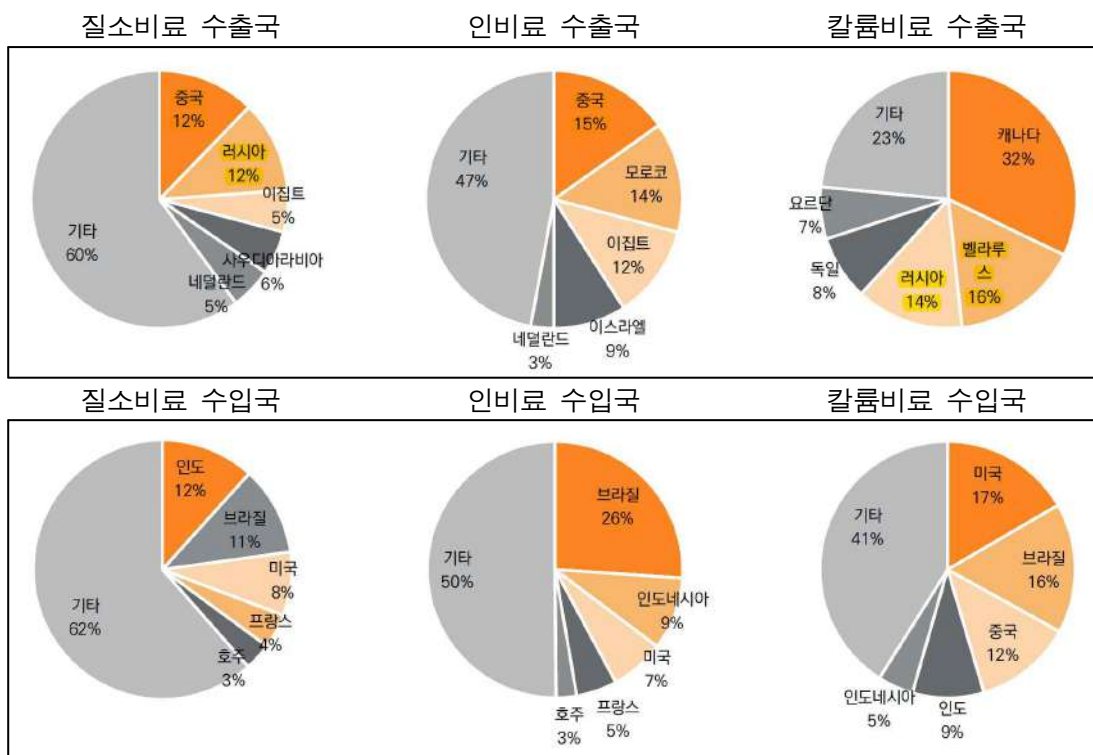
UN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인구는 2022년 11월 15일 80억명으로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2086년 104.3억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72)</sup> 이러한 인구 증가는 식량용 곡물을 포함해 육

72) UNFPA, World set to reach 8 billion people on 15 November 2022. 11 July 2022.

류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료곡물 비중의 증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로는 최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비료가격 상승과 변동성 확대 현상이다. 글로벌 비료수요에 공급 능력이 약화되면서 비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곡물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는 곡물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알려진 변수라는 점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전쟁 때문에 발생한 비료수급 문제는 글로벌 식량생산 및 공급체계에 심각한 교란현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의깊은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sup>73)</sup>

글로벌 3대 주요 비료 수출국/수입국(2020년 기준)



\* 자료: OEC

글로벌 비료산업은 대표적인 정채산업으로, 단위 면적당 비료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비료생산 증가율은 지난 40년간 연평균 1.2%(총 62%)에 불과했다. 심지어 2000년대 이후 전체 농지면적은 줄어들고 있고, 단위 면적당 비료 사용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 생산량은 정체되고 있는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추가적인 생산이 어려운 대표적인 산업으로

www.unfpa.org/press/world-set-reach-8-billion-people-15-november-2022  
 73) 글로벌 비료 생산 및 가격변동 추이는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 산업동향 자료를 활용했다. 서병수, “NEW CONVERGENC, 비료산업, 지정학/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환골탈태,” GLOBAL INDUSTRY ANALYSIS, 미래에셋증권, 2022.9.30. ; 미래에셋증권 보고서는 글로벌 비료 쏠티지현상의 여파가 주식 등 자산시장의 투자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비료산업과 식량가격 변동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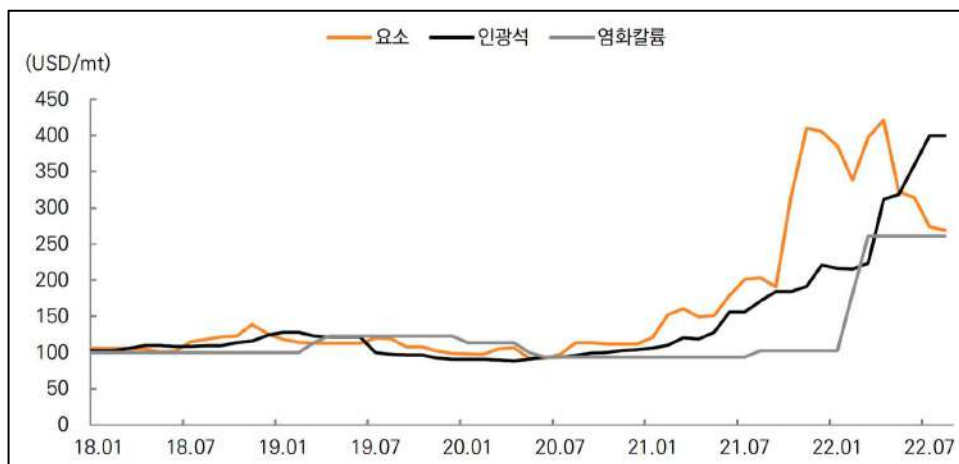
분류된다.

2020년 비료의 국제 거래액은 총 626억 달러로 전세계에서 47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상품으로, 생산의 관점화가 높아 무역에 의한 관세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 등 환경변화에 따라 수급에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는 상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74)</sup> S&P 글로벌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비료 수출량은 총 2억 2,400만 톤이고, 전세계 수요는 총 4억 9,700만 톤으로 전세계 수요의 약 45% 가량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다.<sup>75)</sup>

글로벌 비료의 ▲ 수출 상위국가는 러시아(76억 달러, 12.1%), 중국(70억 달러, 11.2%), 캐나다(55억 달러, 8.8%), 모로코(37억 달러, 5.9%), 미국(37억 달러, 5.9%) 순이며, ▲ 수입 상위국가는 브라질(78억 달러, 12.5%), 인도(65억 달러, 10.4%), 미국(53억 달러, 8.5%), 중국(26억 달러, 4.2%), 프랑스(18억 달러, 2.9%) 순이다. 특히 지역별 매장량 편차가 큰 칼륨이나 인비료 보유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비료의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상위 국가로 랭크되기도 한다.

글로벌 비료가격 변동성은 2021년부터 발생했는데, S&P 글로벌은 2021년 1차 비료 수요의 가치가 2,310억 달러로 직전연도(1,150억 달러)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비료수요 증가 원인은 “식량안보의 필요성 같은 수요 요인” 과 “용량 및 에너지 비용 증가와 같은 공급 요인” 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가뭄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국제곡물시장의 수급 변동성 확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질소와 인비료의 주요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비료 대표제품 가격추이(2018-2022.8월)



\* 자료: The World Bank

북한은 최근까지 질소비료 1종을 중심으로 식량생산체계를 유지해왔다. 즉, 북한 농업은 질소비료와 유기질비료를 중심으로 식량을 생산해 왔고, 인비료, 칼륨비료는 품질이나 생산량에서 산업적인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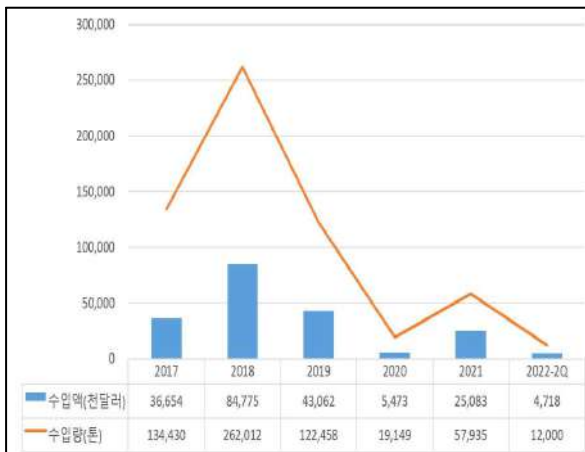
74) OEC(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는 국제 무역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

75) 단, 이 수치는 암모니아와 황 그리고 인산염 암석과 같은 비료 중간체의 거래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런 비료 중간체 거래량은 별도로 약 1억 톤 이상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실질 거래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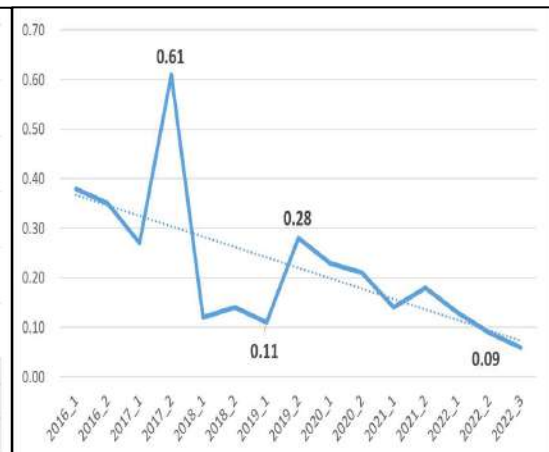
2020년 5월 순천린비료공장이 준공했지만 최근까지 전국적인 인비료 수요를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적 규모의 칼륨비료공장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 비료산업의 경제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첫째, 질소비료 원료문제와 둘째, 인, 칼륨비료 원료의 매장량에 따른 산업적 성장 가능성이다. 먼저, 북한은 질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해 천연가스가 아닌 국내에서 생산하는 석탄이나 갈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쇼티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암모니아 생산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지만 북한은 석탄가스화를 통해 암모니아를 생산해왔는데, 외화부족, 경제제재, 자립화 이데올로기 등의 요인에 의해 천연가스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석탄가스화를 통한 자력갱생식 비료생산이 글로벌 쇼티지(Global chemical fertilizer Shortage) 상황에서 오히려 질소비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역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비료 수입 추이



시장 질소비료 가격 추이



※ 자료: kita.net. \* 2022년 2Q 기준.

※ 자료: 『북한농업동향』 \* 단위: 북한 원/달러

북한 비료산업과 관련해 주목할 또 다른 변수는 인비료와 칼륨비료의 원료인 광석 매장량이다. 질소비료가 질소분해와 암모니아 등 화학적 방법을 통해 생산된다면, 인비료, 칼륨비료는 매장광물을 통해 비료가 생산되는 특성을 가진다. 인비료 원료인 북한의 인광석/인회석 매장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지만,<sup>76)</sup> 관련 기술의 낙후와 장비 부족,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광물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칼륨비료의 원료인 카리장석 등 경제성을 갖춘 관련 광물의 매장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초보적인 수준인 분쇄물을 중국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sup>77)</sup>

76) 고상모, ‘북한 광문자원의 부존 및 개발현황,’ “북한자원NewsLetter,” vol.66.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4.08.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추정하는 북한의 인회석 매장량은 1억 5천만~3억3천만톤이다. 참고로 미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인광석 매장량은 685억톤이며, 남한은 비료용 인광석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77) HS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비료산업 발전 가능성으로 높아 보인다. 현재 질소비료 공장인 홍남과 남흥이 생산능력확대사업을 매년 추진되고 있고<sup>78)</sup>, 순천린비료공장이 생산을 정상화하고,<sup>79)</sup>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카리비료공업을 창설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시급히 해결” 하고<sup>80)</sup> 카리비료공장을 건설한다면 북한의 비료산업과 식량생산체계는 한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러시아-벨라루스 등 우호국의 비료산업에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북한의 화학비료 수출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질소비료 수출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2% 비중으로 전체 시장에서 24%, ▲ 인비료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15%, ▲ 칼륨비료 수출시장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각각 16%, 14% 비중으로 글로벌 비료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월 중국은 29종의 주요 비료품목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단행했는데,<sup>81)</sup> 글로벌 비료 쇼티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질소와 인비료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국제 비료시장의 수급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비료가 국제제재로 수출중단되면서 글로벌 비료 공급망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유럽의 주요 비료생산공장은 현재 대부분 조업을 중단한 상태다. 전세계 암모니아 거래의 1/3 생산능력을 갖춘 세계 정상급 비료회사인 노르웨이 야라(Yara), 독일 바스프(BASF), 영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미국 기업 CF 인더스트리스(CF Industries Holdings) 등 유럽 주요 공장의 조업이 2022년 하반기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재료는 천연가스 쇼티지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북한에게는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이 국내 비료 생산 및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급상황에서 우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 북한 농업정책은 잠재력과 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을까?

고난의 행군이후 북한의 국제사회에 식량위험국가로 낙인찍혔다. 식량증산 정책을 추진해도,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도 ‘북한에서는 식량난’ 이 발생한다. 농업정책의 특성상 가시적인

78) ▲ 홍남비료연합기업소: 2014-2022년까지 17회 생산공정신설, 생산능력확장, 정비보수진행, 2015.5월, 새로운 혼합비료생산공정건설, 2020.9월, 홍남액비료공장완공과 추가로 받은 계획 수행, 2022. 9월, 지난해보다 높아진 비료생산계획수행 등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2014-2022년까지 14회생산공정신설, 생산능력확장, 정비보수진행, 2022.8월, 대규모 탄산소다생산공정 준공, 높아진 새 시비년도계획수행 등 ;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 기준

79)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최근 준공한 탄산소다 생산공정(2022.6.1.)은 순천린비료 생산에 주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80) 당 중앙위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2020.6.8.)

81) KOTRA 해외시장뉴스, “중국, 비료 및 요소 수출제한 조치 시행,” (2021-11-01) ; 수출 규제 강화 29종 비 품목(HS 10단위 기준, 2022년 10월 15일), ▲ 비료용 염화암모늄(HS 2827.1010.00), 질소비료(HS 3210) 중 요소, 질산암모늄, 질산칼슘 비료 등(HS 3102.10.00.10, HS 3102.10.00.90, HS 3102.30.00.00, HS 3102.40.00.00, HS 3102.60.00.00, HS 3102.80.00.00, HS 3102.90.90.00), ▲ 인산비료(HS 3103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 칼륨비료(HS 3104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946909/index.htm>

성과는 장기성을 띤다. 그러나 부문별 성과변화는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 농업정책이 잠재력과 위험요인을 동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글로벌 이슈가 북한 농업정책을 또한 위협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옥수수 농사를 줄이면서 밀농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대북제재와 무역축소 상황에서 글로벌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비료 쇼티지(Global chemical fertilizer Shortage)에 우회할 수 있는 중-러 등 우호국 정치에 힘을 쏟고 있다.

### 북한 식량증산정책의 잠재력과 위험요인

Potential	goal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국가 최우선과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당대회이후 정책 우선순위 유지</li> </ul> </li> </ul>	<b>식 량 증 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2년연속 국가재정능력 정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지출 증가를 둔화, 투자재원 부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자재) 비료/농기계 공급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소비료 증산, 린비료 생산, 칼륨비료공장 건설</li> <li>• 농기계의 군수부문 민수지원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제재) 금속/화학부문 중간재 조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비료 생산 역량 축소</li> <li>• 농기계 등 금속공업 발전 부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개선) 국토관리사업, 관개농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관개시설 2~3년내 완비</li> <li>• 국토관리, 치산치수, 새땅찾기 지속</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축소) 무역수지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비료 수입 축소</li> <li>• 기초식재료, 가공품 소재 부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곡생산구조) 밀농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대응 밀농사 확대, 옥수수농사 축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가격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물가격 상승, 수입능력 약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기술) 농업과학기술 개발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개발, 영농기술 투자 지속</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영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풍 발생빈도 증가, 연중 태풍 발생</li> <li>• 인프라 개선 역량 부족</li> </ul> </li> </ul>

/끝/



[보론]

## 질소비료공장 시설보수 및 생산능력 확장공사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2022	(9월)▲암모니아합성탑 랭가스공급계통 증설 사업, ▲25t증기보일러 전열분포 사업 추진, ▲1호발생로 반수성가스 증산 기술개조 진행 <sup>82)</sup> (8월)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혼합가스압축기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설치 시운전 <sup>83)</sup> (5월)2합성직장 압축기 증설 추진 <sup>84)</sup>	(8월)대규모 탄산소다생산공정 준공, <b>높아진 새 시비년도계획</b> 수행 독려 <sup>85)</sup> (7월)축매생산공정 건설, 노소합성공정 증설, 일부 생산공정 기술개조 <sup>86)</sup> (5월)▲새로 증설한 탄산가스압축기 정상가동 무부하시운전 보장, ▲혼합가스압축기 무부하시운전준비 박차 <sup>87)</sup>
2021	(11월)비료생산계획수행, 능력확장공사,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기지건축공사, 축매 국산화실현 물질기술적토대축성사업 진행 <sup>88)</sup> (6월)능력확장공사 독려 <sup>89)</sup> 방대한 능력확장공사, ▲3기의 가스발생로 동시운전, ▲원심순환압축기 3대 동시운전, ▲산소분리기 1,2호 동시운전 등 생산에 진입 <sup>90)</sup>	(6월)능력확장공사 독려 <sup>91)</sup> (7월)축매 국산화 추진 <sup>92)</sup>
2020	(7월)비료생산능력확장을 위한 3호가스발생로건설 완료 <sup>93)</sup>	(12월)질소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 마감단계 추진 <sup>94)</sup> (11월)설비집중대보수 결속 <sup>95)</sup>
2019	(1월)현존 설비와 기술공정들을 에너지기절약형, 로력절약형으로 개조 추진 <sup>96)</sup>	(1월)저탄장확장공사, 15,000m <sup>3</sup> 가스탱크증설, 재처리콘베아설치 등 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 추진 <sup>97)</sup>
2018	(2월)암모니아합성축매재생공정, 탄산가스정밀탈류축매생산공정, 물정제용 이온교환수지 재생공정 기술관리 개선 추진 <sup>98)</sup>	(10월)방대한 대보수공사 열흘이상 앞당겨 종료 <sup>99)</sup> (8월)한개 계열의 비료생산공정대보수 결속 <sup>100)</sup>
2017	(10월)방대한 설비집중보수 성과, ▲암모니아합성탑대보수, ▲대형압축기배관교체 등 100여개소 설비보수 및 설비장치물제작 설치 성과 <sup>101)</sup> (4월)공업기술연구소, 컴퓨터와 수십종의 실험용시약들, 실험기구보장으로 물정제용페이온교환수지를 소금물과 류산으로 완전재생리용할수 있게 하는 연구성과 <sup>102)</sup>	(2월)발생로급탕기 제작, 12m갱질관 설치 등 설비제작 보수 <sup>103)</sup>
2016	(8월)설비집중대보수와 무연탄가스화공정건설 추진 <sup>104)</sup>	방대한 주체비료생산공정대보수 및 능력확장공사 결속 <sup>105)</sup>
2015	(12월)비료생산공정의 방대한 설비집중대보수 결속, ▲암모니아합성탑개조에 필요한 랭가스관제작용 직곡관과 삼지관제작, ▲노소직장에 과립노소생산공정 새로 조성, ▲발생로직장 고온회리통 개조 <sup>106)</sup> (12월)룡성기계연합기업소, 설비집중대보수 여러 대상설비생산과제 수행 <sup>107)</sup> (5월) <b>새로운 혼합비료생산공정건설</b> , 석탄가스화공정을 거쳐 생산된 노소비료에 비석과 카리, 규소 등 미량원소혼합비료 <sup>108)</sup>	(12월)▲ 발생로1,2직장 설비대보수, ▲ 성형직장의 건조로와 성형기, 가스청정직장의 탈류액탱크 개조 대보수 등 짧은 기간에 두 계열의 생산공정 완벽 보수정비 <sup>109)</sup>
2014	(11월)탈류탑대보수, 탈류액분사 우리식으로 개조 완성, 올해 연속 두차례 걸쳐 단계별로 완수, 산소분리기의 전기가열기 우리식 개조 추진 <sup>110)</sup> (10월)상순까지 가스화공정과 물전해공정 등 방대한 설비집중대보수 <sup>111)</sup>	(11월)가스발생로계통 새 기술도입으로 가스발생능력 성과, 대보수대상100여개 중요생산공정 및 설비 증설 완수 <sup>112)</sup>

82) “농업전선의 병기창에 맥박치는 전진의 숨결-지난해보다 높아진 비료생산계획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로동신문』, 2022년 9월 6일.

83) “홍남비료연합기업소에 대형압축설비를 제작하여 보내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로동신문』, 2022년 8월 23일. “시간당 많은 량의 혼합가스를 압축할수 있는 대형설비의 제작은 홍남의 비료생산능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84) “능력확장된 생산공정들의 활성화를 위해 분투,” 『로동신문』, 2022년 5월 9일.

- 85) “화학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토대 구축,” 『조선중앙통신』, 2022년 8월 27일.
- 86) “현존생산토대강화와 새 능력조성사업 추진,” 『조선중앙통신』, 2022년 7월 25일.
- 87) “능력확장된 생산공정들의 활성화를 위해 분투,” 『로동신문』, 2022년 5월 9일.
- 88) “기간공업부문의 앙양된 기세는 총진군대오에 큰 힘이 된다,” 『로동신문』, 2021년 11월 24일.
- 89)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군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과업관철을 위해 분발,” 『로동신문』, 2021년 6월 23일.
- 90) “능력확장된 생산공정들의 활성화를 위해 분투,” 『로동신문』, 2022년 5월 9일.
- 91)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군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과업관철을 위해 분발,” 『로동신문』, 2021년 6월 23일.
- 92) “홍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시비년도 비료영농공급계획 완수,” 『로동신문』, 2021년 7월 22일.
- 93) “사상전의 명중포화로 - 홍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2020년 8월 12일. “45일은 걸릴것으로 타산했던 3호가스발생로습식공사는 35일만에 끝났으며 추가로 받은 계획까지 포함하여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을 제기일에 수행하였던것이다.”
- 94) “질소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 마감단계에서 추진,” 『로동신문』, 2020년 12월 7일.
- 95) “80일전투의 20일이 흘렀다, 앙양된 기세로 련속공격 앞으로!,” 『로동신문』, 2020년 11월 1일.
- 96) “과학교육부문, 인민경제 중요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쫓기모임 진행,” 『로동신문』, 2019년 1월 12일.
- 97) “목표는 높이, 실천은 완강하게 - 화학공업부문에서,” 『로동신문』, 2019년 1월 20일.
- 98) “비료생산성과 계속 확대 -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8년 2월 22일.
- 99)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주체비료생산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로동신문』, 2018년 10월 2일.
- 100) “한개 계열의 비료생산공정대보수 결속, 생산에 진입-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8년 9월 4일. “크고작은 수많은 화학장치물들과 관망들, 고층살림집을 련상케 하는 10여대의 발생로들과 원료계통 등에 대한 대보수작업량은 방대하였다.”
- 101) “설비집중보수 성과적으로 결속 -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7년 11월 16일.
- 102) “올해 농촌에 보내줄 비료생산 결속 -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7년 8월 2일.
- 103) “자강의 길만이 흥하는 길이다-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로동신문』, 2017년 2월 5일.
- 104) “만리마속도창조의 선봉투사로,” 『로동신문』, 2016년 8월 30일.
- 105) “주체비료증산의 동음 높이 올리리,” 『로동신문』, 2018년 1월 4일.
- 106) “설비집중대보수 결속,비료생산 시작 -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5년 12월 11일.
- 107) “영웅적로동계급의 위력을 과시할 열의안고 -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기술자들,” 『로동신문』, 2015년 12월 16일.
- 108) “우리 식의 새로운 혼합비료생산공정 확립 -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5년 3월 18일. “10여종의 설비장치물들이 짧은 기간에 제작설치되고 여러차례의 시험생산공정을 성과적으로 끝내여 마침내 혼합비료생산”
- 109) “비료생산공정마다에 드높은 만부하의 동음-황철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펼쳐나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동계급,” 『로동신문』, 2015년 12월 22일.
- 110) “홍남과 남흥의 주체비료생산지에서 타오른 비약의 불길,” 『로동신문』, 2014년 11월 21일.
- 111) “설비집중대보수 결속, 비료생산 시작 -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신문』, 2014년 10월 27일.
- 112) “홍남과 남흥의 주체비료생산지에서 타오른 비약의 불길,” 『로동신문』, 2014년 11월 21일.

## 참고문헌

- 강택구, 정기웅, 홍윤근, 김일기, 이준호,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KEI 사업보고서, 한국환경연구원, 2021.
- 고상모, ‘북한 광문자원의 부존 및 개발현황,’ “북한자원NewsLetter,” vol.66.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4.08.
- 국가정보원, 『북한 법령집』, 2022.
- 권태진, “[북한 식량수급 전망] 북한, 춘궁기 식량 위기 어떻게 넘기나?” 북한 2020 4월 통권 580호, 2020, pp. 54-59.
- 권태진,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KDI 북한경제 리뷰』 2021년 5월호.
- 권태진, “북한의 비료 수급 동향과 시사점,” 『KREI 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4월.
- 김경민 외,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북한산림정보 구축 방법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2020.
- 김영훈, “이상기후와 북한농업, 그리고 협력과제,” 『북한농업동향』, 22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9.
- 김영훈, “이상기후와 북한농업, 그리고 협력과제,” 『북한농업동향』, 22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9.
- 김일한, “선군에서 인민으로, 국가정상화 전략 평가와 전망,”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학술회의자료집(2021.11.2.)
- 리성영, “현시기 농업부문에서 알곡생산구조를 바꾸는데서나서는 중요문제,” 『사회과학원학보』, 2022.1호.
- 박성열, 한지만, 정원희, “북한의 식량위기론: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 비교 분석 -FAD와 FED 접근법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vol 91. 2022.
- 서병수, “NEW CONVERGENC, 비료산업, 지정학/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환골탈태,” GLOBAL INDUSTRY ANALYSIS, 미래에셋증권, 2022.9.30.
- 이규창 외,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1, 통일연구원, 2020.
- 이규창 외, “북한인권백서 2020,” 통일연구원, 2020.
- 이규창 외, “북한인권백서 2020,” 통일연구원, 2020.
- 이용희,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식량 위기와 대책,” 통일전략, vol 21, no 2, 2021.
- 이지선, “북한의 식량난과 당국 대응에 대한 평가,” 이슈브리프 39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9.
- 전동진, 김익재 외, “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과 정책방향 연구(Ⅲ),” KEI 기후환경정책연구 2021-01, 한국환경연구원, 2021.

정은이 외,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KINU 연구총서 21-33, 통일연구원, 2021.

최용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KREI 농정포커스, 193호, 2020.11.

KOTRA 해외시장뉴스, “중국, 비료 및 요소 수출제한 조치 시행,” (2021-11-01) 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21.

FAO/WFP, special report, 2003.

Global Network Against Food Crises,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2021*, 2021.

Jonas Jägermeyr···, Climate impacts on global agriculture emerge earlier in new generation of climate and crop models. *NATURE FOOD*. Vol.2. 11 2021.

UNFPA, World set to reach 8 billion people on 15 November 2022. 11 July 2022. [www.youtube.com/watch?v=waQOvhPRl3s](http://www.youtube.com/watch?v=waQOvhPRl3s)

[www.kita.net](http://www.kita.net). The World Bank, 블룸버그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VOA, 자유아시아방송, dailynk

제6회의

#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현황과 과제

사회: 진희관(인제대학교)



# 강원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현황과 과제



송영훈(강원대학교)

박아름(강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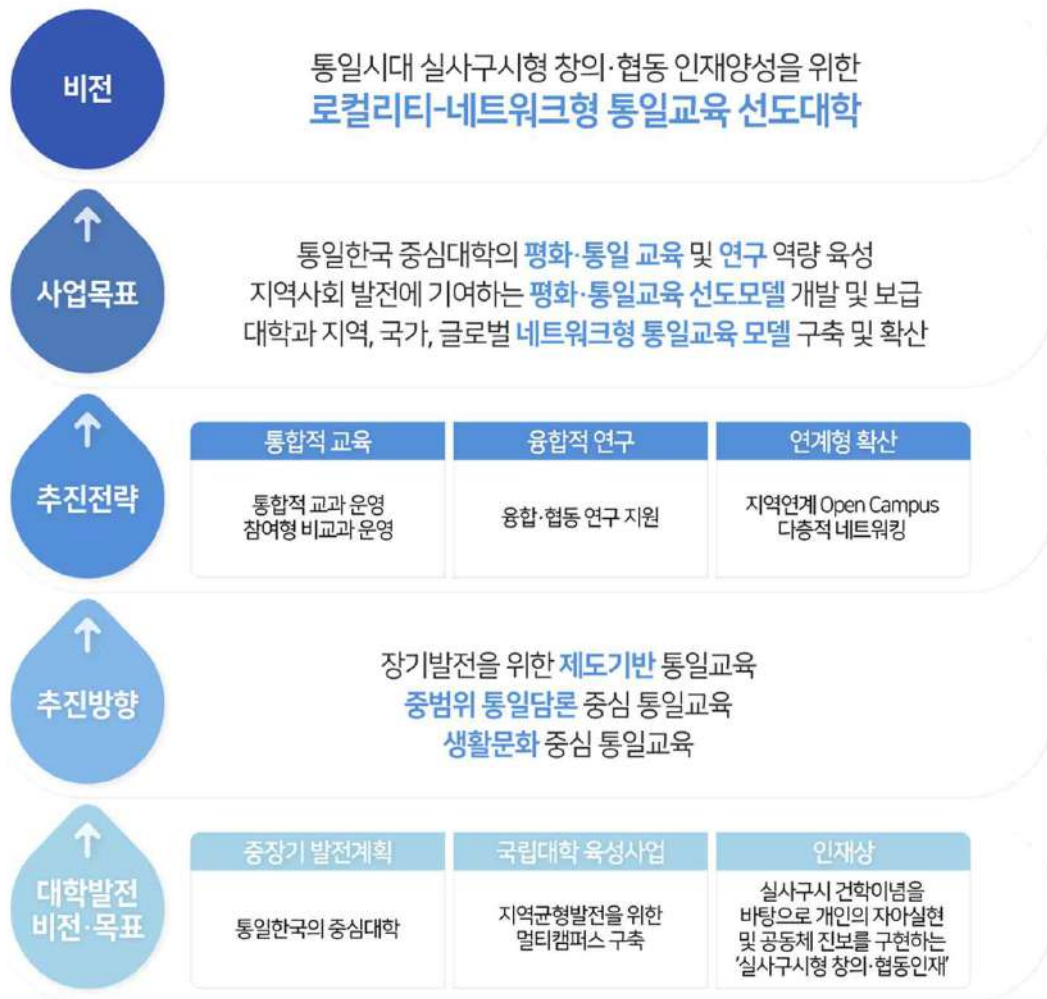


# 강원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현황과 과제

송영훈·박아름(강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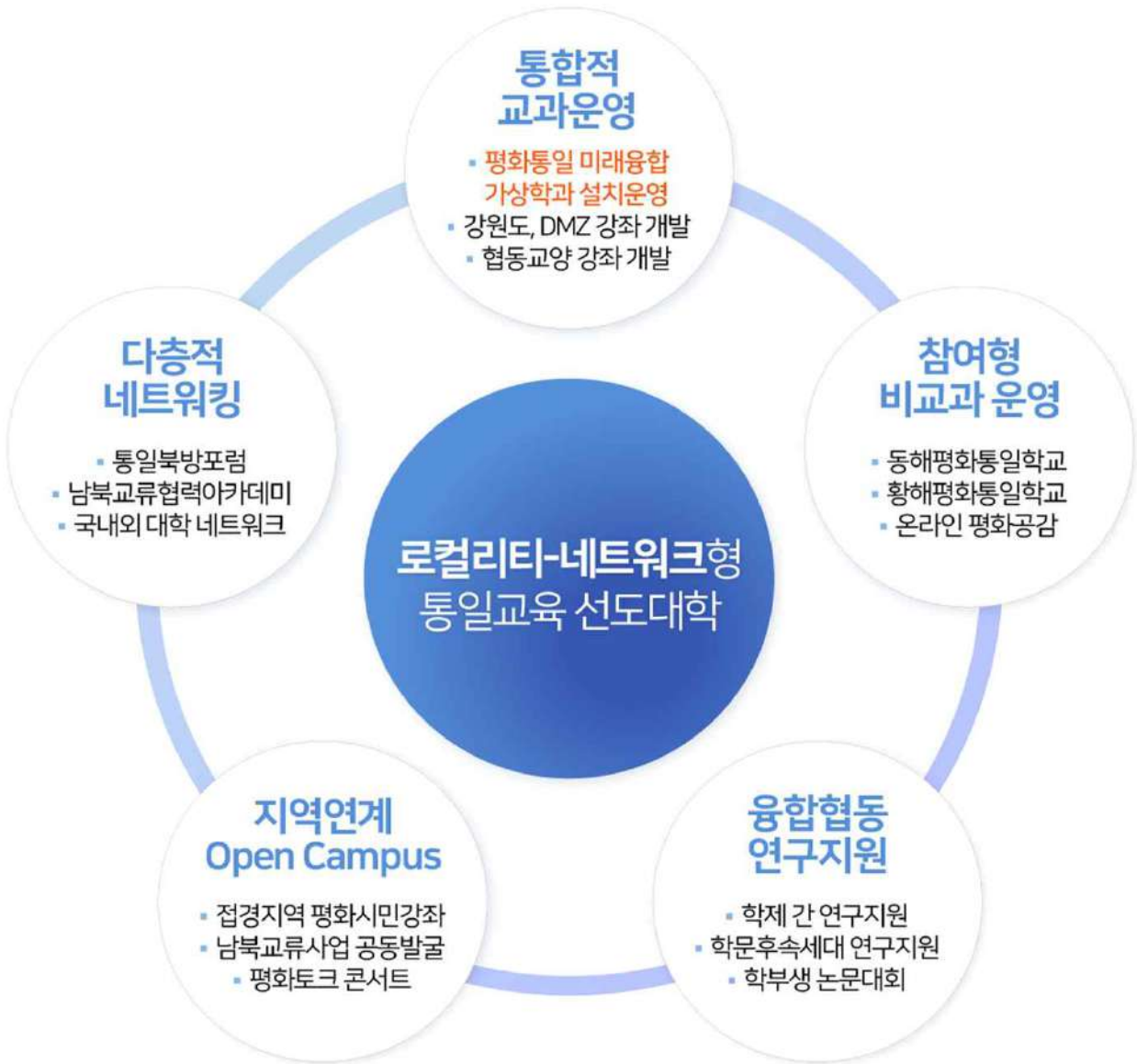
## 1. 들어가며

강원대학교는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으로써 2019년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을 맡고 있는 ‘통일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은 통일교육선도대학을 통해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교육 외에도, 강원도 지역의 학생, 주민, 지자체와의 사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확장 해 왔다. 연구원의 비전은 ‘로컬리티-네트워크형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써 대학발전의 비전 및 목표와 부합하는 통일교육선도대학 운영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였으며, 통합적 교육, 융합적 연구, 연계형 확산 전략으로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4년차에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로컬리티-네트워크형 통일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그림 1]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비전 및 목표(로컬리티-네트워크형)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통합적 교과운영, 참여형 비교과 운영, 융합협동 연구지원, 지역연계 오픈캠퍼스, 다층적 네트워킹 5가지를 들 수 있다.



[그림 2]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추진전략



2022년 4년차 시기 동안 연구원은 크게 연구·개발/강좌운영/보급·확산으로 나누어 총 1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그간의 사업에서 개발한 모델과 경험을 보급 및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표 1] 2022년도 강원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 성과 목표

	단위사업	내용
1. 대학 통일교육 모델 프로그램 연구·개발	① 평화학과 프로그램 연구	○ 평화학과 부전공 강의 질의 심화 및 학생 인원 확대, 과목의 개설 수 증대 및 다양화 노력 - 체험과 소통에 기반 한 강의개설 - 국내·외 유관기관 인턴십제도 마련
	② 심포지엄 개최 등 학술교류	○ 평화·통일 관련 국내학술회 및 포럼 개최
	③ 해외교류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 평화연구 관련 해외교류 - 연구자들과 주제별, 대륙별 학술회의의 진행
	④ 북한 특수자료 운영지원	○ 북한 문헌 제공을 통한 북한연구 지원 - 자료의 다양화, 이용률 향상 도모
2. 통일교육 강좌 운영	⑤ 평화·통일 관련 교과운영지원	○ 평화·통일 교내 연구 지원 사업 ○ 교과 개발 연구 및 행사 지원 - 평화·통일 관련 특강 지원
	⑥ 대학생 평화공감 공모전	○ 주제와 참여 형식의 다양화를 통한 강원지역 대학생들의 평화·통일 공모사업 지속
	⑦ 비교과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	○ 강원지역 분단·통일 관련 현장학습 모델 전파 ○ 분단·통일·평화 관련 비교과 현장 체험학습 지원
	⑧ 평화공감 온에어	○ 분단·평화·통일·민주화 관련 저명인사와의 대담을 콘텐츠로 제작, 유포
3. 대학 통일교육 모델 프로그램 보급·확산	⑨ 동해평화학교	○ 제3회 동해평화학교 개최 - 타 학교 대학생들과 함께 동해안 DMZ 현장학습 및 세미나와 토론 진행
	⑩ 온라인 평화공감 시리즈	○ 평화·통일 관련 학자, 활동가, 자자체 정책결정자 등 전문가 그룹의 '평화' 이야기 제작
	⑪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 강원도민 또는 춘천시민과 대학생이 함께 하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마련
	⑫ 글로벌 대학생 평화통일 캠프	○ 글로벌 대학생들의 한반도 분단·통일 현장학습 프로그램 제공
	⑬ 평화교육 보급 및 컨설팅	○ 타지역 및 타대학에 평화교육 보급 및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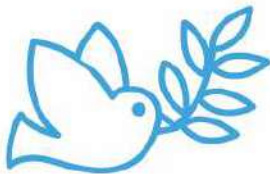
## 2. 대학 통일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 등 연구·개발

### 1) 평화학과 프로그램 연구

2022년 1학기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평화학과’가 부전공으로 개설되어 강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평화학과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평화 관련 이론, 사상, 개념, 정치, 이슈, 역사, 쟁점 등을 담을 수 있는 ‘학술지’ 발간을 기획하여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2024년 상반기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진입을 목표로 하는 『평화들 PEACES』은 학술잡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술지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할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점이 높기 때문이다. 글로벌과 내셔널만이 아니라 로컬 피스를 담고, 구조나 체제만이 아니라 일상과 경험세계를 담을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평화학의 학제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 학과·전공 장벽을 넘나드는 융합교육 분야 강원대학교 미래융합가상학과 평화학과

평화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며 평화감수성을 지닌  
공동체 지향의 인격체를 지닌 인재 양성  
교육분야: 평화학 관련 통일, 정치, 남북한 관련 분야



### 2022년도 ‘평화학과’ 부전공 개설 확정

과목명	학과
한국문학과 평화	국어교육과
전략자원과 국제갈등	지질·지구물리학과
전쟁과 평화의 역사	사학과
디지털지리정보와 국제관계	지리교육과
분단과 통일	역사교육과
국제기구와 글로벌거버넌스	정치외교학과
평화 사상과 이론	평화학과
폭력과 화해	평화학과

이론, 연구, 강원도의 사례까지 담아낸 『평화들 PEACES』 창간호는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 ‘평화 움직임 세계로 확장’ 실천적 학술지 주목

### 통일강원연구원 첫 학술지 ‘평화들’ 발행인 송영훈 원장

‘평화’를 둘러싼 지역에서의 문제 의식을 확장시키고, 강원도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지역 안팎 연구진의 시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송영훈 통일강원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한 12명의 국내외 편집위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통일강원연구원 첫 학술지 ‘평화들 Peaces’을 최근 발간했다.

편집위원장은 이동기 강원대 교수가 맡았고 강혁민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동진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더블린 ISE 평화화해학 시니어리서치펠로우, 김성경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성용 뉴질랜드 오타고대 교수, 조영철 전북대 교수, 주윤정 부산대 교수,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통일부에서 지원받은 통일교육선도대학 자금, 교육부의 국



**국내외 12명의 편집위원 참여  
학자·활동가 대담코너 등 눈길  
다양한 관점 소통·논의 등 통해  
“우리지역의 문제 공감대 유도”**

립대학육성사업 자금이 학술지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됐다.

‘평화들 Peaces’은 기존 학술지의

틀을 깬 대담한 구성으로 눈길을 끈다. 학자들뿐 아니라 현장 활동가들까지 포함된 연구자가 모여 대담을 하는 코너 ‘퀘바디스, 피시즈’와 평화의 적극적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평화하자’ 등의 코너가 그 주인공이다. 다양한 관점으로 평화를 논의하고 대중과 소통하며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연구진의 생각으로 만들어졌다.

발행인을 맡은 송영훈 원장은 국내외 연구진의 공감을 바탕으로 대중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학술지를 만들고,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안팎에서 평화의 움직임을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송 원장은 “강원도 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강원도의 독자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도 공감할 수 있는 모두의 문제”라며 “그러한 지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다른 생각이 공존하며 평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박서화기자**

### 2) 심포지엄 개최 등 학술교류

연구원은 다수의 평화·통일, 북한과 관련된 포럼과 학술회를 개최하였는데, 평화, 통일, 북한, 강원지역, 남북산림협력, 통일교육, 공공역사 등 의제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연구자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 하고 교과목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과 평화·통일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3) 해외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연구원은 코로나 규정을 준수하며 해외교류네트워크를 통해 평화학과 확장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국내외 학자, 언론인, 종교인, 접경지역 주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통해 로컬평화, 한반도 인권, 유엔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로 한반도 그리고 접경지의 평화담론은 논의하였다.

# 평화들 PEACES

2022.08

창간호

## 퀴바디스, 피시즈

- 평화화 편: 평화학자가 답하다 -

| 이동기, 구갑우, 백지운, 이성용, 조영철, 주윤정

## 이론과 사상

평화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주정치

| 한준성

'빙산'에서 '얼각'으로

| 이동기

## 평화하자

한반도 비핵화는 가능한가?

| 이남주

유엔 아카이브와 한반도 냉전사·평화사의 모색

| 류기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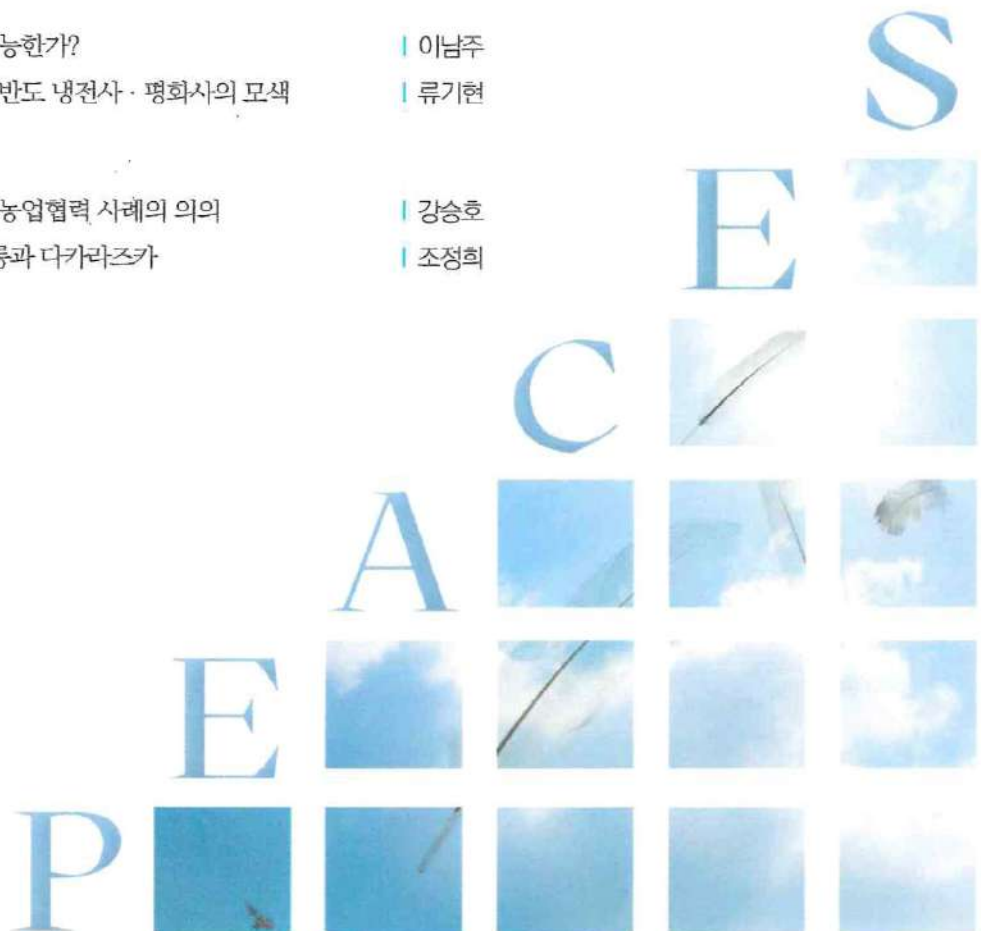
## 로컬평화

강원도와 연해주의 농업협력 사례의 의의

| 강승호

두 도시 이야기: 강릉과 다카라즈카

| 조정희





**\* 2022 통일교육 선도대학** 제74차 KUIS포럼

## 전문가와 나누는 북한축산 이야기

**주제** 북한의 농과대학 실태와 협력방안 | 최윤재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일시** 2022.03.23 (수) 14:00~16:00  
**장소** 동문생명과학대학 1호관 103호(비대면강의)

회차	일시	주제	연사
1	03월 23일 ① 14:00-16:00	북한의 농과대학 실태와 협력방안 <small>*비대면 수업으로 진행</small>	최윤재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2	03월 30일 ② 14:00-16:00	남북 농축산 교류협력의 실제	오윤환 대표 (농협)
3	04월 06일 ③ 14:00-16:00	최근의 북한의 경제변화	이만수 이사장 (삼척강원농업대학)
4	04월 13일 ④ 14:00-16:00	DMZ의 동물사회학 1	함영택 소장 (DMZ 연구소)
5	04월 20일 ⑤ 14:00-16:00	DMZ의 동물사회학 2	함영택 소장 (DMZ 연구소)
6	04월 27일 ⑥ 14:00-16:00	생명과 희망의 땅, 한반도 DMZ - DMZ가 받을 몫 -	전영재 기자 (MBC)
7	05월 04일 ⑦ 14:00-16:00	한반도 DMZ 독일 - 그레사르토프를 뛰어넘어	전영재 기자 (MBC)
8	05월 18일 ⑧ 14:00-16:00	북한의 농축산업 현황 (수의/축산/육류/수산물/수리시설 등)	최종희 박사 (당진대)
9	05월 25일 ⑨ 14:00-16:00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	송영준 교수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10	06월 08일 ⑩ 14:00-16:00	북한산어 인형극 보급을 위한 남북한 농생연방어 연구	최성기 박사 (서울대)
11	06월 15일 ⑪ 14:00-16:00	축산분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 방안	최원규 본부장 (KETA)

주최 \*KNU 강원대학교 동문산림융합학과 주최 \*KNU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문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1 강릉대 80주년기념관 312호 033-250-8031-8032  
 홈페이지 http://kuis.kangwon.ac.kr E-mail kuis@kangwon.ac.kr

**2022 통일교육 선도대학** 제80차 KUIS포럼

## 북한에서 경험한 보건의료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야기

**강사** 윤상혁 (사)선양하나 이사 **대상자** 관심있는 사람  
**일시** 2022.5.2 (월) 13:00-16:20 / 5.4 (수) 13:00-16:30  
**장소**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보건과학관 525호

회차	일시	시간	강의내용	강사
1	5월 2일 화요일	13:00-13:30	접수	-
		13:30-13:40	인사말	송영준 통일강원연구원 원장
		13:40-15:40	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소개	윤상혁 (사)선양하나 이사
2	5월 4일 수요일	15:40-16:20	통일도론	전병진 강원대학교 석좌교수
		13:00-13:30	접수	-
		13:30-14:00	남한의 재활치료 현황 소개	전병진 강원대학교 석좌교수
		14:00-16:00	북한의 재활치료 경험 소개	윤상혁 (사)선양하나 이사
		16:00-16:30	통일도론	전병진 강원대학교 석좌교수

주최 \*KNU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주관 \*KNU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문의 강원도 춘천시 도계읍 울도길 346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전화 033-540-3480 / 033-250-8031-8032  
 홈페이지 http://kuis.kangwon.ac.kr E-mail kuis@kangwon.ac.kr

KUIS 학술의의  
퀴비디스피시스 ①

## 평화학 어디로 가는가?

2022.6.21 (화) 강원대학교 서삼관 시사실  
 2022.6.22 (수)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6월 21일 (화)	
14:00 ~ 16:00	<b>주제 1</b> "로컬평화구축모델에서 나타나는 외부행위자의 역할"
	<b>사회</b> 송영준 (강원대학교)
	<b>발표</b> 이상훈 (우주과학대학교) <b>토론</b> 강혁민 (강원대학교) 이소영 (제주대학교) 홍석률 (삼산여자대학교)
Break Time	
16:30 ~ 18:00	<b>주제 2</b> 퀴비디스 피시스 라운드 테이블: "평화학 어디로 가는가?"
	<b>사회</b> 이종기 (강원대학교)
	<b>토론</b> 구갑우 (한신대학교) 박지은 (서울대학교) 이상훈 (우주과학대학교) 조영철 (전북대학교) 주윤정 (부산대학교)
18:00 ~ 20:00 만찬	
6월 22일 (수)	
10:00 ~ 12:00	<b>토론</b> 「평화를 PEACES」 퀴비디스 친세토론
	오찬
12:00 ~ 14:00	

주최 \*KNU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문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1 중앙도서관 1층 033-250-8031-8032  
 홈페이지 http://kuis.kangwon.ac.kr E-mail peaces@kangwo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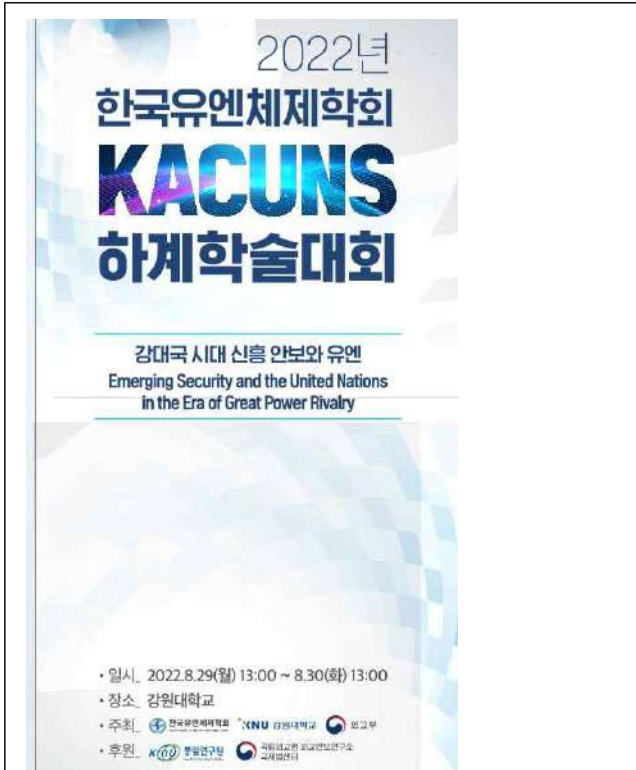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 강원연구원 - 남북강원도협력협회 공동학술회의

## 남북강원협력, 강원도 지자체에게 바란다

일시 2022.7.26 (화) 15:00~18:00  
 장소 강원대학교 미래도서관 대회의실

일시	프로그램
15:00 ~ 15:10	<b>개회식</b> 송영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원장) 이만수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김재진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센터장)
	<b>사회</b> 김기석 (강원대학교)
	<b>발표 1</b>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전망과 과제 나용우 (통일연구원) <b>발표 2</b>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실태와 목표 양 철 (강원연구원)
15:10 ~ 18:00	<b>중환도론</b> 서보혁 (통일연구원) 권오영 (강원연구원) 조용호 (반핵법제연구회) 최병수 (강원일보)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왕효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KNU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강원연구원 (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주관 \*KNU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문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1 중앙도서관 1층 033-250-8031-8032  
 홈페이지 http://kuis.kangwon.ac.kr E-mail kuis@kangwon.ac.kr



### 2022 DMZ국제회의 한반도 평화인권과 해외 네트워크

**<목적>**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해 실질적인 활동과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해외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인권의 현실을 이해시키고자 함

첫째, 미국, 일본, 독일 등 동포사회 지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둘째, 국제 시민단체들과 연대,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개요>**

- 주 제 : 한반도 평화인권과 해외 네트워크
- 일 시 : 2022년 10월 4일(화) - 7일(금)
- 장 소 : 강원도 철원 한탄리비서사호텔, DMZ정경마을
- 참가자 : 60명  
 집경지역네트워크 주안대표 15인(3인×5개지역: 철원,연천,파주,김포,강화)  
 BPS 피스메이커 8인 / 공동주최단체 12인  
 재미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4인 /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1인  
 평화학자, 기자, 평화단체 활동가 등 20인
- 공동주최기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국경선평화학교, 성동회대학교, 한신대학교 글로벌피스연구원,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 4) 북한 특수자료 운영지원

연구원은 북한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강원도 사례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특수자료를 구입 및 비치하였다. 특히 1985년~2019년 사이 출판된 저작으로 의학, 농업, 가정학, 기술, 소설, 역사, 교육, 정치, 풍속, 법학, 철학, 경제학, 연감 등 다양한 분류의 자료를 구비하여 여러 분야별 연구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3. 통일교육 강좌운영

#### 5) 평화·통일 관련 교과운영지원

2022년도에 강원대학교에서는 평화·통일 관련 교과목이 총 12개 개설되었는데, 이 강의들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의 강의들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답사와 특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1년차와 2년차 때는 교재 및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이 중점이 되었다면 4년차에는 답사와 특강을 지원하여 개발된 연구성과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노력하였다.

<p><b>‘평화 기관과 박물관 답사’</b> (과목명: 평화사상과 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강생들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기관인 유네스코의 역사와 현재 활동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토론함으로써 평화형성의 글로벌 차원을 배웠다. 그것을 통해 학생들은 평화와 관련한 취업 전망과 활동 방향에 대해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를 받고 취업 전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익혔다.</li> <li>- 수강생들은 고문 폭력과 식민 폭력의 현장과 역사 탐방을 통해 평화부재의 구체적 상황을 익히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평화문화 형성의 실재를 경험했다. 아울러 평화를 가꾸는 기억문화와 공공역사의 활동을 직접 봄으로써 ‘직업으로서의 평화’전망을 숙고하도록 자극하고 정보를 모았다. 향후 식민지역사박물관과 민주인권기념관 또는 남영동인권기념관 추진위원회와는 토론 기회를 더 갖자고 합의했다.</li> </ul>	
--	---

**<전쟁-국민국가>를 재현하는 두 가지 방법:**

**박물관과 미술관**

**(과목명: 현대사회와 문화비평- 기억과 기념의 인류학)**

- 5월 14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된 답사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 위치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현재 특별전으로 열리고 있는 <히토 슈타이얼: 데이터의 바다>는 현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시각예술가이자, 영화 감독, 비평가이기도 한 히토슈타이얼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으로 이번 전시는 오늘날 또 하나의 현실로 재편된 데이터사회를 성찰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전시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각종 재난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술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지구 내전, 불평등의 증가, 독점 디지탈 기술로 명명되는 시대, 동시대 미술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답사에 참여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음.




**통일의 시작점 DMZ와 북한 알기 프로그램**

**(과목명: 북한지리)**

- 북한지리 교과 수업을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통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음.
- 북한을 멀게만 알았던 학생들에게 접경지역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게 하였고, 올바른 통일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었으며, 현장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p style="text-align: center;"><b>통일시대의 생활문화</b> (과목명: 통일시대의 북한문화)</p> <p>- 탈북민 강연을 통해 북한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음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p>	
---	--

6) 대학생 평화공감 공모전

연구원은 강원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단·평화·통일관련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였다. 공모전은 봄과 여름으로 나누어 2번 각각 3개의 총 6개의 분야 (강의콘텐츠, 서평, 기술 에세이, 답사 기행문, 문서 에세이, 영화 감상평)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공모를 통해 여러 전공 학생들의 참여를 도모하였다. 실제 연속적으로 진행된 공모전에 학생들이 지속 참가하였으며 연구원이 주최하는 통일교육선도대학 다른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가로 이어졌다. 특히 2019년부터 지속되어 온 공모전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높아진 관심으로 2022년에는 강원대학교 총장상이 대상으로 신설되어 수상한 학생들에게 더 큰 의미가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봄 공모전 3개 대학 22개과 참석</li> <li>- 3개 대학: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li> <li>- 22개 과: 의생명공학과, 윤리교육과, 응용생물학, 불어불문학과, 정보통계학과, 영어과, 동물산업융합학과, 문화인류학과, 사학과, 역사교육과, 중어중문학과, 산림과학부, 농업장원경제학과, 수학교육과, 국어국문학과, 사회학과, 관광경영학과, 교육학과, 과학교육과, 멀티디자인학과, 정치외교학과, 한문교육과</li> </ul>			
	<p>‘평화 만들어 봄’ 1. ‘평화’ 강의 콘텐츠</p>	<p>‘평화 마주 봄’ 2. ‘평화’ 서평 대회</p>	<p>‘평화 멀리 봄’ 3. ‘평화’ 기술 에세이</p>
추천 주제	<p>1. 문학을 통해 만나는 ‘젠더’ - 리베카 솔닛의 『세상에 없는 나의 기억들』</p> <p>2. 영화를 통해 고민하는 ‘분단’ - 『모가디슈』</p> <p>3. 답사를 통해 느끼는 ‘화해’ - 제주 4.3 평화기념관</p> <p>4. 기술을 통해 발견하는 ‘연대’ - ‘모저 램프(Moser lamp)’</p> <p>5. 그림을 통해 마주하는 ‘전쟁’ -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p> <p>※ 추천 주제 외, 자율 주제 선택가능</p>	<p>1. 이용석 지음, 『평화는 처음이라』(빨간소금, 2021).</p> <p>2. 이동기 지음, 『현대사 몽타주』(돌배개, 2018).</p> <p>3. 김기석 외 지음, 『금강산 관광 돌아보고 내다봄』(진인진, 2018).</p> <p>4. 님 웨일즈, 김산 지음, 『아리랑』(동녘, 2005).</p> <p>5. 이경자 지음, 『순이』(사계절, 2010).</p>	<p>1. 행운의 철 물고기(lucky iron fish)</p> <p>2. 모저 램프(Moser lamp)</p> <p>3. 리퍼포스 스쿨백(Repurpose Schoolbags)</p> <p>4. 휴대용 점자 입력 장치</p> <p>5. Q드럼</p> <p>※ 추천 주제 외, 자율 주제 선택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여름 공모전 5개 대학 24개과 참석</li> <li>- 5개 대학: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가톨릭관동대학교</li> </ul>			

- 24개 과: 지역경제학과, 분자생명과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학과, 행정학과, 윤리교육과, 불어불문학과, 인문학부, 문화인류학과, 영어영문학과, 윤리교육학과, 수학교육과, 응용생물학전공, 국어교육과, 한문교육과, 경제학과, 영상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어국문학과, 정보통계학과, 경영학과, 사회학과, 멀티디자인학과

	1. '평화' 답사 기행문	2. '평화' 문서 에세이	3. '평화' 영화 감상평
추천 주제	1.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강원도) 2. 유엔기념공원(부산) 3. 노근리평화공원(충청북도) 4. 동학혁명기념관(전라북도) 5.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경기)	1.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 2. 「국제연합남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1951)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 4. 「반동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최종의정서」(1955) 5.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1992)	1. 허철녕, 『206: 사라지지 않는』(2021) 2.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타인의 삶』(2007) 3. 구로사와기요시, 『스파이의 아내』(2020) 4. 양영희, 『디어평양』(2006) 5. 필립 리오레, 『웰컴』(2009)

**2022 강원지역 평화봄 공모전**

1. 평화봄: '평화' 강의 관련초  
2. 평화봄: '평화' 서명 대회  
3. 평화봄: '평화' 기술 에세이

**추천주제**

1. 문학을 통해 만나는 '평화' - '타인의 삶'의 '해방에 있는 나의 기억'.
2. 영화를 통해 고백하는 '평화' - '모기다시'.
3. 담사를 통해 느끼는 '평화' - '제주 4.3 평화기행'.
4. 기술을 통해 발전하는 '평화' - '잊지 않겠다(Kasper Lamp)'.
5. 그림을 통해 마주하는 '평화' - '타인의 삶', '디어평양'의 '타인'.

**참가자격**  
강원지역 소재 2~3학년, 4년제 대학교 학부생(휴학생 포함)

**참가방법**  
수업내용(1회, PPT 30분 내외) - 6,000자(공백포함) 내외 서명  
- 1명당 1회 제출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평화-봄]으로 제출(kus@kangwon.ac.kr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접수기간**  
2022년 4월 18일(월) - 2022년 5월 30일(일)

**사상내역**

구분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1명	1명	1명	1명	1명
최우수상	1명	1명	1명	1명	1명
우수상	2명	2명	2명	2명	2명
장려	3명	3명	3명	3명	3명

관려서류 제출기한: 2022. 5. 30 (일)  
상사 결과 발표: 2022. 6. 6 (월)  
시상식: 2022. 6. 13 (월) 예정

**주의사항**

- ▶ 참여 작품의 수가 적을 시 수상자의 구분 및 포상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 제출받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표절 시 수상자격 박탈.
- ▶ 수상작의 경우 2차 가공을 통해 통일강원연구원과 국립통일교육원에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
- ▶ 강의 관련초, 서명, 에세이 중 2개 분야까지 중복 공모 가능.

**문의사항**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kus.kangwon.ac.kr>  
TEL: 033-250-8031~3 E-mail: kus@kangwon.ac.kr

**2022년 강원지역 '평화-여름' 공모전**

1. '평화' 답사 기행문 2. '평화' 문서 에세이 3. '평화' 영화 감상평

**추천주제**

1.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강원도)
2. 유엔기념공원(부산)
3. 노근리평화공원(충청북도)
4. 동학농민혁명기념관(전라북도)
5.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경기)

**참가자격**  
강원지역 소재 2~3학년, 4년제 대학교 학부생(휴학생 포함)

**참가방법**  
- 5,000자(공백포함) 내외 기행문(시선 3회 이상 포함)  
- [평화 1] 제출  
- 6,000자(공백포함) 내외 에세이  
- [평화 2] 제출  
- 6,000자(공백포함) 내외 감상평  
- [평화 3] 제출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평화-여름]으로 제출(kus@kangwon.ac.kr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접수기간**  
2022년 6월 6일(월) - 2022년 8월 15일(월)

**시상내역**

구분	기행문	에세이	감상평	총합
대상 (강원대학교 총장상)	1명	1명	1명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1명	1명	1명	상금 70만원
우수상	2명	2명	2명	상금 50만원
장려	3명	3명	3명	상금 30만원

**참모일정**  
관련서류 제출기한: 2022. 8. 15 (월)  
상사 결과 발표: 2022. 8. 29 (월)  
시상식: 2022. 9. 5 (월) 예정

**주의사항**

- ▶ 참여 작품의 수가 적을 시 수상자의 구분 및 포상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 제출받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표절 시 수상자격 박탈.
- ▶ 수상작의 경우 2차 가공을 통해 통일강원연구원과 국립통일교육원에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
- ▶ 기행문, 에세이, 감상평 중 2개 분야까지 중복 공모 가능.

**문의사항**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kus.kangwon.ac.kr>  
TEL: 033-250-8031~3 E-mail: kus@kangwon.ac.kr

7) 비교과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

연구원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개발해온 강원지역 평화답사 프로그램을 춘천의 사회적 기업인 '강원퍼스트어'와 함께 강원지역을 포함하여 타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도 지원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회 강원평화로</li> <li>- 강원지역 대학생 3개 대학 18개 과 27명 참석</li> <li>-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아카데미 21기 수강생 13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대학: 강원대학교, 강원원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li> <li>· 18개 과: 행정학과, 지리교육과, 관광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산림경영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멀티디자인학과, 산림자원학과, 농업자원경제학과, 영어교육학과, 교육학과, 일본학과, 사회학과, 국어국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정치외교학과, 자치행정학과, 역사교육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회 강원평화로</li> <li>- 3개 대학 9개 과 30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대학: 강원대학교,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li> <li>· 9개 과: 일본학전공, 산림자원학전공, 생명건강공학과, 수의과대학, 북한학과, 법학과, 국제관계학과, 철학과, 디자인예술학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날갯짓×동백길 제주 평화기행</li> <li>- 3개 대학 17개 과 21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대학: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제주대학교</li> <li>· 17개 과: 정치외교학과, 교육학과, 에너지자원공학부, 농업자원경제학과, 인문학부, 사회학과, 역사교육과, 건축학과, 언어청각학부, 철학과, 수산생명의학과, 사학과, 식물자원학과, 해양생명과학과, 언론홍보학과, 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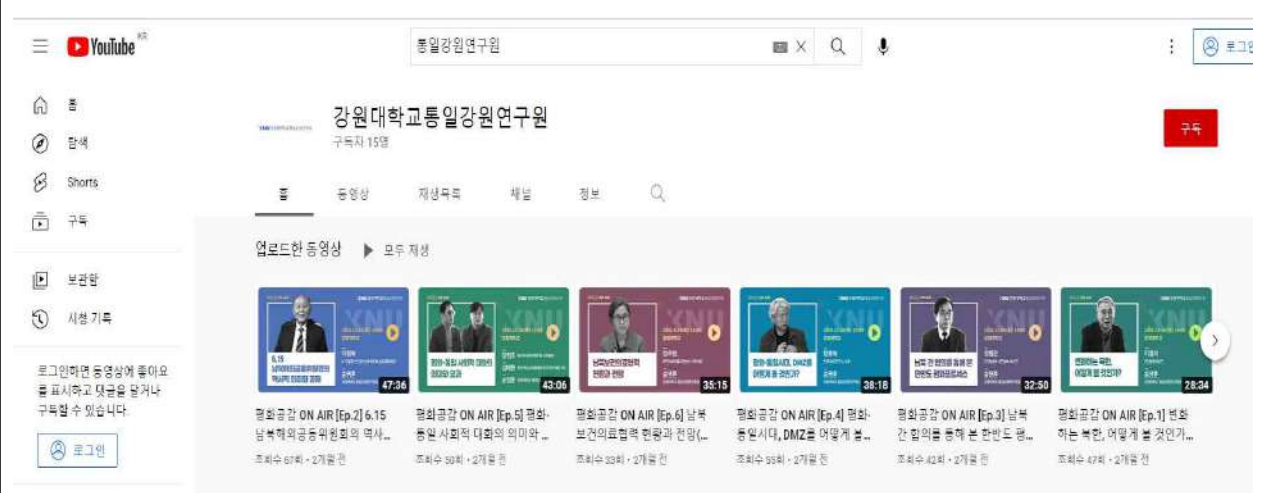
8) 평화공감 온에어

연구원은 평화·통일, 북한 관련 전문가, 예술가, 활동가를 대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했던 생애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평화이슈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평화공감 온에어’사업은 정규 교양강좌의 형태를 탈피하고 콘텐츠의 온라인 제공을 통해 대학생 포함 일반인까지 누구나 쉽게 북한, 통일, 평화 관련 이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부터 총 10개의 영상을 제작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2022년에 제작한 5개의 영상



은 엄주현(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최윤(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부의장), 정성현(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 강기희(민족작가연합 상임대표), 김주영(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과의 인터뷰 이다.

<p>평화공감 ON AIR KNU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p>  <p><b>남북보건의료협력 현황과 전망</b></p> <p>2022.4.19(화) 14:00 강원대학교</p> <p>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p> <p>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p>	<p>평화공감 ON-AIR</p>  <p><b>민주화와 로컬평화</b> -평화의 중심지 강원도</p> <p>2022.9.22 (목) 11:00 강원대학교</p> <p>최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부의장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p>
<p>평화공감 ON-AIR</p>  <p><b>DMZ 생태평화운동</b></p> <p>2022.9.22.(목) 14:00 강원대학교</p> <p>정성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p>	<p>KNU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평화공감 ON-AIR</p>  <p><b>문학과 통일운동</b></p> <p>2022.11.2.(수) 11:30 강원대학교</p> <p>강기희 민족작가연합 상임대표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p>
<p>KNU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평화공감 ON-AIR</p>  <p><b>하나됨, 평화</b></p> <p>2022.11.9.(수) 15:00 강원대학교</p> <p>김주영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p>	



통일강원연구원

강원대학교통일강원연구원  
구독자 15명

업로드한 동영상 ▶ 모두 재생

<p>평화공감 ON AIR [Ep.2] 6:15</p> <p>남북한의공동위원회와 역사...</p> <p>조회수 61회 · 2개월 전</p>	<p>평화공감 ON AIR [Ep.5]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p> <p>조회수 50회 · 2개월 전</p>	<p>평화공감 ON AIR [Ep.6] 남북 보건의료협력 현황과 전망(...)</p> <p>조회수 33회 · 2개월 전</p>	<p>평화공감 ON AIR [Ep.4] 평화-통일시대, DMZ은 어떻게 볼...</p> <p>조회수 55회 · 2개월 전</p>	<p>평화공감 ON AIR [Ep.3] 남북 간 협력을 통해 본 한반도 평...</p> <p>조회수 42회 · 2개월 전</p>	<p>평화공감 ON AIR [Ep.1] 변화하는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p> <p>조회수 47회 · 2개월 전</p>
---	---	--	---	---	--

## 4. 대학 통일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 등 보급·확산

## 9) 동해평화학교

2019년 제1회 동해평화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 제2회 동해평화학교에 이어 2022년 제3회 동해평화학교를 개최하여, 강원지역 대학생 뿐 만아니라, 국립대학네트워크 참여 대학 대학생(서울, 충남, 부산지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연구원은 강원지역의 현장답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동해안 남북 분단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접경지 주민들의 생애사를 통해 한반도 분단 현실을 인식하고, 경계박물관과 통일전망대, 제진역 답사를 통해 평화 상상력을 향상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제3회 동해평화학교는 국가주도로 기억되고 만들어진 박물관과 기념관을 첫째 날 일정으로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마을 답사를 둘째 날 일정으로 여러 학교 학생들과 한조를 이루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발표하고 소통하는 조별발표회를 셋째 날 일정으로 기획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한 학생들에게 거시적 부분과 미시적 부분에 대한 균형적인 경험과 평화적 감수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첫째날	
.09:50~10:00	집결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10:00~12:15	이동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 고성 대진항/화진포 인근 식당
12:15~13:15	중식 - 고성 대진항/화진포 인근 식당
13:15~13:45	이동 - 고성 화진포박포수가든 → 제진역 - 출입신고소 경유 (출입전 교육)
13:45~16:00	<b>제진역 PTX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b> - 2개조(밀어내기 방식으로 실시)
16:00~17:00	<b>통일전망대 견학</b>
17:00~18:00	<b>DMZ박물관 견학</b> - 단체해설예약 (본해설은 30분 내외/가능시 2개조)
18:00~19:00	석식 - 고성 화진포박포수가든
19:00~20:00	이동 - 고성 화진포박포수가든 → 씨크루즈호텔
20:00~21:30	<b>동해접경지의 분단 생애사: 실항민과 남북 어부 이야기</b> - 발표 : 엄경선 설악닷컴 대표 - 김춘삼 동해안 남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 섭외 여부
21:30	체크인 및 휴식
둘째날	
08:00~09:00	조식 후 집결/출발
09:00~09:45	이동 - 씨크루즈호텔 →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09:45~12:00	<b>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답사</b> - 이승만/이기봉/김일성별장
12:00~13:00	중식 - 고성 화진포/대진항 인근 식당

13:00~14:00	이동 - 고성 → 속초 시립박물관
14:00~15:30	속초 시립박물관 - 2개조로 진행
15:30~16:00	이동 - 속초 시립박물관 → 아바이마을(청호초등학교)
16:00~18:00	<b>아바이마을 답사</b> - 청호초등학교 → 아트플랫폼 갯배 → 설악대교 → 아바이동상 - 2개조로 진행 여부
18:00~19:00	석식 - 속초 청초호/아바이마을 인근 식당 - 석식 후 갯배를 이용하여 호텔로 도보 이동
19:00~	호텔 복귀 후 자유시간 - 학생 조별 모임
셋째날	
08:00~09:00	조식 후 체크아웃
09:00~09:30	이동 - 씨크루즈호텔 → 상도문돌담마을 도문농요전시관
09:30~11:30	<b>팀별 토론결과 발표</b> - 발표 준비(30분) - 토론결과 발표(1시간 30분) - 제3회 동해평화학교 명의 상장 및 수료증 수여(30분)
11:30~12:30	<b>상도문돌담마을 마을투어</b>
12:30~13:30	중식 설악가든식당
13:30~14:00	이동 외옹치 바다향기길 도착
14:00~16:00	<b>외옹치 바다향기길 산책</b>
16:00	마무리, 출발

<p>[조별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b>분단의 최전방 대성동 마을</b> 제3회 동해평화학교 1조 김민주 김도훈 백지환 안진우 임다빈 오세웅 최유빈</p>	<h2 style="margin: 0;">통일을 기억하는 땅에서</h2> <p style="margin: 10px 0 0 0;">제3회 동해평화학교 1조 김중환 김도운 김용호 김형우 김지훈 송하정 목지효 황설현</p>
---	---

# 실향민에 대하여

3조 김혜강, 문승준, 신동희, 안형주, 이민하, 임화경, 하다경



[현장사진]



## 10) 온라인 평화공감 시리즈

연구원은 통일 전후시기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법률(행정), 교육, 예체능, 과학기술, 보건환경 등 당면 과제를 자유롭게 논의함으로써 평화·통일 담론을 확산하고자 연구원 메일리스트의 약 2000여명의 지인(교수, 학생, 연구자, 운동가, 활동가, 지역네트워크 등)에게 격주로 에세이 형식의 글을 발간하고 있다. 2022년에는 ISSN 2951-1542(Online) 번호를 발급받았으며, 격주로 발간되는 다양한 주제



에 대해 구독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17건 제작 및 발송 완료

- 4월 4일(월) 박찬식, “4·3의 세계평화 가치”
- 4월 18일(월) 김도민, “중립과 한반도 평화”
- 5월 2일(월) 이충일, “사람이 못하는 일 물고기가 할 수 있습니다”
- 5월 16일(월) 이경훈, “생태 환경 교육으로 평화 통일 교육하기”
- 5월 30일(월) 김현진, “평평하고 화사하게”
- 6월 13일(월) 김태균,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 SDGs 시대의 글로벌 공동체를 위한 변명”
- 6월 27일(월)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평화와 한반도 컨센서스”
- 7월 11일(월) 주윤정, “이행기 정의의 새로운 흐름: 아동학대와 수용시설의 문제”
- 7월 25일(월) 이재영, “평화와 치유를 위한 회복적 정의로 바라본 세상”
- 8월 8일(월) 이기동, “대북정책 추진환경과 한반도 비핵화”
- 8월 22일(월) 김기현, “남북저작권교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9월 5일(월) 이상숙, “북중리 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
- 9월 19일(월) 이기찬, “접경지역과 다크투어리즘”
- 10월 4일(화) 임유경, “분단의 역사와 한국문학”
- 10월 17일(월) 함광복, “영화 ‘고지전’의 생태학적 상상 DMZ 그린 데탕트”
- 10월 31일(월) 장희경,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독일 통일 사례 연구가 남긴 과제”
- 11월 14일(월) 박래군, “이태원은 참사, 이상한 애도와 다시 사라진 국가”

 <p style="text-align: center;"><b>사람이 못하는 일 물고기가 할 수 있습니다.</b></p> <p style="text-align: center;">이충일   강원원주대학교 해양생태환경학과 교수</p> <p>우리는 종종 '남북교류협력'이란 표현을 자주 듣기도, 말하기도 그리고 보기도 하며, '사업' 또는 '지원', '시스템'이란 단어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과 같이 말이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처럼 '남과 북'을 두고 교류와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성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는 달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p> <p>물리학에서는 교류를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어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아서 마음이 통하여 서로 알아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힘을 합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협력이라고 표현한다.</p> <p>분단 이후 지금까지 서로가 각자의 색깔로 '교류와 협력'이란 크고 작은 일들이 오랫동안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산자원분야, 농산림분야,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문화협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까워 지려는 노력을 많이 해 왔다. 그 대상은 바다, 산림, 농업, 복원주인, 문화 분야지만, 결국은 사람이 오고가며 행해야 하는 일이며, 지원 후에도 자체적으로 지속성이 유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보다는 끊임없이 사람이 오고 가야 하는 일들이 다수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이유에서 결국은 사람이 알려줘야 하는 일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숙제가 풀리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하는 기대치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람 중심'의 문제 해결은 때론 우리 마음과는 달리 더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또는, 못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이충일</b> 강원원주대학교 해양생태환경학과 교수</p> <p><b>저자약력</b> 현 강원원주대학교 해양생태환경학과 교수 전 남북바다자원교류원 원장(강원원주대학교)</p> <p><b>주요저서</b> 『해양생물자원과 기후변화』(부산: 부경대학교출판부, 2014), 공저. 『수산해양학』(부산: 부경대학교출판부, 2011), 공저.</p>
---	--



KNU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Kangwo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No. 51  
2022. 07. 25.

**평화 공감** KIUS Peace Brief

## 평화와 치유를 위한 회복적 정의로 바라본 세상

이재영 |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사)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

**1.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의 현실**

2022년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위해 법무부에서 관련 TF팀을 꾸리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소년범죄 대응에 있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이해하지만, 앞으로 수 백, 수 천명의 청소년이 범죄소년이란 꼬리표를 달고 전과기록을 갖게 되면 과연 학교와 지역사회는 더 안전해 질 수 있을까? 더욱이 한국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구속을 받는 비준국가이다. 이 국제적 협약의 가이드라인은 14세를 형사처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저 연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12-13세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교사와 학부모에게 12세 또는 13세 인 초등학교 연령의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학교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지도해야하는 학교와 마을은 어떻게 되고 싶어하고 싶다. 모두가 우려와 열려가 앉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자녀의 학교에는 그런 청소년들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할 것이다. 그렇다. 누구도 이런 청소년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고 더 불안해 질것이 당연히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반성하고 긍정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하는데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모순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엄벌은 지지하지만 엄벌이 생산한 결과들은 외면하고 싶다는 논리는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  
사)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

**저자약력**  
현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원장  
형(사)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  
전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전 대통령지문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구위원  
전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 위원  
전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 자문위원

**주요저서**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남양주: 피스빌딩, 2020).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춘천: Korea Anabaptist Press, 2014), 공역.

11)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연구원은 2020년부터 강원도 접경지역 정책에 대한 대학생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도민 또는 춘천시민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진행 해 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다.

12) 글로벌 대학생 평화통일 캠프

연구원은 강원도 내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한반도 통일, 평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DMZ를 중심으로 발생한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피스투어리즘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영어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 2022 글로벌 대학생 고성 DMZ 평화기행 개최
- 33개국 99명의 유학생 참여
  -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베트남, 우간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브라질, 네팔, 태국, 일본, 페루,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멕시코, 미국, 몽골, 르완다, 터키,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루마니아, 스페인, 콜롬비아, 투르크메니스탄, 탄자니아, 세네갈, 리투아니아



13) 평화교육 보급 및 컨설팅

연구원은 통일교육선도대학 4년차 사업의 핵심인 보급·컨설팅을 위해 강원지역의 평화답사 모델을 타학 교에 컨설팅하고 공동답사를 진행하였다.

<p>• 강원지역 평화답사 모델 컨설팅 및 공동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제2회 강원평화로(2022.05.27.~2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이카데미 현장답사 컨설팅 및 공동 답사</li> <li>- 2회, 제3회 동해평화학교(2022.08.17.~19):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 현장답사 컨설팅 및 공동 답사</li> <li>- 3회, 2022 날개짓X동백길 제주 평화기행(2022.07.11.~14):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제주대학교 현장답사 컨설팅 및 지원</li> <li>- 4회, 평화통일 파주 DMZ 현장체험(2022.10.28.~29):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현장답사 컨설팅 및 공동 답사</li> <li>- 5회, 한반도 대학생 캠프(2022.11.04.): 중부대학교 현장 답사 컨설팅 및 특강 지원</li> <li>- 6회, 제3회 강원평화로(2022.11.11.~12):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현장답사 컨설팅 및 공동답사</li> </ul>	 <p>The poster is titled "2022 통일교육 선도대학 평화통일 파주 DMZ 현장체험 참가자 모집". It features a green and white color scheme with a background of a forest. The text inclu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에서는 일방적 현실주의 통일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장체험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1박2일 파주 DMZ 현장체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li> <li>2022.10.28 (금) ~ 29 (토) 경기도 파주시 일대 (DMZ포함)</li> <li><b>답사</b>: 경기도 일대 답사(DMZ포함), DMZ (종이문, 43방굴, 도라산방아 등), 임진각 (국가관사 및 자유의대 통일역사 전시관 등), 각종 평화의 흔적을 체험, 평화누리공원, 오두산봉황전망대 등</li> <li><b>소포의 장</b>: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소동의 장 평화·통일에 관한 세미나</li> <li><b>모집 내용</b>: 신청대상: 통일과 평화에 열의를 가진 강원지역 대학생, 신청기간: 2022.10.19 까지, 신청방법: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홈페이지 및 일명마당 공지사항 신청서 작성 (http://kuis.kangwon.ac.kr &gt; 이메일(kuis@kangwon.ac.kr) 제출), 신청인원: 10명, 선착순 접수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부장교수 강성우 우석산발), 신청문의: kuis@kangwon.ac.kr 033-250-8031-3</li> </ul> </p>
--	--

## 5. 나가며

강원대학교는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접근을 넘어 평화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보급하였다. 강원대학교의 사례가 성공적인 부분은 첫째, 연구와 제도를 기반으로 학생과의 접촉면을 확대 하였다는 데 있다. 교내외 연구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강의에서 북한과 통일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평화학과’가 부전공으로 자리잡아 평화에 대해 학생들이 키운 관심의 지속을 보장하였다. 선도대학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평화학과’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강원대학교가 아닌 강원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모든 사업에 대해 강원지역의 학생 및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정례화 하였다. 또 타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강원지역의 평화답사 모델을 보급하여 강원지역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였다. 셋째,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을 낮추었다는 데 있다. 다양한 비교과 현장체험은 학생들에게 ‘낯설음’을 ‘흥미’로 바꾸는 기회가 되었고,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전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평화를 상상할 수 있게 도왔다.



# 대진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현황과 과제

소성규(대진대학교)

# 대진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현황과 과제



**2022.12.09.**  
소성규(대진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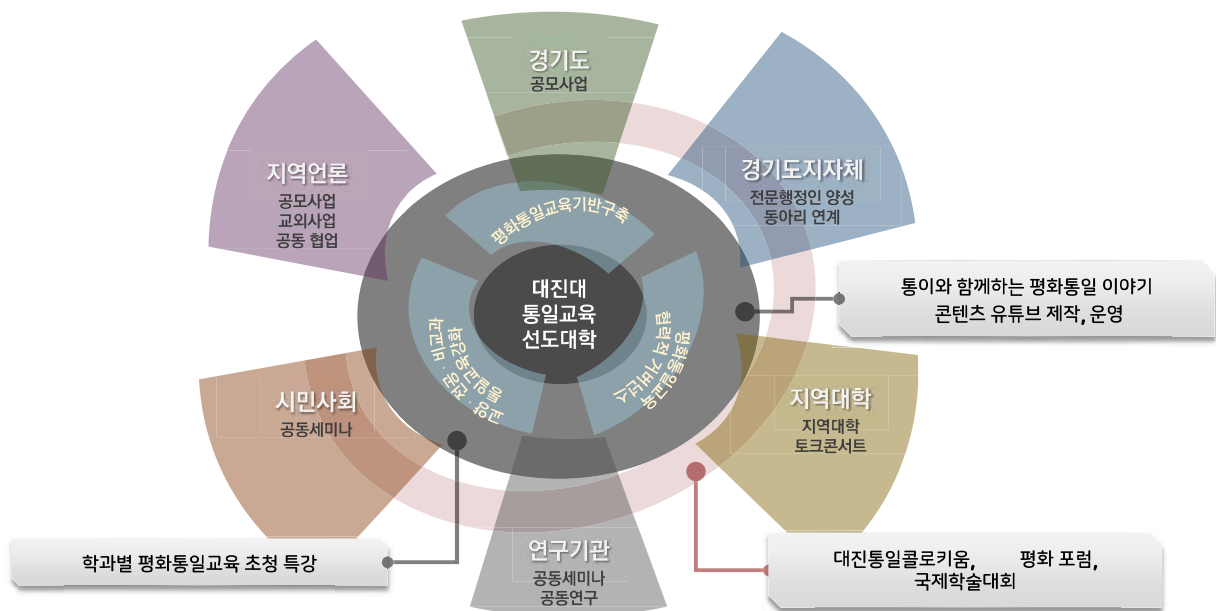


## 목 차

- I. 대진대학교 통일교육 모델과 조직
- II. 대진대학교 내부 확산전략과 성과
- III. 대진대학교 통일교육 모델에 따른 외부 주체별 사업 성과
  - 1. 지역대학과의 협업사업 및 성과
  - 2. 경기도와 경기북부 지자체와의 협업사업 및 성과
  - 3.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업사업 및 성과
  - 4. 언론과의 협업사업 및 성과
  -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사업 및 성과
- IV. 대진대학교 지속가능한 통일교육을 위한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의 성과
- V. 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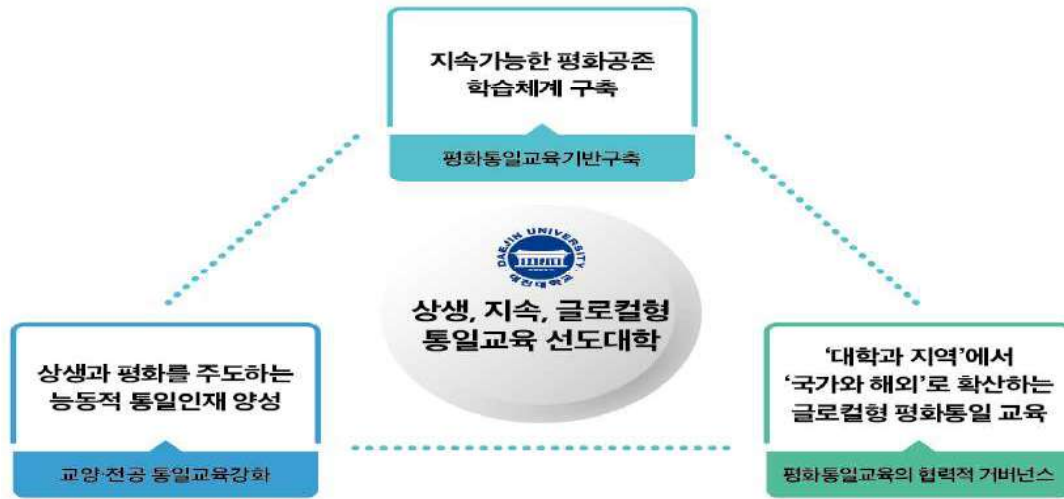
# I. 대진대학교 통일교육모델과 조직

## 1. 대진대학교 통일교육 모델 : “지역 네트워크 통일교육 모델”





## 2. 대진대학교 통일교육 모델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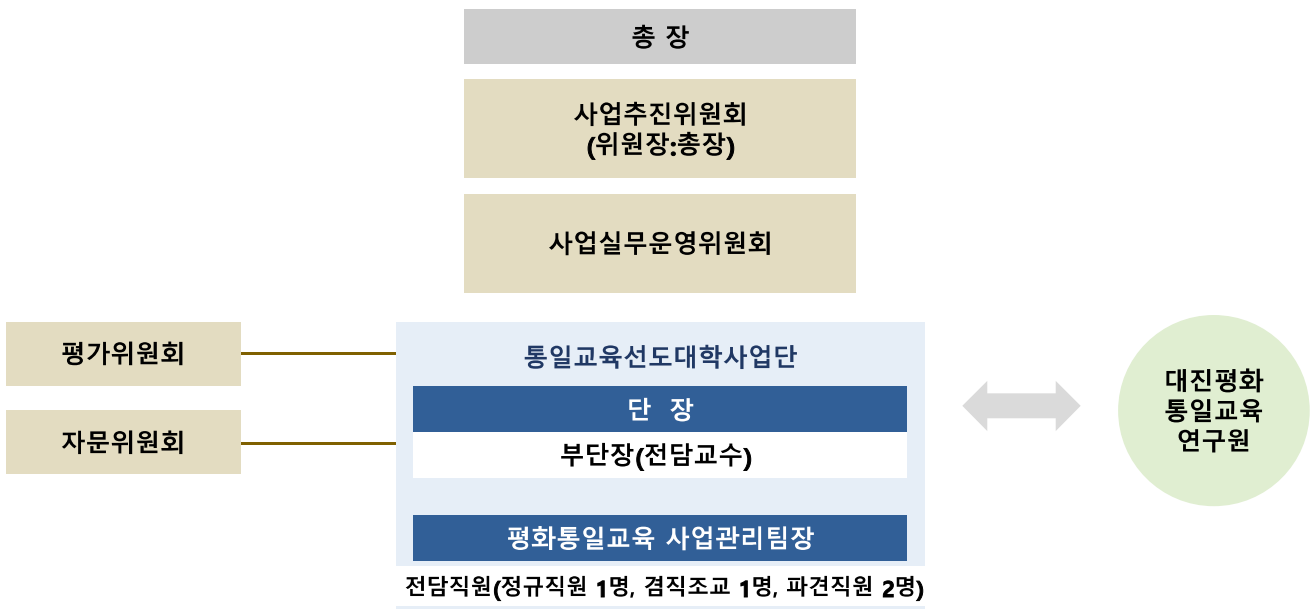
## 3. 대진대학교 통일교육 캐릭터 : “통이”



## 4. 대진대학교 통일교육 유튜브 채널 : “통이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야기”



## 5. 대진대학교 통일교육 조직 : (1)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지정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





## 5. 대진대 통일교육 조직 : (2) 대진대학교 교책연구원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 기존 교책연구소 DMZ연구원

1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 및 연구를 위한  
교책연구기관 신설(2020년)

2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운영위원회 구성(2020년)



## II. 대진대학교 내부 확산전략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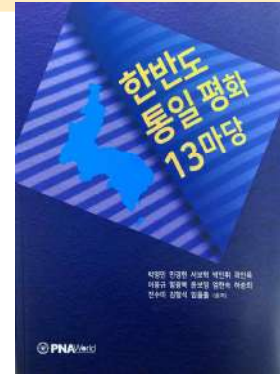
# 1. 교양필수 과목 지정 : 통이(Tongyi, 通異)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야기

## 가. 개요

- 학점 크기 : 1학점
- 수업 형태 : 원격수업
- 시행 시기 : 2022년 1기, 2학기
- 성적 평가 : P/F제



- **세부 운영 방안**
  - ▶ 수강 학생 : 2021학번 재학생 (정원 내, 정원 외 포함)
  - ▶ 분반 구성 : 4분반 (학기당 955명, 1분반 당 239명 수강)
  - ▶ 강의 운영 체계 : 책임교수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책임, 1시수 부여)
- **교재개발**
  - ▶ 주차별 강의 주제와 연계 13단원으로 구성
  - ▶ 주차별 강의용 PPT 파일 별도 제작



# 1. 교양필수 과목 지정 : 통이(Tongyi, 通異)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야기

## 나. 강좌 운영

### 강의 구성



#### 주차별 주제

<주차별 강의 구성(안)> 참조



#### 강의 시간 50분 분량

동영상 구성  
: 책임교수 강의(20분)  
전문가 대담(30분,교재 필진)



#### 강의 자료

동영상 및 ppt  
1주 전 LMS에 탑재

### 평가방식

#### 성적 산출

출석(20%) 과제(20%)  
중간시험(30%) 기말시험(30%)

#### 시험 방식

공통 표준문제 개발 및 출제  
중간.기말 각 30문항(각 1점씩) 출제

#### 평가 기준

P/F제로 합산 성적  
60점 이하 Fail

#### 과제

2회

## 2. 통일교육 강좌 운영 성과(대학원 석사, 박사 강좌 개설 제외)

### 가. 본교 교육 강좌 현황

#### 2022학년도 교양과목 현황 (1학기)

번호	교과목명	학점	분반
1	통일과 한국의 미래	2	2
2	북한정치사회와 한반도통일	2	1
3	한반도와 국제관계	2	1
4	북한학	2	1

#### 2022학년도 교양과목 현황 (2학기)

번호	교과목명	학점	분반
1	통일과 한국의 미래	2	2
2	북한정치사회와 한반도통일	2	1
3	한반도와 국제관계	2	2
4	북한학	2	1

## 2. 통일교육 강좌 운영 성과(대학원 석사, 박사 강좌 개설 제외)

### 가. 본교 교육 강좌 현황

#### 2023학년도 전공(통일한국인재전공) 교육과정

학년	이수 구분	교과번호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응용합	학점	강의	실습	응용합
2	전선	362004	세계화와통일한국	3	3	0					
		362010	남북한경제의이해	3	3	0					
		362020	미중관계의국제정치	3	3	0					
	전선	362002	국제관계와남북한정치					3	3	0	
		362007	남북한지역개발					3	3	0	
		362016	독일의통일과정과사회변화					3	3	0	
3	전선	362018	북한이탈주민연구	3	3	0					
		362021	통일인문독서	3	3	0					
		362022	통일한국사회복지	3	3	0					
	전선	362003	DMZ와접경지역발전					3	3	0	
		362023	통일인문글쓰기					3	3	0	
		362024	북핵문제의국제정치					3	3	0	
		362025	남북한사회복지통합					3	3	0	
		합계:39학점				18	18	0		21	21

## 2. 통일교육 강좌 운영 성과 (대학원 석사, 박사 강좌 개설 제외)

나. 온라인 비교과 강좌 : “2022년 남북통합 인재육성 옴니버스 강좌” 운영  
(사업수행자: 사단법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김형석 교수 외)

6개 강좌 개설 운영



이수자 장학금, 현장체험 등  
사업단 각종 사업 우선 기회 부여



59명 수강  
(2022.8.31.기준)



## 2. 대전대학교 통일교육 강좌 운영 성과 (대학원 석사, 박사 강좌 개설 제외)

다. 온라인 DJ MOOC 개설

- 자체예산(대학교육혁신원)으로 통일 관련 비교과 온라인 강좌 (DJ MOOC) 운영

2022학년도 DJ MOOC 개설 현황

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1	통일시대 한탄강 유역권(포천)의 미래 : 통일수도	김**(2020년 개설)
2	통일교육과 통일법제를 이해하는 다섯가지 시선	소**(2021년 개설)
3	손에 잡히는 평화통일 한반도 펜타곤	박**(2022년 개설)

### 3. 선진교수법 개발 연구모임 결성

[ “MOOC야 놀자” , MOOC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선진교수법, 교비]

“MOOC야 놀자”(본교 대학교육혁신원 지원) 선진교수법 연구모임 결성

다양한 통일교육 강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에서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 교수법의 개발을 통하여 상호 교수법의 특징점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대진대만의 특성화된 통일교육 교수법 개발이 가능

### 4. 학과(전공) 연계 확산전략과 성과

통일 관련 특성화 학과(전공) 발굴 성과

- 대진통일클로키움, 학과별 초청 특강, 동아리 활동, 교수 연구 활동 등 1,2차년도 사업 종합 분석 결과, **거교적 차원의 통일교육 실시, 정치학에 기반을 둔 본교 통일 관련 융복합 특성화 학과(전공) 발굴 성과**

번호	단과대학	학과	담당교수
1	과학기술대학	식품영양학과, 스포츠과학과, 건축공학전공	주**, 김**, 류**
2	휴먼IT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	정**, 이**
3	공공인재대학	공공인재법학과, 행정정보학과	김**(최**), 김**(고**)
4	글로벌산업통상대학	국제학부 중국학전공, 국제통상학과	조**
5	대순중학대학	대순중학과	고**
6	인문예술대학	종교문화학과, 연극영화학부	김**(조**), 한**
7	통일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통일학과, 공공인재법학과	정**, 소**

## 5. 본교 내부 통일 관련 기관과의 연계 사업

### 가. DMZ연구원,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강원대, 통일연구원 : DMZ평화포럼

- 주최기관 : 대진대 DMZ연구원, 대진대 평화통일교육연구원, 강원대, 통일연구원
- 사업 기간 : 2022.11.18.(금)
- 사업내용 : 강원대, 통일연구원간 협업 및 포럼(본교 및 타대학 교수, 전문가 등)
- 주제 : **“DMZ접경지역의 기억과 그린평화지대화”**
  - 제1세션: 전쟁과 공간의 기억, 제2세션: 유엔사령부와 DMZ 평화. 라운드테이블 : 한반도 평화와 그린평화지대화



## 5. 본교 내부 통일 관련 기관과의 연계 사업

### 나. DMZ연구원,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국민대 : 국제학술대회

- 사업내용: 통일 관련 전문기관·단체 협업(본교 및 타대학 교수, 전문가 등)
- 주최기관 : 대진대, 국민대, 연천군 통일미래포럼
- 주관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사업기간 : 2022.11.25.(금)
- 사업내용 : 한반도위기대응을 위한 공동과제와 전략 모색
  - 1세션 : 남북 SDGs 협력 가능성과 동북아 협력, 제2세션 : 기후위기 시대의 한반도 기술협력 전략

시 간	프로그램
13:30-14:00	개회식 - 인제대 최은희(한·미국제지역학회 이사장) 축사 - 환영 영상 - 기념식(국민대, 연천군, 통일미래포럼)
14:00-15:00	제1세션: 남북 SDGs 협력 가능성과 동북아 협력
15:00-16:00	제2세션: 기후위기 시대의 한반도 기술협력 전략
16:00-17:00	폐회식 - 기념식(국민대, 연천군, 통일미래포럼)
17:00-18:00	특별행사로 진행

## 6. 학생 동아리 중심의 확산전략과 성과

### 동아리 구성과 활동

- 2022년 현재, 5개 동아리별 자체 사업(동아리 지도교수 주관)
- 2023학년도 원코리아(스포츠과학과, 김\*\* 교수) 동아리 구성으로 총6개 동아리 활동 예정
- 매년 동아리 활동 성과 공유회를 통한 피드백
- 통일교육주간 행사 및 "통이" 캐릭터 활용 콘텐츠 개발 참여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추천 현장체험 장소 활용

### • 현황(2022년)

에프터 원(AFTER ONE)  
최\*\* 교수(공공인재법학과)

WATO(We Are The One)  
정\*\* 교수(에너지환경공학부)

너랑나  
류\*\* 교수(건축공학과)

영화바로알기  
한\*\* 교수(연극영화학부)

이지아렌(一家人)  
조\*\* 교수(중국학전공)

## 6. 학생 동아리 중심의 확산전략과 성과

### 동아리 구성과 활동



매년 동아리 활동 성과 보고회 개최



## 7. 학생 중심의 홍보전략과 성과

### 가. 통일교육주간 행사

본교 비교과지원센터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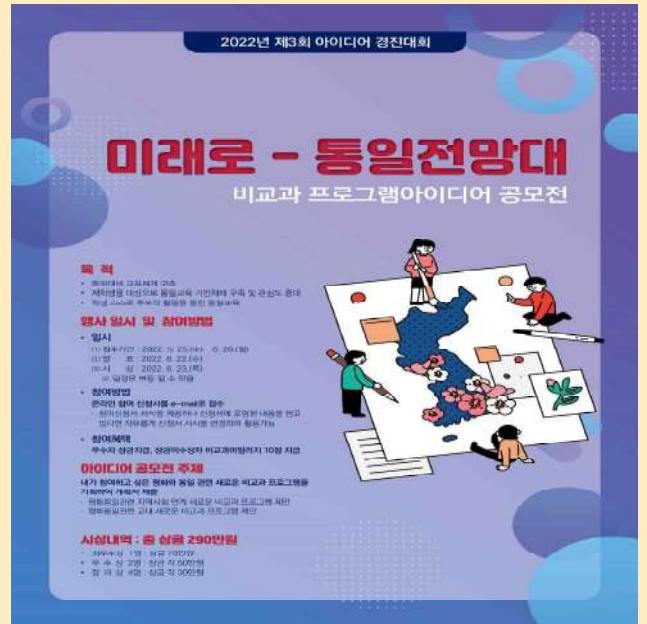
### “미래로-통일전망대”

(통일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제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 통일UCC 경진대회

(“통이”캐릭터를 활용하여 통일관련 자신의 학과와의 특성을 살린 UCC컨텐츠 제작 경진대회)



## 7. 학생 중심의 홍보전략과 성과

### 나. 사업단 홍보

- 사업단 소식 웹포스터 제작 후 홍보
- sms 구매를 통한 문자 활용 재학생 대상 사업 홍보

### 다. 사업단 및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 8. 온라인 중심의 홍보와 확산전략

### 가. "통이"와 함께하는 평화통일이야기(유튜브) 콘텐츠 운영

- 딜라이브 TV 연계 유튜브 콘텐츠 제작
- 통일동아리 연계 유튜브 콘텐츠 제작
- 학생(교직원, 대학원생 포함) 유튜브 콘텐츠 제작
- 전문가, 지역 리더(시장/군수) 연계 유튜브 콘텐츠 제작



## 9. 학과별 현장체험



본교 동아리 학생대표, 일반학생, 교직원 등이 함께 하는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본교 통일 관련 특성화 대학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학과별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통하여  
교내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관련 국내 현장체험 진행



국립통일교육원 추천 국내 현장체험 프로그램 활용

## 10. 본교 유학생 대상 통일교육 확산전략과 성과

본교 유학생 및 한국어교육센터 재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 일시 : 2022. 12. 01. 15시-17시 / 장소 : 대진교육관 205호
- 참석자 : 대진대 외국인 유학생 및 한국어교육센터 재학생 및 관계자 등 50여명
- 주제 : '통'일 한반도를 '이'루는 꿈, 대진대학교의 꿈 (임\*\* 대진대 총장)
- 본교 중국캠퍼스(DUCC), 베트남 탄호아 문화관광대학  
한국어교육센터 학생 연계 (중국어 번역 특강 자료 공유)



## 11. “평화통일 스칼라십” (평화통일 민주시민 인재 장학금)

장학금 지급 기준(학생복지처 장학금 지급 내규)

**평화통일 민주시민 인재 장학금(이중 수혜 허용 장학)**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인재 육성 및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장학명	대상자	수혜내용	비고
평화통일 민주시민 인재장학A	·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이 추천한 자	별도로 정함	·수혜대상은 직전학기 평점 평균 2.5 이상 ·최소이수학점 이수
평화통일 민주시민 인재장학B	· 단과대학장이 추천한 자		
평화통일 민주시민 활동장학	· 동아리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 (“통·통·동(통일과 통하는 동아리)”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천한 자 - “통일한국인재전공” 과 통일 관련 교양 및 전공과목 수강생 ·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이 추천한 자 - 비교과과정 참여 학생 및 통이 서포터 단	별도로 정함	·수혜대상은 직전학기 평점 평균 2.5 이상 ·최소이수학점 이수

### III. 대진대학교 통일교육 모델에 따른 외부 주체별 사업 성과

#### 1. 유관기관과의 협업사업 및 성과

: 대학생 하계 현장학습 (인턴실습)

#####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기간 : 2022. 7월~8월
- 대상 : 본교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내용 : 통일관련 현장실습, 통일관련 직업을 탐구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 내용

NO	기관명	모집 (인원)	근무시간	배치부서	업무내용	담당자 성명	배정자
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명	월-금 (10:00-17:00)	교류협력 기반본부	-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 지원(문서 작업 보조, 행사지원 등) - 기타 행정 보조	*지은 과장	*지아
2	남북사회통합연구원	1명	월-금 (10:00-17:00)	연구부 대외협력부	- 용역과제 수행업무 보조 - 시민통일강좌 운영업무 지원 - 기타 행정업무 보조	*예은 연구위원	*세희
3	한국통일협회	1명	월-금 (10:00-17:00)	사무처	- 협회 업무 전반 지원(문서 작업 보조, 행사지원 등) - 기타 행정 보조	*영도	*승진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1명	월-금 (10:00-17:00)	대외 협력부	-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업 지원 - 기타 행정 보조	*도은	*시연

## 2. 지역대학과의 협업사업 및 성과

### : 경기도 공모 사업 - 대학생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전교육 : 2022. 9. 29. (목)

- 한반도 평화캠프 : 2022. 9. 30 (금)

\*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함

#### 사업량

- 경기도내 소재 대학 및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 100여명 내외

- 주최 및 후원 : 경기도, 대진대학교

#### 모집 및 선발

##### 선발 대상

##### 경기도 내 대학생(재/휴학생)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포함

##### 참가자 특전

- 참가비 무료
- 참가자 전원 수료증 지급
- 각종 프로그램 우수팀 시상

## 2. 지역대학과의 협업사업 및 성과

### : 경기도 공모 사업 - 대학생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

#### 주요 프로그램

##### 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퀴즈대회

오프라인 현장체험학습 진행

##### 나. 온라인 통일 퀴즈대회

퀴즈대회 전 예상문제를 나누어주어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다. 온라인 통일 PPT 및 UCC발표대회

**내용** : 평화통일을 향한 2030세대의 창의적인 통일 프로젝트를 주제로 통일 관련 PPT 및 UCC 발표대회 진행

**형식** : 온라인 발표대회

## 2. 지역대학과의 협업사업 및 성과

### : 경기도 공모 사업 - 대학생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



## 2. 지역대학과의 협업사업 및 성과

### : 경기도 공모 사업 - 대학생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

[포천] 대진대학교 '대학생 한반도 평화캠프'



출처 : 딜라이브TV. 2022.10.5. (<https://youtu.be/14sEGPuQICU>)



### 3. 경기도와 경기북부 지자체와의 협업사업 및 성과

: 양주시 공무원 통일교육 - 제5기 평화통일 대비 전문행정인 양성과정  
[양주시 예산, 2022년 10월~11월 진행]

#### 교육과정 (온라인)

소** (대진대 교수)	[개강식] 평화통일 대비 전문행정인 양성과정 목적 및 교육과정 안내 북한의 주택공급 방법과 주거생활-남북한 비교를 중심으로
홍** (삼정 KPMG)	남북 경제협력의 실제와 거버넌스의 협력적 역할
장** (대진대 교수)	임진강을 통한 남북한 수자원 협력 방안
임** (한세대 교수)	북한의 음악 -DMZ평화와 음악
김** (대구대 교수)	북핵문제의 발단, 전개, 그리고 전망 -한반도 평화, 멀고도 험한 여정
김** (前 통일부차관)	코로나이후, 비무장지대를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 4.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업사업 및 성과

대진통일콜로키움 외부 사업 현황(2022년, 한국통일교육학회, 개성포럼 등)



남남갈등 해결을 위한 대학생 원탁 토론회(2022년)



## 5. 언론과의 협업사업 및 성과

딜라이브 TV 협업

중앙지, 경인일보 등 지방 및 지역신문 협업

**대진대, 경기도 대학생·청년 대상 '한반도 평화캠프' 개최**

등록 2022-10-09 09:28:07  
수정 2022-10-09 09:28:07  
임재훈 기자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진대가 경기지역 청년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대진대학교는 통일교육원도대학서업단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보내 거주하는 대학생 및 주직생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22년 대학생 온라인 한반도 평화캠프'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대 전대학교 재학생)

이번 캠프는 지난날 5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홍보를 통한 참여 학생 모집을 거쳐 29일부터 이틀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대진대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스승마린 통일위주대회 스톱일 관련 PPT 및 LICC 발표대회 스톱사 독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향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통일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유학생 전용 통일위주대회를 열어 외국인유학생을도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사업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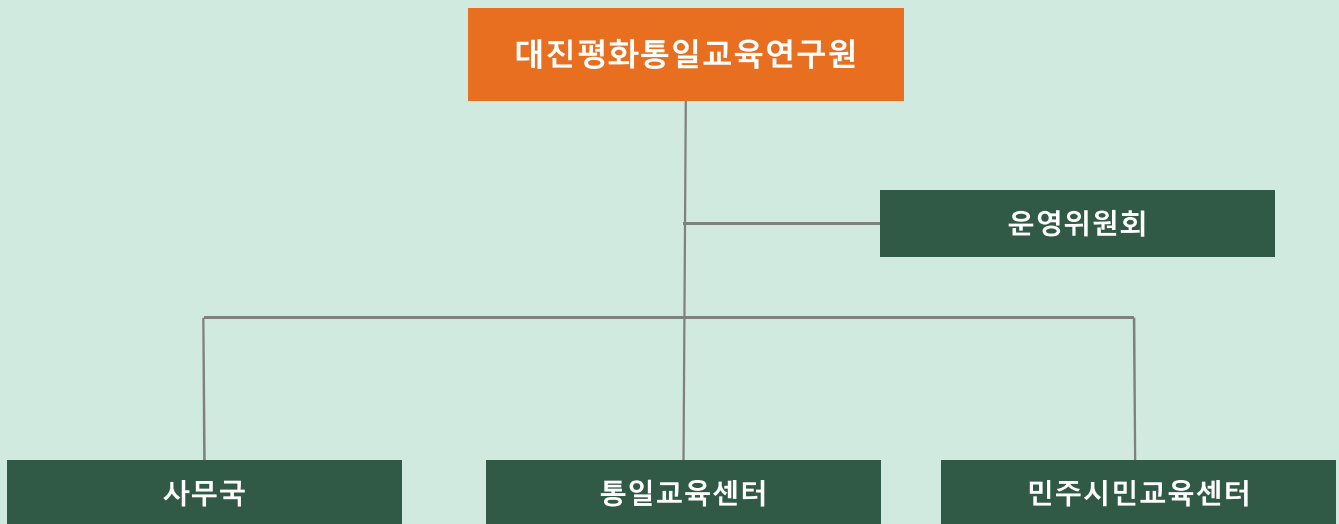
- 통일연구원, 경기연구원
- 강원대(한라대) 등(접경지역 대학 교류)
- 제주 4.3. 평화재단 등과의 협력
- 개성포럼("개성 평화인문학 대학" 온라인 강좌 개설, "38선 평화 기행", 학술세미나 연계 등)



중국 연변대학 등

## IV. 대진대학교 지속가능한 통일교육을 위한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의 성과

### 대진대학교 지속가능한 통일교육을 위한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 의 성과



<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조직도 >



# 대진대학교 지속가능한 통일교육을 위한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의 성과

“지역과 통일” 발간

경기도 및 경기북부 지자체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참여

한국연구재단(KCI) 2023년 등재후보지 목표



2021. 6. 30. 제1호(창간호) 발간 완료



2022. 6. 3. 제3호 발간 완료



## V. 과제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주간 하나 되어 봄! 제10회 통일교육주간



출처 : 통일부 UNITV(<https://www.youtube.com/watch?v=L6E7kSpwM3s&t=17s>)

## 과제

1

- 모든 단과대학 내지 학과별 통일 관련 연구 및 교육과정 특성화
- 정치학에 기반을 둔 통일 관련 특성화 발굴 학과(전공) 집중 지원
- 단대별 학생 중심 동아리 추가 구성, 코로나 이후 기존 사업 피드백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 4차년도 사업 종료 이후 특성화 사업을 기반으로 통일교육 확산 구상

2

내부(대학원 등)/외부(경기북부지역 학교/사회/공무원/이주배경도민, 군인 등) 통일교육 확산 전략

3

메타버스 활용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과, 비교과 접목 및  
유튜브 “통이” 캐릭터 다양한 콘텐츠 보강

4

지속가능한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기반 구축

## (통일AR앱) 통일부와 함께하는 고리의 북한여행기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He5FILo0DGQ>

감사합니다.



# 인제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현황과 과제

진희권(부산대학교)



# 인제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현황과 과제

진희권(인제대 통일학 박사)

인제대 통일교육선도대학



## 목 차

- 01 인제대 통일교육 비전과 추진전략
- 02 추진과제별 성과1: 대학 통일교육 특화 콘텐츠 개발
- 03 추진과제별 성과2: 수요자 중심, 혁신적 통일교육
- 04 추진과제별 성과3: 지역 내 성과 확산
- 05 결 론: 인제대 통일교육의 과제

## 01 통일교육 비전과 추진전략

\_인제대 통일교육의 비전

### 혁신적 통일교육을 선도하는 통일교육 대표대학

\_인제대 통일교육의 목표

\_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인재 양성

\_역량과 인성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통일 전문가 양성

## \_추진전략

1 대학 통일교육 특화 콘텐츠 개발 및 관리	2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 통일교육	3 지역내 성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과정 확대, 개편 및 내실 강화</li> <li>•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li> <li>• 성과 정리 및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요구도 조사 및 연구사업 지속</li> <li>• 통일서포터즈 활동 장려</li> <li>• 학생참여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li> <li>• 비교과 활동의 학생 주도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교육 네트워크 확대</li> <li>• 통일교육 교과 확대</li> <li>• 통일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확산</li> </ul>

## 02 추진과제별 성과1\_대학 통일교육 특화 콘텐츠 개발 및 관리

### 1. 교육 과정 확대 개편

년 도	전공 강좌	전공 수강	교양 강좌	교양 수강	수강 합계	수강합계 증감
2018년	12과목	120명	3과목	244명	364명	-
2019년	12과목	150명	7과목	559명	709명	94.8%
2020년	12과목	99명	6과목	582명	681명	-3.9%
2021년	12과목	103명	8과목	686명	789명	15.9%
2022년	6과목	46명	7과목	557명	603명	-23.6%
2019~2022 평균	10.5과목	99.5명	7과목	596명	695.5명	91.1%(2018년 대비)

\_ (개설 강좌) 2018년(선도대학 사업 전) 대비 교양 강좌 연평균 4과목 증가

\_ (수강 학생) 2018년 대비, 연평균 331.5명(91.1%) 증가

\_ (향후 과제) 남북관계와 북한 이미지 악화에 따른 학생 관심 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대 과정에서 수강 학생 감소 상황 대응, 변화하는 정세와 학생 의식을 반영한 강의 업데이트와 내실화

### 2. 통일교육 교재 개발

대학 통일교육 교재 초판(2020년) 통일교육 교재 수정본 (2021년)



통일교육 교재 전면 개정본 1, 2 (2022년)



**\_ 통일교육 교재 초판 목차(2020년)**

장	주 제	저 자
서론	한반도의 통일이란 무엇인가	진희관
1장	북한의 정치	진희관, 진희권
2장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	김일한
3장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핵무기 개발 동향	이춘근
4장	북한의 교통	안병민
5장	북한의 사회문화1 :북한 주민생활	안지영
6장	북한의 사회문화2 :북한의 교육정책과 제도	김창근
7장	북한의 문학과 예술	전영선
8장	남북교류협력의 의미	문인철
9장	지방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	황교육
10장	남북한 통합	진시원
11장	한반도 평화로 가는 세계의 길	서보혁

**총 12개 주제, 12명의 저자 참여**



**\_ 통일교육 교재 수정본 목차(2021년)**

장	주 제	저 자
서론	과정으로서의 통일, 어울려사는 통일의 의미 한반도의 통일이란 무엇인가	김연철 진희관
1장	북한의 정치	진희관, 진희권
2장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	김일한
3장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핵무기 개발 동향	이춘근
4장	북한의 교통	안병민
5장	북한의 사회문화1 :북한 주민생활	안지영
6장	북한의 사회문화2 :북한의 교육정책과 제도	김창근
7장	북한의 문학과 예술	전영선
8장	남북교류협력의 의미	문인철
9장	지방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	황교육
10장	남북한 통합	진시원
11장	한반도 평화로 가는 세계의 길	서보혁

**총 13개 주제, 13명의 저자 참여**

**○ 통일교육 교재 전면 개정본 목차(2022년)**

**\_ 1권: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이해**

장	주 제	저 자
서론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진희관
1장	북한의 정치	진희관, 진희권
2장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북한경제 기초)	탁용달
3장	북한의 경제	김일한
4장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핵무기 개발 동향	이춘근
5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대	장철운
6장	북한의 사회문화1 :영화로 만나는 청년의 삶	안지영
7장	북한의 사회문화2 : 교육정책과 제도	김창근
8장	북한의 문학과 예술	전영성
9장	북한의 교통	안병민
10장	북한의 체육	허정필

**\_ 2권: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평화**

장	주 제	저 자
서론	한반도의 통일이란 무엇인가	진희관
1장	70년의 대화1: 냉전시대	김연철
2장	70년의 대화2: 탈냉전시대	
3장	분단질서 70년 : 국제 질서의 법적성과 핵문제	진희관
4장	남북교류협력의 의미	문인철
5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돌아봄과 내다봄	황교육
6장	남북 해양수산 협력의 현황과 새로운 패러다임	진희권
7장	남북한 통합	진시원
8장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배우는 한반도 통일	김영수
9장	중국, 대만 양안관계와 한반도	이권호
10장	한반도 평화로 가는 세 개의 길	서보혁

**총 21개의 주제, 18명의 저자 참여**





○ 인제대 통일교육 교재 발간의 성과와 시사점

1) 다양한 저자 참여를 통해 전문성과 지역 특화 및 다양한 시각 반영

- \_ 각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들이 질필에 참여,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 \_ 부산, 경남지역 전문가 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화와 함께 지역 통일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_ 신진 연구자들의 교재 개발 참여를 통해, 다양한 시각 반영 및 통일교육 참여 기회 제공

2) 남북관계 변화와 수요자의 인식 변화를 반영, 지속적 업데이트

- \_ 남북관계 및 북한 내부 변화 등 새로운 정보 반영을 위해 지속 업데이트 및 내용 관리
- \_ 대학생들의 변화하는 통일 및 북한 인식을 반영, 매년 업데이트를 통해 설득력 있는 교재 제공
- \_ 수업 및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 및 인식 반영

3) 수요자의 관심 제고 및 다양한 접근을 위해 통일 교육 내용 다변화

- \_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군사, 체육, 북한 청년의 삶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접근해 통일교육 외형 확대
- \_ 신진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반영, 통일교육 다양화 및 수요자 관심 제고

03 추진과제별 성과2\_수요자 중심의 혁신적 통일교육

1. 수강생 요구도 조사 및 지속적 연구사업

1) 수강생 요구도 조사

- 매 학기 수강생 요구도 조사 진행
- 북한 및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 교재 및 수업에 반영
- 2021년 까지 623명 조사 참여

영역	조사 문항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 (총 5문항)	① 귀하께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② 귀하께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귀하께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가 일반국민과 대학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④ 귀하께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와 관련해 전민적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그러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의 결과를 '통일국민협약'으로 공식화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통일국민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의견 (총 5문항)	① 남한과 북한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② 남과 북은 1972년 공동성명을 통해 세 가지 통일의 원칙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3대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③ 2018년 6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선언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④ 미국 정부가 북한에게 요구한 핵폐기 방식(CVID)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⑤ 독자적인 내륙경제 조지를 못하고 있는 미국은 기존까지 핵개발과 관련한 거래 등에 한차례 경제를 위하다, 2017년 그 이외까지 경제를 확대했습니다. 2017년 경제 확대 이후 추가된 경제 품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평화·통일을 둘러싼 사안에 대한 의견 (총 12문항)	① 귀하께서는 향후 한반도의 체제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귀하께서는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귀하께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④ 귀하께서는 향후 통일교육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귀하께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어떤 순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⑥ 귀하께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⑦ 귀하께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국제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⑧ 귀하께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남북 간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⑨ 귀하께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어느 쪽에 더 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⑩ 귀하께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어떤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인식조사 영역별 세부 문항

## 2. 연구사업

**INJE UNIVERSITY**

### 도전, 내가 만드는 통일교육

####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전 소개**  
평소 자신이 듣고싶었던 통일 북한 주제와 수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모전입니다. 총 15주 분량의 수업 계획서를 자유롭게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집기간**  
2022년 5월 16일 ~ 27일

**대상**  
인제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상금**  
1등(1명) 30만원 + 해외 현장체험학습  
2등(2명) 20만원 + 국내 현장체험학습  
3등(3명) 10만원 + 국내 현장체험학습

**신청방법**  
IU 나버, 통일학부 홈페이지, 통일학부 블로그에 등재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문의사항**  
통일학부(담진관, 103호)  
055-320-3325  
카카오톡 '통일학부' 검색  
→ 인제대 통일학부 문의채팅방

### 1) 수강생 요구 및 인식 반영을 위한 연구사업

- 수업계획서 공모전 진행 및 결과 반영을 위한 연구사업
- 북한 주민 일상생활과 남북한의 통일정책 등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음을 확인
- 통일교육 내용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모색

### 2) 비교과 과정 내용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

- 비교과 과정 중 학생 참여와 만족도가 높은 통일 토크 & 퀴즈 내용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
- 연구사업을 통해 통일 토크 & 퀴즈의 내용과 형식을 점검, 대안을 제시
- 인제대 통일교육을 대표하는 비교과 사업으로 육성

**인제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

### 통일 토크&퀴즈

통일 토크콘서트

**행사 안내**

**일정** 2022.05.23. 15:00 - 16:40

**장소** 앞빛관 이태석 기념홀

**참여대상**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참여방법** IU 나버에서 '통일 토크&퀴즈' 신청

**문의사항**

- 통일학부(담진관 103호)
- 055) 320 - 3325
- 카카오톡 '통일학부' 검색, DM 신청
- '인제대 통일학부 문의채팅방'

**진행자 소개**

- 김정민: 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기획과 운영, 기획과 운영을 위한 김경민
- 김희영: 본 행사에 대한 연구소 내외, 전 재학생, 1인칭, 전, 후방 TV 진행자
- 신희경: 인제대 통일학부 신희경 교수

QR Code

## 2. 비교과 교육과정 활성화

### 1) 통일 토크 & 퀴즈

- 인제대 통일교육을 대표하는 비교과 과정으로 자리매김
- 연구사업을 통해 내용과 형식 제고
- 전문성을 갖춘 출연진과 다년 간의 사업 경험으로 완성도와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음
- 권역 내 타 대학으로 확산

### 2) 체험형 현장 통일교육

- 평화 통일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생동감 있는 통일교육 제공 및 재학생 관심 제고
- 천안함/ 판문점/ 제주 4.3평화공원/ 백두산 등 국내외 현장 통일교육 진행






3) 전문가 초청 특강

- 북한, 통일, 남북관계 국내 전문가 초청 특강  
년 평균 10여 회 진행

4) 학생 참여 다양화

- 다양한 형식의 학생 참여 행사를 통해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재학생 접촉면 확대

**통일교육 SNS 글짓기 이벤트**

“대학생과 함께하는 통일 최행시 - 짧은 글짓기”

2020. 11. 23 ~ 2020. 12. 6

김소희교수, 권복호교수

**참여방법**  
 1. 통일교육 선도대학 홈페이지(www.inje.ac.kr)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한다.  
 2.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에 통일교육 선도대학 SNS 글짓기 이벤트를 게시한다.  
 3. SNS 글짓기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SNS에 게시한다.  
 4. SNS 글짓기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SNS에 게시한다.  
 5. SNS 글짓기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SNS에 게시한다.




**참여자**  
 2020. 11. 23 ~ 2020. 12. 6

**장소**  
 통일교육 선도대학 강의실

**참여대상**  
 통일교육 선도대학 재학생

**대상**  
 SNS 글짓기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SNS에 게시한다.

**기타사항**  
 통일교육 선도대학 홈페이지(www.inje.ac.kr)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한다.



3. 통일서포터즈 활동

○ 통일교육 선도대학 서포터즈 구성

- 10명 내의 학생들로 통일서포터즈를 구성
- 학내 통일인식 확산, 통일교육 홍보 및 참여 유도 활동
- 자체 세미나, 특강 등을 통해 전문성 함양

○ 통일서포터즈 활동의 성과와 시사점

-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핵심역량, 사업 준비 및 홍보, 집행 과정에서 주요 역할 수행
- 위와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한 구성원들의 내용적 준비 및 동기 부여 필요
- 향후 지속적 활동을 위한 물적 지원 토대 필요, 자체 재생산 구조 마련은 숙제



## 04 추진과제별 성과3\_지역 내 성과 확산

### 1. 통일교육 네트워크

- (MOU 체결:)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북한연구학회, 한스자이델 재단, (사)한길남북교류사업단
- (통일교육 교과목 지원) 마산대, 창원대, 신라대
- (통일교육 현장체험 지원) 부산대, 부산교대, 창신대
- (공동연구사업, 자문 및 성과공유 등 일상 네트워크) \_경남대, 동국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동서대,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등



### 2. 타대학 통일교육 교과 확대

※ (2022년)4개 대학 5개 강좌 개설, 272명 참여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라대_ '남북분단과 북한 사회의 이해'(32명 수강)</li> <li>- 창원대_ '언어로 배우는 북한'(40명 수강)</li> <li>- 마산대_ '통일의 이해'(79명 수강)</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라대_ '남북통일과 국제관계'(50명 수강)</li> <li>- 창원대_ '언어로 배우는 북한'(39명 수강)</li> </ul> </li> </ul> |
|---|---|

### 3. 타대학 통일교육 비교과 확대

- (2019년) 영남권 대학생 통일 세미나\_부경대, 경상대, 경남대 학생 참가
- (2021년) \_제주 평화기행(부산대)
  - \_통일 토크&퀴즈(부산대, 부산교대)
  - \_대학생 통일 세미나(부산대, 부산교대)
- (2022년) \_현장 체험학습(창신대, 부산대, 부산교대),
  - \_통일 토크&퀴즈(신라대)
  - \_대학생 통일세미나(부산대, 부산교대)

## 05 결론\_인제대 통일교육의 과제

### 1. 대학 통일교육 특화 콘텐츠 개발 및 내실화

#### 1) 교과 과정 분야

-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강 학생은 비례하는 상황, 현재와 같은 상황(남북관계 악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대북 인식 악화)에서 대학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통일교육의 특성 상 다양한 대면 접촉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 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통일교육 교과목 수강생이 감소한 상황.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2) 통일교육 교재 개발 및 연구사업

-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종료에 따른 지속적 업데이트 및 연구개발 방안 마련
- 현 교재에 학생들의 피드백을 주제 및 내용에 반영
-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지속적 업데이트

### 2.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 통일교육

- 학생들의 인식 변화 및 수요를 교과목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학생들과 양방향 소통을 정례화, 시스템화하여 인제대 통일교육의 기본 특성으로 안착
- 통일 토크&퀴즈 사업 정례화 및 년차별 진행을 통해 인제대 통일교육의 대표 비교과 과목으로 안착
- 통일서포터즈의 지속가능한 활동 방안 및 재생산 구조 모색

### 3. 지역 내 성과 확산

- 통일교육의 지역 내 확산은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인제대의 경우 3년차 사업부터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성과가 구체화 되는 시점에서 사업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존재
- 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차기 사업 선정 대학에 성과를 이전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지역 내 통일교육 네트워크는 각 대학의 사례 공유, 학생 간 교류 라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속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감사합니다!

2022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

**북한,  
미완의 논쟁과  
새로운 쟁점**